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V) :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김나영 · 최윤경 · 김희수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V):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저 자

김나영, 최윤경, 김희수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 나 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 윤 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희 수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2-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V):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36-7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본 연구는 5개년 연구로 진행된 「육아정책의 분석과 과제(2018~2022)」의 마지막 연차 연구이다.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육아정책의 성과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주요 목적을 두어 지난 5년간의 육아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육아정책이 나아가야 할 개선방향에 대한 제안을 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가구유형의 변화 등 우리나라 유자녀 가구의 생활 양식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정책수요자의 요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간의 정책수행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의 범주를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등으로 포괄적으로 설정한다. 중앙부처별로 제시한 정책의 계획과 연도별 목표 대비 달성도에 의한 협의의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추진된 정책의 목표와 계획의 이행이 부모, 현장 교직원, 전문가의 시각에서 어떻게 체감되고 육아의 과정과 환경 전반에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육아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 육아정책 전문가, 현장 교직원 대상 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이를 큰 틀에서의 육아정책의 개선방향 제시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토대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각계 전문가와 육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교직원, 부모님, 그리고 보고서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자문 및 검토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22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	14
3. 연구의 내용	15
4. 연구의 추진방법	16
5. 연차별 주요 연구의 성과	23
II. 육아정책 및 성과분석(부처별)	25
1. 보건복지부	27
2. 교육부	44
3. 여성가족부	52
4. 고용노동부	60
5. 부처별 정책 및 성과지표 취합	64
III. 육아정책 성과분석 및 국정과제 평가(2~4차)	77
1. 육아정책의 범주	79
2. 육아정책 성과분석	82
3. 육아정책 국정과제 평가	90
4. 육아정책 성과 제고 방안	105
IV. 육아정책 성과분석(1)	109
1. 육아정책 성과분석	111
2. 정책성과 분석	184

V. 육아정책 성과분석(2)	205
1. 수요자 부모의 육아정책 성과 평가 및 의견	207
2. 어린이집 교사, 원장 성과 평가 및 의견	219
3. 유치원 교사, 원장 성과 평가 및 의견	233
VI. 새 정부 육아정책 국정과제 평가(5차)	245
1. 새 정부 육아정책 국정과제	247
2. 새 정부 육아정책 국정과제 평가	249
VII. 결론 및 정책제언	279
1. 결론	281
2. 정책제언	283
참고문헌	293
Abstract	296
부록	298
부록1.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설문조사 결과)	298
부록2. 전문가 설문지	324
부록3. 부모 설문지	341
부록4. 면담조사 질문지	360



표 목차

〈표 Ⅰ-4-1〉 면담조사 개요	16
〈표 Ⅰ-4-2〉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부모)	17
〈표 Ⅰ-4-3〉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어린이집 원장)	17
〈표 Ⅰ-4-4〉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어린이집 교사)	18
〈표 Ⅰ-4-5〉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유치원 원장)	18
〈표 Ⅰ-4-6〉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유치원 교사)	18
〈표 Ⅰ-4-7〉 설문조사 개요	19
〈표 Ⅰ-4-8〉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9
〈표 Ⅰ-4-9〉 전문가 설문조사 항목	20
〈표 Ⅰ-4-10〉 부모 조사 대상 분포	21
〈표 Ⅰ-4-11〉 부모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21
〈표 Ⅰ-4-12〉 부모 설문조사 항목	22
〈표 Ⅰ-5-1〉 육아정책 분석 주요 성과(연차별)	23
〈표 Ⅱ-1-1〉 2018 보건복지부 성과 목표 및 실적	28
〈표 Ⅱ-1-2〉 2019 보건복지부 성과 목표 및 실적	32
〈표 Ⅱ-1-3〉 2020 보건복지부 성과 목표 및 실적	37
〈표 Ⅱ-1-4〉 2021 보건복지부 성과 목표 및 실적	41
〈표 Ⅱ-2-1〉 2018 교육부 성과 목표 및 실적	44
〈표 Ⅱ-2-2〉 2019 교육부 성과 목표 및 실적	45
〈표 Ⅱ-2-3〉 2020 교육부 성과 목표 및 실적	47
〈표 Ⅱ-2-4〉 2021 교육부 성과 목표 및 실적	50
〈표 Ⅱ-3-1〉 2018 여성가족부 성과 목표 및 실적	53
〈표 Ⅱ-3-2〉 2019 여성가족부 성과 목표 및 실적	55
〈표 Ⅱ-3-3〉 2020 여성가족부 성과 목표 및 실적	57
〈표 Ⅱ-3-4〉 2021 여성가족부 성과 목표 및 실적	59
〈표 Ⅱ-4-1〉 2018 고용노동부 성과 목표 및 실적	60
〈표 Ⅱ-4-2〉 2019 고용노동부 성과 목표 및 실적	61
〈표 Ⅱ-4-3〉 2020 고용노동부 성과 목표 및 실적	62
〈표 Ⅱ-4-4〉 2021 고용노동부 성과 목표 및 실적	64
〈표 Ⅱ-5-1〉 2021년 보건복지부 성과 목표 기준 2018~2021 실적	66

〈표 II-5-2〉 2021년 교육부 성과 목표 기준 2018~2021 실적	70
〈표 II-5-3〉 2021년 여성가족부 성과목표 기준 2018~2021 실적	73
〈표 II-5-4〉 2021년 고용노동부 성과목표 기준 2018~2021 실적	75
〈표 III-1-1〉 1~4차년도 연구에서 선정한 핵심육아정책 목록	80
〈표 III-2-1〉 저출산 분야(전문가, 달성도)	83
〈표 III-2-2〉 저출산 분야(부모, 만족도)	85
〈표 III-2-3〉 유아교육·보육·돌봄 분야(전문가, 달성도)	87
〈표 III-2-4〉 아동 분야(전문가, 달성도)	89
〈표 III-2-5〉 아동 분야(부모, 달성도)	90
〈표 III-3-1〉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성과평가(2차년도)	91
〈표 III-3-2〉 육아정책 관련 성과 세부 평가(2차년도)	93
〈표 III-3-3〉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성과평가(3차년도)	94
〈표 III-3-4〉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중요도, 실행 우수, 실행 미흡(3차년도) ..	96
〈표 III-3-5〉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성과평가(4차년도)	97
〈표 III-3-6〉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중요도(4차년도)	98
〈표 III-3-7〉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행 우수(4차년도)	98
〈표 III-3-8〉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행 우수 1순위(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구현) 선택 이유(4차년도)	99
〈표 III-3-9〉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행 미흡(4차년도)	99
〈표 III-3-10〉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행 미흡 1순위(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선택 이유(4차년도)	100
〈표 III-3-11〉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행 미흡 1순위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선택 이유(4차년도)	100
〈표 III-3-12〉 성과가 미흡한 국정과제 1순위(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대한 개선방안(4차년도) ..	101
〈표 III-3-13〉 성과가 미흡한 국정과제 1순위(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에 대한 개선방안(4차년도)	101
〈표 III-3-14〉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행 평가_종합	102
〈표 III-4-1〉 육아정책의 성과 제고 주요 방안 종합(1~4차 연구)	105
〈표 IV-1-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의 성과분석 요소	111
〈표 IV-1-2〉 정책의 충분성 및 포괄성 분석	112
〈표 IV-1-3〉 출산 및 육아지원 정책 인지도(현금 및 의료비 지원)	114
〈표 IV-1-4〉 출산 및 육아지원 이용률(수혜경험) (현금 및 의료비 지원)	115

〈표 IV-1-5〉 지자체 현금지원금 총 수급액	116
〈표 III-1-6〉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 만족도(2021년, 2022년)	117
〈표 IV-1-7〉 현금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불만족 이유- 각종 수당 등 현금지원	118
〈표 IV-1-8〉 현금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불만족 이유-의료비 및 건강 지원 ..	119
〈표 IV-1-9〉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119
〈표 IV-1-10〉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미흡한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120
〈표 IV-1-1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의 수행 달성도 평가 (2020년, 2021년, 2022년)	121
〈표 IV-1-12〉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 (2021년, 2022년)	121
〈표 IV-1-13〉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성과가 큰 과제로 평가한 이유	122
〈표 IV-1-14〉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 과제 (2021년, 2022년)	124
〈표 IV-1-15〉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로 평가한 이유	125
〈표 IV-1-16〉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부문의 성과분석 요소	128
〈표 IV-1-17〉 정책의 충분성 및 포괄성 분석	129
〈표 IV-1-18〉 교육·보육 및 돌봄 서비스 인지도	130
〈표 IV-1-19〉 교육·보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률(2021년, 2022년)	130
〈표 IV-1-20〉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률	131
〈표 IV-1-21〉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만족도(2021년, 2022년)	132
〈표 IV-1-22〉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에 불만족한 이유	133
〈표 IV-1-23〉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여부	134
〈표 IV-1-24〉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 만족도	135
〈표 IV-1-25〉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에 만족하는 이유	136
〈표 IV-1-26〉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에 불만족하는 이유	137
〈표 IV-1-27〉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138
〈표 IV-1-28〉 유치원 교육과정 시간 구성(교육과정+방과후과정 이용)에 대한 만족도	139

〈표 IV-1-29〉 유치원 교육과정 시간 구성(교육과정+방과후과정)에 만족하는 이유	140
〈표 IV-1-30〉 유치원 교육과정 시간 구성(교육과정+방과후과정)에 불만족하는 이유	141
〈표 IV-1-31〉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인지비율	141
〈표 IV-1-32〉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률(2021년, 2022년)	142
〈표 IV-1-33〉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률	143
〈표 IV-1-34〉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만족도(2021년, 2022년)	144
〈표 IV-1-35〉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에 불만족한 이유	145
〈표 IV-1-36〉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147
〈표 IV-1-37〉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148
〈표 IV-1-38〉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의 수행 달성도 평가 (2020년, 2021년, 2022년)	150
〈표 IV-1-39〉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 (2021년, 2022년)	151
〈표 IV-1-40〉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로 응답한 이유	152
〈표 IV-1-41〉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가장 성과 미흡 과제 (2021년, 2022년)	153
〈표 IV-1-4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성과가 미흡한 과제로 응답한 이유	154
〈표 IV-1-43〉 자녀돌봄 시간 지원 부문의 성과분석 요소	155
〈표 IV-1-44〉 정책의 충분성 및 포괄성 분석	156
〈표 IV-1-45〉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인지도 (출산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156
〈표 IV-1-46〉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인지도(유연근무제)	157
〈표 IV-1-47〉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 (출산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159
〈표 IV-1-48〉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유연근무제)	160
〈표 IV-1-49〉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만족도(시간지원)(2021년, 2022년) ...	161
〈표 IV-1-50〉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자녀돌봄 시간지원)에 불만족한 이유	162

〈표 IV-1-51〉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163
〈표 IV-1-52〉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165
〈표 IV-1-5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 (2020년, 2021년, 2022년)	166
〈표 IV-1-54〉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정책 (2021년, 2022년)	166
〈표 IV-1-55〉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로 평가한 이유	167
〈표 IV-1-56〉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2021년, 2022년)	169
〈표 IV-1-57〉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로 평가한 이유	170
〈표 IV-1-58〉 전체 육아정책 성과가 가장 큰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173
〈표 IV-1-59〉 전체 육아정책 성과가 가장 미흡한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176
〈표 IV-1-60〉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 (2021년, 2022년)	178
〈표 IV-1-61〉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큰 과제로 평가한 이유	179
〈표 IV-1-62〉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2021년, 2022년)	181
〈표 IV-1-63〉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로 평가한 이유 ..	183
〈표 IV-2-1〉 분석변수	186
〈표 IV-2-2〉 분석변수 기초통계량	186
〈표 IV-2-3〉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설문변수	187
〈표 IV-2-4〉 상관관계: 교육보육돌봄에 대한 만족도 수준	188
〈표 IV-2-5〉 분석결과: 교육보육돌봄에 대한 만족도 수준	188
〈표 IV-2-6〉 상관관계: 초등돌봄에 대한 만족도 수준	189
〈표 IV-2-7〉 분석결과: 초등돌봄에 대한 만족도 수준	189
〈표 IV-2-8〉 상관관계: 육아지원에 대한 만족도 수준	190
〈표 IV-2-9〉 분석결과: 육아지원에 대한 만족도 수준	190

〈표 IV-2-10〉 분석변수	191
〈표 IV-2-11〉 분석변수 기초통계량	192
〈표 IV-2-12〉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설문변수	193
〈표 IV-2-13〉 상관관계: 교육보육돌봄에 대한 이용경험	194
〈표 IV-2-14〉 분석결과: 교육보육돌봄에 대한 이용경험	194
〈표 IV-2-15〉 상관관계: 초등돌봄에 대한 이용경험	195
〈표 IV-2-16〉 분석결과: 초등돌봄에 대한 이용경험	195
〈표 IV-2-17〉 상관관계: 육아지원에 대한 이용경험	196
〈표 IV-2-18〉 분석결과: 육아지원에 대한 이용경험	196
〈표 IV-2-19〉 분석변수	197
〈표 IV-2-20〉 분석변수 기초통계량	198
〈표 IV-2-21〉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설문변수	198
〈표 IV-2-22〉 상관관계: 교육보육돌봄에 대한 정책별 이용경험	199
〈표 IV-2-23〉 분석결과: 교육보육돌봄에 대한 정책별 이용경험	200
〈표 IV-2-24〉 상관관계: 초등돌봄에 대한 정책별 이용경험	201
〈표 IV-2-25〉 분석결과: 초등돌봄에 대한 정책별 이용경험	201
〈표 IV-2-26〉 상관관계: 육아지원에 대한 정책별 이용경험	202
〈표 IV-2-27〉 분석결과: 육아지원에 대한 정책별 이용경험	202
〈표 VI-1-1〉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247
〈표 VI-2-1〉 윤석열 정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요도	250
〈표 VI-2-2〉 윤석열 정부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요도	251
〈표 VI-2-3〉 윤석열 정부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요도	253
〈표 VI-2-4〉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1순위)	254
〈표 VI-2-5〉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1순위)(제특성별)	256
〈표 VI-3-1〉 향후 가장 중요도가 높은 정책 범주	258
〈표 VI-3-2〉 향후 가장 중요도가 높은 정책 범주로 판단한 이유	259
〈표 VI-3-3〉 윤석열 정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요도	262
〈표 VI-3-4〉 윤석열 정부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요도	263
〈표 VI-3-5〉 윤석열 정부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요도	265
〈표 VI-3-6〉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1순위, 2순위, 1+2순위)	266

〈표 VI-3-7〉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으로 선택한 이유	268
〈표 VI-3-8〉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	270
〈표 VI-3-9〉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육아 및 유아교육·보육·돌봄의 정책 방향성(정책대상)	274
〈표 VI-3-10〉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육아 및 유아교육·보육·돌봄의 정책 방향성(정책조합)	275
〈표 VI-3-11〉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육아 및 유아교육·보육·돌봄의 정책 방향성(보편적vs선별적 지원체계)	275
〈표 VI-3-12〉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육아 및 유아교육·보육·돌봄의 정책 방향성(추가비용 부담vs비용지원 강화)	276
〈표 VI-3-13〉 유보통합의 필요성	277
〈부록 표 1-1〉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의 성과분석 요소	298
〈부록 표 1-2〉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의 성과지표별 산식(측정방법) 및 이용자료(추후보완)	299
〈부록 표 1-3〉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	301
〈부록 표 1-4〉 긴급돌봄 이용 이유	302
〈부록 표 1-5〉 긴급돌봄 미이용 이유	304
〈부록 표 1-6〉 코로나19 긴급 육아 지원 만족도(2021년, 2022년)	305
〈부록 표 1-7〉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에 불만족한 이유	306
〈부록 표 1-8〉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불만족한 이유	306
〈부록 표 1-9〉 가족돌봄휴가에 불만족한 이유	307
〈부록 표 1-10〉 2021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에 불만족한 이유	307
〈부록 표 1-11〉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 육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 ..	308
〈부록 표 1-12〉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	310
〈부록 표 1-13〉 원격수업에 불만족한 이유	311
〈부록 표 1-14〉 (영유아 부모) 코로나19로 인한 기관보육, 등원수업 등 대면활동의 감소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 ...	311
〈부록 표 1-15〉 (초등 부모)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감축, 원격수업 확대가 교육격차 확대 및 학습공백 발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 ...	313

〈부록 표 1-16〉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양육 부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부모교육 등 가정양육 역량 강화 정책의 필요성	314
〈부록 표 1-17〉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책	315
〈부록 표 1-18〉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 (2021년, 2022년)	317
〈부록 표 1-19〉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정책에서 정책 효과성이 가장 높은 과제(2021년, 2022년)	317
〈부록 표 1-20〉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정책에서 정책 효과성이 가장 높은 과제로 판단한 이유	318
〈부록 표 1-21〉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2021년, 2022년)	320
〈부록 표 1-22〉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정책에서 정책효과성이 낮은 육아 지원 정책으로 선택한 이유	321



그림 목차

[그림 I-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5개년 연도별 연구 내용	15
[그림 II-2-1] 저출산 분야(전문가, 달성도)	84
[그림 III-2-2] 저출산 분야(전문가, 달성도)	84
[그림 III-2-3] 저출산 분야(부모, 만족도)	86
[그림 III-2-4] 저출산 분야(부모, 만족도)	86
[그림 III-2-5] 유아교육·보육·돌봄 분야(전문가, 달성도)	88
[그림 III-2-6] 유아교육·보육·돌봄 분야(전문가, 달성도)	88
[그림 III-2-7] 아동 분야(전문가, 달성도)	89
[그림 III-2-8] 아동 분야(부모, 달성도)	90
[그림 II-3-1]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행 평가(종합)	104
[그림 VI-2-1] 맞춤형 보육사업(정책) 개발 절차(안)	291
[그림 VI-2-2] KICCE 양육환경 컨설팅단(가칭)	292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의 육아정책은 아동수당의 도입 및 지급대상 확대, 보육지원체계 개편,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등 큰 틀에서의 제도적 구축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꾀하여 정책 실행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함.
- 「2018~2022년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는 5개년 연구로서 2018년에 시작하여 2022년까지 매년 연속적으로 현 정부의 육아정책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2022년은 새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전 문재인 정부의 육아정책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및 분석하여 향후 육아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해야할 시점임.
- 따라서 본 연구는 2021년 수행된 육아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지난 4년 동안 시행된 정부의 육아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새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1~4차년도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함. 기존 성과지표를 수정 및 보완하여 5차년도에 수행할 성과지표를 정리함.
- 2021년도에 추진한 각 부처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육아정책 자료 및 성과평가 자료들을 이용하여 정부가 추진한 육아정책의 이행 수준을 분석함.
- 2021년의 현안 육아정책 또는 부처의 당면 정책과제를 심층 분석하여, 당면 현안에 대해 정책 방안 수립을 모색함.
- 2021년에 추진한 육아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행 수준을 진단하여 향후

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함.

- 2018~2022년의 5년 동안 추진된 육아정책의 성과를 종합하여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다. 연구방법

- 통계자료, 법령, 정부발간자료(각 부처 업무계획, 보도자료 등)를 분석하고, 1~4차년도 과제 및 관련 선행연구 문헌들을 고찰함.
-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목표와 성과달성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정책들의 성과 분석 및 계량분석을 통한 정책의 성과분석
- 부모, 원장, 교사 등 육아정책 수요자 대상으로 총 3개 그룹으로 나눠 심층면담조사(FGI)를 실시
- 전문가와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2. 육아정책 및 성과분석(부처별)

가. 보건복지부

-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임신·출산 건강 지원 과제에서 성과지표 중 ‘난임·우울증상담센터 대상자 만족도’는 증가추세임.
- 아동수당 지급 과제의 성과지표인 ‘아동수당 지원 만족도’는 2018년 71.9점, 2019년 71.5점, 2020년 74.6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21년도에 목표 수치인 73.0점으로 하락
-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목표의 관리과제인 ‘보호대상아동 지원체계 강화 및 아동인권증진’의 경우, 성과지표 중 입양인 사후서비스 만족도가 2018년에 92.0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2019년 90.4점으로 하락했고, 이후 2020년 90.6점, 2021년 91.4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임.
- 동 성과목표 중 ‘보호대상아동 치료재활, 자립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를 위한 과제의 경우 중 성과지표가 ‘보호대상 아동 자립률’인 경우, 2018년 79.6%, 2019년 80.6%, 2020년 81.1%, 2021년 81.7%로 매해 증가

- 동 성과목표 중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을 위한 관리과제의 경우, 아동안전사고예방 교육 만족도가 2018년 94.0%에서 2019년 96.3%로 상승하였다가, 2020년 95.8%로 하락 후, 2021년에 다시 96.2%로 상승
-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에서는 수요자중심의 무상교육기반 강화 과제 중 성과지표 ‘보육료 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2018년 80.9%에서 2019년 81.8%로 증가하다가, 2020년 74.1%로 큰 하락을 보였고, 2021년에 다시 81.6%로 회복
- 동 성과목표 중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과제의 경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비중’ 성과지표는 2018년 9.2%, 2019년 11.6%, 2020년 14.0%, 2021년 16.3%로 지속적인 상승

나. 교육부

-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교육부에서 시행한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유·초중등교육의 교육자치 강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 기반 구축 과제 중 성과지표가 ‘권한 이양 정비과제 이행 개수’인 경우, 2018년 96개, 2019년 103개, 2020년 122개, 2021년 131개 과제 중 6개 과제 미완료로 지속적인 개선을 보임.
-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로 ‘유아교육 국가 책임 강화 및 유치원 투명성 지속 제고’ 관리과제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충 수’는 2018년 25.5%, 2019년 28.5%, 2020년 29.8%, 2021년 31.0%로 매년 증가
- 방과후 돌봄 정책 활성화에 관한 과제로서 성과지표인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수는 2018년 26.1만 명에서 2019년 29.0만 명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에는 25.6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락을 반복

다. 여성가족부

-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가족정책 기반구축 단위사업의 경우 성과지표 중 ‘가족친화인증 기업(관)수’는 2018년 3,328개, 2019년 3,833개, 2020년 4,340개, 2021년 4,918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경우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성과지표에

서도 2018년 89.9점, 2019년 90.2점, 2020년 90.6점, 2021년 91.4점으로
매해 증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운영 사업에서의 성과지표인 ‘양육비 이행률’ 또한 2018년 32.3%, 2019년 35.6%, 2020년 36.1%, 2021년 38.3%로 매해 증가하였고, 한부모가족 지원(기금) 사업의 성과지표인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만족도’ 역시 2018년 74.6점, 2019년 79.4점, 2020년 80.5점, 2021년 80.6점으로 매년 개선됨.
- 가족서비스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전화센터 상담실적’도 매년 증가함(2018년 132,115건, 2019년 155,641건, 2020년 161,466건, 2021년 194,802건).

라. 고용노동부

-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데이터 기반의 정책 대응과 고용문화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로서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 노력’ 관리과제 중 성과지표로서 ‘위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 동 과제 중 성과지표로서 ‘유연근무제 지원인원’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2018년 6,571명, 2019년 6,824명, 2020년 30,088명, 2021년 39,194명).
- ‘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 성과 목표 중 남녀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과제에서도 모든 성과지표에서 매년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고, ‘남성 육아휴직자수’는 2018년 17,665명, 2019년 22,297명, 2020년 27,423명, 2021년 29,041명,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 수 2018년 1,111개, 2019년 1,153개, 2020년 1,216개, 2021년 1,248개로 매해 증가

3. 육아정책 성과분석 및 국정과제 평가(2~4차)

가. 육아정책의 범주

- 1차년도 연구는 문제인 정부 초창기로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중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육아정책 부문을 선정하였고, 2차년도 연구는 정부의 정책 수행을 기반으로 정책 계획, 목표 대비 산출(혹은 결과), 성과에 대

한 평가를 핵심으로 논의하였고, 중장기 정책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안

- 3차년도 연구는 2차년도의 분야 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저출산 정책 분야의 범주 개수를 다소 단순화하고 유아교육 보육돌봄정책 범주의 정책은 보완 및 세분화하여 제시
- 4차년도의 육아정책 범주는 지원 부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저출산 정책에 포함되었던 현금 및 의료비 지원과 자녀돌봄 시간 지원을 별도의 부문으로 구분함.

나. 육아정책 성과분석

- 2~4차 국정과제 평가에 대한 결과를 공통된 항목에 대해 종합해 보면, 지속적인 긍정비율의 상승을 보인 과제는 ‘(9)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과 ‘(10)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구현’으로 나타남.
- 반면에 지속적으로 긍정비율의 하락을 보인 과제는 ‘(1) 일하며 키우기 행복한 나라’로 나타남.

다. 육아정책 성과 제고 방안

- 1차년도 연구는 10대 복합·혁신 핵심정책 과제와 5대 유아교육보육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추진 방안을 제안
- 2차년도 연구는 국정과제 및 정책과제 별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육아정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큰 틀로 ‘시간지원의 실행력 강화’, ‘현금지원의 효과성 검증 및 후속정책 설계’, ‘초등시기 다양한 수요 충족과 양질의 프로그램/환경 구성’, ‘육아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어젠다 설정’ 제안
- 3차년도 연구는 육아정책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저출산 정책/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아동정책 분야 별로 성과 제고 방안을 제시
- 4차년도 연구는 부문별 육아정책(현금 및 의료비 지원정책,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정책, 자녀돌봄 시간 지원정책)과 2020~2021년 이슈인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여 성과 제고 방안을 제안

4. 육아정책 성과분석(5차): 정책총괄평가

가. 부모

-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실제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현금-서비스-시간 지원 정책 중 1개를 선택하게 한 결과,
 - ‘육아휴직’과 ‘아동수당’에 대한 긍정응답이 각 28.0%, 2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택근로(유연근무제)’에 대한 긍정응답이 8.6%로 많았으며, 이를 시차출퇴근(유연근로제) 응답 3.6%와 합칠 경우 ‘유연근로제(재택근로, 시차출퇴근)’에 대한 긍정응답은 12.2%로 나타남.
 - 시간지원 및 현금지원의 확대에 대한 부모의 긍정평가가 큼.
-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적은(실제 육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현금-서비스-시간 지원 정책 중 1개를 선택하게 한 결과,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아동수당’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각 18.9%, 10.9%, 9.4%로 많았다. 그다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유연근무제)’에 대한 부정응답이 8.9%, 7.4%로 많음.
 - 앞서 살펴본 긍정 성과평가로서의 시간지원 및 현금지원에 대한 부모의 긍정응답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남.

나. 전문가

-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크게 보인 과제를 지정하도록 한 조사 결과는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가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를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강화, 육아휴직제도 채택 직종 확대, 육아휴직으로 인한 작업손실 및 대체 등에 대한 대책마련 등의 실질적 대응 모색, 이용자 확대에 의한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 의식 강화, 자녀 성장에 긍정적 기여를 한 점 등을 제시함.
-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를 지정하도록 한 조사 결과는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가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

조교사 지원 확대 등)’가 14.4%,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가 10.6%로 나타남.

-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에 대한 응답 비율이 12.2%p만큼 크게 상승
- ‘보육서비스 질 제고’ 항목도 7.4%p 정도 상승한면, 2021년에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로 평가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0%에서 2022년 9.6%로 10.4%p만큼 크게 하락
-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교사의 양성과 정과 질에 대한 격차, 국가적 재정 지원 차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차이 등이 존재하고 실질적인 격차 완화에 대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
-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부족, 대체교사 지원의 어려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과중 업무 등이 제시됨.
- ‘육아휴직제도’를 선택한 이유로는 사회와 기업의 인식 부족이 제시됨.

다. 정책분석

□ 이용만족도 분석(순서화 로짓모델)

- 맞벌이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초등돌봄 정책의 만족도 수준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연령(막내자녀)이 육아지원정책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경험 유무 분석(로짓모델)

- 자녀연령(막내자녀), 가구 월평균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교육보육돌봄 정책에 대한 이용경험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연령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경험 정책 분석(OLS)

- 자녀연령(막내자녀), 응답자 연령, 가구 월평균 소득은 교육보육돌봄 정책의 정책별 이용경험 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초등돌봄 정책의 정책별 이용경험 수와 가구 월평균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관계가 있음.
-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정책별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자녀연령(막내자녀), 응답자 성별, 맞벌이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5. 육아정책 국정과제 평가(5차)

가. 부모

-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중요도가 높은 국정과제로, ‘의료비지원’과 ‘건강지원’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70% 내외로 나타남.
- ☐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에 관한 12개 국정과제 중 중요도가 가장 큰 것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81.4%(4.4점/5점척도)로 나타남.
- ☐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2개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적용대상 확대 및 난임 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양립 지원과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에 대한 중요도 응답이 80.9%로 높았음.

나. 전문가

- ☐ 향후 중요도가 가장 높은 정책 범주로는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이 67.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7.3%,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5.4% 순으로 나타남.

6. 정책제언

가. 현금 지원의 선별/보편지원 방향성 확립

- ☐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의 방향성은 선별적 확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
- ☐ 현금지원의 경우 적절한 규모가 지원될 때 만족도가 다른 정책들에 비해서 매우 크게 증가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필요

- 이에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한 정책을 분류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나. 정책 인지도 및 이용률 수준 파악에 따른 정책성과의 집중 관리

- 인지도가 높지만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원 정책을 우선 파악하고, 이렇게 파악된 정책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연계를 통한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성과관리가 필요

다. 자녀돌봄 시간지원 사각지대 감소 및 정책 활용도 지속적 제고

- 중소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육아지원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고, 남성의 육아참여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입 필요

라. 지속적으로 요구도 높은 정책에 대한 재평가 및 재구조화

- 보육의 질 제고에 대한 높은 요구는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이었고, 특히 만 0세에 대한 비율 개선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
-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의 요구도가 높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적극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요구도 높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

마. 육아지원정책 관련 데이터 기반화 및 정보수집 체계 강화

- 사회적 약자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요구가 79.5%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포괄적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정보 수집의 차원이 보다 세밀하게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함.

바. 다양한 노동유형의 양육 부모 지원 위한 맞춤형 정책 강화

-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원하는 형태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이때 부모의 직접 돌봄의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 예를 들면, 부모의 직접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육을 위한 절대적 시간확

보가 가능해야 하며, 이러한 시간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해진 노동유형을 고려해야 할 것

사. 중앙-지방 연계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추진

- ☐ 지역별 현황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보육기관 분포, 영유아 인구규모, 지자체 담당인력, 보육서비스 인프라 등) 분석
- ☐ 이를 바탕으로 보육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포괄적 지역분류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러한 개념을 법제화 하여 향후 보육정책 및 사업수립에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함.
- ☐ 수립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분류를 시행하고, 분류 지역그룹별 특성을 분석
- ☐ 중앙정부는 지역그룹별 맞춤형 사업의 큰 틀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세부적인 시행사업(정책)계획을 수립
- ☐ 이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 비중과 편성을 배분하여 보육재정의 효율화를 달성

아. 맞춤형 보육컨설팅 제공을 통하여 보육의 질 제고 강화

- ☐ 소규모, 농어촌 등 여러 특수한 여건에 놓여 있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을 고려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하여 제공
- ☐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한 어린이집의 경우 전환의 조건으로 정기적인 보육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포함

자. 인구유입 정책과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연계

- ☐ 인구소멸 위기로 지역 혹은 농촌으로의 청년유입 사업 및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 및 정책의 경우 단순하게 일자리 사업이나 정착금 지원에 한정되어 있는 경향
- ☐ 유입된 청년이 정착하여 이후의 삶을 그 지역에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결혼/출산/양육에서 어려움이 없는 환경 조성 방안도 반드시 연계하여 수립

I

서론

- 0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02 연구의 목적
- 03 연구의 내용
- 04 연구의 추진방법
- 05 연차별 주요 연구의 성과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 이후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8년 0.98명을 기록하며 1.00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2021년에는 최저수준인 0.84명을 기록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기조는 고착화 된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2021: 4). 이러한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육아지원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정부의 육아정책은 아동수당의 도입 및 지급대상 확대, 보육지원체계 개편,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등 큰 틀에서의 제도적 구축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꾀하여 왔으며, 정책 실행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정책 수요자들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양육비용 지원 확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이정원 외, 2018: 577, 582-586, 615). 아울러 정책 수요자들은 부모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며, 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원 외, 2018: 577, 616).

「2018~2022년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는 5개년 연구로서 2018년에 시작하여 2022년까지 매년 연속적으로 현 정부의 육아정책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8년 1년차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의 범위를 유아교육과 보육 위주에서 일-가정양립의 저출산 정책을 위주로 포괄하여 확대·분석하였다(이윤진, 양미선, 김문정, 2018). 2019년 2년차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는 한편, 2019년 정책 수행의 시점에서 육아정책의 범주를 제시하고 성과평가의 틀과 지표를 구성 및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저출생과 아동, 돌봄, 유아교육과 보육의 영역에서 정책의 설계와 수행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안했다. 2020년 3년차 연구에서는 2년차 연구에서 개발한 성과평가의 틀과 지표를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이를 적용하여 저출생, 아동, 돌봄, 유아교육, 보육 등 육아정책

의 각 영역에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주요 현안, 성과가 부진한 정책 및 신규 도입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 개선 방향 및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2021년 4년차 연구에서는 3년차 연구에서 개발한 성과평가의 틀과 지표를 수정하고 보완하였는데, 이를 적용하여 육아정책의 각 영역에서 성과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육아지원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 문재인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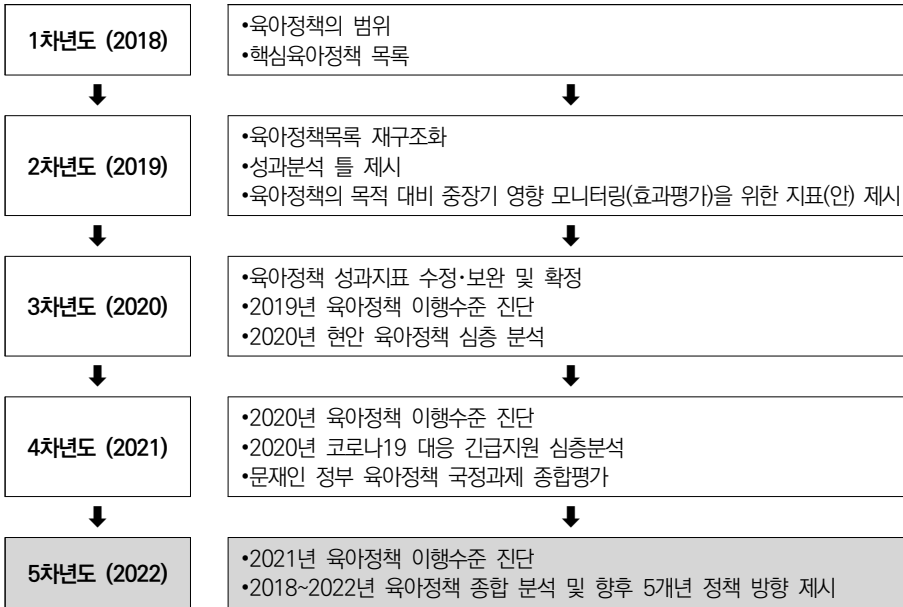
2022년은 새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전 문재인 정부의 육아정책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및 분석하여 향후 육아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해야할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1년 수행된 육아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지난 4년 동안 시행된 정부의 육아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새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현황 대비 추진이 미약한 과제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육아정책의 실행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5년 연속과제 중 5차년도에 해당하는 정책연구로 4차년도(2021년) 연구에서 수정·보완한 육아정책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2021년에 정부가 추진한 육아정책을 진단 및 분석하고, 미비한 점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향후 개선과제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5년 동안의 육아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중점 현안을 심층 분석하고 국정과제의 성과 및 미비점을 정리함으로써 그동안 추진된 육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육아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I-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5개년 연도별 연구 내용



3.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1~4차년도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한다. 기존 성과지표를 수정 및 보완하여 5차년도에 수행할 성과지표를 정리한다.

둘째, 2021년도에 추진한 각 부처별 육아정책을 수합하고 분석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서 추진한 육아정책 자료 및 성과평가 자료들을 이용한다.

셋째,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2021년에 정부가 추진한 육아정책의 이행 수준을 분석한다.

넷째, 2021년의 현안 육아정책 또는 부처의 당면 정책과제를 심층 분석하여, 당면 현안에 대해 정책 방안 수립을 모색한다.

다섯째, 2021년에 추진한 육아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행 수준을 진단하여 향후 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여섯째, 2018~2022년의 5년 동안 추진된 육아정책의 성과를 종합하여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4. 연구의 추진방법

가. 문헌연구

통계자료, 법령, 정부발간자료(각 부처 업무계획, 보도자료 등)를 분석하고, 1~4차년도 과제 및 관련 선행연구 문헌들을 고찰한다.

나. 성과 분석

1~4차년도 연구기간 동안 분석한 육아정책 중에서 주요 공통된 정책에 대한 성과목표와 성과달성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정책들의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계량분석을 통한 정책의 성과를 분석한다.

다. 면담조사

부모, 원장, 교사 등 육아정책 수요자 대상으로 총 3개 그룹으로 나눠 심층면담 조사(FGI)를 실시한다.¹⁾ 조사 내용으로는 현재 육아정책에 대한 만족도, 문제점, 개선점 등이 있다. 또, 저출산 대응 및 출산양육지원체계의 수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육아정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다.

〈표 I-4-1〉 면담조사 개요

구분	부모	기관 원장	기관 교사
대상	1) 영유아 부모 2) 초등 저학년(1~3학년) 자녀를 둔 부모	1) 어린이집 원장 2) 유치원 원장	1) 어린이집 교사 2) 유치원 교사 3) 돌봄(초등돌봄 포함) 종사자
면담 내용	• 자녀 육아 실태 및 현황: 기관 이용, 육아 시 어려운 점, 만족감 등 • 정부에서 가장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 저출산정책/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에 대한 생각 • 정부에서 가장 잘 추진된 정책 •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변화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	

1) 면담질문지는 부록4에 수록함.

구분	부모	기관 원장	기관 교사
	체감하는 정책 • 미흡한 정부의 육아정책 • 주요 육아정책 이용 여부, 만족도 및 각 정책에 대한 평가 •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수요자로서의 의견, 제안하고 싶은 정책	• 정부 정책에서 미흡한 점 • 주요 육아정책 (저출산정책/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아동정책 등) 만족도 및 각 정책에 대한 평가 •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면담조사에 참여한 부모(영유아/초등자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유치원 원장/교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I-4-2〉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부모)

구분	부/모	지역	연령(만)	취업/전업	자녀 연령 및 이용기관
영유아 부모 (8.2)	모	서울	37세	전업	① 24개월(가정양육)
	모	서울	36세	취업 (육아휴직)	① 만3세(민간어린이집) ② 17개월(민간어린이집_0세)
	모	서울	37세	전업	① 만2세(국공립어린이집) ② 24개월(국공립어린이집_만1세)
	모	경기	40세	전업	① 만6세(공립단설유치원) ② 만4세(공립단설유치원)
초등 부모 (8.2)	모	경기	36세	취업 (육아휴직)	① 7세(초등1학년) ② 15개월(가정어린이집_0세)
	모	서울	37세	전업	① 만10세(초등4학년) ② 만7세(초등1학년)

〈표 I-4-3〉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어린이집 원장)

구분	소재지	유형	기관규모	정원/현원	교직원
수도권 어린이집 원장 (8.23)	서울	국공립 (야간연장)	만1세 1학급 만2세 2학급 만3세 1학급 만4세 1학급 만5세 1학급 유아혼합 1학급	정원 56 현원 56	총 13 원장 1 보육교사 10 조리원 1
	서울	민간	만1세 2학급 만2세 2학급 만3세 1학급 만4세 1학급 만5세 1학급 유아혼합 1학급	정원 79 현원 74	총 15 원장 1 보육교사 11 조리원 1

구분	소재지	유형	기관규모	정원/현원	교직원
	서울	가정 (서울형)	만0세 1학급 만1세 2학급 만2세 2학급	정원 20 현원 20	총 8 원장 1(보육교사겸직) 보육교사 7
읍면 어린이집 원장 (8.23)	경북 칠곡	국공립	만0세 1학급 만1세 2학급 만2세 2학급	정원 25 현원 25	총 11 원장 1 보육교사 7 조리원 1
	경북 칠곡	민간	만1세 2학급 만2세 1학급 만3세 2학급 만4세 1학급 만5세 1학급 영아혼합 3학급 유아혼합 2학급	정원 94 현원 91	총 21 원장 1 보육교사 17 조리원 2
	경북 칠곡	민간	만0세 3학급 만1세 2학급 만2세 3학급	정원 39 현원 33	총 11 원장 1(보육교사겸직) 보육교사 10

〈표 I-4-4〉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어린이집 교사)

구분	소재지	설립유형	담당학급	총 보육경력	현 기관 근속기간
보육 교사 (7.29)	서울시	국공립	만0세	13년	3년
	서울시	국공립	만3,4세	8년6개월	8년6개월
	서울시	민간	만3세	15년	4년
	서울시	가정	만1세	13년	3년3개월

〈표 I-4-5〉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유치원 원장)

구분	소재지	유형	기관규모	정원/현원	교직원
유치원 원장 (8.23)	서울시	사립사인	만3세 3학급 만4세 4학급 만5세 3학급	정원 300 현원 272	총 32 원장 1 원감 1 교사 21 사무직원 9
	서울시	사립법인	만3세 2학급 만4세 3학급 만5세 4학급	정원 169 현원 154	총 16 원장 1 원감 1 교사 11 영양교사 1 사무직원 2

〈표 I-4-6〉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유치원 교사)

구분	소재지	설립유형	담당학급	총 경력	현 기관 근속기간
유치원 교사(8.27)	서울	사립법인	만5세	10년	10년
	서울	사립사인	만3세	9년	2년

라.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전문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²⁾ 2018~2022년 동안 수행한 육아정책의 성과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관련 분야(저출산, 아동, 가족, 복지, 교육, 보육, 경제, 고용 정책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육아서비스의 이용 여부, 만족도 및 육아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유아 자녀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표 I-4-7〉 설문조사 개요

구분	전문가 조사	부모 조사
대상	전문가 100명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1,000명
조사 목적	2018~2022년에 추진한 육아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요도 평가	육아서비스에 대한 이용 여부, 만족도 및 육아 정책에 대한 의견 등 파악

1) 전문가 설문조사

전문가 조사에는 총 104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응답자 특성과 설문조사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4-8〉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전체	100.0 (104)		
성별		분야	
남성	13.5 (14)	유아교육	33.7 (35)
여성	86.5 (90)	보육	41.3 (43)
연령		기타	25.0 (26)
30대	1.9 (2)	전공	
40대	24.0 (25)	유아교육/교육	53.8 (56)
50대	54.8 (57)	보육/가족/아동	27.9 (29)
60대 이상	19.2 (20)	사회복지/행정/경제/기타	18.3 (19)

2) 설문조사표(전문가/부모)는 부록2, 3에 수록함.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전공		현재 직종	
사회복지	9.6 (10)	대학 교수	76.9 (80)
정책/행정	2.9 (3)	연구기관 연구원	6.7 (7)
유아교육/교육	53.8 (56)	현장 전문가	12.5 (13)
보육	1.9 (2)	기타 전문가	3.8 (4)
가족	3.8 (4)		
아동	22.1 (23)		
경제	2.9 (3)		

〈표 I-4-9〉 전문가 설문조사 항목

조사영역	세부 조사 항목
I. 육아정책의 성과평가: 국정과제 및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성과평가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실행이 가장 잘된 과제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실행이 가장 미흡한 과제 - 육아정책 정책범주 별 목표 달성도 -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 정책 -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 정책
II.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효과성 평가 - 가장 중요하고 집중해야 할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을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정책 과제 제안
III.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향후 육아정책 개선 제안	- 향후 가장 중요도가 높은 정책범주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육아정책 과제 중요도 평가 -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 제안 -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방향성 - 유보통합의 필요성

2) 부모 조사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 5월 주민등록인구 현황자료에 근거하여 아동연령별(영유아 및 초등 부모를 연령별로 구분),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로 비례 배분하여 표집하였다.

실제 조사에 참여한 부모는 총 1,087명이며, 응답자 특성과 설문조사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4-10〉 부모 조사 대상 분포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초1)	8세 (초2)	9세 (초3)	합계
대도시	15	31	33	37	39	43	49	53	53	53	406
중소도시	17	33	36	40	44	48	54	59	58	58	447
농어촌	5	11	12	14	14	16	18	19	19	19	147
합계	37	75	81	91	97	107	121	131	130	130	1,000

〈표 I-4-11〉 부모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전체	100.0 (1,087)		
성별		응답자 최종학력	
아버지	28.2 (307)	고졸 이하	11.7 (127)
어머니	71.8 (780)	대졸 이상	88.3 (960)
지역 구분		취업모 여부	
대도시	38.4 (417)	취업	37.3 (403)
중소도시	44.1 (479)	휴직 중	9.9 (107)
읍면	17.4 (189)	학업 중	0.9 (10)
연령		구직 중	11.3 (122)
20대	2.1 (23)	미취업	40.5 (437)
30대	51.0 (554)	맞벌이 여부	
40대 이상	46.9 (510)	맞벌이	90.4 (983)
첫째아 기준		외벌이	5.6 (61)
초등부모	19.1 (208)	해당없음(한부모 등)	4.0 (43)
유아부모	43.1 (468)	가구내 여성취업	
영아부모	37.8 (411)	전일제 취업	81.6 (416)
모든자녀기준(중복응답)		시간제 취업	18.4 (94)
초등부모	34.5 (375)	취약가구 여부	
유아부모	60.0 (652)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2.7 (29)
영아부모	37.8 (411)	해당 없음	97.3 (1,058)
서비스이용여부		다문화 여부	
어린이집 이용자	81.4 (877)	다문화	1.1 (12)
유치원 이용자	50.6 (545)	다문화 아님	98.9 (1,075)
초등 돌봄 전반	31.4 (338)	한부모 여부	
양육수당 이용자	66.9 (721)	한부모	3.6 (39)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아동수당 이용자	96.1 (1,036)	한부모 아님	96.4 (1,048)
모 근로단축 이용자	15.0 (162)	소득 기준	
부 근로단축 이용자	4.3 (46)	250만원 이하	6.2 (67)
모 육아휴직 이용자	35.3 (380)	251~350만원	15.9 (173)
부 육아휴직 이용자	9.9 (107)	351~500만원	28.2 (306)
		501~600만원	17.3 (188)
		601만원 이상	32.5 (353)

〈표 I-4-12〉 부모 설문조사 항목

조사영역	세부 조사 항목
I. 응답자 특성	• 응답자 연령, 성별, 혼인상태, 취업상태, 거주 지역, 월평균 소득 • 자녀 수 및 자녀 연령 • 기초생활수급 및 법정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 여부 • 월평균 가구소득 및 월평균 자녀양육비용
II. 육아 서비스 및 지원 제도 만족도	• 영유아 교육·보육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불만족 이유 •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여부, 보육시간 개편 만족도, 이유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유치원 교육시간 구성 만족도, 이유 •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불만족 이유 •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인지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불만족 이유
III. 코로나19 긴급 육아 지원의 만족도	•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이용 경험, 이유, 만족도, 불만족 이유 •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 육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 • 원격수업 만족도, 불만족 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의 감소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감축 및 원격수업 확대가 교육격차 및 학습공백 발생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양육시간 증가에 따라 부모교육 등 가정양육 역량 강화 지원 정책의 필요성
IV. 문재인 정부 육아정책 성과에 대한 질문	• 문재인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과제 • 문재인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과제
V. 윤석열 정부 육아정책 중요도에 대한 질문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 • 정부의 육아지원 전반에 대해 제언과 의견

마.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성과지표를 보완하고 새로 필요한 지표를 논의한다. 정책방안을 자문한다.

5. 연차별 주요 연구의 성과

총 5차에 걸친 연속 연구인만큼 앞선 1~4차년도 연구에서는 각 연차별로 주요 육아정책 설계와 추진 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의 범위를 설정하고, 2차년도 연구에서는 성과평가의 틀과 지표를 개발하였다. 3차와 4차년도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틀과 지표를 수정 및 보완하여 정책을 분석하였다. 각 연차별 주요 연구성과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5-1〉 육아정책 분석 주요 성과(연차별)

연도	성과 요약
1차년도 연구(2018)	• 5년간 다룬 육아정책의 목록과 핵심 정책과제 도출 • 저출산 정책을 포함한 광의의 육아정책 범위 설정 • 정책수요자/전문가 조사를 통한 육아정책 적합성 평가로 향후 개선과제 도출 및 제안
2차년도 연구(2019)	• 1차년도에 도출된 육아정책의 범주와 목록/구성 검토 • 육아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의 틀과 지표 개발 • 2018년 정책 설계 및 수행 분석과 평가 • 향후 3년 우선 과제 도출 및 정책 제언
3차년도 연구(2020)	• 2차년도에 개발한 성과평가의 틀과 지표 수정·보완 • 2019년 정책 설계 및 수행 분석과 평가 •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 • 향후 3년 우선 과제 도출 및 정책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4차년도 연구(2021)	• 3차년도에 적용한 성과지표 수정·보완 • 2020년 정책 수행 분석과 평가 • 2020년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 심층분석 • 4년 동안의 육아정책 국정과제 종합 평가 및 개선 방안 제시

II

육아정책 및 성과분석(부처별)

- 01 보건복지부
- 02 교육부
- 03 여성가족부
- 04 고용노동부
- 05 부처별 정책 및 성과지표 취합

II. 육아정책 및 성과분석(부처별)

본 장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에 대한 각 부처의 육아정책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각 부처의 자체성과분석(평가) 결과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보건복지부

가. 2018년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임신 및 출산지원 강화’ 과제에서는 자체평가 ‘부진’의 결과가 나왔고, ‘아동수당 지급’ 과제에서는 성과지표인 ‘아동수당 지원 만족도’에서 71.9점을 달성하여 2018년 목표치(70점)를 초과 달성하여 ‘우수’의 자체평가 결과를 얻었다.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목표에 관리과제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의 경우, ‘보통’의 결과가 나왔으며 당해 연도 목표치(‘보호대상 아동 자립률’ 77.5%, ‘입양 정보 DB 구축률’ 100%)보다 높은 수치(각각 80.8%, 100%)를 보였다. 동 성과목표에 ‘아동권리 및 아동안전 증진’의 경우 ‘미흡’ 결과가 나왔으며, 성과지표인 ‘재학대 발생률’, ‘실종아동 가족 인계율’, ‘아동안전사고예방 교육 참여자 수’, ‘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면에서 목표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반면 ‘아동인권증진활동 참여 아동 수’의 경우 2018년도 목표 1,500명 보다 172명 낮은 1,328명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의 성과목표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무상교육기반 강화’ 과제가 ‘우수’하였으며, 성과지표 ‘보육료지원 만족도’와 ‘시간제 보육반 수’ 모두 목표치보다 높은 성과가 나타났다(71.5%→74.7%, 443개→443개).

〈표 II-1-1〉 2018 보건복지부 성과 목표 및 실적

2018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 보고서	자체 평가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2018 목표치	지표종류		2018 실적	성과	평가		
					정량화	성격					
Ⅲ. 저출산 극복과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1.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①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효과성(공통) ② 저출산 대책 보완	'18년 국민인식조사 중 정부정책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효과가 있다는 답변 비율 보완계획 수립여부	69.3	정성	신출	64.9	미흡		
		① 난임시술지원 만족도	가정경제도움(60점) + 서비스 만족도(40점)	74.0	정성	신출	76.3				
		② 고위험 임신부 지원자 증가율	(당해 연도 지원자수-전년도 지원자수) / 전년도 지원자수 × 100	22	정량	결과	13.3				
		③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자 지원율	(당해 연도 지원자수-전년도 지원자수) / 전년도 지원자수 × 100	1	정량	결과	16.7				
	2. 임신·출산지원 강화	④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미숙아는 조산아, 저체중아	미숙아 지원자수/미숙아수×100 *미숙아로 진단받아 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아수	80.0	정량	결과	85.1	부진			
		③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상의 연도별 확충 계획 나홀로 있는 시간이 감소한 아동수/다함께돌봄 이용 아동수	17	정량	투입	17				
		④ 아동수당 지급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된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만족도 평균	50%	정량	결과					
		70점	정성	결과	71.9	우수					
	2.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 횟수(회) ② 보호대상 아동 자립률(%) ③ 입양정보 DB구축률(%)	자지체별 위원회 개최횟수의 총합/243(자지체수) (퇴소아동 중 취업자 및 진학자 수) / 당해 연도 아동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퇴소 아동 × 100 (당해 연도까지 누적 구축 건수) / 전체구축대상DB 건수×100	1	정량	과정	-	80.8	100	보통

2018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 보고서	자체 평가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2018 목표치	지표종류		실적	결과
					정량화	성격		
4. 영유아가 출건고 부모님이	②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① 지역아동센터 이용 서비스 만족도(점)	지역아동센터 이용서비스 만족도=Σ이용자별 만족도 × 20/만족도 조사 참여자 수 · 대상: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이용아동 · 표본수: 시설 전체 이용아동의 약 10% · 시기: 연도말 · 문항: 프로그램, 지도자, 주변환경, 도움, 전반적 만 족도 등 5개 항목 26개 문항	90.5	정성	결과	90.6	다소 미흡
		② 드림스타트 지원 아동의 행복감(점)	드림스타트 사업 효과성 연구 시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	74.0	정성	결과	72.3	
		① 재학대 발생률(%)	당해 연도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되었던 건수/당해 연도 아동학대 판정 건수×100	8.2	정량	결과	10.2	
		② 실종아동 가족 인계율(%)	- 대상자: 실종아동 발생자 중 가족에게 인계된 아동 현황(18세 미만 아동) - 측정사식: 가족인계자 수/ 실종아동 발생자 수×100	99.3	정량	결과	99.5	
		③ 아동안전사고예방 교육 참여율 수(명)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참여자 수 집계	51,300	정량	산출	70,273	미흡
		④ 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점)	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 설문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 로 환산한 평균 점수(연령·성·학력·거주지·문화배치방 식 등 고려한 무작위표본추출 온라인 설문조사)	87.0	정성	결과	87.6	
		⑤ 아동인권증진활동 참여 아동 수(명)	대한민국 아동총회 지역대회, 본대회 등 참가 아동수 합산	1,500	정량	산출	1,328	
		① 수유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	어린이집 이용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만족” 이상 답 변 비율	71.5	정성	결과	74.7	우수
		② 시간제 보육반 수(개)	전국 시간제 보육반 수(연도말 기준, 보육통합정보시 스템 DW)	443	정량	산출	443	

2018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 보고서	자체 평가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2018 목표치	지표종류		실적	결과
					정량화	성격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③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① 평가인증 유지율	인증유지 어린이집 시설 수/ 전체 어린이집 시설 수	81.1	정량	신출	81.6	보통
		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전년 실적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15.12) 중장기 확충 목표('14~'25년까지 매년 150개소 확충)로 산출	450	정량	신출	574	
		② 보육실태조사 완료(%)	최종보고서 검수 시 100% 달성	100	정성	신출		
		③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만명)	'17년 공공형 150개소 신규 지정 고려=150개소 × 30명 * '16년 신규선정 기관 평균 현황: 30명	11.2	정량	신출	10.9	
		④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분석방법: 빈도분석 - 측정대상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약 1,500명 - 조사시기: 12월 말 - 측정문항: 콘텐츠 만족, 상담 만족 등 * 만족 100점, 대체로 만족 75점, 보통 50점, 대체로 불만족 25점, 불만족 0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	90	정성	결과	90	다소 우수
		⑤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최근 3년간 실적(76.3점)등을 고려하여 설정	76.5	정성	결과	76.5	

자료: 1) 보건복지부(2018). 2018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pp.479-483.
2) 대한민국정부(2019a). 2018.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 pp.1547-1552.
3) 보건복지부(2019a). 2018.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p.9.
4) 보건복지부(2019b). 2019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p.357, 362, 366, 373.
5) 김은실, 김지현, 최정원, 윤유나(2020).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델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나. 2019년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임신 및 출산지원 강화’ 과제에서는 자체평가 ‘다소미흡’의 결과가 나왔고, ‘아동수당 지급’ 과제에서는 성과 지표인 ‘아동수당 만족도’에서 71.5점을 달성하여 2019년 목표치(71.4점)를 초과 달성하여 ‘다소미흡’의 자체평가 결과를 얻었다.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목표에 관리과제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및 아동인권 증진’의 경우, ‘보통’의 결과가 나왔으며 당해 연도 목표치(‘입양인 사후서비스 만족도’ 90점, ‘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 87.6점)보다 높은 수치(각각 90.4점, 88.0점)를 보였다. 동 성과목표에 ‘보호대상아동 치료재활, 자립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의 경우 ‘보통’의 결과가 나왔으며, 성과지표인 ‘시설아동 문제행동 치료율’, ‘보호대상 아동자립률’에서 목표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반면 ‘드림스타트 지원 아동의 행복감’의 경우 2019년도 목표 77.0점 보다 2.2점 낮은 74.8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성과목표에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의 경우 ‘보통’의 결과가 나왔으며, 성과지표인 ‘재학대 발생률’에서 2019년도 목표치 9.5%보다 낮은 8.1%로 나타났고, ‘실종아동 가족 연계율’과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참여자 수’의 경우는 목표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의 성과목표에서는 ‘수요자중심의 무상교육기반 강화’ 과제가 ‘다소우수’하였으며, 성과지표 ‘보육료지원 만족도’에서 목표치 78.5점보다 0.7점 낮은 77.8점으로 나타났고, 성과지표 ‘시간제 보육반 1개반당 평균 이용건수’는 목표치보다 높은 성과가 나타났다(62.5건→68건).

〈표 II-1-2〉 2019 보건복지부 성과 목표 및 실적

2019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 보고서	자체 평가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2019 목표치	지표 종류		실적	결과
					정량화	성격		
Ⅲ. 저출산 극복과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1. 저출산·고령사 회 대응 기반 구축	①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출생아수 전년 대비 감소율(해당연도 3년치 평균) +1.9%* *최근 '16~'18년 표준편차: 1.9%	-7.3%	정량	결과		미흡
		① 노인우울상담센터 대상자 만족도(공통)	만족률=만족도 평가점수/만족도 총점(20점)×100	80	정성	결과	91	
		② 임신·출산지원 강화	고위험 임신부 수혜율(공통)	19	정량	신출	19.7	다소 미흡
		③ 미숙아 진료비 지원율	미숙아 의료비 지원율=미숙아 지원자 수/미숙아 (환아) 수×100	81.8	정량	신출	86.6	
		① 디하임케어센터 확충 개소 수	연도말 기준 디하임케어센터 실태조사	150	정량	결과	156	
	③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② 지역아동센터 이용 서비스 만족도	(측정산식)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Σ이용자별 만 족도×20/만족도 조사 참여자 수 • 대상: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이용자 등 • 표본수: 시설 전체 이용아동의 약 10% • 시기: 연도말 • 문항: 프로그램, 지도자, 주변환경, 도움, 전반적 만족도 등 5개 항목 26개 문항	92.0	정성	결과	90	보통
		④ 아동수당 지급	① 아동수당 만족도	71.4	정성	결과	71.5	다소 미흡

2019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 보고서	자체 평가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2019 목표치	지표 종류		실적	결과
					정량화	성격		
2.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는 사회환경 조성	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및 아동인권 증진	① 입양인 사후서비스 만족도(점)	사후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점수의 합/설문조사 대상자 수	90	정성	결과	90.4	보통
		② 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점)	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 설문조사 *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 * 연령·성·학력·거주지·문화배치방식 등 고려한 무작 위 표본추출 온라인 설문조사	87.6	정성	결과	88.0	
	② 보호대상아동 치료재활, 지립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① 시설아동 문제행동 치료율(%)	k-CBCL 정상범위 아동수/사업참여자수×100	37	정량	결과	44.13	보통
		② 보호대상 아동지립률(%)	(퇴소 아동 중 취업자 및 진학자 수)/당해 연도 아동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기정 퇴소 아동×100	79.8	정량	결과	80.8	
		③ 드림스타트 지원 아동의 행복감(점)	드림스타트 사업 효과성 연구 시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	77.0	정성	결과	74.8	
	③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	① 재학대 발생률(%) *하향지표	당해 연도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최근 5년간 아동학 대로 판단되었던 간수/당해 연도 아동학대 판정 간수 ×100	9.5	정량	결과	8.1	보통
		② 실종아동 가족 인계율(%)	- 대상자: 실종아동 발생자 중 가족에게 인계된 아동 현황(18세 미만 아동) - 측정산식: 가족인계자 수/실종아동 발생자 수×100	99.4	정량	결과	99.6	
		③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참여자 수(명)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참여자 수 집계	77,000	정량	신출	81,241	

2019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 보고서	자체 평가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2019 목표치	지표 종류		실적	결과
					정량화	성격		
4.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호환경 조성	①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	① 보육료 지원 만족도(점)	만족도 조사 조사결과(5점 평균)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78.5	정성	결과	77.8	
		② 시간제 보육반 1개반당 평균 이용간수(건)	(월별 총이용간수/월별 시간제 보육반수) 연간 합계 /12	62.5	정량	결과	68	다소 우수
		③ 시간제 보육 연간 이용 아동수(천명)	중복 제거한 연간 이용아동 수	18	정량	결과	20	
	② 민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① 평가제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 및 시행(점)	(과정)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 여부(30점) - 개최횟수당 3점 - 10회 이상: 30점 (내용) 아동안전, 인권보호 등을 위한 지표 및 평가 체계 개발 및 반영(15점) - 어린이집 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개선(5점) - 놀이중심·유아중심의 보육과정운영 평가기준 개선(5점) - 교직원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지표축소, 서류감축, 관찰면접 확대(15점) (시행) 5월까지 개선안 마련 및 중보위 심의(10점) - 6월까지 시행규칙 개정(10점) - '19.9월부터 개선 평가체계 적용(10점)	95	정성	과정		미흡
	③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개소 수	550	정량	신출	654	보통
		② 보조교사 배치율(%)	측정식=보조교사 수/영아반 수×100	22.9	정량	신출	23.1	

2019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 보고서	자체 평가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2019 목표치	지표 정량화	지표 종류	실적	결과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분석방법: 빈도분석 - 측정대상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약 1,500명 - 조사시기: 12월말 - 측정문항: 콘텐츠 만족, 상담 만족 등 * 만족 100점, 대체로 만족 75점, 보통 50점, 대체로 불만족 25점, 불만족 0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	90	정성	결과	90	
		④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 측정산식=(조사항목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들의 합계)/항목수 - 측정대상자 및 표본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집 원장 - 측정문항: 시스템 구성 및 이용편의성, 기능개선 노력 정도 등에 대한 만족도 측정	76.5	정성	결과	76.5	

자료: 1) 보건복지부(2019b). 2019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p.491-496.
2) 대한민국정부(2020a). 201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 pp.1542-1548.
3) 보건복지부(2020a).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pp.90-115.
4) 보건복지부(2020b). 2020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p.393, 400, 459, 459.

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임신·출산 건강 지원’ 과제에서는 자체평가 ‘미흡’의 결과가 나왔고, ‘아동수당 지급’ 과제에서는 성과지표인 ‘아동수당 만족도’에서 74.6점을 달성하여 2020년 목표치(71.5점)를 초과 달성하여 ‘보통’의 자체평가 결과를 얻었다.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목표의 관리과제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및 아동인권 증진’의 경우, ‘다소미흡’의 결과가 나왔으며 성과지표가 ‘입양인 사후서비스 만족도’에서 당해 연도 목표치 90.5점보다 0.1점 높은 90.6점으로 나타났으나, 성과지표가 ‘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인 경우, 목표치 89.0점보다 2.2점 낮은 86.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성과목표에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의 경우 ‘매우우수’한 결과가 나왔으며, 성과지표인 ‘재학대 발생률’, ‘실종아동 가족 인계율’, ‘아동안전사고예방교육 만족도’면에서 목표치보다 높게 나왔다.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의 성과목표에서는 ‘수요자중심의 무상교육기반 강화’ 과제에서 자체평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과지표 ‘보육료 지원 만족도와 시간제 보육반 1개반 당 평균 이용건수’에서 모두 목표치보다 낮은 성과가 나타났다(82.0점→74.1점, 69.0건→16.7건).

〈표 II-1-3〉 2020 보건복지부 성과 목표 및 실적

2020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 보고서	자체 평가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2020 목표치	지표 종류		실적	결과
					정량화	성격		
III.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저출산·고령사회의 대응기반 구축 1. 저출산·고령사회의 대응기반 구축	①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여부	수립	정량	과정		부진
		① 난임유증 상담센터 대상자 만족도(%)	만족률=만족도 평가점수/만족도 총점(20점) × 100	91	정성	결과	91	
	② 임신·출산 건강 지원	② 난임유증 상담센터 이용도(건)	센터 상담 건수	21,605	정량	산출	19,933	미흡
		③ 고위험 임신부 수혜율	(고위험 임신부 지원자수/전체 임원진료 고위험 임신부 수)×100	20.5	정량	산출	21.8	
		④ 미숙아 진로비 지원율	(미숙아등 지원자수/미숙아등 환아수)×100	83.8	정량	산출	86.1	
	③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①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개소 수	연도말 기준 다함께돌봄 실태조사 등을 통해 목표 달성 여부 확인	350	정량	산출	251	다소 미흡
		②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시범사업 개소 수	'20년말 기준 공공성 강화 시범사업 개소 수	100	정량	산출		
	④ 아동수당 지급	① 아동수당 만족도	만족도 조사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만족도 점수	71.5	정성	결과	74.6	보통
		② 아동수당 지급률	아동수당 지원(아동수/주민등록인구통계 상 0-6세 아동수(연도말 기준)×100	97.1	정량	결과	97.2	
		① 임영민 사후서비스 만족도(점)	사후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점수의 합/설문조사 대상자 수	90.5	정성	결과	90.6	
2. 아동이 행복하고 대가족이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및 아동인권 증진		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 * 연령·성·학력·가주지·문화배치방식 등 고려한 무작위 표본추출 온라인 설문조사	89.0	정성	결과	86.8	다소 미흡
		② 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점)						

2020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 보고서	자체 평가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2020 목표치	지표 종류		실적	결과
					정량화	성격		
4.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② 보호대상아동 치료재활, 자립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① 시설아동 문제행동 치료율(%)	k-CBCL 정상범위 아동수/사업참여아동수×100	40	정량	결과	41.49	보통
		② 보호대상 아동자립률(%)	(퇴소 아동 중 취업자 수/당해 연도 아동양육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100	80.7	정량	결과	81.1	
		③ 드림스타트 지원 아동의 행복감(점)(공동)	드림스타트 사업 효과성 연구 시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	73.8	정성	결과	75.6	
		① 재학대 발생률(%) *하향지표	당해 연도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되었던 건수/당해 연도 아동학대 판정 건수×100	9.3	정량	결과	11.6	
		④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	- 대상자: 실종아동 발생자 중 가족에게 인계된 아동 현황(18세 미만 아동) - 측정산식: 가족인계자 수/실종아동 발생자 수 ×100	99.4	정량	결과	99.5	매우 우수
		③ 아동안전사고예방교육 만족도(%)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만족도	94.7	정성	결과	95.8	
		① 보육료 지원 만족도(점)	6개 항목의 만족도 조사 결과(리커트 5점 척도)의 평균 수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82.0점	정성	결과	74.1	
		② 어린이집 이용의 자녀 발달 기여도	5개 영역의 자녀발달 기여도 조사결과(리커트 5점 척도)의 평균 수치	4.0점	정량	결과		
		③ 시간제 보육만 1개반 당 평균 이용건수(건)	(월별 총이용건수/월별 시간제 보육반수) 연간 합계/12	69.0건	정량	산출	16.7	보통
		④ 시간제 보육 연간 이용아동비율	시간제보육 연간 이용아동 수/6-36개월 미만 영유아수당 수급자 수 ×100	5.0%	정량	결과	2.0	
		⑤ 시간제보육 국민참여 및 소통간수	수요자 조사 실적+간담회 실적+대국민 홍보 실적+정보제공 실적 합산	5건	정량	산출	6	
	② 민고 밀결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① 어린이집 평가등급 A·B 등급 비율	어린이집 평가 A·B등급 어린이집 비율(평가결과 A·B등급 어린이집 수/평가대상 어린이집 수)	88.5%	정량	결과	89.6	다소 우수

2020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 보고서	자체 평가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2020 목표치	지표 종류		실적	결과
					정량화	성격		
③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개소 수	550개소	정량	결과	581	우수
		②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비중	측정산식 =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전체 어린이집 개소 수) × 100 (조사시기) 12월 말	12.5%	정량	산출	14.0	
		③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 (공공형어린이집 인원/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 100	7.7%	정량	결과	7.7	
		④ 보수교육이수자의 교육이수율(점)	보수교육(승급교육) 이수자의 평균 성적(점수)	93	정량	산출	91.7	
		⑤ 보조교사 배치율(%)	측정산식=보조교사 수/영아반 수×100	23.3%	정량	산출	24.1	
		⑥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분석방법: 빈도분석 - 측정대상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약 1,500명 - 조사시기: 12월말 - 측정문항: 코넬조 만족, 상담 만족 등 * 만족 100점, 대체로 만족 75점, 보통 50점, 대체로 불 만족 25점, 불만족 0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	90점	정성	결과	90	
		⑦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측정산식=(조사항목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들의 합계)/항목수	76.7점	정성	결과	76.7	

자료: 1) 보건복지부(2020b). 2020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p.502-506.

2) 대한민국정부(2021a). 202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 pp.1367-1373.

3) 보건복지부(2021a).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pp.82-99.

4) 보건복지부(2021b). 2021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p.405, 411, 465.

라. 2021년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임신·출산 건강 지원’ 과제에서는 자체평가 ‘보통’의 결과가 나왔고, ‘아동수당 지급’ 과제에서는 성과지표인 ‘아동수당 지원 만족도’에서 73.0점을 달성하여 2021년 목표치와 같았고, ‘보통’의 자체평가 결과를 얻었다.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목표에 관리과제인 ‘보호대상아동 지원체계 강화 및 아동인권증진’의 경우, ‘매우 우수’의 결과가 나왔으며 당해 연도 목표치(‘입양인 사후서비스 만족도’ 90.9점, ‘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 87.5점)보다 높은 수치(각각 91.4점, 89.6점)를 보였다. 동 성과목표에 ‘학대피해아동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의 경우 ‘보통’의 결과가 나왔으며, 성과지표인 ‘아동안전사고예방교육 만족도’면에서 96.2점으로 목표치(96.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의 성과목표에서는 ‘수요자중심의 무상교육기반 강화 과제’가 ‘우수’하였으며, 성과지표 ‘보육료 서비스 만족도’에서 목표치보다 낮은 성과가 나타났다(82.0%→81.6%).

〈표 II-1-4〉 2021 보건복지부 성과 목표 및 실적

2021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 보고서	자체 평가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2021 목표치	지표 종류		실적	결과
					정량화	성격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①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인식개선 홍보캠페인 효과성(%)	목표치=전년도 실적치대비 3%* 증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2% 감안	45.7	정성	결과	47.2	부진
		① 난임·우울증상담센터 대상자 만족도(%)	만족률=만족도 평가점수 /만족도 총점(20점) ×100	92	정성	결과	94	
	② 임신·출산 건강 지원	② 미숙아 NICU 퇴원 후 생존율(%)	KNN 2020년 연차보고서상 생존율	85.4	정량	결과	85.4	보통
		③ 성·피임 교육 전·후 인지 변화율	교육 후 인지변화율 - 교육 전 인지 변화율 ×100%	26.8	정성	결과	27.4	
		④ 임신·출산 종합 상담 전화 이용자 만족도(신규)	만족도 설문조사(5점 척도)문항별 평균점수/문항수	83.5	정성	결과	86.1	
	③ 은종일 돌봄체계 구축	① 다함께돌봄센터이용자 만족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대상 설문조사(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만족도 점수)	70	정량	결과	91.6	우수
		② 지역아동센터 이용서비스 만족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만족도(5점 척도) 평균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92.5	정성	결과	91.8	
	④ 아동수당 지급	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아동수당 지급 연령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여부 (22년 예산 반영)	'22년 아동수당 예산 증액	정성	결과		보통
		② 아동수당 지원 만족도(점)	만족도 조사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만족도 점수	73	정성	결과	73	
		③ 아동수당 지급률(%)	아동수당 지원아동수/ 주민등록인구통계 상 0-6세 아동수 (연도말 기준)×100	97.2	정량	산출	97.6	

2021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 보고서	자체 평가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2021 목표치	지표 종류		실적	결과
					정량화	성격		
2.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① 보호대상아동 지원체계 강화 및 아동인권증진	① 입양인 사후서비스 만족도(점)	사후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점수의 합/설문조사 대상자 수	90.9	정성	결과	91.4	매우 우수
		② 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점)	리커트 5점 척도에 따라 아동권리인식도 측정(설문 조사)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87.5	정성	결과	89.6	
		③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횟수(회)	지자체별 위원회 개최 횟수의 총합/229(시군구수)	3.0	정량	산출	6.5	
		④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율(점)	연말 기준 배치완료된 아동보호전담요원 수 / 국비지원 아동보호전담 요원 수	92.8	정량	산출	93.7	
	② 보호대상아동 치료재활, 자립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① 시설아동 문제행동 치료율(%)	k-CBCL 정상범위 아동수/ 사업참여여성*100	41.5	정량	결과	42.6	다소 우수
		② 보호대상 아동자립률(%)	(토소 아동 중 취업자 및 진학자 수)/ 당해 연도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토소 아동×100	82	정량	결과	81.7	
		③ 드림스타트 사업의 가족기능향상 기여도(점)	드림스타트 수혜대상자의 가족기능(가족 응집력, 적응성 등 14문항)점수	74.2	정성	결과	75.7	
	③ 학대피해아동 보호 아동안전 및 아동안전 증진	① 아동학대 발견율 (%)	(아동학대사례/추계아동인구)* 1,000(아동복지 법은 아동의 나이를 만0세~만7세로 정의)	4.00	정량	결과	4.53 (잠정)	보통
		② 실종아동 가족 인계율(%)	- 대상자: 실종아동 발생자 중 가족에게 인계된 아동 현황(18세 미만 아동) - 측정산식: 가족인계자 수/실종아동 발생자 수 ×100	99.6	정량	결과	99.5	
		③ 아동안전사고예방교육 만족도(%)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만족도	96.0	정성	결과	96.2	

2021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 보고서	지체 평가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2021 목표치	지표 종류		실적	결과
					정량화	성격		
4. 영유아가 즐거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①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	① 보육료 서비스 만족도(점)	6개 항목의 만족도 조사 결과(리커트 5점 척도)의 평균 수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82.0%	정성	결과	81.6	다소 미흡
		②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경력교사 비율	보육교사 호봉총합/전체 인건비 지원 보육 교사수	7.7점	정량	결과	8.1	
		③ 시간제보육 제공 지자체 수	측정산식=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존재하는 시· 군·구 수	169	정량	결과	177	
		④ 영아수당 제도 도입 추진	법령 개정 여부	완료	정성	산출		
	② 민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① 어린이집 평가등급 A·B 등급 비율	어린이집 평가 A·B등급 어린이집 비율(평가결과 A·B등급 어린이집 수/평가실시 어린이집 수)	91.4%	정량	결과	90.4	미흡
		① 공공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개)	공공어린이집 확충 대상 선정 개소수	565개소	정량	결과	515 개소	
	③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② 공공어린이집 개소수 비중	- 측정산식=(공공어린이집 개소수/전체 어린이집 개소수)×100 - 조사시기: 12월 말	15.5%	정량	산출	16.3 %	다소 미흡
		③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공공형 어린이집 정원/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100	7.7%	정량	결과	8.8	
		④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90점	정성	결과	86.8	
		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측정산식=(조사항목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들의 합계)/항목수	77.3점	정성	결과	79.4	
		⑥ 보조교사 배치율	측정산식=보조교사 수/영아반 담임 교사수	24.5%	정량	산출	26.4	

자료: 1) 보건복지부(2021b). 2021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p.508-512.
 2) 대한민국정부(2022a). 202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 pp.1309-1315.
 3) 보건복지부(2022a).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95-96.
 4) 보건복지부(2022b). 20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pp.393-467.

2. 교육부

가. 2018년

교육부의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관한 성과 목표의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는 유아교육 지원 강화’ 과제에서는 자체평가 ‘우수’의 결과가 나왔으나 당해 연도 목표치(‘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27%, ‘사립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 활용률’ 200%)보다 낮은 수치(각각 25.5%, 81.0%)를 보였다. 동 성과목표에 관리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의 경우 성과지표인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에서 26.1만 명을 달성하여 2018년 목표치(25.4만명)를 초과 달성하여 ‘매우우수’의 자체평가 결과를 얻었다.

〈표 II-2-1〉 2018 교육부 성과 목표 및 실적

2018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 평가	실적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	지표종류		결과	
					정량화	성격		
IV.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1. 학교급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③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는 유아교육지 원 강화	①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국·공립 유치원취원아 수 / 전체 유치원 취원아 수 ×100	27%	정량	결과	우수	25.5
		② 유아·놀이중심 교육문화 조성 워크숍 참석자 만족도	놀이문화 워크숍 참석자 대상 설문조사(Likert척도)	70	정량	결과		
		③ 사립유치원 입학 관리시스템 활용률	참여 유치원 수 / 전체 사립유치원 수×100	200	정량	투입		7,214/ 8,859× 100 =81.0%
	④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①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조사를 통한 학 생 수	25.4 만명	정량	산출	매우 우수	26.1만명
		① 선도사업 추진 개소 수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선정결과	10개	정량	산출		

자료: 1) 교육부(2018). 2018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pp.494-495.

2) 교육부(2019a).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99, 101.

3) 김은설, 박원순, 김희수(2019).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운영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연구. 충청남도
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p.36.

나. 2019년

교육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은 출발선의 평등 보장과 유치원 투명성 강화, 방과후 돌봄 정책 활성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의 3개 관리과제에 대해 표와 같이 구성되었다.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의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는 유아교육 지원 강화’ 과제에서는 자체평가 ‘보통’의 결과가 나왔으며 당해 연도 목표치(‘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29%)보다 낮은 수치(28.5%)를 보였다. 동 성과목표에 관리과제인 ‘초등돌봄 확대 및 내실화’의 경우 성과지표인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에서 29만 명을 달성하여 2019년 목표치(26.8만 명)를 초과 달성하였고, ‘보통’의 자체평가 결과를 얻었다.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를 성과목표로 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관리과제의 경우 ‘초등돌봄 이용 학생수’의 성과지표에서 39.6만 명으로, 2019년 목표치(3.2만 명)를 초과 달성하여 ‘보통’의 자체평가 결과가 나왔다.

〈표 II-2-2〉 2019 교육부 성과 목표 및 실적

2019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 평가	실적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	지표종류		결과	
					정량화	성격		
1.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 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③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는 유아교육 지원 강화	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공공 유치원 취원아 수 / 전체 유치원 취원아 수 × 100	29%	정량	산출	보통	28.5%
		② 개정 누리과정 현장안착을 위한 교원 연수 만족도	5점 척도로 조사 후 매우 불만족 0, 불만족 25, 보통 50, 만족 75, 매우 만족 100점으로 환산	75%	정량	결과		
		③ 에듀파인 사용 유치원 수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 유치원 수로 설정	581	정량	산출		
	④ 초등돌봄 확대 및 내실화	① 초등돌봄 이용 학생수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조사(‘19.5.)	26.8 만명	정량	결과	보통	29 만명

2019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 평가	실적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	지표종류		결과	
					정량화	성격		
5.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②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① 초등돌봄 이용 학생수	부처별 초등돌봄 운영현황 조사(만명)	37.2만명	정량	산출	보통	39.6

자료: 1) 교육부(2019b). 2019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안). pp.433~441.
 2) 교육부(2020a).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114~186.
 3) 교육부(2020b). 2020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276.

다. 2020년

교육부의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유·초중등교육의 교육자치 강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 기반 구축 과제에서는 자체평가 ‘부진’의 결과가 나왔고, 사회 정책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의 관리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의 경우 성과지표인 ‘초등돌봄 이용 학생수’에서 42.1만명을 달성하여 2020년 목표치(40.8만 명)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다소미흡’하다는 자체평가 결과를 얻었다.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로 ‘출발선의 평등 보장과 유치원 투명성 강화’ 관리과제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의 성과지표에서 29.2%로, 2020년 목표치 34.0%를 달성하지 못해 ‘다소미흡’하다는 자체평가 결과가 나왔고, ‘방과후 돌봄 정책 활성화’ 관리과제의 경우 목표치(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수 30.4만 명)보다 낮은 25.6만 명이라는 수치를 보였으나 ‘우수’하다는 평가결과를 받았다.

〈표 II-2-3〉 2020 교육부 성과 목표 및 실적

2020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지체평가		실적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	지표종류	정량화	성격	
I. 고교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함양한다.	3. 유·초·중등 교육의 교육자 치 강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 기반을 구축한다.	① 유·초·중등 교육의 교육자 치 강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 기반 구축	① 지방 이양 과제 이행률	이양된 과제 수 / 발굴 과제 수(%)	93.0	정량		신출	부진
III.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여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정책을 추진한다.	3. 사회정책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창출한다.	④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① 초·중·고등교육 이양 학생수(단위:만명)	부차별 초·중·고등교육 이양실적 조사	40.8	정량	정량	신출	42.1
			② 초·중·고등교육 이양 중 취업률조사 고려 사업비율(단위:%)	사업별 지침에 취업률조사 고려 유무 조사	75	정량	정량	과정	다소 미흡
			③ 온종일 돌봄 시설(교실) 수 증가분(단위: 개소 수)	부차별 초·중·고등교육기관 확충실적 조사	1,100	정량	정량	신출	
IV.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와 안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1. 유·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한다.	③ 출발선의 평등 보장과 유망 인재 양성 강화	① 공공유치원 유치원률	공공 유치원 취원아 수 / 전체 유치원 취원아 수 × 100	34%	정량	정량	신출	29.2% ('20. 4월)
			② 사립유치원 애독아인도입률(%)	(K-에듀파인) 도입 한 사립유치원수 ÷ (사립유치원 수)	100%	정량	정량	신출	다소 미흡
		④ 방과후 돌봄 정책 활성화	① 초·중·고등교육 이양 학생수(만명)	초·중·고등교육기관 운영현황 조사('20. 4.)	30.4	정량	정량	신출	우수

2020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	지표종류	
					정량화	성격
2. 모두에게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인성 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⑥ 코로나19 대응 학교 상황 관리 강화	② 유·초·중·고등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등 등교수업 현황 자료 제공 건수	보도자료 제공 건수	100	정량	신출
					결과	
					보통	

자료: 1) 교육부(2020b). 2020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p.456~465.
2) 교육부(2021a).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8-10.
3) 교육부(2021b). 2021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226.

라. 2021년

교육부의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유·초중등교육의 교육자치 강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 기반 구축’ 과제에서는 자체평가 ‘6등급’의 결과가 나왔고, 사회정책 총괄·조정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의 관리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의 경우 ‘4등급’의 자체평가 결과를 얻었다. 학생 맞춤형 교육 복지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로 ‘유아 교육 국가 책임 강화 및 유치원 투명성 지속 제고’ 관리과제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충 수’의 성과지표에서 2020년 목표치 500학급이었는데, 31.0%를 차지해 ‘3등급’의 자체평가 결과가 나왔다. 모두에게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로 시행한 ‘코로나19 대응 학교상황 관리 강화’ 관리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목표치(90%)를 초과 달성한 수치(90.6%)로 ‘5등급’의 자체평가 결과를 받았다.

〈표 II-2-4〉 2021 교육부 성과 목표 및 실적

2021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		실적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	지표종류	정량화	성격	결과
I. 고교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한다.	3. 유·초·중등교육의 교육자 치 강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 기반 구축	① 유·초·중등교육의 교육자 치 강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 기반 구축	① 관한 이양 정비과제 이행 개수	관한 이양 발굴과제 중 이행 완료된 과제 수(누적)	125	정량	신출	신출	131개 과제중 6개 과제 미완료
			① 초등돌봄시설확충에 따른 이용 가능 학생수(단위: 만명)	부처별초등돌봄시설확충에 따른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학생 수용 정원 현황 조사	45.9만명	정량	신출	신출	44.3
III.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여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정책을 추진한다.	3. 사회정책 총괄·조성의 호과성을 제고한다.	③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②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응답률(%)	초등학교 재학생(1~5학년) 및 내년도 예비취학아동 보호자 대상 온라인 수요 조사에 응답한 비율	40%	정량	신출	신출	4등급
			③ 온종일돌봄서비스 만족도(점)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 조사 항목 중 '온종일돌봄 서비스 만족도' 항목을 신설하여 응답결과 활용	88점	정량	신출	신출	85.8
IV.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1. 유·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③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및 유치원 투명성 지속 제고	④ 초등돌봄사업 개선 대책 발표 건수	초등돌봄사업 개선대책 발표 건수	1건	정량	신출	신출	
			① 공공유치원 학급 확충 수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학급 수	500학급	정량	신출	신출	31.0% ('21. 12.)
			④ 방과후 돌봄 정책 활성화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조사('21.5.)	27	정량	신출	신출	6등급

2021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	지표종류	
					정량화	성격
2. 모두에게 고 른 교육 기회 를 제공하고 안심할 수 있 는 교육 여건 을 조성한다.	⑥ 코로나19 대응 학교상황 관리 강화	② 유초중등학교 확진 상황 확인비율(%)	24시간 내 파악 확진자 / 전체 확진자	90	정량	산출
					결과	
					5등급	
					90.6%	

주: 자체평가: 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7등급으로 등급화 함. 1등급(~상위5%), 2등급(5%~15%), 3등급(15%~30%), 4등급(30%~70%), 5등급(70%~85%), 6등급(85%~95%), 7등급(95%~)

자료: 1) 교육부(2021b). 2021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p.488~496.

2) 교육부(2022a).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44~164.

3) 교육부(2022b). 20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253.

3. 여성가족부

가. 2018년

여성가족부의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취약·위기가족 역량강화지원’ 단위사업에서 목표치(‘취약·위기가족 지원 가족 기능 향상률’ 38%, ‘이혼위기 가족관계 개선도’ 28%, ‘한부모가족 법률구조 수혜자 수’ 910명)를 초과 달성했다(각각 40.6%, 60.9%, 1,002명). ‘아이돌봄지원’ 사업에서는 성과지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와 ‘아이돌봄 서비스 실이용 가구’ 모두에서 각각의 당해 연도 목표치(89.6점, 61,400가구)를 초과달성하였다(각각 89.9점, 64,591가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운영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중 ‘양육비 이행률’은 32.3%로 2018년도 목표치(32.5%)보다 낮았고, ‘다문화이해교육 만족도’는 85.4점으로 목표치(84점)보다 높았다.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인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만족도’, ‘미혼모부자거점 기관 이용자 수’,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입소자 만족도’ 모두에서 2018년도 목표치보다 높았다(73점→74.6점, 1,100명→1,296명, 83.6점→83.9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인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이용 후 가족 및 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 정도’,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상담 실적’은 목표치보다 높았던 반면(87점→87.8점, 128,000건→130,000건),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지원실적’의 경우 50,063건으로 목표치와 같았다.

〈표 II-3-1〉 2018 여성가족부 성과 목표 및 실적

2018년도 여성가족부 성과계획서							성과 보고서
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2018 목표치	지표종류		실적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 II.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한다. [프로그램목표] II-1. 가족친화환경 조성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통한 가족 기능강화	취약위기가족 역량강화지원	취약·위기가족 지원 가족 기능 향상을	(초기평가대비 가족기능 향상된 사례 수/총사례 관리대상자수)×100	38	정성	결과	40.6
		이혼위기 가족관계 개선도	(가족관계 개선자 수/가족관계 개선여부 조사 대상자)×100	28	정량	결과	60.9
		한부모가족 법률구조 수혜자 수	당해 연도 법률구조 수혜자 수	910	정량	산출	1,002
	아이돌봄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실문응답자(이용가정)가 부여한 만족도 점수(5점 척도)합산·평균	89.6	정성	결과	89.9
		아이돌봄 서비스 실이용 가구	사업기관별 서비스 실이용가구수 합계	61,400	정량	산출	64,591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운영	양육비 이행률	(양육비를 이행 받고 있는 가구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지원가구)×100	32.5	정량	결과	32.3
		다문화이해교육 만족도	다문화이해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의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값	84	정성	결과	85.4
	한부모가족 지원 (기금)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만족도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	73	정성	결과	74.6
		미혼모부자거점 기관 이용자 수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실 이용자수 측정	1,100	정량	산출	1,296
	다문화가족 지원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입소자 만족도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	83.6	정성	결과	83.9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이용 후 가족 및 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 정도		센터 이용자 대상으로 가족 및 사회에 대한 인식, 태도 등 설문조사	87	정성	결과	87.8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상담실적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상담전화 건수	128,000	정량	산출	130,00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지원 실적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회복·치료를 위한 지원건수	50,063	정량	산출	50,063

자료: 1) 대한민국정부(2018). 2018년도 성과계획서(여성가족부). pp.239-240.

2) 대한민국정부(2019b). 2018.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여성가족부). pp.511-512.

나. 2019년

여성가족부의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취약·위기가족 역량강화지원’ 단위사업에서 ‘취약·위기 가족지원 가족 기능 향상률’의 성과지표에서 2019년 목표치와 같은 40%를 보였다. 동 단위사업의 다른 성과지표로서 ‘한부모가족 법률구조 수혜자’ 수는 1,101명으로 목표치 930명을 초과 달성했다. ‘가족친화환경조성’ 단위사업은 당해 연도 목표치를 초과달성했다(‘가족정책분석 리포트의 정책반영률’ 70%→100%, ‘가족친화인증 기업(관)수’ 3,800개→3,833개). ‘아이돌봄지원’ 사업도 역시 모든 성과지표(‘아이돌봄 서비스 실이용 가구’, ‘아이돌보미 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서 당해 연도 목표치(65,000가구, 25,000명, 89.9점)를 초과달성하였다(각각 70,485가구, 29,534명, 90.2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운영 사업 역시 모든 성과지표에서 2019년 목표치보다 높았다(‘양육비 이행률’ 34.7%→35.6%, ‘센터종사자 역량 강화교육 만족도’ 88.1점→90.0점). ‘한부모가족 지원(기금) 사업’의 성과지표인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만족도’, ‘미혼모부자 거점 기관 이용자 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만족도’ 모두에서 2019년도 목표치보다 높았다(73.8%→79.4%, 1,240명→1,386명, 83.9점→85.4점). 가족서비스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전화센터 상담실적’은 목표치보다 높았던 반면(140,000건→155,641건), ‘가족서비스 이용 효과성’과 ‘가족친화환경조성’의 경우 목표치(88점, 5%)보다 낮았다(각각 86.6점, 3.9%).

〈표 II-3-2〉 2019 여성가족부 성과 목표 및 실적

2019년도 여성가족부 성과계획서							성과	
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2019 목표치	지표종류		보고서	실적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 II]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에 적극 대처하여 여 성·아동인권의 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 춤형 지원으로 모든 가 족이 행복한 사회를 구 현한다.	취약·위기 가족역량강화 지원	① 취약·위기 가족지원 가족 기능 향상률(%) ② 한부모가족 법률구조 수혜자 수(명)	(초기평가대비 가족기능 향상된 사례수/총사례 관리대상자수) × 100 당해 연도 법률구조 수혜자 수	40	정성	결과	보고서	40
	가족친화환경조성	① 가족정책분석 리포트의 정책변영률(%)	(법령 개정, 지침수정 등 제도개선에 반영된 연구 과제수) / (가족정책분석 리포트 연구 과제 수) × 100	930	정량	산출		1,101
		② 가족친화인증 기업(관수(개))	가족친화인증 기업(7관) 수 (유요)	70	정량	결과		100
	아이돌봄지원	① 아이돌봄 서비스 실이용 가구(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실이용 가구수 합계	3,800	정량	산출		3,833
		② 아이돌보미 수(명)	실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수 집계	65,000	정량	산출		70,485
		③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점)	설문응답자(이용가정)가 부여한 만족도 점수(5점 척도) 합산·평균	25,000	정량	산출		29,53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운영	① 양육비 이행률(%)	(양육비를 이행 받고 있는 가구/ 양육비이행지원 서비스지원가구) × 100	89.9	정성	결과		90.2
		② 센터총사자역량 강화교육 만족도(점)	센터 총사자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값	34.7	정량	결과		35.6
	한부모가족 지원(기금)	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만족도(점)	라카트 5점척도를 활용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	88.1	정성	결과		90.0
		② 미혼모부자 가정 기관 이용자 수(명)	미혼모부자 가정기관 실 이용자수 측정	73.8	정성	결과		79.4
강화		③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만족도(점)	라카트 5점척도를 활용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	1,240	정량	산출		1,386
	가족서비스 지원	① 가족서비스 이용 효과성(점)	가족서비스 이용 효과성 평균	83.9	정성	결과		85.4
		②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전환센터 상담실적 (건)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환센터의 상담전화 건수	88	정성	결과		86.6
	가족친화환경조성	① 가족센터 공정률(%)	누적투자액/총사업비	140,000	정량	산출		155,641
				5				3.9

자료: 1) 대한민국정부(2019d). 2019년도 성과계획서(여성가족부), pp.253-255.

2) 대한민국정부(2020b). 201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여성가족부), pp.504-507.

다. 2020년

여성가족부의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취약·위기가족 역량강화지원’ 단위사업에서 ‘취약·위기가족 지원 가족기능 향상률’이라는 성과지표에서 2020년 목표치(87.0%)보다 높은 성과(87.4%)를 보였다. 동 단위사업의 다른 성과 지표로서 ‘한부모가족 법률구조 수혜자 수’는 1,048명으로 목표치 1,030명을 초과 달성했다. ‘가족친화환경조성’ 단위사업 역시 당해 연도 목표치를 초과달성했다(‘가족친화인증 기업(관)수’ 4,300개→4,340개).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경우 성과 지표가 ‘아이돌봄 서비스 실이용 가구’, ‘아이돌보미 수’인 경우 목표치(각각 85,000가구, 28,000명)를 달성하지 못했지만(각각 59,663가구, 24,469명),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국민 참여 및 소통’ 성과지표에서는 당해 연도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다(각각 90.1점→90.6점, 5건→6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운영’ 사업에서는 모든 성과지표에서 2020년 목표치보다 높았다(‘양육비 이행률’ 32.9%→36.1%, ‘센터종사자역량 강화교육 만족도’ 90.0점→92.2점). ‘한부모가족 지원(기금)’ 사업의 성과지표인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만족도’, ‘미혼모부자 거점 기관 이용자 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만족도’ 모두에서 2020년도 목표치보다 높았다(75.1%→80.5%, 1,330명→1,393명, 84.2점→85.6점). ‘가족서비스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인 ‘가족서비스 이용 효과성’,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전화센터 상담실적’의 경우 목표치보다 높았다(각각 85.3점→87.8점, 142,000건→161,466건). ‘가족친화환경조성’ 사업의 경우 역시 2020년도 목표치(‘가족센터 공정률’ 5%)를 초과달성하였다(11.7%).

〈표 II-3-3〉 2020 여성가족부 성과 목표 및 실적

2020년도 여성가족부 성과계획서							성과 보고서	
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2020 목표치	지표종류		실적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 II 여성·아동에 대한 폭 력에 적극 대처하여 여성·아동인권의 보 호지원 체계를 구축 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 로 모든 가족이 행복 한 사회를 구현한다. 프로그래밍표 II - 1. 여성·아동에 대한 폭 력여빙과 피해자 보 호지원, 가족친화환경 조성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통한 가족기 능강화	취약위기가족 역량강화 지원	취약·위기가족 지원 가족기능 향상을 한부모가족 법률구조 수혜자 수	(초기 평가 대비 가족기능 향상된 사례 수/사 례관리가 종결된 사례 수)×100	87.0	정성	결과	87.4	
	가족친화환경 조성	한부모가족 법률구조 수혜자 수	당해 연도 법률구조 수혜자 수	1,030	정량	산출	1,048	
		가족친화인증 기업(관) 수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수 (유효)	4,300	정량	산출	4,340	
		아이돌봄 서비스 실이용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실이용가구수 합계	85,000	정량	산출	59,663	
		아이돌봄지원	아이돌보미 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실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수 집계 설문응답자(이용 가정)가 부여한 만족도 점수 (5점 척도) 합산·평균	28,000 90.1	정량 정성	산출 결과	24,469 90.6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운영	국민 참여 및 소통	대국민 홍보 실적 +정보제공 실적 합산		5	정량	산출	6
		양육비 이행률		(양육비를 이행 받고 있는 가구/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자원가구)×100	32.9	정량	결과	36.1
		센터중사자 역량강화교육 만족도	센터 중사자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값		90.0	정성	결과	92.2
	한부모가족지원 (기금)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만족도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		75.1	정성	결과	80.5
		미혼모부자 가정 기관 이용자 수	미혼모부자 가정기관 실 이용자수 측정		1,330	정량	산출	1,393
	가족서비스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만족도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		84.2	정성	결과	85.6
가족서비스 이용 효과성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 지 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서비스이용 효과성		85.3	정성	결과	87.8	
가족친화환경조성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상담실적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상담전화 건수		142,000	정량	산출	161,466	
	가족센터 공정률	누적투자액/총사업비		5	정량	과정	11.7	

자료: 1) 대한민국정부(2020c). 2020년도 성과계획서(여성가족부). pp.227-228.

2) 대한민국정부(2021b). 202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여성가족부). pp.463-464.

라. 2021년

여성가족부의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가족정책 기반구축’ 단위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로는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 가족기능향상’, ‘가족친화인증 기업(관)수’가 있는데, 2021년도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다(각각 87.5%→88.3%, 4,833개→4,918개).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가 ‘아이돌봄 서비스 실 이용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인 경우 당해 연도 목표치(각각 72,500가구, 90.4점)를 달성하지 못했지만(각각 71,789가구, 91.4점), ‘아이돌보 미 수’ 성과지표에서는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다(각각 29,500명→25,917명).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운영’ 사업에서는 성과지표 ‘통합적 가족서비스 만족도’에서 2021년 목표치보다 낮았고(91.0점→90.8점), 동 사업 성과지표 ‘양육비 이행률’에서는 목표치보다 높았다(36.3%→38.3%). ‘한부모가족 지원(기금)’ 사업의 성과지표인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만족도’, ‘미혼모부자 거점 기관 이용자 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만족도’ 모두에서 2020년도 목표치보다 높았다(75.1%→80.5%, 1,330명→1,393명, 84.2점→85.6점). ‘가족서비스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인 ‘가족서비스 이용 효과성’,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전화센터 상담실적’, ‘다문화가족 특성화 지원 사업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목표치보다 높았다(각각 88.0점→88.45점, 178,904건→194,802건, 85.0점→90.7점). ‘가족친화환경조성’ 사업의 경우 역시 2021년도 목표치(‘가족센터 공정률’ 37.0%)를 초과달성하였다(44.2%).

〈표 II-3-4〉 2021 여성가족부 성과 목표 및 실적

2021년도 여성가족부 성과계획서							성과	
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2021 목표치	지표종류		보고서	실적
					정량화	성격		
III. 가족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III-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가족정책 기반 구축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 가족기능향상	(초기 평가 대비 가족기능 향상된 사례 수/사례 관리가 종결된 사례 수)×100	87.5	정성	결과	88.3	
		가족친화인증 기업(관수)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수(유호)	4,833	정량	산출	4,918	
	아이돌봄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실이용 가구	아이돌봄서비스실이용가구수 합계	72,500	정량	산출	71,789	
		아이돌봄미 수	실제 활동하는 아이돌봄미 수 집계	29,500	정량	산출	25,917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설문응답자(이용가정)가 부여한 만족도 점수 합산·평균	90.4	정성	결과	91.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운영	통합적 가족서비스 만족도	통합가족 서비스를 이용한 센터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값	91.0	정량	결과	90.8	
		양육비 이행률	(양육비를 이행 받고 있는 가구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지원가구)×100	36.3	정량	결과	38.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만족도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	80.6	정성	결과	80.6	
	한부모가족 지원 (기금)	한부모가족지원 비율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수 대비 지원비율 측정	75.7	정량	산출	102.7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입소자 만족도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	85.7	정성	결과	86.4	
가족서비스 지원		가족서비스 이용 효과성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서비스 이용 효과성	88.0	정성	결과	88.45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진화센터 상담실적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진화센터의 상담전화 건수	178,904	정량	산출	194,802	
		다문화가족 특성화 지원 사업 이용자 만족도	다문화가족 특성화 지원 사업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점수 종합 집계	85.0	정성	결과	90.7	
	가족친화환경 조성	가족센터 공정률	누적투자액 / 총사업비	37	정량	과정	44.2	

자료: 1) 대한민국정부(2021c). 2021년도 성과계획서(변경)(여성가족부). pp.216-217.
2) 대한민국정부(2022b). 202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여성가족부). pp.415-416.

4. 고용노동부

가. 2018년

고용노동부의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 과제에서는 성과지표인 ‘민간부문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인원’, ‘유연근무제 지원인원’ 모두에서 2018년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고(5,000명→5,730명, 5,000명→6,571명), 자체평가 ‘보통’의 결과가 나왔다. ‘남녀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과제에서는 성과지표인 ‘남성 육아휴직자수’에서 17,662명을 달성하여 2018년 목표치(14,920명)를 초과 달성하여 ‘다소우수’의 자체평가 결과를 얻었다. 반면, 동 관리과제의 성과지표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수(공통)’에서는 당해 연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1,133개소→1,111개소).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을 위한 관리과제의 경우, ‘보통’의 결과가 나왔으며 당해 연도 목표치(‘스마트 근로감독 사업장’ 600개소, ‘AA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비율(공통)’ 37.84%)보다 높은 수치(각각 659개소, 38.18%)를 보였다.

〈표 II-4-1〉 2018 고용노동부 성과 목표 및 실적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18 목표치	지표 종류		실적	결과
					정량화	성격		
Ⅲ. 성별·연령 별 맞춤형 일자리 지 원을 강화 한다. Ⅲ-2. 여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①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	① 민간부문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인원(명)	전환형 시간선택 제 지원인원 수	5,000명	정량	산출	5,730	보통
		② 유연근무제 지원인원(명)	유연근무제 지원 인원 수	5,000명	정량	산출	6,571	
	② 남녀 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① 남성 육아휴직자수(명)	남성육아휴직자 수	14,920명	정량	산출	17,662	다소 우수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수(공통)	직장어린이집 수	1,133개소	정량	결과	1,111	
	③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① 스마트 근로감독 사업장	전국 지방관서 점 검사업장 수	600개소	정량	투입	659	보통
		② AA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비율(공통)	(여성근로자 비율 의 합/AA대상 사 업장 수)×100	37.84%	정량	결과	38.18	

자료: 1) 고용노동부(2018). 2018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p.275.

2) 고용노동부(2019a).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p.6.

3) 고용노동부(2019b). 2019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pp.167, 174.

나. 2019년

고용노동부의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 과제에서는 성과지표인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인원’인 경우 2019년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고(5,900명→5,979명), 동 과제의 성과지표 ‘유연근무제 지원인원’의 경우에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7,600명→6,824명). 자체평가에서는 ‘보통’의 결과를 받았다. ‘남녀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과제에서는 성과지표인 ‘남성 육아휴직자수’에서는 22,297명을 달성하여 2019년 목표치(19,128명)를 초과 달성하여 ‘다소우수’의 자체평가 결과를 얻었다. 반면, 동 관리과제의 성과지표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수(공통)’에서는 당해 연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1,191개소→1,153개소).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을 위한 관리과제의 경우, ‘다소미흡’의 결과가 나왔는데, 성과지표가 ‘스마트 근로감독 사업장’인 경우 700개소로 목표치와 같았으나, ‘AA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비율(공통)’의 성과지표에서는 목표치(38.19%)보다 높은 수치(38.41%)를 보였다.

〈표 II-4-2〉 2019 고용노동부 성과 목표 및 실적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19 목표치	지표 종류		실적	결과
					정량화	성격		
Ⅲ. 성별·연령 별 맞춤형 일자리 지 원을 강화 한다	①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	①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인원(명)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인원 수	5,900명	정량	산출	5,979	보통
		② 유연근무제 지원인원(명)	유연근무제 지원 인원 수	7,600명	정량	산출	6,824	
	② 남녀 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① 남성 육아휴직자수명	남성육아휴직자 수	19,128명	정량	산출	22,297	다소 우수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수 (개소)(공통)	직장어린이집 수	1,191개소	정량	산출	1,153	
Ⅲ-2. 여성의 일자리를 확대하 다	③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를 환경 구축	① 스마트 근로감독 사업장(개소)	전국 지방관서 점 검사업장 수	700개소	정량	산출	700	다소 미흡
		② AA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비율(%) (공통)	(여성근로자 비율 의 합/AA대상 사 업장 수)×100	38.19%	정량	결과	38.41	

자료: 1) 고용노동부(2019b). 2019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p.288.

2) 대한민국정부(2019c). 201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고용노동부). pp.427, 842.

3) 고용노동부(2020a).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p.9.

다. 2020년

고용노동부의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 성과목표의 관리과제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의 경우 2020년도 목표치(‘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 7,500명)를 초과달성하였으나(20,837명) 자체평가 ‘다소미흡’의 결과를 받았다. 동 성과목표 중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통한 워라벨 확산’ 관리 과제의 경우도 해당년도 목표치(‘유연근무제 지원인원’ 8,200명)를 초과 달성하여(30,088명) 자체평가 ‘우수’의 결과를 받았다. 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 성과 목표 중 남녀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과제에서는 성과지표인 ‘남성 육아휴직자 수’,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수(공통)’ 모두에서 2020년도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여(각각 25,000명→27,423명, 1,195개소→1,216개소) ‘매우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 성과목표 중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을 위한 관리과제의 경우, ‘보통’의 결과가 나왔는데, 성과지표가 ‘스마트 근로감독 사업장’인 경우 400개소로 목표치와 같았으나, ‘AA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비율(공통)’의 성과지표에서는 목표치(38.47%)보다 높은 수치(38.73%)를 보였다.

〈표 II-4-3〉 2020 고용노동부 성과 목표 및 실적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20 목표치	지표 종류		실적	결과
					정량화	성격		
II.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6. 일·생활 균형의 직장문화를 확산한다	①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	①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명)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 수	7,500명	정량	산출	20,837	다소 미흡
	①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통한 워라벨 확산	① 유연근무제 지원인원(명)	유연근무제 지원인원 수	8,200명	정량	산출	30,088	우수
III.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① 남녀 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① 남성육아휴직자수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25,000명	정량	결과	27,423	매우 우수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20 목표치	지표 종류		실적	결과
					정량화	성격		
2. 여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 수(공통)	직장어린이집 개소 수	1,195개소	정량	결과	1,216	보통
	②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① 스마트 근로감독 사업장	전국 지방관서 점검 사업장 수	400개소	정량	투입	400	
		② AA 적용 사업장의 여성고용비율(공통)	(여성근로자 비율의 합/AA대상 사업장 수)×100	38.47%	정량	결과	38.73	

자료: 1) 고용노동부(2020b). 2020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p.331
 2) 고용노동부(2021a).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p.11.

라. 2021년

고용노동부의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데이터 기반의 정책 대응과 고용문화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로서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 노력’ 관리과제의 경우, 2021년도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으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 25,000명→30,706명, ‘유연근무제 지원인원’ 21,000명→39,194명), 자체평가 ‘다소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 성과 목표 중 ‘남녀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과제에서는 성과지표인 ‘남성 육아휴직자수’, ‘직장 어린이집 설치 사업장수(공통)’ 모두에서 2021년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각각 32,270명→29,041명, 1,253개소→1,248개소), ‘다소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 성과목표 중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을 위한 관리과제의 경우, ‘보통’의 결과가 나왔는데, 성과지표 ‘스마트 근로감독 사업장’, ‘AA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비율(공통)’의 성과지표 모두에서 목표치(각각 900개소, 38.89%)보다 낮은 수치(각각 868개소, 37.78%)를 보였다.

〈표 II-4-4〉 2021 고용노동부 성과 목표 및 실적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2021 목표치	지표 종류		실적	결과
					정량화	성격		
II.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5. 데이터 기반의 정책 대응과 고용문화 개선을 지원한다	④ 일·생활 균형 고용 문화의 확산 노력	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 수	25,000명	정량	산출	30,706	다소 미흡
		② 유연근무제 지원인원	유연근무제 지원인원 수	21,000명	정량	산출	39,194	
III.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2. 여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① 남녀 근로자 육아 부담 경감	① 남성 육아휴직자 수	남성 육아휴직 급여 지급자 수	32,270명	정량	결과	29,041명	다소 우수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 수	직장어린이집 개소 수	1,253	정량	결과	1,248	
	②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① 스마트 근로감독 사업장	전국 지방관서 점검 사업장 수	900	정량	투입	868	보통
		② AA 적용 사업장의 여성고용 비율	(여성근로자 비율의 합 / AA대상 사업장 수) × 100	38.89%	정량	결과	37.78	

자료: 1) 고용노동부(2021b). 2021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p.310-311.

2) 고용노동부(2022a).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pp.10-11.

5. 부처별 정책 및 성과지표 취합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부처별로 시행한 육아정책과 해당 정책에 대한 성과지표를 취합하면 아래와 같다. 이를 통하여 시기별로 각 부처별 정책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가. 보건복지부(2018~2021)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임신·출산 건강 지원’ 과제에서 성과지표 중 ‘난임·우울증상담센터

대상자 만족도’는 증가추세에 있다. ‘아동수당 지급’ 과제의 성과지표인 ‘아동수당 지원 만족도’는 2018년 71.4점, 2019년 71.5점, 2020년 74.6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21년도에 목표 수치인 73점으로 하락했다.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목표의 관리과제인 ‘보호대상아동 지원체계 강화 및 아동인권증진’의 경우, 성과지표 중 ‘입양인 사후서비스 만족도’가 2018년에 92.0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2019년 90.4%로 하락했고, 이후 2020년 90.6%, 2021년 91.4%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동 성과목표 중 ‘보호대상아동 치료재활, 자립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를 위한 과제의 경우 중 성과지표가 ‘보호대상 아동 자립률’인 경우, 2018년 79.6%, 2019년 80.6%, 2020년 81.1%, 2021년 81.7%로 매해 증가하였다. 동 성과목표 중 ‘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을 위한 관리과제의 경우, ‘아동안전사고예방 교육 만족도’가 2018년 94.0%에서 2019년 96.3%로 상승하였다가, 2020년 95.8%로 하락 후, 2021년에 다시 96.2%로 상승하였다.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에서는 ‘수요자중심의 무상교육기반 강화’ 과제 중 성과지표 ‘보육료 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2018년 80.9%에서 2019년 81.8%로 증가하다가, 2020년 74.1%로 큰 하락을 보였고, 2021년에 다시 81.6%로 회복했다. 동 성과목표 중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과제의 경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비중’ 성과지표는 2018년 9.2%, 2019년 11.6%, 2020년 14.0%, 2021년 16.3%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다.

표 II-5-1) 2021년 보건복지부 성과 목표 기준 2018~2021 실적

2021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실적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2021 목표치	지표 종류		2018	2019	2020	2021
					정량화	성격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	①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 홍보캠페인 효과성(%)	목표치 = 전년도 실적치 대비 3%* 증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감률2% 감인	45.7	정성	결과	-	-	-	47.2
		① 난임·우울증상담센터 대상자 만족도(%)	만족률=만족도 평가점수/만족도 총점(20점)×100	92	정성	결과	신규	91	91	94
	② 임신·출산 건강 지원	② 미숙아 NICU 퇴원 후 생존율(%)	KNN 2020년 연차보고서상 생존율	85.4	정량	결과	-	-	-	85.4
		③ 성·피임 교육 전·후 인지 변화율	교육 후 인지변화율-교육 전 인지 변화율 ×100%	26.8	정성	결과	23.5	29.8	26.8	27.4
		④ 임신·출산 종합 상담 전화 이용자 만족도(신규)	만족도 설문조사(5점 척도)문항별 평균점수/문항수	83.5	정성	결과	-	-	-	86.1
		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만족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만족도 점수)	70	정량	결과	-	-	-	91.6
	③ 은종일 돌봄체계 구축	② 지역아동센터 이용서비스 만족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만족도(5점 척도) 평균 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92.5	정성	결과	90.6	90.0	92.9	91.8
		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아동수당 지급 연령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여부 ('22년 예산 반영)	'22년 아동수당 예산증액	정성	결과	-	-	-	
	④ 아동수당 지급	② 아동수당 지원 만족도(점)	만족도 조사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만족도 점수	73	정성	결과	71.4	71.5	74.6	73
		③ 아동수당 지급률(%)	아동수당 지원아동수/ 주민등록인구통계 상 0-6세 아동수 (연도말 기준)×100	97.2	정량	산출	-	-	97.1	97.6

2021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실적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2021 목표치	지표 종류		2018	2019	2020	2021
					정량화	성격				
2.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① 보호대상아동 지원체계 강화 및 아동인권증진	① 입양인 사후서비스 만족도(점)	사후서비스 만족도 조 사결과 점수의 합/설문 조사 대상자 수	90.9	정성	결과	92	90.4	90.6	91.4
		② 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점)	리케트 5점 척도에 따라 아동권리인식도 측정 (설문조사)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87.5	정성	결과	-	-	86.8	89.6
		③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횟수(회)	지자체별 위원회 개최 횟수의 총합/229(시군 구수)	3.0	정량	산출	-	-	-	6.5
		④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율(점)	연말 기준 배치완료된 아동보호전담요원 수 / 국비지원 아동보호전담 요원 수	92.8	정량	산출	-	-	89.8	93.7
	② 보호대상아동 치료재활, 자립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① 시설아동 문제행동 치료율(%)	k-CBCL 정상범위 아동수/ 사업참여자수*100	41.5	정량	결과	신규	44.1	41.4	42.6
		② 보호대상 아동자립률(%)	(퇴소 아동 중 취업자 및 진학자 수/ 당해 연도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100	82	정량	결과	79.6	80.6	81.1	81.7
		③ 드림스타트 사업의 가족기능 향상 기여도(점)	드림스타트 수혜대상자의 가족기능(가족 응집력, 적응성 등 14문항)점수	74.2	정성	결과	72.3	74.8	75.6	75.7
	③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	① 아동학대 발견율 (%)	(아동학대사례/추계아동인구)*1,000(아동복지법 은 아동의 나이를 만0세~만17세로 정의)	4.00	정량	결과	2.98	3.81	3.61	4.53 (집점)
		② 실종아동 가족 인계율(%)	- 대상자: 실종아동 발생자 중 가족에게 인계된 아동 현황(18세 미만 아동) - 측정산식: 가족인계자 수/실종아동 발생자 수 ×100	99.6	정량	결과	99.5	99.6	99.5	99.5
		③ 아동안전사고예방교육 만족도(%)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만족도	96.0	정성	결과	94.0	96.3	95.8	96.2

2021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실적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2021 목표치	지표 종류		2018	2019	2020	2021
					정량화	성격				
4. 영유아가 출생부터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①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	① 보육료 서비스 만족도(점)	6개 항목의 만족도 조사 결과(리커트 5점 척도)의 평균 수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82.0%	정성	결과	80.9	81.8	74.1	81.6
		②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경력 교사 비율	보육교사 호봉총합/전체 인건비 지원 보육 교사수	7.7점	정량	결과	신규	신규	신규	8.1
		③ 시간제보육 제공 지자체 수	측정산식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존재하는 시·군·구 수	169	정량	결과	신규	신규	신규	177
		④ 영아수당 제도 도입 추진	법령 개정 여부	완료	정성	산출	신규	신규	신규	
	② 민고 밀집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① 어린이집 평가등급 A·B 등급 비율	어린이집 평가 A·B등급 어린이집 비율 (평가결과 A·B등급 어린이집 수/평가실시 어린이 집 수)	91.4%	정량	결과	신규	87.8	89.6	90.4
		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선정 개소수	565개소	정량	결과	574	654	581	515 개소
	③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②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비중	측정산식=(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전체 어린이 집 개소수)×100 (조사시기: 12월 말)	15.5%	정량	산출	9.2	11.6	14.0	16.3%
		③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공공형 어린이집 인원/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100	7.7%	정량	결과	-	7.9	7.7	8.8
		④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90점	정성	결과	90	90	90	86.8
		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측정산식=(조사항목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들의 합계)/항목 수	77.3점	정성	결과	76.5	76.5	76.7	79.4
		⑥ 보조교사 배치율	측정산식 = 보조교사 수 / 영아인 담임 교사 수	24.5%	정량	산출	-	23.1	24.1	26.4

주: 공식적인 실적자료가 없는 경우 음영 표시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21b). 2021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p.508-512.
2) 대한민국정부(2022a). 202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 pp.1309-1315.
3) 보건복지부(2022a).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95-96.

나. 교육부(2018~2021)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교육부에서 시행한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유·초중등교육의 교육자치 강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 기반 구축 과제 중 성과지표가 ‘권한 이양 정비과제 이행 개수’인 경우, 2018년 96개, 2019년 103개, 2020년 122개, 2021년 131개 과제 중 6개 과제 미완료로 지속적인 개선을 보였다.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로 ‘유아교육 국가 책임 강화 및 유치원 투명성 지속 제고’ 관리과제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충 수’는 2018년 25.5%, 2019년 28.5%, 2020년 29.8%, 2021년 31.0%로 매년 증가했다. ‘방과후 돌봄 정책 활성화’에 관한 과제로서 성과지표인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수’는 2018년 26.1만 명에서 2019년 29.0만 명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에는 25.6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락을 반복했다.

〈표 II-5-2〉 2021년 교육부 성과 목표 기준 2018~2021 실적

2021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2021 목표치	지표종류		실적			
						정량화	성격	2018	2019	2020	2021
Ⅰ.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함양한다.	3. 유·초·중·고교육의 교육자치 강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 기반 구축	① 유·초·중·고교육의 교육자치 강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 기반 구축	① 권한 이양 정비과제 이행 개수	권한 이양 발굴과제 중 이행 완료된 과제 수(누적)	125	정량	산출	96	103	122	131개 과제중 6개 과제 미완료
Ⅲ.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여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정책을 추진한다.	3. 사회정책 총괄·조정 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③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① 초·중·고·대·대학원 교육에 따른 이용 가능 학생 수(단위: 명)	부처별초·중·고·대·대학원 교육에 따른 이용 가능 학생 수(단위: 명) 현황 조사	45.9	정량	산출	36	39.7	42.1	44.3
			②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응답률(%)	초등학교 재학생(1~5학년) 및 내년도 예비취학아동 보호자 대상 온라인 수요 조사에 응답한 비율	40%	정량	산출	-	38.3	39.0	
			③ 온종일돌봄서비스 만족도(점)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 조사 항목 중 '온종일돌봄 서비스 만족도' 항목을 신설하여 응답결과 활용	88점	정량	산출	-	-	-	85.8
			④ 초·중·고·대·대학원 개선 대책 발표 건수	초·중·고·대·대학원 개선대책 발표 건수	1건	정량	산출	1	1	1	

2021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2021 목표치	지표종류		실적			
					정량화	성격	2018	2019	2020	2021
IV. 학생 맞춤형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교육기회를 강화 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③ 유아교육 국가 책임 강화 및 유치원 투명성 지속 제고	①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충 수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학급 수	500 학급	정량	산출	25.5	28.5	29.8	31.0% (‘21. 12.)
							501	966	885	
	④ 방과후 돌봄 정책 활성화	① 초·중·고·특수교육 학생수(단위: 만명)	초·중·고·특수교육 운영현황 조사(‘21.5.)	27	정량	산출	26.1	29.0	25.6	
2. 모두에게 고른 교육 기회를 제 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 여 건을 조성한다.	⑥ 코로나19 대응 학교상황 관리 강화	② 유·초·중·고·특수교육 확진비율(%)	24시간 내 파악 확진자/전체 확진자	90	정량	산출	신규	신규	신규	90.

주: 공식적인 실적자료가 없는 경우 음영 표시함.
자료: 1) 교육부(2021b). 2021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p.488-496.
2) 교육부(2022a).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44-164.

다. 여성가족부(2018~2021)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가족정책 기반구축’ 단위사업의 경우 성과지표 중 ‘가족친화인증 기업(관)수’는 2018년 3,328개, 2019년 3,833개, 2020년 4,340개, 2021년 4,918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경우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성과지표에서도 2018년 89.9점, 2019년 90.2점, 2020년 90.6점, 2021년 91.4점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운영’ 사업에서의 성과지표인 ‘양육비 이행률’ 또한 2018년 32.3%, 2019년 35.6%, 2020년 36.1%, 2021년 38.3%로 매년 증가하였다. ‘한부모가족 지원(기금)’ 사업의 성과지표인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만족도’ 역시 2018년 74.6점, 2019년 79.4점, 2020년 80.5점, 2021년 80.6점으로 매년 개선되었다.

‘가족서비스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전화센터 상담실적’도 매년 증가하였다(2018년 132,115건, 2019년 155,641건, 2020년 161,466건, 2021년 194,802건).

〈표 II-5-3〉 2021년 여성가족부 성과목표 기준 2018-2021 실적

2021년도 여성가족부 성과계획서					실적					
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표종류		2018	2019	2020	2021
					정량화	성격				
Ⅲ. 가족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가족정책 기반 구축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가족기능향상 관리가 종결된 사례 수	(초기 평가 대비 가족기능 향상된 사례 수)×100	87.5	정성	결과	산규	87.4	88.3	88.3
		가족친화인증 기업(관수)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수(유무))	4,833	정량	산출	3,328	3,833	4,340	4,918
		아이 돌봄 서비스 실이용 가구	아이돌봄서비스실이용가구수 합계	72,500	정량	산출	64,591	70,485	59,663	71,789
	아이돌봄 지원	아이돌봄미 수	실제 활동하는 아이돌봄미 수 집계	29,500	정량	산출	23,675	24,677	24,469	25,917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설문응답자(이용가정)가 부여한 만족도 점수 합산·평균	90.4	정성	결과	89.9	90.2	90.6	91.4
Ⅲ-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운영	통합적 가족서비스 만족도	통합가족 서비스를 이용한 센터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값	91.0	정량	결과	산규	89.1	90.1	90.8
		양육비 이행률	(양육비를 이행 받고 있는 가구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지원가구)× 100	36.3	정량	결과	32.3	35.6	36.1	38.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만족도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	80.6	정성	결과	74.6	79.4	80.5	80.6
		한부모가족지원 비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보호 수 대비 지원비용 추경	75.7	정량	산출	산규	산규	산규	102.7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인소자 만족도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	85.7	정성	결과	83.9	85.4	85.6	86.4
가족서비스 지원		가족서비스 이용 효과성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서비스 이용 효과성	88.0	정성	결과		86.6	87.8	88.45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진화센터 상담실적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진화센터의 상담전화 건수	178,904	정량	산출	132,115	155,641	161,466	194,802
		다문화가족 특성화 지원 사업 이용자 만족도	다문화가족 특성화 지원 사업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점수 종합 집계	85.0	정성	결과	산규	산규	산규	90.7
	가족친화 환경 조성	가족센터 공정률	누적투자액 / 총사업비	37	정량	과정	-	3.9	11.7	44.2

자료: 1) 대한민국정부(2021c). 2021년도 성과계획서(변경)(여성가족부). pp.216-217.
2) 대한민국정부(2022b). 202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여성가족부). pp.415-416.

라. 고용노동부(2018~2021)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데이터 기반의 정책 대응과 고용문화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로서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 노력’ 관리과제 중 성과지표로서 ‘위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은 2018년 5,730명, 2019년 5,993명, 202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급증하여 20,837명, 2021년 30,70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동 과제 중 성과지표로서 ‘유연근무제 지원인원’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2018년 6,571명, 2019년 6,824명, 2020년 30,088명, 2021년 39,194명).

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 성과 목표 중 ‘남녀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과제에서도 모든 성과지표에서 매년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자수’ 2018년 17,665명, 2019년 22,297명, 2020년 27,423명, 2021년 29,041명,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 수’ 2018년 1,111개, 2019년 1,153개, 2020년 1,216개, 2021년 1,248개로 매해 증가하였다. 동 성과목표 중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을 위한 관리과제의 경우, 성과지표로서 ‘스마트 근로감독 사업장’은 2018년 659개, 2019년에는 700개로 다소 증가했다가 2020년 400개로 하락하고, 2021년 868개로 다시 증가하는 등락을 보였다. 동 과제 중 성과지표로서 ‘AA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비율(공통)’은 2018년, 2019년, 2020년 모두에서 38.18%로 동일했으나 2021년에 37.78%로 하락했고, 이는 2021년의 목표치 38.89%보다도 낮은 수치였다.

〈표 II-5-4〉 2021년 고용노동부 성과목표 기준 2018~2021 실적

2021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실적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2021 목표치	지표 종류		2018	2019	2020	2021		
						정량화	성격						
II.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5. 데이터 기반의 정책 대응과 고용문화 개선을 지원한다	④ 일·생활 균형고용문화의 확산 노력	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 수	25,000명	정량	산출	5,730	5,993	20,837	30,706		
			② 유연근무제 지원인원	유연근무제 지원인원 수	21,000명	정량	산출	6,571	6,824	30,088	39,194		
III.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2. 여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① 남녀 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① 남성 육아휴직자 수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32,270명	정량	결과	17,665	22,297	27,423	29,041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 수	직장어린이집 개소 수	1,253	정량	결과	1,111	1,153	1,216	1,248		
		②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① 스마트 근로감독 사업장	전국 지방관서 점검사업장 수	900	정량	투입	659	700	400	868		
			② AA 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 비율	(여성근로자 비율의 합 / AA대상 사업장수)×100	38.89%	정량	결과	38.18	38.18	38.18	37.78		

자료: 1) 고용노동부(2021b). 2021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p.159-187.
 2) 고용노동부(2022b). 2022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pp.133-162.

III

육아정책 성과분석 및 국정과제 평가(2~4차)

- 01 육아정책의 범주
- 02 육아정책 성과분석
- 03 육아정책 국정과제 평가
- 04 육아정책 성과 제고 방안

Ⅲ. 육아정책 성과분석 및 국정과제 평가 (2~4차)

본 장에서는 본 연속 연구의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육아정책의 범주를 취합해 보고, 아울러 해당 기간 동안 수행한 부처별 육아정책, 그리고 그에 대한 성과지표를 정리한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 및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된 육아정책 성과 제고 방안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육아정책의 범주

각 연차별로 육아정책 범주가 제시되었고 본 5차년도 연구에서의 육아정책 범주는 과년도 연구과제를 바탕으로 하여 4차년도 부처별 관련 정책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고자 한다.

1차년도 연구(이윤진 외, 2018: 24)는 문재인 정부 초창기로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중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육아정책 부문을 선정하였다.

2차년도 연구(최윤경, 김나영, 이해민, 2019)는 2018년 정부의 정책 수행을 기반으로 정책 계획, 목표 대비 산출(혹은 결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핵심으로 논의하였고, 중장기 정책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안하고 있다(최윤경 외, 2019: 13; 김근진, 박창현, 김희수, 2020: 46 재인용). 1차년도에서 제시한 1) 저출산 정책 2) 유아교육정책 3) 보육정책으로 구성된 육아정책 목록을, 1) 저출산 2) 유아교육·보육·돌봄 3) 아동정책으로 재구조화 하여 범주의 내용을 확대하였다(최윤경, 외, 2019: 187; 김근진 외, 2020: 46 재인용). 3차년도 연구 역시 2차년도 연구의 육아정책 분야를 유지하고, 범주에 속한 정책을 일부 수정하여 수행되었다.

3차년도 연구(김근진 외, 2020)는 2차년도의 분야 분류를 사용하였으나, 핵심 육아정책 범주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 저출산 정책 분야의 범주 개수는 다소 단순화하고 유아교육 보육돌봄정책 범주의 정책은 보완 및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4차년도(김근진, 유해미, 조혜주, 2021)의 육아정책 범주는 지원 부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3차년도 연구의 육아정책 범주와 비교하면 저출산 정책에 포함되었던 현금 및 의료비 지원과 자녀돌봄 시간 지원을 별도의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현 정부의 육아정책에서 육아휴직 등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금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현금지원과 시간지원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정책에 포함되었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교육·보육·돌봄 지원에 포함시켰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으로 새롭게 도입된 정책인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아동특별돌봄지원금), 긴급돌봄(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가족돌봄휴가를 각각의 범주에 추가하였다.

〈표 III-1-1〉 1~4차년도 연구에서 선정한 핵심육아정책 목록

구분	분야		핵심 육아정책 범주
1차 (2018년)	복합·혁신 10대 과제	저출산 정책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 3.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4.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5.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7.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8.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9.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10.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유아교육	11.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12.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유아교육· 보육정책 5대 과제	보육정책	13.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14.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15.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2차 (2019년)	저출산정책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3.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4. 출산·양육 세제 개선 5. 의료비 제로화 6. 기타지원: 난임, 다자녀지원 등 7. 포용적 가족: 한부모양육지원, 출생등록제등 8. 초등교육 혁신 9. 양육지원체계 개편

구분	분야	핵심 육아정책 범주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10.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11.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 12. 사립유치원 지원을 통한 공공성강화 13.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14. 보육교사 전문성강화(자격) 및 처우개선 15.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16.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등 다양한서비스 17.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돌봄체계 도입
	아동정책	18.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19.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20. 아동권리보장(4영역:보호, 참여, 건강, 놀이)
3차 (2020년)	저출산정책	1.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2.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 지원,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3.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 지원 등 4.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7.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8.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9.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10.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11.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12.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3. 보육서비스 질 제고 14.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15.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 16.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등 다양한서비스 17.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18.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아동정책	19.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20.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21.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현금 및 의료비 지원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4차 (2021년)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8.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9.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10.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1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구분	분야	핵심 육아정책 범주
	자녀돌봄 시간 지원	1. 육아휴직제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4. 유연근무제(재택근로) 5.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1.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3. 가족돌봄휴가

자료: 1) 이윤진 외(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육아정책연구소. p.89.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65.
 3)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45, 47.
 4)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64, 65.

2. 육아정책 성과분석

본 절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4차년도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통하여 2018년부터 2020년 기간에 대한 육아정책 부문별 정책달성도(전문가) 및 만족도(수요자) 결과를 취합하여 정리하였다.

가. 저출산 분야

2차년도 연구(최윤경 외, 2019)의 저출산 분야 전문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수당’ 긍정비율의 경우 21.7%에서 3차년도(2020) 78.0%, 4차년도(2021) 80.0%로 가장 큰 차이(전체 58.3%p상승)가 나타났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2차~4차 연구 모두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긍정비율의 차이(14.2%p상승)는 아동수당 다음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의 긍정비율은 가장 낮은 차이(2.9%p상승)를 보였다. 2차~4차 연구의 7점 평균의 경우, ‘아동수당’이 2년동안 0.13점 상승으로 가장 낮은 차이를 보였고, ‘건강지원’의 경우, 2차년도 연구 5.1점에서 4차년도 연구 5.63점으로 0.53점의 상승으로 가장 높은 차이를 보였다.

〈표 III-2-1〉 저출산 분야(전문가, 달성도)

단위: %, 점, (명)

선별지표 항목	2~4차년도 보고서 내의 항목	결과	차수(년도)		
			2차(2019)	3차(2020)	4차(2021)
아동수당	아동수당	긍정비율 ¹⁾	21.7	78.0	80.0
		7점 평균 ²⁾	5.5	5.3	5.63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긍정비율 ¹⁾	70.8	81.0	85.0
		7점 평균 ²⁾	5.2	5.4	5.60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긍정비율 ¹⁾	72.6	78.0	83.0
		7점 평균 ²⁾	5.1	5.4	5.63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긍정비율 ¹⁾	51.9	48.0	63.0
		7점 평균 ²⁾	4.5	4.3	4.76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긍정비율 ¹⁾	54.7	46.0	58.0
		7점 평균 ²⁾	4.4	4.2	4.55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긍정비율 ¹⁾	65.1	60.0	68.0
		7점 평균 ²⁾	4.7	4.6	4.95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주: 1) 긍정비율은 '⑥',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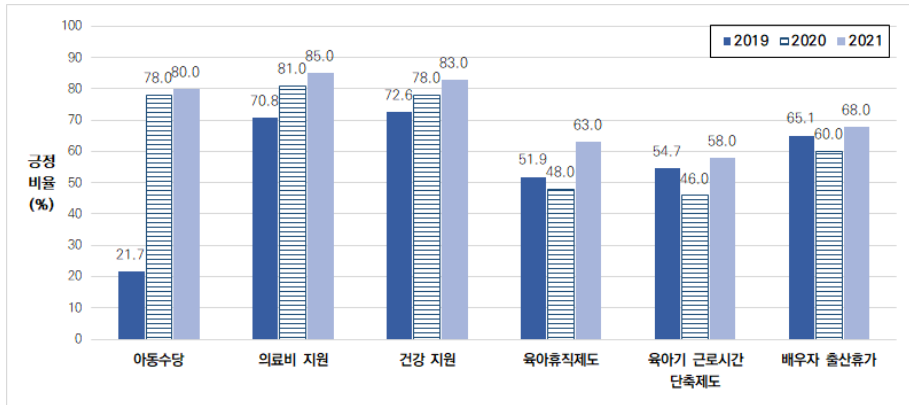
2)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1)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99, 224.

2)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12.

3)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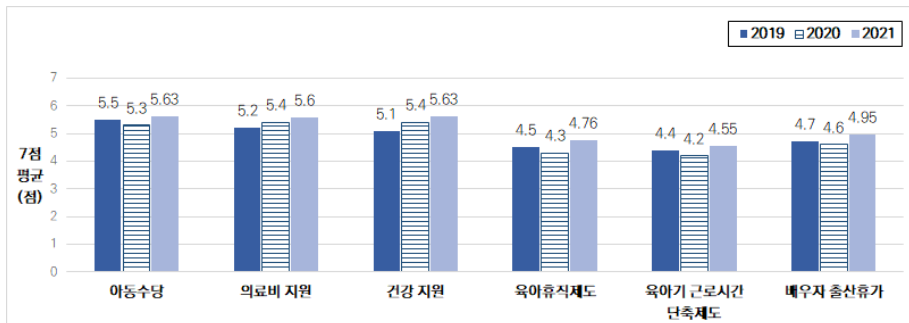
[그림 II-2-1] 저출산 분야(전문가, 달성도)



주: 1) 본 보고서 <표 III-2-1>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냄.

2) 각 항목에 대한 긍정비율로,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그림 III-2-2] 저출산 분야(전문가, 달성도)



주: 1) 본 보고서 <표 III-2-1>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냄.

2)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⑦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7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2차년도 연구(최윤경 외, 2019)의 저출산 분야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모 육아휴직' 만족비율의 경우 50.5%에서 3차년도(2020) 62.3%, 4차년도(2021) 71.3%로 가장 큰 차이(전체 21.2%p상승)가 나타났다. '아동수당'의 경우 2~4차 연구 모두 비교적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긍정비율의 차이(19.7%p상승)는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4차 연구의 5점 평균의 경우, '모 육아휴직'과 '부 육아휴직'이 2년 동안 0.5점 상승으로 과년도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의료비 지원'의 경우, 2차년도 연구 3.7점에서 3차년도 3.9점으로 0.2점 상승했지만 4차년도 연구 3.7점으로 다시 원점으로 변함없는 결과가 나타나 가장 낮은 점수 차(0점)가 보인다.

〈표 III-2-2〉 저출산 분야(부모, 만족도)

단위: %, 점, (명)

선별지표 항목	2~4차년도 보고서 내의 항목	결과	차수(년도)		
			2차(2019)	3차(2020)	4차(2021)
아동수당	아동수당	만족비율 ¹⁾	43.9	61.1	63.6
		5점 평균 ²⁾	3.3	3.6	3.7
		계(수)	100.0(897)	100.0(1,633)	100.0(1,807)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만족비율 ¹⁾	65.2	75.0	64.2
		5점 평균 ²⁾	3.7	3.9	3.7
		계(수)	100.0(342)	100.0(563)	100.0(1,379)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모 육아휴직	만족비율 ¹⁾	50.5	62.3	71.7
		5점 평균 ²⁾	3.4	3.6	3.9
		계(수)	100.0(315)	100.0(655)	100.0(803)
	부 육아휴직	만족비율 ¹⁾	48.0	55.5	63.7
		5점 평균 ²⁾	3.2	3.6	3.7
		계(수)	100.0(50)	100.0(119)	100.0(19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모 근로시간 단축	만족비율 ¹⁾	61.9	68.9	70.4
		5점 평균 ²⁾	3.7	3.8	3.8
		계(수)	100.0(105)	100.0(283)	100.0(399)
	부 근로시간 단축	만족비율 ¹⁾	51.5	59.6	64.6
		5점 평균 ²⁾	3.5	3.8	3.8
		계(수)	100.0(33)	100.0(89)	100.0(127)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모 출산휴가	만족비율 ¹⁾	61.4	67.5	72.1
		5점 평균 ²⁾	3.7	3.8	3.9
		계(수)	100.0(394)	100.0(790)	100.0(957)
	부 출산휴가	만족비율 ¹⁾	34.7	47.8	53.8
		5점 평균 ²⁾	3.0	3.3	3.4
		계(수)	100.0(357)	100.0(623)	100.0(781)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	모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등)	만족비율 ¹⁾	64.7	67.8	74.3
		5점 평균 ²⁾	3.8	3.8	3.9
		계(수)	100.0(68)	100.0(199)	100.0(226)
	부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등)	만족비율 ¹⁾	72.7	73.2	73.2
		5점 평균 ²⁾	3.8	3.9	3.9
		계(수)	100.0(33)	100.0(112)	100.0(183)

주: 1)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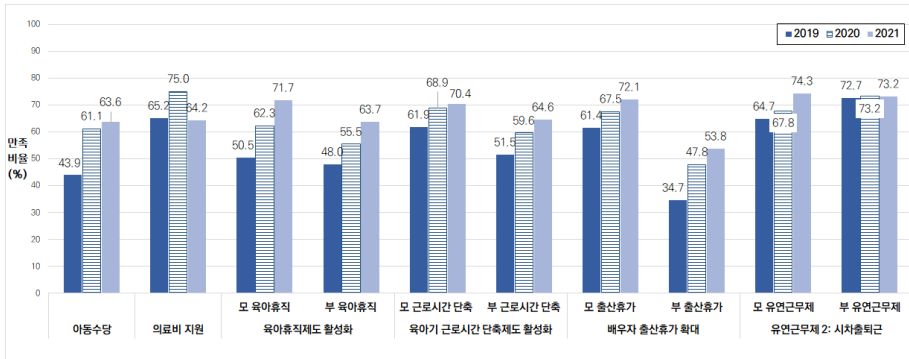
2) 만족비율은 '④만족', '⑥매우 만족'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자료:1)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94, 219.

2)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I):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100, 103,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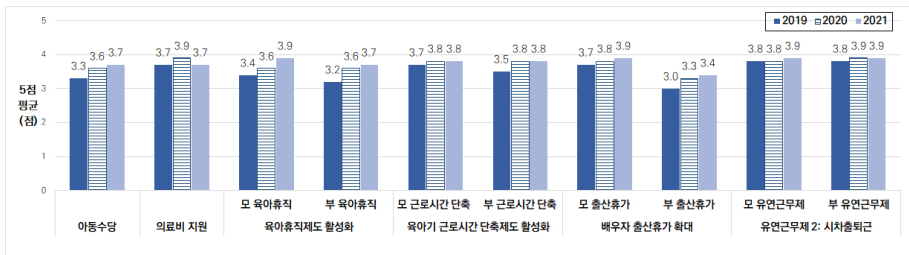
3)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140, 149.

[그림 III-2-3] 저출산 분야(부모, 만족도)



주: 1) 본 보고서 <표 III-2-2>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냄.
2) 각 항목에 대한 만족비율로, '④만족', '⑤매우 만족'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그림 III-2-4] 저출산 분야(부모, 만족도)



주: 1) 본 보고서 <표 III-2-2>를 그림으로 나타냄.
2) '①매우 불만족'~'⑤매우 만족'의 5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나. 유아교육·보육·돌봄 분야

2~4차년도 연구의 유아교육·보육·돌봄 분야 전문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긍정비율경우(21.0%p)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20.5%p 상승)이다. 7점 평균 차이의 경우, 긍정비율이 두 번째로 많이 상승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이 0.93점 차이로 가장 큰 폭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초등돌봄서비스의 질 제고'(0.74점)가 뒤를 이었다. '시간제보육사업'의 경우, 과년도 대비 긍정비율(1%p하락), 7점평균(0.04점 상승) 모두 가장 낮은 차이 결과가 나타났다.

〈표 III-2-3〉 유아교육·보육·돌봄 분야(전문가, 달성도)

단위: %, 점, (명)

선별지표 항목	2~4차년도 보고서 내의 항목	결과	차수(년도)		
			2차(2019)	3차(2020)	4차(202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만족도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긍정비율 ¹⁾	57.5	64.0	74.0
		7점 평균 ²⁾	4.5	4.8	5.40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국공립유치원 등 공공 유치원 취원율	국공립유치원·어린이 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긍정비율 ¹⁾	60.4	62.0	63.0
		7점 평균 ²⁾	4.6	4.6	4.87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보육 취원율	국공립유치원·어린이 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긍정비율 ¹⁾	60.4	62.0	63.0
		7점 평균 ²⁾	4.6	4.6	4.87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긍정비율 ¹⁾	41.5	43.0	62.0
		7점 평균 ²⁾	4.1	4.0	5.03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차이 완화 여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긍정비율 ¹⁾	31.1	41.0	43.0
		7점 평균 ²⁾	3.8	4.1	3.96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긍정비율 ¹⁾	55.7	64.0	69.0
		7점 평균 ²⁾	4.7	4.8	5.43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보육지원체계 개편 만족도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긍정비율 ¹⁾	55.7	61.0	69.0
		7점 평균 ²⁾	4.7	4.7	5.02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시간제보육 사업 확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긍정비율 ¹⁾	67.0	68.0	66.0
		7점 평균 ²⁾	4.9	5.0	4.94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초등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긍정비율 ¹⁾	50.0	52.0	71.0
		7점 평균 ²⁾	4.4	4.4	5.14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정부 지원을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긍정비율 ¹⁾	53.8	45.0	68.0
		7점 평균 ²⁾	4.6	4.4	5.15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주: 1) 긍정비율은 '⑤',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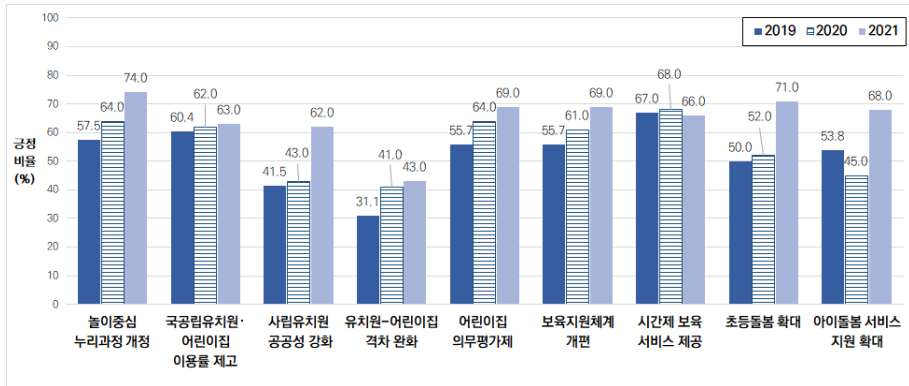
2)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1)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192~193.

2)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181~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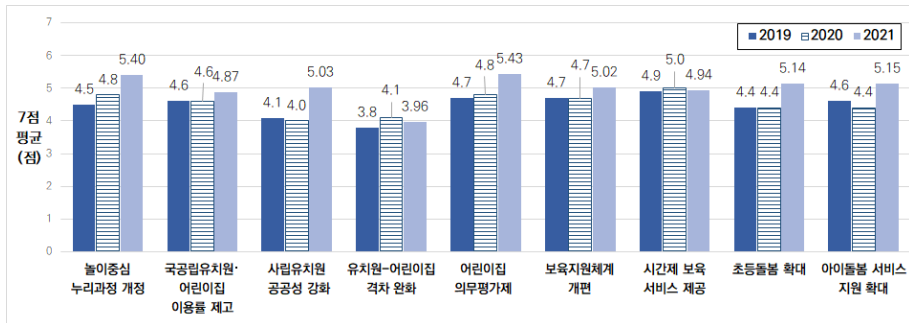
3)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113~114.

[그림 III-2-5] 유아교육·보육·돌봄 분야(전문가, 달성도)



주: 1) 본 보고서 <표 III-2-3>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냄.
2) 각 항목에 대한 긍정비율로, '⑤', '⑥', '⑦' 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그림 III-2-6] 유아교육·보육·돌봄 분야(전문가, 달성도)



주: 1) 본 보고서 <표 III-2-3>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냄.
2)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⑦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7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다. 아동 분야

2~4차년도 아동분야 전문가 조사 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 시군구 배치율' 긍정비율의 경우 2차년도 54.7%에서 3차년도 43.0%로 11.7%p로 큰 감소폭이 나타났으며, 4차년도 연구의 경우 54.0%로 전년도 대비 9%p가 올랐지만 2년 동안 결과적으로 0.7%p 하락한 결과가 나타났다. 7점 평균 또한 4.5점에서 4.34로 전반적인 0.16점 하락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III-2-4〉 아동 분야(전문가, 달성도)

단위: %, 점, (명)

선별지표 항목	2~4차년도 보고서 내의 항목	결과	차수(년도)		
			2차(2019)	3차(2020)	4차(202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군구 배치율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개편)	긍정비율 ¹⁾	54.7	43.0	54.0
		7점 평균 ²⁾	4.5	4.2	4.34
		계(수)	100.0(106)	100.0(100)	100.0(100)

주: 1) 긍정비율은 '⑥',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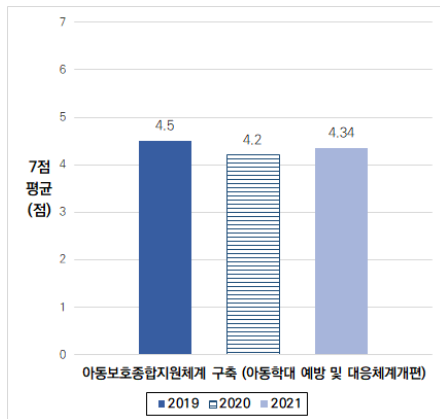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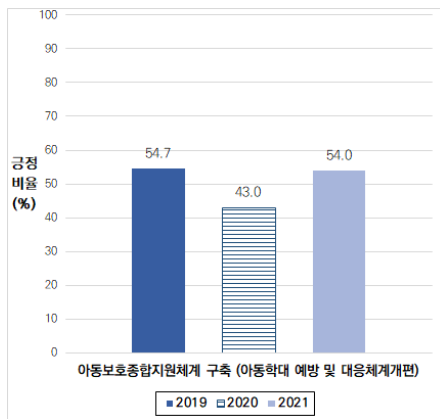
2)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1)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192~193.

2)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303.

3)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15.

[그림 III-2-7] 아동 분야(전문가, 달성도)



주: 1) 본 보고서 〈표 III-2-4〉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냄.

2) 각 항목에 대한 긍정비율로, '⑥',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3)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⑦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7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2차, 3차년도 연구의 아동분야 부모 만족도 평가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 시군구 배치율'의 긍정비율은 각각 18.6%, 20.6%로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점평균의 경우 각각 2.7점, 2.8점으로 전년도 대비 0.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아동 분야(부모, 달성도)

단위: %, 점, (명)

선별지표 항목	2~4차년도 보고서 내의 항목	결과	차수(년도)		
			2차(2019)	3차(2020)	4차(2021)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요원 시군구 배치율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개편)	긍정비율 ¹⁾	18.6	20.6	-
		5점 평균 ²⁾	2.7	2.8	-
		계(수)	100.0(1,013)	100.0(1,7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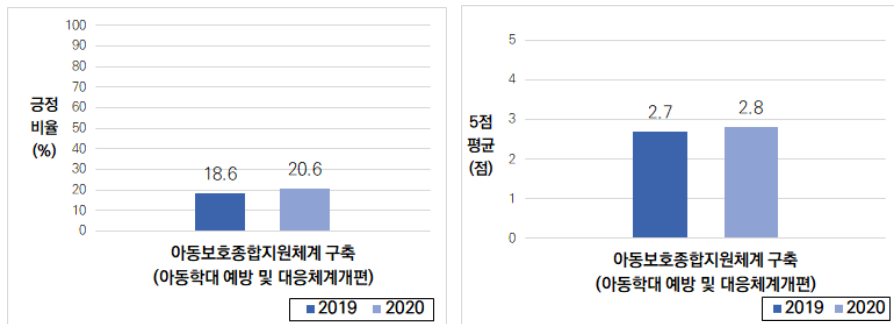
주: 1) 긍정비율은 '④달성되었다', '⑤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2)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자료: 1)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298.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51.

[그림 III-2-8] 아동 분야(부모, 달성도)



주: 1) 본 보고서 <표 III-2-5>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냄.

2) 각 항목에 대한 긍정비율로, '④달성되었다', '⑤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3) '①전혀 달성되지 않았다'~'⑤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5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3. 육아정책 국정과제 평가

본 절에서는 2~4차년도 연구에서 실시한 국정과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가. 2차년도

2차년도 연구(최윤경 외, 2019)의 전문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17개(하위과제 6개 포함)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을 질문한 결과, 7점 척도 평가에서

평균 3~4점대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잘 못하는 편’에 가까운 응답으로 평가되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 비율의 합이 54.7%로 긍정 응답 과반을 넘은 유일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긍정 응답률이 높은 국정과제로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긍정 응답 46.2%,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43.4%,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각 40.6%로 40%대의 긍정 응답을 보였다.

반면에 ‘강력한 저출산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15.1%,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은 18.9%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육아정책의 최상위 목표인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40.6%, 못하고 있다 39.6%로 7점 평균 4.0점의 ‘보통’ 수준으로 평정되었으며,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투자 강화’, ‘온종일 돌봄의 실현’과 같은 국정과제에서 긍정적 평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성과평가(2차년도)

단위: %(명), 점

관련 국정과제	긍정비율	평균 (7점)	계(수)
(1)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40.6	4.0	100.0(106)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보건복지부)	23.6	3.5	100.0(106)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33.0	3.8	100.0(106)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15.1	3.2	100.0(106)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40.6	3.9	100.0(106)
(6)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26.4	3.5	100.0(106)
(7)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27.4	3.9	100.0(106)
(8)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34.9	3.9	100.0(106)
(9)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성가족부)	39.6	4.1	100.0(106)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54.7	4.6	100.0(106)
(11)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성가족부)	38.7	4.0	100.0(106)
(12)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28.3	3.7	100.0(106)
(13) -일·가정 양립 일상화	34.9	3.8	100.0(106)
(14)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18.9	3.2	100.0(106)
(15)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34.9	3.8	100.0(106)
(16)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43.4	4.2	100.0(106)
(17)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46.2	4.2	100.0(106)

주: 긍정비율은 ‘⑤’, ‘⑥’, ‘⑦매우 잘하고 있다’의 응답비율 합산임.

자료: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p.108-109.

제시된 육아정책의 세부과제(39개)를 전문가에게 모두 제시하고 성과가 가장 큰 (즉 수요자 효능감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정책과제와 그렇지 않은 성과가 가장 적은 정책, 그리고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1, 2순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시적으로 성과가 우수한 정책과제로는 ‘아동수당의 도입과 연령 확대’와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가 (1+2순위 중복응답기준) 각 25.5%, 2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놀이중심의 누리과정 개편’, ‘의료비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경우 정책 성과가 크다는 응답과 적다는 응답이 약 10% 내외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평가가 엇갈리는 과제로 해석된다.

성과가 미흡한 정책과제와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는 비슷한 응답패턴을 보였는데, 먼저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저조한 성과평가와 향후 우선집중과제라는 응답이 모두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성과가 미흡한 정책과제에 대한 응답은 ‘아동의 웰빙과 행복’,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부모의 육아행복감’과 ‘부모의 육아권 보장’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요하거나 우선 집중이 필요한 정책 과제로는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다음으로, ‘아동의 웰빙/행복’,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와 ‘부모의 육아행복감’,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유보통합의 추진이 중단되고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로 과제화 되었으나, 실제 가시적으로 체감한 부분이 없었다는 의견이 있으며,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정책의 추진과 기여도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정책과제의 수행이 불변의 중요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행복과 웰빙, 부모의 육아행복감 회복과 증진이 성과가 가장 미흡하고 향후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로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표 III-3-2〉 육아정책 관련 성과 세부 평가(2차년도)

단위: %

관련 국정과제	성과 큰 정책		성과 적은 정책		집중 필요 정책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2.8	4.7	22.6	29.2	22.6	24.5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5	12.3	2.8	3.8	4.7	5.7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1.9	2.8	3.8	5.7	1.9	4.7
(4) 육아시간 지원	-	0.9	-	0.9	-	-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8.5	14.2	0.9	0.9	0.9	1.9
(6) 부모의 노동권 보장	-	0.9	4.7	0.9	-	0.9
(7) 부모의 육아권 보장	1.9	1.9	0.9	7.5	6.6	13.2
(8)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15.1	25.5	-	0.9	-	0.9
(9) 출산·양육 세제 개선	0.9	1.9	0.9	1.9	0.9	0.9
(10) 양육지원체계 개편(보육료·수당 관련 개편)	0.9	2.8	0.9	2.8	1.9	2.8
(11)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제도로,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8.5	15.1	-	-	-	-
(12)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지원 등	-	0.9	-	0.9	-	-
(13) (취약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0.9	1.9	2.8	3.8	-	-
(14) (놀이중심)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혁신	-	0.9	4.7	8.5	3.8	3.8
(15)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1.9	2.8	3.8	6.6	4.7	6.6
(16)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편	14.2	18.9	3.8	5.7	1.9	4.7
(17)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12.3	20.8	1.9	5.7	2.8	5.7
(18)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5.7	10.4	4.7	9.4	2.8	6.6
(19)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	2.8	1.9	1.9	1.9	3.8
(20)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0.9	1.9	3.8	4.7	0.9	1.9
(21)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	-	6.6	11.3	8.5	14.2
(22) 보육서비스 질 제고	-	0.9	1.9	4.7	1.9	5.7
(23)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3.8	13.2	-	0.9	1.9	2.8
(24)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1.9	4.7	-	3.8	0.9	4.7
(25)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9	4.7	0.9	0.9	-	1.9
(26)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0.9	6.6	2.8	5.7	0.9	7.5
(27) 육아지원의 확대	0.9	1.9	-	1.9	-	2.8
(28)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서비스	-	1.9	2.8	5.7	4.7	12.3
(29) 아이돌봄비, 육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	0.9	0.9	0.9	0.9
(30) 취학전 출발선 평등	2.8	4.7	0.9	4.7	3.8	5.7
(31)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	0.9	3.8	2.8	5.7	-	3.8
(32) 양육비 부담 완화	0.9	4.7	0.9	5.7	-	2.8
(33)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	0.9	0.9	3.8	0.9	0.9
(34)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0.9	1.9	0.9	5.7	2.8	6.6
(35) 아동권리보장(4영역: 보호, 참여, 건강, 놀이)	0.9	2.8	-	1.9	-	3.8
(36) 아동정책 (수혜)의 사각지대 보완	-	-	-	-	-	4.7
(37) 부모의 육아 행복감	-	0.9	1.9	10.4	5.7	14.2
(38) 아버지의 양육참여	-	-	0.9	-	0.9	0.9
(39) 아동의 웰빙/행복	-	1.9	9.4	17.0	7.5	16.0

자료: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116-117.

나. 3차년도

3차년도 연구(김근진 외, 2020)의 전문가 성과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차년도 연구(2019년) 결과와 비교하여,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보건복지부)’,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는 2019년보다 긍정비율이 높아졌으나,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성가족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성가족부)’,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일·가정 양립 일상화’는 2019년보다 긍정비율이 낮아졌다.

〈표 III-3-3〉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성과평가(3차년도)

단위: %(명), 점

구분	관련 국정과제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1)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39.0	4.1	100.0 (100)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보건복지부)	29.0	3.7	100.0 (100)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32.0	4.0	100.0 (100)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19.0	3.4	100.0 (100)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45.0	4.2	100.0 (100)
(6)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24.0	3.7	100.0 (100)
(7)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27.0	3.8	100.0 (100)
(8)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39.0	4.1	100.0 (100)
(9)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성가족부)	33.0	4.0	100.0 (100)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60.0	4.6	100.0 (100)
(11)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성가족부)	35.0	3.9	100.0 (100)
(12)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25.0	3.6	100.0 (100)
(13)	ㄴ 일·가정 양립 일상화	30.0	3.8	100.0 (100)
(14)	ㄴ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18.0	3.4	100.0 (100)
(15)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36.0	4.0	100.0 (100)
(16)	ㄴ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44.0	4.2	100.0 (100)
(17)	ㄴ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47.0	4.3	100.0 (100)

주: 긍정비율은 ‘⑤’, ‘⑥’, ‘⑦매우 잘하고 있다’의 응답비율 합산임.

자료: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76.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중요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1순위 기준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가 1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9년 조사에서 23.6%가 나온 결과와 비교하면 다소 하락하였으나, 1+2순위 기준으로는 2020년 30.0%로 2019년 31.1%와 비교하면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그다음으로는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이 14.0%였고,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13.0%로 그 뒤를 이었다.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은 2019년 조사에서도 1순위 기준으로 16.0%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에 이어 2번째로 그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국정과제 중 실행이 우수한 과제는 1순위 기준으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1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19년에도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18.9%로 2020년 조사 결과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2019년 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서비스 확대’는 2019년 조사에서는 19.8%였지만, 2020년 조사에서는 16.0%로 다소 하락하였다. 그다음으로 실행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과제는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으로 15.0%로 나타났다.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은 2019년 조사에서는 11.3%로 나타났는데 2020년 조사에서는 그 중요도가 다소 상승하였다.

국정과제 중 실행이 미흡한 과제로는 1순위 기준으로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이 1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이 14.0%,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가 13.0%,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10.0%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저출산 대응 정책들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은 2019년 조사 결과에서는 8.5%였으나, 2020년 조사 결과에서는 14.0%로 나타나 그 성과가 2019년보다 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표 III-3-4〉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중요도, 실행 우수, 실행 미흡(3차년도)

단위: %

관련 국정과제	중요도		실행 우수		실행 미흡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17.0	30.0	3.0	6.0	10.0	19.0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보건복지부)	11.0	18.0	2.0	3.0	15.0	26.0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14.0	24.0	3.0	7.0	14.0	20.0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5.0	9.0	2.0	5.0	13.0	24.0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13.0	29.0	19.0	29.0	6.0	14.0
(6)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3.0	7.0	2.0	4.0	7.0	11.0
(7)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여성가족부)	2.0	5.0	2.0	3.0	4.0	8.0
(8)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	6.0	9.0	15.0	2.0	2.0
(9)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성가족부)	3.0	6.0	5.0	11.0	3.0	7.0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	-	16.0	38.0	1.0	1.0
(11)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성가족부)	3.0	6.0	3.0	6.0	6.0	8.0
(12)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2.0	8.0	1.0	1.0	9.0	14.0
(13) ㄴ 일·가정 양립 일상화	7.0	14.0	3.0	6.0	3.0	18.0
(14) ㄴ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7.0	14.0	1.0	3.0	4.0	12.0
(15)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4.0	6.0	6.0	16.0	2.0	8.0
(16) ㄴ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3.0	10.0	8.0	23.0	1.0	2.0
(17) ㄴ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6.0	8.0	15.0	24.0	-	6.0

자료: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77~81.

다. 4차년도

4차년도 연구(김근진 외, 2021)의 전문가 평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일·가정 양립 일상화’,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구현’은 2020년보다 긍정 비율이 높아졌으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2020년보다 긍정비율이 낮아졌다.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성과평가에서 2020년과 2021년 모두 긍정비율이 가장 높은 국정과제는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구현’이고, 긍정비율이 가장 낮은 국정과제는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였다.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구현’은 긍정비율이 2020년 47.0%에서 2021년 52.0%로 상승하였으나,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는 긍정비율이 2020년 19.0%에서 2021년 12.0%로 하락하였다.

〈표 III-3-5〉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성과평가(4차년도)

단위: %(명), 점

관련 국정과제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1)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33.0	3.98	100.0 (100)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22.0	3.41	100.0 (100)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36.0	3.92	100.0 (100)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12.0	3.25	100.0 (100)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38.0	4.03	100.0 (100)
(6)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41.0	4.21	100.0 (100)
(7)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32.0	3.86	100.0 (100)
(8) 일·가정 양립 일상화	43.0	4.13	100.0 (100)
(9)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48.0	4.15	100.0 (100)
(10)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구현	52.0	4.51	100.0 (100)

주: 긍정비율은 ‘⑤’, ‘⑥’, ‘⑦매우 잘하고 있다’의 응답비율 합산임.

자료: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I):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306.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중요도 조사결과를 보면, 1순위 기준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가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이 19.0%였고,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이 18.0%로 그 뒤를 이었다. 2순위 및 1+2순위로는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각각 18.0%와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3-6〉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중요도(4차년도)

단위: %

관련 국정과제	1순위	2순위	1+2순위
(1) 일하며 키우기 행복한 나라	20.0	12.0	32.0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18.0	8.0	26.0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19.0	18.0	37.0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3.0	6.0	9.0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15.0	15.0	30.0
(6)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5.0	7.0	12.0
(7)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2.0	9.0	11.0
(8) 일·가정 양립 일상화	11.0	14.0	25.0
(9)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5.0	6.0	11.0
(10)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구현	2.0	5.0	7.0

자료: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306~307.

국정과제 중 실행이 우수한 과제는 1순위, 2순위, 1+2순위 모두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구현’이 각각 29.0%, 19.0%,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3-7〉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행 우수(4차년도)

단위: %

관련 국정과제	1순위	2순위	1+2순위
(1) 일하며 키우기 행복한 나라	4.0	5.0	9.0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3.0	4.0	7.0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3.0	11.0	14.0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2.0	0.0	2.0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15.0	15.0	30.0
(6)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22.0	19.0	41.0
(7)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2.0	4.0	6.0
(8) 일·가정 양립 일상화	5.0	14.0	19.0
(9)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15.0	9.0	24.0
(10)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구현	29.0	19.0	48.0

자료: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307.

전문가들이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중 실행이 우수한 과제로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을 1순위로 선택한 이유로는 다부처에서 추진 중이라 효율성은 낮으

나 그만큼 실행이 가장 잘 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온종일 돌봄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I-3-8>과 같다.

<표 III-3-8>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행 우수 1순위(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구현) 선택 이유 (4차년도)

선택 이유
(1)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 아동지역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온종일 돌봄 시스템은 잘 갖추어진 상태임.
(2) 정책의 “가시성” 면에서 가장 잘 된 과제임.
(3) 다 부처에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효율성은 낮으나 그만큼 실행이 가장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함.
(4) 다른 과제에 비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음.
(5)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기관에서 돌봄에 대한 관심과 실행을 실천하고 있음.
(6)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온종일 돌봄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음.
(7)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공동체 사업지원, 부처별 돌봄서비스 유형 외에 각 지자체별 특성을 살린 틈새돌봄, 지역돌봄이 활성화 되었음.

자료: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I):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307의 내용을 표로 구성함.

국정과제 중 실행이 미흡한 과제로는 1순위, 2순위, 1+2순위 모두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가 각각 26.0%, 20.0%,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순위 기준으로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이 그다음으로 높은 21.0%로 나타났다.

<표 III-3-9>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행 미흡(4차년도)

관련 국정과제	1순위	2순위	1+2순위
(1) 일하며 키우기 행복한 나라	4.0	14.0	18.0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21.0	11.0	32.0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12.0	12.0	24.0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26.0	20.0	46.0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16.0	8.0	24.0
(6)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2.0	5.0	7.0
(7)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9.0	9.0	18.0
(8) 일·가정 양립 일상화	4.0	6.0	10.0
(9)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2.0	12.0	14.0
(10)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구현	4.0	3.0	7.0

자료: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I):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310.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조직구조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이 번번이 좌절되고 청와대의 의견대로 추진되었다고 보았다. 그 외 다양한 이유는 아래 <표 III-3-10>과 같다.

<표 III-3-10>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행 미흡 1순위(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선택 이유(4차년도)

선택 이유
(1) 저출산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하나 형식적인 합의 등으로 진행된다고 여겨지며, 구성원들이 관, 학계 위주로 구성되어 현장의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족하다고 여겨짐.
(2)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마련이 부족했음은 출산율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저출산 대책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강화되지는 못함.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음.
(5) 조직 구조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이 번번이 좌절되고 청와대의 의견대로 추진됨.
(6) 부처별 사업의 저출산 대책 포괄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의 문제,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중복 사업들의 통합관리가 필요함.
(7)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어느 부처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없음.
(8) OECD 출생률 세계최저 결과는 현행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되지 못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I):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308의 내용을 표로 구성함.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여전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 외 제시된 이유는 아래 <표 III-3-11>과 같다.

<표 III-3-11>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행 미흡 1순위(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선택 이유(4차년도)

선택 이유
(1) 저출산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으나 실제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이며,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2) 일회성 근시안적 대책 제공
(3)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부족
(4) 단기적인 투자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함
(5)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세대에게 저출산 문제는 현실성이 떨어짐.

자료: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308의 내용을 표로 구성함.

성과가 미흡한 국정과제 1순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개선방안으로 관계 부처 합동 위원회에 저출산, 보육 실무 현장 전문가 참여율을 높이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이 상시적 열람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의 위원회로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하며, 출산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강력한 베네핏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항상 이에 대한 총론만 논의하는데 그치고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다(〈표 III-3-12〉 참조).

〈표 III-3-12〉 성과가 미흡한 국정과제 1순위(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대한 개선방안(4차년도)

개선 방안
(1) 관계 부처 합동 위원회에 저출산, 보육 실무 현장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결정사항에 대해 부처 및 관계기관이 상시적 열람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필요
(2) 관련 기관 홍보활성화를 위한 포상계획 등 세부 추진내용 마련
(3) 현재의 위원회로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 불가
(4) 출산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강력한 베네핏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베네핏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총론만 이야기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기술하지 못하고 있음.
(5) 저출산과 관련된 대책 및 전체적인 로드맵의 수정이 필요함.
(6)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 필요함.
(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나 TF에서 이루어지고 수렴된 의견에 대한 적합한 반영이 필요함.
(8) 보건복지부에서 아이 출생에서부터 종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9) 부처 간 업무 조정 협의 또는 상위기관 마련(예: 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직속기구)
(10) 현행 저출산 관련 계획 수립과 재정투입이 지자체, 부처별 시행에 따라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견됨으로 시행단계를 간략화하면서 중복되지 않은 컨트롤타워기능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309의 내용을 표로 구성함.

〈표 III-3-13〉 성과가 미흡한 국정과제 1순위(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에 대한 개선방안(4차년도)

개선 방안
(1) 자녀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2) 영유아 양육수당, 부모 양육 지원,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기관 질적 수준 향상, 경제적인 유인책 외에 요즘 세대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3) 저출산 문제는 지속적인 홍보와 자녀 수 만큼 세금 및 주거 혜택 등을 제공해야 함.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봄. 현재 우리나라는 세 명 출산 시 주거 구입에 혜택이 있으나, 두 명으로 기준이 하향되어야 함.

개선 방안
(4) 젊은 세대의 일자리, 주거 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일자리, 주거문제가 먼저 해결해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음.
(5) 미래세대에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출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6) 출산 뿐만 아니라 이후 육아를 위해서도 확실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7) 국가 주도로 양질의 유아교육, 보육기관 확대, 출산장려금 확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의 의미를 개인적 의미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8) 출산과 육아의 즐거움에 대한 사회적인 문화형성 필요

자료: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309의 내용을 표로 구성함.

라. 종합

이상의 2~4차 국정과제 평가에 대한 결과를 공통된 항목에 대해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다. 연구기간 동안 지속적인 긍정비율의 상승을 보인 과제는 ‘(9)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과 ‘(10)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구현’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속적으로 긍정비율의 하락을 보인 과제는 ‘(1) 일하며 키우기 행복한 나라’로 나타났다.

〈표 III-3-14〉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행 평가_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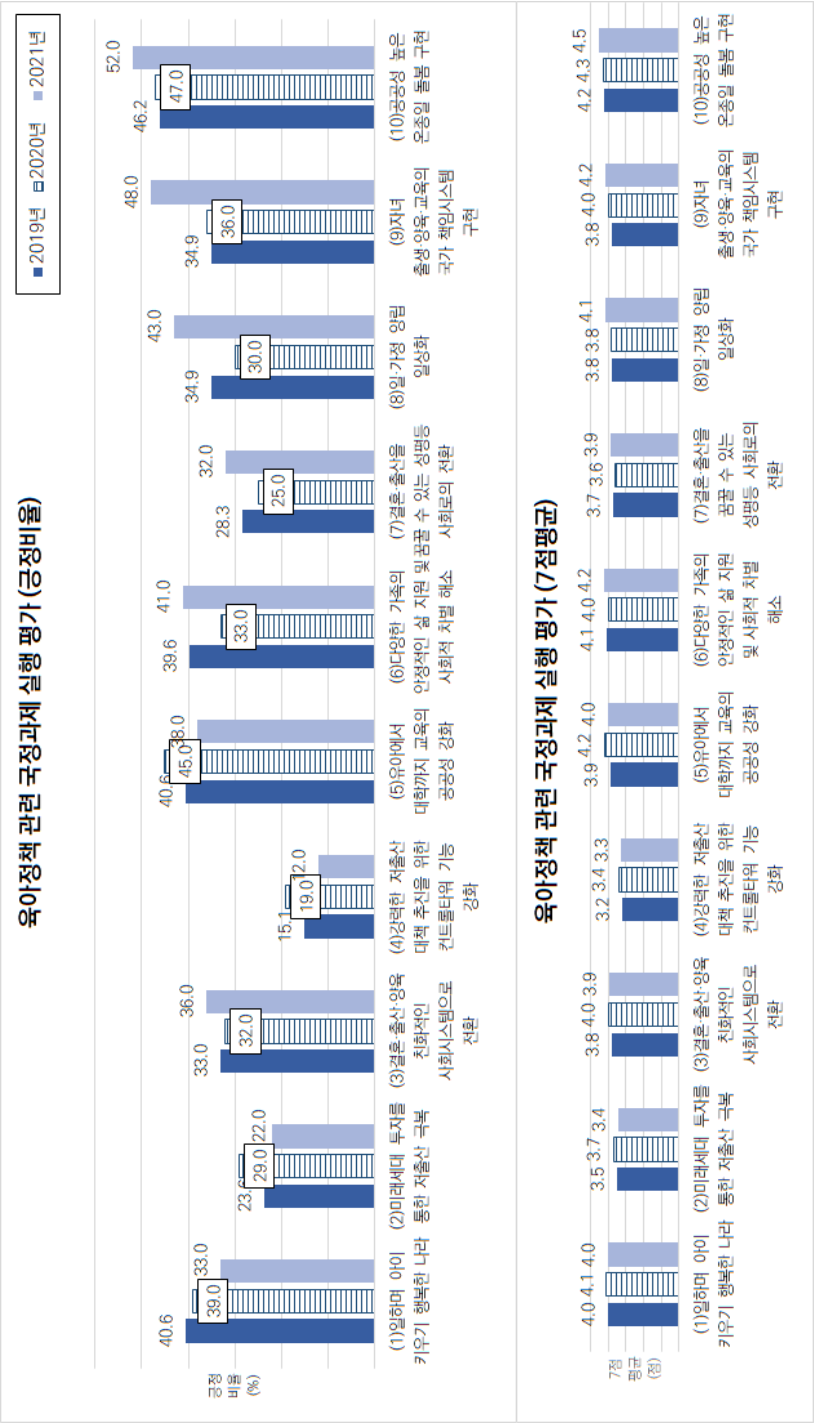
관련 국정과제	2019년 조사				2020년 조사				2021년 조사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1)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40.6	4.0	100.0	(106)	39.0	4.1	100.0	(100)	33.0	3.98	100.0	(100)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23.6	3.5	100.0	(106)	29.0	3.7	100.0	(100)	22.0	3.41	100.0	(100)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33.0	3.8	100.0	(106)	32.0	4.0	100.0	(100)	36.0	3.92	100.0	(100)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15.1	3.2	100.0	(106)	19.0	3.4	100.0	(100)	12.0	3.25	100.0	(100)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40.6	3.9	100.0	(106)	45.0	4.2	100.0	(100)	38.0	4.03	100.0	(100)

III. 육아정책 성과분석 및 국정과제 평가(2~4차)

관련 국정과제	2019년 조사				2020년 조사				2021년 조사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6) 다양한 가족의 안정 적인 삶 지원 및 사 회적 차별 해소	39.6	4.1	100.0	(106)	33.0	4.0	100.0	(100)	41.0	4.21	100.0	(100)
(7)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 로의 전환	28.3	3.7	100.0	(106)	25.0	3.6	100.0	(100)	32.0	3.86	100.0	(100)
(8) 일·가정 양립 일상화	34.9	3.8	100.0	(106)	30.0	3.8	100.0	(100)	43.0	4.13	100.0	(100)
(9) 자녀 출생·양육·교 육의 국가 책임시스 템 구현	34.9	3.8	100.0	(106)	36.0	4.0	100.0	(100)	48.0	4.15	100.0	(100)
(10) 공공성 높은 온종 일 돌봄 구현	46.2	4.2	100.0	(106)	47.0	4.3	100.0	(100)	52.0	4.51	100.0	(100)

주: 긍정비율은 ‘⑤’, ‘⑥’, ‘⑦매우 잘하고 있다’의 응답비율 합산임.

[그림 II-3-1]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행 평가(중항)



4. 육아정책 성과 제고 방안

각 연차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육아정책 성과 제고 방안을 정리하면 <표 III-4-1>와 같다.

1차년도 연구(이윤진 외, 2018)는 10대 복합·혁신 핵심정책 과제와 5대 유아교육·보육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2차년도 연구(최윤경 외, 2019)는 국정과제 및 정책과제 별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육아정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큰 틀로 ‘시간지원의 실행력 강화’, ‘현금지원의 효과성 검증 및 후속정책 설계’, ‘초등시기 다양한 수요 충족과 양질의 프로그램/환경 구성’, ‘육아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어젠다 설정’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어서, 3차년도 연구(김근진 외, 2020)는 해당 연구에서 선정한 육아정책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저출산 정책/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아동정책 분야 별로 성과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4차년도 연구(김근진 외, 2021)는 부문별 육아정책(현금 및 의료비 지원정책,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정책, 자녀돌봄 시간 지원정책)과 2020~2021년 이슈인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여 성과 제고 방안을 제안하였다.

<표 III-4-1> 육아정책의 성과 제고 주요 방안 종합(1~4차 연구)

구분	내용	
1차 (2018)	10대 복합·혁신 핵심정책과제 제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유아교육·보육 정책과제 추진 방안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 학교 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 체제 도입 -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구분	내용	
2차 (2019)	시간지원의 실행력 강화: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보완	- 별도의 기금 조성 논의를 통해 시간지원의 보편적 수혜 기반 마련 -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로제의 순차적 도입으로 효과성, 수혜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시간지원 정책의 실행수준 제고
	현금지원의 효과성 검증 및 후속정책 설계	- 가구특성, 양육방식에 따른 현금지원 효과 분석,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현금지원 보완책과 연계전략 요구 · 취약계층: 양질의 교육보육돌봄 프로그램 이용 보장 서비스와 프로그램 지원 추가적으로 요구됨. · 중산층 이상: 돌봄 기능 이상의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보장되어 사교 육의존 감소 로드맵 설정 요구 ·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와 공적 놀이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가능성 보장 · 가구 특성과 양육패턴별로 현금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차별화 된 전략과 지원체계 마련
	육아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어젠다 설정	- 육아정책의 주요 과제 우선순위 확보 - 우선순위가 필요한 육아정책: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와 가정환경의 질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전방위 설계, 아동 최우선의 원칙 적용 및 아동 웰빙과 발달성과 우선 모니터링, 양육지원체계(수당-서비스 지원의 정합성 제고) 및 보육지원체계(기본-연장 보육의 효율성 제고) 개편의 연계성 확보 등
3차 (2020)	육아정책의 단계·요소별 제언	-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및 집행/전달체계 개선(중앙-지방정부 역할 설계) - 저출산 정책의 재구조화: 정책 구성의 차별성 확보 - 온종일 돌봄체계 및 국공립기관 확대 추진방식에 대한 재고 - 육아정책의 설계와 추진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강화 - 포용정책 성과를 위한 정책대상 집단의 확대 - 지역 간 격차, 사교육 이용, 인프라 문제를 적극 고려하는 육아정책의 과정
	저출산정책	-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수준 점진적 증가 - 육아휴직 등 시간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 중소기업에서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요구
	유아교육/보육/ 돌봄 정책	- 초등돌봄교실 및 온종일 돌봄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달체계 개편 필요 · 초등돌봄교실의 관리책임을 지자체로 이관. 민간위탁보다는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선행 · 교육부의 기존 초등돌봄교실 예산 지자체 이전 - 보육지원체계 개편 후속 조치 필요 · 연장보육료 지원 시간 조정 -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념 명확화,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전환, 충분한 교육 자료 제공 - 유보격차 완화를 위한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필요
	아동정책	- 아동학대 대응 정책 예산의 일반회계 편성 제안

구분	내용	
4차 (202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아동수당 지급 금액 및 지급 연령 지속 확대 -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을 지속 확대 - 의료비 지원 수준 확대
	유아교육·보육· 초등돌봄 정책	- 공보육 이용률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하는 방향 필요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에듀파인 전담 인력 지원 추진 필요 - 공공성 및 회계투명성 강화 정책과 병행하여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도 지속적으로 추진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시간지원 제도의 전체 이용률을 증대시키는 정책, 성별, 종사자 규모에 따른 이용 편차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요구 - 육아휴직제도의 내실화 우선적 추진, 자녀연령 및 가구 여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순차적으로 병행 활용,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직장 내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 지속 필요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	- 집단휴원으로 인한 자녀돌봄의 사각지대가 초래되지 않도록 안전한 기관 긴급돌봄서비스 접근성 보장 -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및 부모 대상, 심리상담 및 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 가정 내 양육 가구를 위한 양육프로그램 지원 강화 - 부모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권고 이상의 방역 조치 요구

- 자료: 1) 이운진 외(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육아정책연구소. pp.179-183.
 2) 최운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197-200.
 3)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311-347.
 4)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313-325.

IV

육아정책 성과분석(1)

01 육아정책 성과분석

02 정책성과 분석

IV. 육아정책 성과분석(1)

본 장에서는 2021~2022년(5차) 육아정책을 정리하고 그와 관련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분석 내용을 보고하고자 한다.

1. 육아정책 성과분석

본 절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5차년도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통하여 2021~2022년 기간에 대한 육아정책 부문별 정책달성도(전문가) 및 만족도(수요자) 결과를 기반으로 성과분석 하였다. 성과분석을 위한 지표로는 4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성과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³⁾

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자녀양육 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육아지원으로는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과 의료비 지원이 있으며,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및 제도를 중심으로 충분성, 포괄성, 만족도 등을 성과분석 요소로 제시하여 분석한다(김근진 외, 2021: 74).

〈표 IV-1-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의 성과분석 요소

목표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세부 목표	성과분석요소
자녀양육 및 임신·출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아동수당	-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아동의 기본권 보장	- 아동수당 지급액의 충분성 - 아동수당 지급의 포괄성 - 아동수당 만족도 (도움 정도 인식)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의료비 부담 완화	- 의료비 지원 금액의 충분성 - 의료비 지원의 포괄성 - 의료비 지원 만족도 (도움 정도 인식)

3) 다만, 2021년도에 시행된 육아정책까지 수집을 완료하여 정리한 후, 정책 간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성과지표를 본 년도에 맞게 수정하여 분석함.

목표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세부 목표	성과분석요소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 건강관리 비용 부담 완화	- 건강 지원 금액의 충분성 - 건강 지원의 포괄성 - 건강 지원 만족도 (도움 정도 인식)

자료: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74.

1) 정책의 충분성 및 포괄성

앞서 제시된 성과분석요소 중에서 정책의 충분성 및 포괄성을 우선 분석해 보면, 실적이 보고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봤을 때, 관리과제 중 ‘임신·출산 건강 지원’, ‘아동수당 지급’ 등은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정책의 충분성과 포괄성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2〉 정책의 충분성 및 포괄성 분석

2021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 보고서	자체 평가
관리 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2021 목표치	지표 종류		실적	결과
				정량화	성격		
② 임신·출산 건강 지원	① 난임·우울증상담센터 대상자 만족도(%)	만족률 = 만족도 평가점수 / 만족도 총점(20점) × 100	92	정성	결과	94	보통
	② 미숙아 NICU 퇴원 후 생존율(%)	KNN 2020년 연차보고서상 생존율	85.4	정량	결과	85.4	
	③ 성·피임 교육 전·후 인지 변화율	교육 후 인지변화율 - 교육 전 인지 변화율 × 100%	26.8	정성	결과	27.4	
	④ 임신·출산 종합 상담 전화 이용자 만족도(신규)	만족도 설문조사(5점 척도)문항별 평균점수/문항수	83.5	정성	결과	86.1	
④ 아동수당 지급	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아동수당 지급 연령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여부('22년 예산 반영)	'22년 아동수당 예산 증액	정성	결과		보통
	② 아동수당 지원 만족도(점)	만족도 조사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만족도 점수	73	정성	결과	73	
	③ 아동수당 지급률(%)	아동수당 지원아동수 / 주민등록인구통계 상 0~6세 아동수 (연도말 기준) × 100	97.2	정량	산출	97.6	

2021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 보고서	자체 평가
관리 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2021 목표치	지표 종류		실적	결과
				정량화	성격		
① 수요자 중심의 무상 보육 기반 강화	④ 영아수당 제도 도입 추진	법령 개정 여부	완료	정성	산출		다소 미흡

주: 본 보고서 <표 II-1-4>를 정리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21b). 2021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p.508-512.

2) 대한민국정부(2022a). 202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 pp.1309-1315.

3) 보건복지부(2022a).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95-96.

4) 보건복지부(2022b). 20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pp.393-467.

2) 정책의 만족도 및 성과평가 결과

가) 부모

(1) 부모의 현금-시간 지원 정책 인지도·이용률·만족도

우선 부모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질문한 결과, 첫 만남이용권을 제외한 각종 현금지원에 대해 90% 내외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아동수당’에 대한 인지도가 응답자의 98.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의료비지원’과 ‘영아수당’,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 ‘가정양육수당’, ‘건강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에 대한 인지도는 57.5%의 과반 인지도를 보였으며, 이는 하위집단 특성별로 부모다 모, (첫째아 기준) 영아 부모일수록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동일하게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영아수당의 경우는 인지율 87.3%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역시 부모다 모, 영아 부모일수록 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현금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1-3〉 출산 및 육아지원 정책 인지도(현금 및 의료비 지원)

단위: %, (명)

구분	아동수당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의료비 지원 (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등)	첫만남 이용권 (생후 육아용품 구입비 200만원 1회 지급)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금	(수)
전체	98.8	87.3	85.8	89.0	83.9	57.5	87.0	(1,087)
성별								
남성	97.1	84.7	77.5	80.1	73.9	48.9	79.8	(307)
여성	99.5	88.3	89.1	92.4	87.8	60.9	89.9	(780)
$\chi^2(df)$	10.907(1)**	2.637(1)	24.285(1)***	33.967(1)***	31.416(1)***	13.062(1)***	19.778(1)***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96.6	89.9	80.3	91.8	90.4	70.2	93.8	(208)
유아부모	99.4	88.0	88.7	90.8	84.6	58.5	88.0	(468)
초등부모	99.3	85.2	85.4	85.4	79.8	49.9	82.5	(411)
$\chi^2(df)$	10.260(2)**	3.201(2)	8.430(2)*	8.675(2)*	11.754(2)**	23.691(2)***	16.270(2)***	

주: 1) 각 서비스의 인지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함.
 2) 각 서비스 별 인지/미인지 간 차이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이어서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실제 ‘수혜경험’에 대해서는,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아동수당’에 대한 수혜율이 전체 96.5%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등 의료비 지원(79.0%), 가정양육수당(77.3%),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69.3%)에 대한 수혜경험이 7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건강지원의 경우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이 반영되어 영아부모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수당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즉 초등자녀를 둔 부모의 이용률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였다. 초등자녀를 포괄하는 보편적 지원으로서의 아동수당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은 모 응답자보다 부, 영아부모일수록, 맞벌이가구, 읍면지역일수록 수혜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영아기 투자 및 건강의료 지원의 확대로 '영아부모'의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수혜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건강지원(난임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외별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지자체 현금지원에 대한 수혜율 응답이 모에 비해 부 응답자에서,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4〉 출산 및 육아지원 이용률(수혜경험)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단위: %

구분	아동수당 <i>n</i> =1,074	영아수당 <i>n</i> =949	가정양육수당 <i>n</i> =933	의료비지원(영유아의료비 지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i>n</i> =967	건강지원(난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등) <i>n</i> =912	첫만남이용권(생후 육아용품구입비 200만원 1회 지급) <i>n</i> =625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금 <i>n</i> =946
전체	96.5	8.1	77.3	79.0	34.9	12.0	69.3
성별							
남성	93.6	10.0	67.6	77.6	36.6	17.3	72.7
여성	97.6	7.4	80.6	79.5	34.3	10.3	68.2
$\chi^2(df)$	9.890(2)**	1.723(2)	17.605(2)***	4.817(2)	0.773(2)	7.292(2)*	6.069(2)*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94.5	23.0	77.8	78.5	45.2	29.5	85.6
유아부모	96.6	6.6	80.0	83.5	35.1	9.1	68.4
초등부모	97.3	2.0	73.8	73.8	28.7	3.4	61.1
$\chi^2(df)$	4.113(4)	92.521(4)***	5.374(4)	16.251(4)**	15.214(4)**	65.855(4)***	35.590(4)***
맞벌이 여부							
맞벌이	96.9	8.5	78.3	79.2	35.0	12.7	71.1
외벌이	90.0	7.4	65.3	76.4	42.0	10.3	65.5
해당없음	95.3	0.0	68.6	79.5	21.2	0.0	33.3
$\chi^2(df)$	9.313(4)	4.520(4)	6.301(4)	2.879(4)	8.600(4)	5.011(4)	24.745(4)***

주: 1) 이용률은 서비스를 인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2) 각 서비스의 이용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함.

3) 각 서비스 별 이용/미이용 간 차이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을 받는 경우, 총 수급액을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 97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일수록 지자체 현금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나, 인구소멸이 가시화 된 지자체에서 현금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이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자체 현금지원의 수급액이 높게 나타난 점은 현금지원에 대한 인지율이 가구소득 수준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평균 소득수준이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에서 출산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이 많은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표 IV-1-5〉 지자체 현금지원금 총 수급액

단위: 만원, (명)

구분	평균	(수)
전체	97.3	(656)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75.5	(33)
251~350만원	92.7	(92)
351~500만원	97.9	(193)
501~600만원	85.0	(121)
601만원 이상	108.7	(217)
<i>F</i>	0.8	
지역구분		
대도시	72.5	(231)
중소도시	100.9	(296)
읍면	134.2	(127)
<i>F</i>	7.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01$.

수혜경험이 있는 현금/의료비 지원에 대한 만족 응답(만족+매우만족)은 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된 ‘첫만남이용권(200만원 1회)’과 ‘영아수당(매월 30만원)’에 대한 만족도가 각 82.7%, 62.3%로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의료비지원’과 ‘건강지원’, ‘아동수당’에 대한 만족 응답률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지원 금액 수준이 높은 순으로 만족한다는 긍정응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지자체 현금지원’과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5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다.

‘아동수당’과 ‘의료비 지원’, ‘건강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60%대에서 5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지원이 확대되는 정책 시기에 이에 대한 만족도가 초기 대비 떨어지는 경향을 보임은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표 III-1-6〉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 만족도(2021년, 2022년)

단위: %(명), 점

구분	2021			2022		
	만족 비율	5점 평균	계(수)	만족 비율	5점 평균	계(수)
아동수당	63.6	3.7	100.0 (1,807)	54.6	3.5	100.0 (1,036)
영아수당	-	-	- -	62.3	3.8	100.0 (77)
가정양육수당	-	-	- -	48.8	3.4	100.0 (721)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64.2	3.7	100.0 (1,379)	56.3	3.6	100.0 (764)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63.7	3.7	100.0 (576)	55.0	3.6	100.0 (318)
첫만남이용권(생후 육아용품 구입비 200만원 1회 지급)	-	-	- -	82.7	4.2	100.0 (75)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금	-	-	- -	42.2	3.3	100.0 (656)

주: 1)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만족비율은 '만족', '매우 만족' 비율을 합산한 결과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94.

‘각종수당 등 현금지원’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부정적 응답을 한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현금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인 만큼 ‘지원금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불만족 응답의 80.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수당’의 경우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이 8세 미만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불만족 응답과 함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없이 전 계층에 동일하게 지원’ 되는 것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있었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다른 부분 등 ‘연령기준의 제한’에 대한 불만족 의견과 ‘현금 지원보다는 서비스/인프라/교직원 등에 대한 지원’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일부 5% 미만으로 있었다. ‘지자체 현금지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 제한’과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없이 전 계층에 동일하게 지원’ 되는 것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있었다.

〈표 IV-1-7〉 현금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불만족 이유-각종 수당 등 현금지원

단위: %(명)

구분	지원 금액 불충분	지원 대상 자녀 연령 기준 제한적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 전 계층 동일하게 지원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동일하게 지원	현금지원 보다 서비스/ 인프라/ 교직원 등 다른 지원 우선될 필요 있음	기타	계(수)
아동수당	81.3	11.6	3.9	0.6	-	2.6	-	100.0 (155)
영아수당	100.0	-	-	-	-	-	-	100.0 (6)
가정양육수당	82.8	4.7	3.1	2.3	0.8	4.7	1.6	100.0 (128)
첫만남이용권 (생후 육아용품 구입비 200만 원 1회 지급)	80.0	-	20.0	-	-	-	-	100.0 (5)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 원금	82.5	4.8	4.8	1.2	0.6	2.4	3.6	100.0 (166)

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지원금액 수준에 대한 불만족이유 외에, ‘지원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과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불만족이유로 응답되었으며, 건강지원의 경우 ‘지원금액 수준’에 대한 불만족이유 외에, ‘지원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과 ‘이용 방법/절차의 복잡함’, ‘신청 후 지원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등 비교적 다양한 불만족 이유가 응답되었다.

아동수당과 의료비, 건강 지원의 3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60%대에서 5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현금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불만족 이유-의료비 및 건강 지원

단위: %(명)

구분	지원 금액/ 서비스 수준 낮음	이용방법/ 절차 복잡	지원 기간 불충분	신청 후 지원 받기까지 시간 오래 걸림	원하는 시간/시기 이용 어려움	기타	계(수)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82.1	3.3	4.9	1.6	4.9	3.3	100.0 (12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62.7	9.8	11.8	5.9	2.0	7.8	100.0 (51)

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부모의 정책 효과성 인식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3개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1가지 선택하게 한 결과, ‘아동수당’에 대한 응답이 72.5%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의료비 지원’ 22.0%, ‘건강지원’ 5.5% 순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지원으로서의 아동수당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의 경우 초등부모에서, ‘의료비’와 ‘건강 지원’은 영아부모에서 상대적으로 긍정 응답이 많았다.

〈표 IV-1-9〉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단위: %(명)

구분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계(수)
전체	72.5	22.0	5.5	100.0 (1,087)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51.9	38.5	9.6	100.0 (208)
유아부모	74.6	20.9	4.5	100.0 (468)
초등부모	80.5	14.8	4.6	100.0 (411)
$\chi^2(df)$			59.36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0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3개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한 가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고르게 응답이 나타나, ‘건강지원’ 40.3%, ‘아동수당’ 36.0%, ‘의료비지원’ 23.7%로 응답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나,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영아부모일수록), ‘건강지원’의 경우 자녀 연령이 많을수록(초등부모일수록) 정책 성과가 미흡하다(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좀 더 많았다.

〈표 IV-1-10〉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단위: %(명)

구분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계(수)
전체	36.0	23.7	40.3	100.0 (1,087)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42.3	22.6	35.1	100.0 (208)
유아부모	36.8	22.9	40.4	100.0 (468)
초등부모	31.9	25.3	42.8	100.0 (411)
$\chi^2(df)$			7.057(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나) 전문가

(1) 현금 및 의료비 지원의 수행 달성도 평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의 수행 달성도는 이외 부문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의 긍정비율(7점 척도, ⑤~⑦ ‘매우 잘 달성되었다’를 합한 비율)은 84.6%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그다음으로는 ‘건강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81.7%, ‘아동수당’ 75% 순으로 평가되었다.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세부과제 모두에서 그 수행 달성도에 대한 긍정비율이 하락하였으며, 가장 높게 평가된 ‘의료비 지원’의 해당 비율도 0.4%p 하락하였다.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아동수당’에 대한 긍정 비율은 하락하였고, 그 외 ‘의료비 지원’, ‘건강 지원’ 항목의 긍정 비율 모두 상승하였다.

〈표 IV-1-1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의 수행 달성도 평가(2020년, 2021년, 2022년)

단위: %(명), 점

정책과제	2020			2021			2022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아동수당	78.0	5.3	100.0 (100)	80.0	5.63	100.0 (100)	75.0	5.4	100.0 (104)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 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81.0	5.4	100.0 (100)	85.0	5.60	100.0 (100)	84.6	5.5	100.0 (104)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 리 지원)	78.0	5.4	100.0 (100)	83.0	5.63	100.0 (100)	81.7	5.3	100.0 (104)

주: 1) 긍정비율은 '⑤', '⑥', '⑦' 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2)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12.

3)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99.

(2) 현금 및 의료비 지원의 성과 평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는 '아동수당제도'가 54.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의료비 지원' 30.8%, '건강 지원' 14.4% 순으로 평가되었다.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아동수당제도' 항목이 11.2%p만큼 크게 하락했다. 그 외 '의료비 지원'과 '건강지원'에 대한 비율은 상승하였다.

〈표 IV-1-12〉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2021년, 2022년)

단위: %(명)

관련 국정과제	2021	2022
아동수당	66.0	54.8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4.0	30.8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0.0	14.4
계(수)	100.0(100)	100.0(104)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00.

‘아동수당’의 성과를 가장 높게 평가한 이유로는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든 가구에 대해 보편적으로 지원되어 수요자의 체감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도움을 직접적으로 준다는 점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출이 큰 영유아 시기에 적합한 지원이라는 점과 예방 차원에서 영유아의 건강권이 강화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또, 목적 없는 지출이 아니라 필수욕구(need)에 대한 서비스 지원과 연계된 지원이라는 점도 언급되었다.

‘건강지원’은 난임부부가 크게 증가하여 이들 가구의 비용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출산과 양육의 의지가 있는 대상을 지원하는 것이 합계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IV-1-13〉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성과가 큰 과제로 평가한 이유

국정 과제	이유
아동수당	- 아동수당의 저출산 대책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부모가 직접 아동을 돌봄으로써 아동에게 심리·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임. - 보편 급여로서 해당연령 아동이 있는 가구에 모두 지급되었고, 아동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한 국가의 책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임. - 보편복지 실현을 위한 초석이므로 금액이 충분치는 않으나 정착되었다고 봄. - 계층에 상관없이 지원되어 각 가정에 적절한 육아비용으로 쓰임. - 이러한 다양한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 형태로 지원이 넓은 범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혜택을 받는 대상 가정이 많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게 느껴짐. - 다른 정책에 비해 수혜범위가 넓음. 아동수당은 보편주의 정책의 대명사로 간주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음. - 재원이 허락되고 우선순위에서 아동출산 및 양육의 가치가 평가되면 아동수당금액이 상승될 것이므로 즉각적인 정책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의료비지원과 출산지원도 각각의 성과가 있겠지만, 아동수당은 부모의 육아행위를 사회와 국가가 가치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지급으로 인하여 어린 영아의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 성과를 짐작할 수 있음. - 아동양육가정에 대한 국가지원의 육아비용 보편적 지원의 상징성. 현금지급을 통한 낙인효과 감소. - 현금 지원은 부모들이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임. 정부가 아동양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도 크게 기여한다고 봄. - 아동수당을 현실화하여 자녀양육의 경제적 도움에 기여 -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단임. 아동수당의 인상과 연령의 확대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보편적 복지로서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 실제 지급 범위와 비용이 많아지고 있음. -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통한 높은 체감도 보편적 현금지원 정책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았음. -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각

국정 과제	이유
	가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임. - 공적 보육 강화와 함께 부모의 아동 양육 관련 경제적 부담의 완화 지원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제도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에서 다른 두 가지 정책에 비해서 제3자가 가시적으로 쉽게 관찰하고 평가하는 측면에서 홍보효과가 극대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많은 지자체에서 열성적으로 적극 채택하는 이유도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효과가 직접적으로 강화된다는 관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그 외에도 자녀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모든 국민과 가정에 대해 공정하게 부여하는 현금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아동양육의 국가책임 및 아동권리 인식개선 - 아동수당의 안정적 지급 및 확대. 이전에 없던 제도이며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아동수당이 가장 기본적인 아동대상 복지라고 생각함. - 아동수당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모든 아동에 대해 국가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시점에서 정책성적평가 가장 크다고 보기 어려울지라도 잠재적 효과는 가장 큰 정책이라 봄. - 연령별, 기관이용자와 가정 내 양육비지원 등에 대한 현금 지원혜택이 증가하고 양육자와 기관운영에 도움을 주었고, 의료비 지원을 통해 영유아기부터 조기진료혜택을 통해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임.
의료비 지원 (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너무 특수하지도 않으면서 필요한 대상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점, 아동의 건강보장을 위한 비용부담 해소, 실제현금보상의 파급력, 국가의료비지원이 증가함. - 의료비지원은 임신·출산 여성, 영유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고 정책 효과도 매우 높은 정책이며, 지원역시 충분히 확대되었다고 판단됨. - 현금성 정책이기 보다는 실제경험 가능한 정책이라고 판단되고 실질적 혜택이 되었음. - 건강한 다음세대 출생 및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며 특히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계층의 가족에게는 건강한 출산 및 양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 - 저출산 정책의 수요자만족도를 높여 둘째아 출산에 기여함. - 실제적인 건강 검진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므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정책으로 비싼 출산 비용과 산후비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재정적인 정책은 가장 체감이 높음. - 영유아 건강을 위한 의료비지원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했기 때문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정책대상이 폭넓음. - 이전보다 의료비 지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모들이 영유아 의료비지원에 만족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고,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다가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함. - 중앙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정책의 확대로 임신출산비용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전반적으로 의료비지원이 확대되었음. 물가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출산하는 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음. - 영유아 건강관리 관련 보건사업이 전국단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원 대상 자격이 정해져 있으나,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정책실행이라고 판단 - 영유아 시기는 의료비 지출이 큰 시기이고, 임신과 출산 진료비에 따른 부담이 많았던 바, 성과가 큰 정책이었다고 판단함. - 단지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할만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출산에 대한 부담을 경제적 지원으로 감소시킴. - 영유아 관련 의료비나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비용으로 고민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음.

국정 과제	이유
건강 지원(난임 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난임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직장 내 관련 제도가 과거에 비하여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음. - 난임부부가 갈수록 들어가는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지원이기에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난임부부 지원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지원하여 출산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지원은 출산을 행복한 기억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임. - 출산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사람 외에 출산을 하고 싶지만 건강 및 신체상으로 이유로 임신이 어려운 사람에게 난임부부 지원은 매우 좋은 일로 생각되고 마음도 힘든데 비용도 비싸며 시간도 오래 걸려 지칠 수가 있지만 긍정적지원이라 봄. - 저출산 극복에 도움되는 정책이라서 실제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지자체에도 중앙정부 지원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등 정책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임. - 결혼기가 높아짐에 따라 난임부부가 사회적으로 증가되고 특수한 시술비용의 부담감으로 출산을 미루던 부부에게 큰 도움을 줌. 또한 임신 중에 정기검사 및 빈혈보조제 지원 등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전반적인 지원으로 출산비용에 대한 부담감 완화함. - 난임부부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가 시행되었고 그에 따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었다고 판단됨. - 저출산 극복의 방법 중에 아기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거나 낳은 아기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지원은 실질적인 출산을 제고에 도움이 됨.

주: 개방형으로 응답된 내용을 정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반면에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로는 난임부부와 산모 및 신생아 지원사업이 포함된 ‘건강지원’이 52.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아동수당’과 ‘의료비 지원’은 각각 27.9%, 19.2%의 응답자가 성과가 미흡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표 IV-1-14〉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 과제(2021년, 2022년)

관련 국정과제	단위: %(명)	
	2021	2022
아동수당	22.0	27.9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2.0	19.2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6.0	52.9
계(수)	100.0(100)	100.0(104)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01.

‘건강지원’을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로 평가한 이유로는 난임부부 수의 증가에도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홍보 부족,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 등을 지적하는 응답이 있었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에 따라 수요자의 낮은 만족도, 금액과 사용처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큰 개인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원’이 있는지 혹은 구체적 지원금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IV-1-15〉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로 평가한 이유

국정과제	이유
건강 지원(난임 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난임 정책을 부부로만 제한하여 구시대적인 면모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혀야 함. - 건강 지원정책의 경우, 이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대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난임부부가 늘고 있으나 실질적 지원은 매우 부족. 난임부부 지원 미흡 난임부부 지원 횟수 증가 필요.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필요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재정적 부족, 홍보 부족 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 - 난임부부 지원 등은 결과와 관련한 지원이므로 실질적 지원이 안 될 수 있음. - 난임부부 지원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아직도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임. - 대상자 소득 산정이나 지원 횟수에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문제점이 있음. 혜택대상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정책 이해도가 매우 낮음. - 난임부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이 많이 존재함. 여성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난임부부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음. - 난임이나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성과적인 측면에서 대상이 되는 집단자체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전체 저출산 극복에 미치는 성과로 본다면 (미흡하다고 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성과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봄. - 난임부부를 지원한다고는 하나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므로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 주변에서 이와 관련된 만족도가 높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지 못함. - 다른 영역에 비해 혜택 받는 대상도 적어 건강지원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됨. - 특정 의료 치료 등 고비용의 난임, 산모 신생아에 대한 지원 및 보험금 지급 변경에 대한 정책은 미흡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경우, 유효기간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60일이 경과되면 배우자 자격이 소멸됨. 이는 유효기간이 짧고, 지원기간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으로 짧음.

국정과제	이유
	-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지원 기준에 따른 제한이 여전히 크다고 봄.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범위나 지원 금액의 경우, 여전히 건강보험적용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부분은 개선될 여지가 있음. - 난임부부는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위축돼있는 상황임. 비용부부이라도 완전지원 필요 - 난임의 경우 시술의 횟수제한이나 비용지원의 제한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 비용적인 부담이 매우 큼. - 난임 부부에 대하여 재정지원과 함께 직장 여성의 경우 시술을 위한 병원 방문시간에 대한 배려 필요 - 현재 저출산 기조 속에서 난임부부 지원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업무를 주로 하는 산과 및 부인과 전문센터 및 보건관리거점 등이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는 산모 및 산과 상담진료 대상자가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거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며, 이는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려는 정부정책과도 상반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즉, 실제로는 건강지원정책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은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만 추진하려고 하는 모순된 상황을 초래한 것임. - 상대적으로 수요자가 적어서 미흡하다고 판단할 뿐, 다른 정책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부분은 이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으나, 국가에서 전격적으로 지원하여 난임부부가 돈 걱정 없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대부분의 가정에서 출산 시 산후조리원 등 사적으로 산후조리비용이 발생하므로,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전반적으로 의료비 지원은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나 소수 비용이 많이 드는 질병에 한해서 지원이 잘 되기를 기대함. - 난임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이 과거에 비하여 확대되었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혜택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난임부부 지원의 경우 혜택을 받는 수혜대상자가 제한적이라 정책성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난임부부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구체적 수행기준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 다른 정책에 비해 실행정도와 효과성 정도가 낮다고 여겨짐. - 난임부부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관련하여, 맞춤형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아동수당	- 수당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수당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follow-up이 불가능하고, 아동 수당에 대한 체감도가 크지 않아서 예산에 비해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됨.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아동수당, 부모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이 출산이나 양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기 때문임. - 모든 지원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당연한 지원이라 생각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만족도는 줄어들음. - 선별적 수당지급을 통해 아동수당지원이 절실한 대상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수당이 증가함에도 증가금액이 실제 아동양육비에 비해 부족함으로 부모만족도는 여전히 낮음. - 지원의 근거와 기준을 더 명확히 해야 하며, 불필요한가정에도 지원하는 것은 세금 낭비일 뿐임. - 보편적 수당이나, 아동수당을 통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부모들이 이 수당을 받아 사교육(학습지, 문화센터, 학원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흘러 들어가, 결국 영유아의 행복한 삶이라는 목표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임.

국정과제	이유
	- 양질의 양육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장치가 없으므로 단발성 있는 정책으로 법안화되어야 함. - 아동수당을 지불한다고 해서 저출산이 극복되거나 그 아동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없음. - 아동수당 도입은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좋다고 판단하겠지만 현금지원방식은 오히려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뿐 모든 아동에게 주는 지원이든 가구 지원의 목적이든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필요로는 돌봄 서비스 이용에 투여한다거나 하는 등의 서비스 확대에 예산 투여가 필요함. - 수요자 입장에서 10만~20만원 아동수당에 충분하지 않을 것임. - 목표한 것보다 미달성 금액이 적고, 정책대상이 제한적이며, 기존 양육수당 등과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별도의 제도로 동떨어짐. -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현금성 아동수당 제도를 마련했으나 정작 차상위계층의 가정의 아동을 위한 꼭 필요한 제도 및 재원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됨. - 저출산의 원인 중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데 그에 비해 지원되는 수당은 적음. - 아동수당의 연령이 확대되었기에 급여의 제공 면에서는 성과를 달성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아동수당이 본래 지향했던 성과의 목표(저출산, 아동복지 등)를 달성했다고 볼 수 없음. - 가정에서 돌볼 수 있을 만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 - 현금지원이므로 수요자 입장에서 여전히 만족도가 낮음. - 아동의 범주는 18세 미만임에도 영유아를 위한 지원이 집중되어 학령기 아동을 위한 지원 상대적으로 미흡 - 액수 증액 금액과 사용처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함.
의료비 지원 (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임신부터 출산까지 부모의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더 확장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모든 가정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의 폭을 넓히지 못하였으므로 중증인 경우 의료비 지원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함. - 의료비 지원은 확대해도 수혜자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 체감도 낮음. 지원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개인부담이 여전함. - 산후조리원에 의존하는 산후조리 방식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나, 평생의 한 번 누려 보는 호사라는 이미지 등 산후조리원이 출산에 대한 보상처럼 인식되고 있어서 변화를 꾀하기 어려운 현실임. - 임신과 출산에 많은 비용이 소모됨. 특히 최근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음.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함. - 영유아 의료비와 산후 조리비용 등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지원 액수와 대상이 제한적임. 영유아 의료비 지원은 의료 현장에서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협업을 얻어내지 못한 유명무실한 정책에 그쳤음. - 아직까지 혜택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구체적인 지원금에 대해 알지 못함. - 특수교육이 필요하거나 장애 위험군인 경우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체계가 매우 미비함.

주: 개방형으로 응답된 내용을 정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나.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부문에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보육서비스 질 제고,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등이 포함된다. 유아교육·보육·돌봄 지원 부문의 세부 목표와 성과분석 요소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V-1-16〉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부문의 성과분석 요소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세부 목표	성과분석 요소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공공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취원을 제고(국공립유치원 등 공공 유치원 취원율,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보육 취원율)	- 공공 영유아 보육·교육의 충분성
보육서비스 질 제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 보조·대체 교사 인력 확대)	- 보육서비스의 포괄성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시간제보육 사업 확대를 통한 단시간 보육 수요 대응	- 시간제보육 사업의 충분성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 초등 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충 - 초등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초등돌봄의 충분성 - 초등돌봄의 포괄성 - 초등돌봄의 만족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아이돌봄서비스의 충분성 - 아이돌봄서비스의 만족도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의 충분성 -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의 포괄성

1) 정책의 충분성 및 포괄성

성과지표들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해당 지표들의 경우 4등급(상위 30~70%) 수준을 달성함에 따라 정책의 충분성 및 포괄성에서 보통 수준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17〉 정책의 충분성 및 포괄성 분석

2021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	지표종류		결과
				정량화	성격	
③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운영	① 초등돌봄시설확충에 따른 이용 가능 학생수(단위: 만명)	부처별초등돌봄시설확충에 따른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학생 수용 정원 현황 조사	45.9만명	정량	산출	4등급
	②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응답률(%)	초등학교 재학생(1~5학년) 및 내년도 예비취학아동 보호자 대상 온라인 수요 조사에 응답한 비율	40%	정량	산출	
	③ 온종일돌봄서비스 만족도(점)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항목 중 ‘온종일돌봄 서비스 만족도’ 항목을 신설하여 응답결과 활용	88점	정량	산출	
	④ 초등돌봄사업 개선 대책 발표 건수	초등돌봄사업 개선대책 발표 건수	1건	정량	산출	

주: 1) 본 보고서 〈표 II-2-4〉를 정리함.

2) 자체평가: 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7등급으로 등급화 함. 1등급(~상위5%), 2등급(5%~15%), 3등급(15%~30%), 4등급(30%~70%), 5등급(70%~85%), 6등급(85%~95%), 7등급(95%~)

자료: 1) 교육부(2021b). 2021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p.488~496.

2) 교육부(2022a).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44~164.

3) 교육부(2022b). 20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253.

2) 정책 만족도 및 성과평가 결과

가) 부모

(1) 부모의 정책 이용률 및 만족도

최근 2년 이내(2021~2022년)에 교육·보육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여부,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우선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와 민간육아도우미, 시간제보육 3개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70~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민간육아도우미에 대한 인지도가 86.0%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시간제 보육 82.6%, 공공 아이돌보미 78.2%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특성별로는 전반적으로 부에 비해 모의 인지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맞벌이에 비해 외벌이 가구의 3개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V-1-18〉 교육·보육 및 돌봄 서비스 인지도

단위: %(명)

구분	공공 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민간육아도우미(베이비 시터 등)	시간제 보육	계(수)
전체	78.2	86.0	82.6	100.0 (1,087)
성별				
남성	69.4	74.6	67.1	100.0 (307)
여성	81.7	90.5	88.7	100.0 (780)
$\chi^2(df)$	19.502(1)***	46.419(1)***	71.666(1)***	
맞벌이 여부				
맞벌이	77.8	85.9	81.9	100.0 (983)
외벌이	80.3	86.9	88.5	100.0 (61)
해당없음	83.7	88.4	90.7	100.0 (43)
$\chi^2(df)$	1.013(2)	0.257(2)	3.796(2)	

주: 1) 각 정책의 인지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함.

2) 각 정책 별 인지/미인지 간 차이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01$.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포함하여 5개 교육·보육·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을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이용이 가장 많아 전체 부모 응답자의 각 80.7%, 50.1%로 나타났다. 그 외 3개 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은 13%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용률은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2022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간제보육의 이용률은 증가하고 공공 아이돌보미 이용률은 약 7.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9〉 교육·보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률(2021년, 2022년)

단위: %(명)

구분	2021		2022	
	이용률	계(수)	이용률	계(수)
공공 아이돌보미(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20.4	100.0 (2,000)	12.9	100.0 (850)
민간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등)			12.7	100.0 (935)
어린이집	77.6	100.0 (2,000)	80.7	100.0 (1,087)
유치원	43.3	100.0 (2,000)	50.1	100.0 (1,087)
시간제보육	11.4	100.0 (2,000)	13.0	100.0 (898)

주: 1) 이용률은 해당 서비스를 인지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각 정책의 이용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77.

어린이집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높은 부모(유아, 초등자녀 부모)에서 누적된 어린이집 이용경험이 반영되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구의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연령이 높은 부모(유아, 초등자녀 부모)에서 누적된 이용경험이 반영되어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어린이집과 달리) 맞벌이에 비해 외벌이 가구에서, 대도시 지역에서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V-1-20〉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공공 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n=850	민간육아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n=935	어린이집 n=1,087	유치원 n=1,087	시간제 보육 n=898
전체	12.9	12.7	80.7	50.1	13.0
성별					
남성	12.7	17.5	78.2	56.0	10.7
여성	13.0	11.2	81.7	47.8	13.7
$\chi^2(df)$	0.018(1)	6.135(1)*	1.722(1)	5.933(1)*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20.9	13.3	46.2	7.7	7.1
유아부모	12.1	15.1	91.7	54.3	12.7
초등부모	10.2	9.6	85.6	66.9	16.4
$\chi^2(df)$	11.111(2)**	5.205(2)	201.816(2)***	199.345(2)***	8.580(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8	12.7	81.5	49.4	13.0
외벌이	12.2	18.9	72.1	57.4	13.0
해당없음	16.7	5.3	74.4	55.8	12.8
$\chi^2(df)$	0.476(2)	3.707(2)	4.351(2)	2.024(2)	0.002(2)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13.0	3.6	76.1	46.3	14.5
251~350만원	9.1	7.6	78.0	45.1	10.8
351~500만원	12.7	10.5	78.1	52.0	13.6
501~600만원	8.8	12.7	84.6	52.1	12.0
601만원 이상	17.1	18.5	83.0	50.7	13.9
$\chi^2(df)$	8.406(4)	18.214(4)**	6.024(4)	2.917(4)	1.170(4)

구분	공공 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민간육아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 보육
	n=850	n=935	n=1,087	n=1,087	n=898
지역구분					
대도시	14.6	12.9	79.6	52.3	11.8
중소도시	11.9	13.6	81.8	49.1	13.1
읍면	12.1	10.2	79.9	48.7	14.9
$\chi^2(df)$	1.279(2)	1.229(2)	0.787(2)	1.144(2)	0.958(2)

주: 1) 이용률은 해당 서비스를 인지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각 정책의 이용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함.
3) 각 정책 별 이용/미이용 간 차이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5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간제 보육에 대한 만족 응답이 70% 이상으로 높아 5점척도 평균 4.0~4.1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78.3%로 가장 높았다. 공공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50% 내외로, 공공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가 민간육아도우미에 비해 약 6%p 높게 나타났다. 2021년 만족도와 비교하여 2022년 만족 응답이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시간제보육'의 경우 만족 응답이 2021년 55.1%에서 2022년 71.8%로 약 16.7%p 증가하였다.

〈표 IV-1-21〉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만족도(2021년, 2022년)

단위: %(명), 점

구분	2021			2022		
	만족 비율	5점 평균	계(수)	만족 비율	5점 평균	계(수)
공공 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55.4	3.6	100.0 (408)	55.5	3.6	100.0 (110)
민간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등)	-	-		49.6	3.5	100.0 (119)
어린이집	76.0	3.9	100.0 (1,551)	78.3	4.1	100.0 (877)
유치원	74.1	3.9	100.0 (865)	73.9	4.0	100.0 (545)
시간제보육	55.1	3.6	100.0 (227)	71.8	4.0	100.0 (117)

주: 1)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만족비율은 '만족', '매우 만족' 비율을 합친 결과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79.

불만족 이유로는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질과 내용 수준’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공공 아이돌보미’의 경우 이용 자격과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주위에 가까이 없다는 접근성과 비용부담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민간육아도우미’의 경우 공공 아이돌보미에 대한 불만족 이유와 유사한 가운데 서비스 질과 내용 및 비용 부담에 대한 응답률이 공공 아이돌보미에 대한 불만족 응답에 비해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전체 응답자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서비스 질과 내용에 대한 불만족 응답(46.7%) 외에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20.0% 있었다. ‘유치원’의 경우 서비스 질과 내용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21.4%로 다른 서비스의 불만족 응답률(46~58%)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28.6%로 높게 나타났다.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렵다는 응답과 주위에 가까이 없다는 접근성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표 IV-1-22〉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서비스 질/ 내용 수준 낮음	이용 방법/ 절차 복잡	이용 자격 까다 로움	접근성 떨어짐	비용 부담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 오래 걸림 (긴 대기 시간)	원하는 시간/ 시기에 이용 어려움	기타	계(수)
공공 아이돌보미	46.2	-	15.4	7.7	7.7	-	15.4	7.7	100.0 (13)
민간육아도우미	58.3	-	16.7	-	16.7	-	8.3	-	100.0 (12)
어린이집	46.7	-	-	10.0	10.0	6.7	20.0	6.7	100.0 (30)
유치원	21.4	-	7.1	14.3	28.6	-	21.4	7.1	100.0 (14)
시간제보육	-	-	50.0	-	-	-	50.0	-	100.0 (2)

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020년 3월 도입된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 최근 2년 이내(2021~2022년)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경험이 있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연장보육 이용 경험이 ‘있다’ 42.8%, ‘없다’ 57.2%로, 연장보육 이용 경험은 전체 응답자 중 약 43%로

나타났다. 부모다 모 응답에서, 유아 부모, 외벌이보다 맞벌이가구에서, 그리고 부모 모두 (직업이) 없는 등 맞벌이여부 비해당 가구에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은 없었으나,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과 25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읍면 지역일수록 연장보육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한 특성이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1-23〉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42.8	57.2	100.0 (877)
성별			
남성	34.2	65.8	100.0 (240)
여성	46.0	54.0	100.0 (637)
$\chi^2(df)$	9.968(1)**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37.5	62.5	100.0 (96)
유아부모	47.8	52.2	100.0 (429)
초등부모	38.1	61.9	100.0 (352)
$\chi^2(df)$	8.678(2)*		
맞벌이 여부			
맞벌이	42.3	57.7	100.0 (801)
외벌이	36.4	63.6	100.0 (44)
해당없음	62.5	37.5	100.0 (32)
$\chi^2(df)$	5.893(2)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43.1	56.9	100.0 (51)
251~350만원	37.8	62.2	100.0 (135)
351~500만원	34.7	65.3	100.0 (239)
501~600만원	48.4	51.6	100.0 (159)
601만원 이상	48.5	51.5	100.0 (293)
$\chi^2(df)$	13.653(4)**		
지역구분			
대도시	39.2	60.8	100.0 (332)
중소도시	42.9	57.1	100.0 (392)
읍면	49.7	50.3	100.0 (151)
$\chi^2(df)$	4.70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이어서 어린이집을 이용한 적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61.8%, 보통 31.9%, 불만족 6.2%로 5 점 척도 3.7점으로 나타났다. 부모 모두 응답에서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읍면지역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1-24〉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전체	1.0	5.2	31.9	43.1	18.7	100.0 (877)	3.7
성별							
남성	1.7	3.8	38.3	43.3	12.9	100.0 (240)	3.6
여성	0.8	5.8	29.5	43.0	20.9	100.0 (637)	3.8
$\chi^2(df)/t$			12.891(4)				-2.4*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1.0	7.3	30.2	40.6	20.8	100.0 (96)	3.7
유아부모	1.4	4.9	32.2	43.1	18.4	100.0 (429)	3.7
초등부모	0.6	5.1	32.1	43.8	18.5	100.0 (352)	3.7
$\chi^2(df)/F$			2.711(8)				0.1
맞벌이 여부							
맞벌이	1.1	5.4	31.8	43.6	18.1	100.0 (801)	3.7
외벌이	0.0	4.5	36.4	34.1	25.0	100.0 (44)	3.8
해당없음	0.0	3.1	28.1	43.8	25.0	100.0 (32)	3.9
$\chi^2(df)/F$			4.250(8)				0.8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2.0	0.0	41.2	29.4	27.5	100.0 (51)	3.8
251~350만원	0.0	4.4	34.1	45.9	15.6	100.0 (135)	3.7
351~500만원	1.3	3.3	34.3	46.9	14.2	100.0 (239)	3.7
501~600만원	2.5	6.3	25.2	46.5	19.5	100.0 (159)	3.7
601만원 이상	0.3	7.5	31.1	39.2	21.8	100.0 (293)	3.7
$\chi^2(df)/F$			30.389(16)				0.2
지역구분							
대도시	0.9	5.1	33.1	41.6	19.3	100.0 (332)	3.7
중소도시	1.3	6.4	33.2	40.8	18.4	100.0 (392)	3.7
읍면	0.7	2.0	26.5	52.3	18.5	100.0 (151)	3.9
$\chi^2(df)/F$			10.015(8)				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변화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61.8%의 부모에게 만족 이유를 질문한 결과,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77.3%로 가장 많았다.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구분하는 시간 설계로서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으로 ‘서비스 질이 높아져’ 12.2%, ‘비용부담이 낮아져서’ 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초등자녀 부모일수록), 맞벌이가구와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에서, 읍면지역일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서비스 질이 높아져서’라는 응답은 유아부모, 외벌이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비용 부담이 낮아져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영아부모와 외벌이가구에서,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좀 더 많았다.

〈표 IV-1-25〉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에 만족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필요한 시간 만큼 이용 할수 있음	서비스 질이 높아짐	비용 부담 낮아짐	계(수)
전체	77.3	12.2	10.5	100.0 (542)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74.6	8.5	16.9	100.0 (59)
유아부모	76.5	15.9	7.6	100.0 (264)
초등부모	79.0	8.7	12.3	100.0 (219)
$\chi^2(df)$		11.224(4)*		
맞벌이 여부				
맞벌이	77.9	12.3	9.7	100.0 (494)
외벌이	53.8	15.4	30.8	100.0 (26)
해당없음	90.9	4.5	4.5	100.0 (22)
$\chi^2(df)$		14.874(4)**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75.9	6.9	17.2	100.0 (29)
251~350만원	78.3	10.8	10.8	100.0 (83)
351~500만원	74.0	14.4	11.6	100.0 (146)
501~600만원	80.0	10.5	9.5	100.0 (105)
601만원 이상	78.2	12.8	8.9	100.0 (179)
$\chi^2(df)$		3.985(8)		

구분	필요한 시간 만큼 이용 할수 있음	서비스 질이 높아짐	비용 부담 낮아짐	계(수)
지역구분				
대도시	75.7	12.9	11.4	100.0 (202)
중소도시	77.2	11.6	11.2	100.0 (232)
읍면	80.4	12.1	7.5	100.0 (107)
$\chi^2(df)$		1.518(4)		

주: 보육시간 개편에 만족(만족+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한 542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보육지원체제 개편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6.2%의 부모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49.1%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서비스 질이 낮아져’라는 응답이 36.4%였으며, ‘비용부담이 높아져서’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불만족 응답률이 낮은 가운데에서도 ‘서비스 질이 낮아졌다’는 불만족 이유가 30% 이상의 비중을 보였다.

보육시간 개편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대부분 맞벌이가구에서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251~350만원 그룹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없어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적은 응답 사례수 가운데에서도 ‘서비스 질이 낮아져서’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많았다.

〈표 IV-1-26〉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에 불만족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필요한 시간 만큼 이용할수 없음	서비스 질 낮아짐	비용 부담 높아짐	기타	계(수)
전체	49.1	36.4	10.9	3.6	100.0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50.0	36.5	11.5	1.9	100.0 (52)
외벌이	50.0	0.0	0.0	50.0	100.0 (2)
해당없음	0.0	100.0	0.0	0.0	100.0 (1)
$\chi^2(df)$		14.966(6)*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0.0	0.0	100.0	0.0	100.0 (1)
251~350만원	66.7	16.7	16.7	0.0	100.0 (6)
351~500만원	45.5	27.3	27.3	0.0	100.0 (11)

구분	필요한 시간 만큼 이용할수 없음	서비스 질 낮아짐	비용 부담 높아짐	기타	계(수)
501~600만원	50.0	35.7	7.1	7.1	100.0 (14)
601만원 이상	47.8	47.8	0.0	4.3	100.0 (23)
$\chi^2(df)$	17.004(12)				

주: 보육시간 개편에 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55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유치원을 이용해본 부모를 대상으로 최근 2년이내(2021~2022년)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이용한 적 있다 61.1%, 없다 38.9%로 나타났다. 정확한 비교는 아니나, 앞서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경험은 42.8%로 나타난 바 있다.

부모다 모 응답에서, 유아부모에서,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맞벌이가구에서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경험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 부모, 외벌이가구와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에서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7〉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61.1	38.9	100.0 (545)
성별			
남성	48.8	51.2	100.0 (172)
여성	66.8	33.2	100.0 (373)
$\chi^2(df)$	15.903(1)***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50.0	50.0	100.0 (16)
유아부모	67.3	32.7	100.0 (254)
초등부모	56.0	44.0	100.0 (275)
$\chi^2(df)$	7.977(2)*		
맞벌이 여부			
맞벌이	61.5	38.5	100.0 (486)
외벌이	57.1	42.9	100.0 (35)
해당없음	58.3	41.7	100.0 (24)
$\chi^2(df)$	0.344(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유치원의 교육시간 구성(교육과정+방과후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64.4%, 보통 32.1%, 불만족 3.5%로 5점척도 3.8점으로 나타났다. 하위특성 변인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자녀연령이 많을수록(초등자녀 부모일수록) 유치원 교육과정 시간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8〉 유치원 교육과정 시간 구성(교육과정+방과후과정 이용)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전체	0.4	3.1	32.1	46.4	18.0	100.0 (545)	3.8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0.0	2.3	38.1	44.5	15.1	100.0 (218)	3.7
유아부모	0.9	3.4	28.1	50.2	17.4	100.0 (235)	3.8
초등부모	0.0	4.3	28.3	41.3	26.1	100.0 (92)	3.9
$\chi^2(df)/F$			9.018(8)				1.5
맞벌이 여부							
맞벌이	0.4	2.9	31.9	47.3	17.5	100.0 (486)	3.8
외벌이	0.0	5.7	31.4	37.1	25.7	100.0 (35)	3.8
해당없음	0.0	4.2	37.5	41.7	16.7	100.0 (24)	3.7
$\chi^2(df)/F$			3.505(8)				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유치원의 교육시간 구성(교육과정+방과후과정)에 대해 ‘만족한다’로 응답한 64.4%의 부모에게 만족 이유를 질문한 결과,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48.1%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서비스 질이 높아져’ 23.1%, ‘비용부담이 낮아져서’ 26.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월소득 25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와 그다음으로 월소득 601만원 이상 고소득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시간이용에 대한 만족 이유 응답은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초등자녀 부모일수록),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에서, (대)도시지역일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서비스 질이 높아져서’라는 응답은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영아자녀 부모일수록), 그리고 외벌이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

며, ‘비용 부담이 낮아져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초등자녀 부모일수록), 그리고 맞벌이가구에서 좀 더 많았다.

〈표 IV-1-29〉유치원 교육과정 시간 구성(교육과정+방과후과정)에 만족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필요 시간 만큼 이용할 수 있음	서비스 질 높아짐	비용 부담 낮아짐	기타	계(수)
전체	48.1	23.1	26.8	2.0	100.0 (351)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44.4	33.3	22.2	0.0	100.0 (9)
유아부모	46.4	28.0	25.0	0.6	100.0 (168)
초등부모	50.0	17.8	28.7	3.4	100.0 (174)
$\chi^2(df)$			8.687(6)		
맞벌이 여부					
맞벌이	47.6	22.5	27.6	2.2	100.0 (315)
외벌이	45.5	31.8	22.7	0.0	100.0 (22)
해당없음	64.3	21.4	14.3	0.0	100.0 (14)
$\chi^2(df)$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70.6	0.0	29.4	0.0	100.0 (17)
251~350만원	47.8	21.7	28.3	2.2	100.0 (46)
351~500만원	42.5	27.4	29.2	0.9	100.0 (106)
501~600만원	35.4	23.1	33.8	7.7	100.0 (65)
601만원 이상	57.3	23.1	19.7	0.0	100.0 (117)
$\chi^2(df)$			29.112(12)**		
지역구분					
대도시	50.8	19.2	27.7	2.3	100.0 (130)
중소도시	47.8	25.2	25.2	1.9	100.0 (159)
읍면	43.5	25.8	29.0	1.6	100.0 (62)
$\chi^2(df)$			2.226(6)		

주: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에 만족(만족+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한 351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유치원의 교육시간 구성(교육과정+방과후과정)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3.5%의 부모($n=19$)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서비스 질이 낮아져’라는 응답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없어서’와 ‘비용

부담이 높아져'가 각 31.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불만족 응답률이 낮은 가운데, 하위특성 변인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1-30〉 유치원 교육과정 시간 구성(교육과정+방과후과정)에 불만족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필요 시간 만큼 이용 수 없음	서비스 질 낮아짐	비용 부담 높아짐	계(수)
전체	31.6	36.8	31.6	100.0 (19)

주: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에 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19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최근 2년(2021~2022년) 이내 초등 방과후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이용경험, 만족도를 초등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우선 초등 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초등방과후학교'(99.0%)와 '초등돌봄교실'(95.9%)에 대한 인지도가 9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76.2%), '다함께돌봄센터(지자체돌봄센터 포함)' 55.0%, '육아/마을공동체 돌봄'(49.4%)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부모가 모 응답에서 유의하게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 돌봄서비스 인지자 중 대다수가 맞벌이 가구임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가구소득 601만원이상 고소득과 읍면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육아/마을공동체돌봄'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V-1-31〉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인지비율

단위: %(명)

구분	초등돌봄교실	초등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지자체돌봄 포함)	육아/마을공동체 돌봄	계(수)
전체	95.9	99.0	76.2	55.0	49.4	100.0 (411)
성별						
남성	86.2	96.7	51.2	33.3	29.3	100.0 (123)
여성	100.0	100.0	86.8	64.2	58.0	100.0 (288)
$\chi^2(df)$	41.522(1)***	9.458(1)**	60.107(1)***	33.255(1)***	28.437(1)***	
맞벌이 여부						
맞벌이	95.5	98.9	75.4	55.9	51.1	100.0 (374)
외벌이	100.0	100.0	75.0	40.0	35.0	100.0 (20)
해당없음	100.0	100.0	94.1	52.9	29.4	100.0 (17)
$\chi^2(df)$	1.754(2)	0.400(2)	3.152(2)	1.965(2)	4.793(2)	

구분	초등돌봄 교실	초등 방과후학교	지역아동 센터	다함께돌봄 센터(지자체 돌봄 포함)	육아/마을 공동체 돌봄	계(수)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100.0	100.0	77.3	50.0	36.4	100.0 (22)
251~350만원	94.8	98.3	75.9	50.0	51.7	100.0 (58)
351~500만원	93.6	100.0	73.4	46.8	44.0	100.0 (109)
501~600만원	97.3	98.7	76.0	56.0	49.3	100.0 (75)
601만원 이상	96.6	98.6	78.2	63.3	54.4	100.0 (147)
$\chi^2(df)$	3.151(4)	1.957(4)	0.825(4)	7.865(4)	4.359(4)	
지역구분						
대도시	93.6	99.4	78.3	56.7	46.5	100.0 (157)
중소도시	97.3	98.9	72.3	51.1	47.3	100.0 (184)
읍면	97.1	98.6	81.4	61.4	61.4	100.0 (70)
$\chi^2(df)$	3.198(2)	0.360(2)	3.006(2)	2.488(2)	4.911(2)	

주: 1) 각 서비스의 인지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함.
 2) 각 서비스 별 인지/미인지 간 차이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최근 2년 이내에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적 있는지 이용경험을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2021년 이용률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이용 경험률이 76.2%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초등돌봄교실' 43.9%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육아/마을 공동체돌봄'은 모두 10% 이하의 이용률을 보였으나 2021년 대비 이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2〉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률(2021년, 2022년)

단위: %(명)

구분	2021		2022	
	이용률	계(수)	이용률	계(수)
초등돌봄교실	42.6	100.0 (733)	43.9	100.0 (394)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63.0	100.0 (733)	76.2	100.0 (407)
지역아동센터	6.3	100.0 (733)	7.0	100.0 (313)
다함께돌봄센터(지자체 돌봄 포함)	3.7	100.0 (733)	4.4	100.0 (226)
육아/마을공동체 돌봄	-	-	2.5	100.0 (203)

주: 2022년 조사의 이용률은 본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84.

‘초등돌봄교실’은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고소득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초등방과후학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마찬가지로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고소득가구에서 좀 더 많고, (대)도시지역일수록 많은 경향을 보였다. ‘지역아동센터’는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부모 모두 미취업이거나 부재인 경우 등)와 25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에서 이용경험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육아/마을 공동체돌봄’ 3개 방과후돌봄 서비스 모두 적은 이용률 수치이지만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구의 이용 경험은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그리고 읍면지역에서 이용 경험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3〉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초등돌봄교실	초등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자체돌봄포함)	육아/ 마을공동체 돌봄
	n=394	n=407	n=313	n=226	n=203
전체	43.9	76.2	7.0	4.4	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43.1	77.0	6.0	4.8	2.6
외벌이	35.0	75.0	0.0	0.0	0.0
해당없음	70.6	58.8	31.3	0.0	0.0
$\chi^2(df)$	5.644(2)	2.983(2)	15.930(2)***	0.851(2)	0.322(2)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45.5	59.1	23.5	0.0	0.0
251~350만원	27.3	77.2	9.1	6.9	6.7
351~500만원	30.4	74.3	11.3	7.8	2.1
501~600만원	50.7	78.4	1.8	4.8	0.0
601만원 이상	56.3	78.6	3.5	2.2	2.5
$\chi^2(df)$	24.036(4)***	4.454(4)	14.196(4)**	3.486(4)	3.372(4)
지역구분					
대도시	44.2	80.1	8.9	4.5	1.4
중소도시	43.0	74.2	4.5	3.2	2.3
읍면	45.6	72.5	8.8	7.0	4.7
$\chi^2(df)$	0.141(2)	2.267(2)	2.245(2)	1.001(2)	1.230(2)

주: 1) 이용률은 본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각 서비스의 이용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함.

3) 각 서비스 별 이용/미이용 간 차이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초등 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 만족도도 2021년 대비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례수는 적지만)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약 80%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이용 만족도는 70% 내외로 5점척도 평균 각 3.9점, 4.0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은 59.1%, ‘육아/마을공동체 돌봄’ 만족 응답은 40.0%로 나타났다.

〈표 IV-1-34〉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만족도(2021년, 2022년)

단위: %(명), 점

구분	2021			2022		
	만족비율	5점 평균	계(수)	만족비율	5점 평균	계(수)
초등돌봄교실	65.7	3.8	100.0 (312)	68.8	3.9	100.0 (173)
초등방과후학교	72.7	3.8	100.0 (462)	72.9	4.0	100.0 (310)
지역아동센터	58.7	3.7	100.0 (46)	59.1	3.6	100.0 (22)
다함께돌봄센터 (지자체 돌봄 포함)	51.9	3.7	100.0 (27)	80.0	4.1	100.0 (10)
육아/마을공동체 돌봄	-	-	- -	40.0	3.6	100.0 (5)

주: 1)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만족비율은 ‘만족’, ‘매우 만족’ 비율을 합친 결과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86.

전체적으로 초등 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률에 편차가 크고, 불만족 응답 사례가 적어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겠으나,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서비스 질과 내용(4사례)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렵고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급식의 질이 낮은 것’에 대한 불만족 이유가 각 1사례로 나타났다.

‘초등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불만족 이유가 고르게 응답되었는데, 우선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이 어려운 점’(3사례)과 ‘비용 부담’(2사례)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있었으며, 그밖에 ‘서비스 질/내용’과 ‘이용자격’, ‘오랜 대기시간’, 기타의 내용이 있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서비스 질과 내용 수준’(2사례)과 ‘까다로운 이용자격’에 대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는 ‘신청후 서비스 이용까지 오랜 대기시간’(1사례)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표 IV-1-35〉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서비스 질/내용 수준 낮음	이용 방법/ 절차 복잡	이용 자격 까다 로움	접근성이 떨어짐	비용 부담됨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 오래 걸림 (오래 대기해야 함)	원하는 시간/ 시기 이용 어려움	급식 제공하지 않거나 급식 질 낮음	차량 운행하지 않거나 차량 운행 불만족	기타	계(수)
초등돌봄교실	66.7	-	-	-	-	-	16.7	16.7	-	-	100.0 (6)
초등 방과후학교	11.1	-	11.1	-	22.2	11.1	33.3	-	-	11.1	100.0 (9)
지역아동센터	66.7	-	33.3	-	-	-	-	-	-	-	100.0 (3)
다함께돌봄 센터	-	-	-	-	-	100.0	-	-	-	-	100.0 (1)
육아/마을 공동체 돌봄	-	-	-	-	-	-	-	-	-	-	0.0 (0)

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부모의 정책 효과성 인식

지난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실제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이었는지 현금, 서비스, 시간 지원의 3개 범주에 해당하는 19개 정책 중 1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 ‘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의 누리과정 개정’(19.6%)과 ‘초등 방과후돌봄 지원 확대’(17.9%)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12.5%)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11.1%)에 대한 긍정 평가가 있었다.

이어서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8.0%)와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7.2%)에 대한 긍정 의견이 있었으며, 그밖에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보육서비스 질 제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은 5%대의 응답률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부모의 긍정 응답은 가장 적었다.

지난 문재인정부 5년간 이루어진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수요자 부모의 성과평가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취학전 유아기 아동중심 놀이중심의 ‘누리과정 개정’과 ‘바우처 지원금 인상’에 대한 긍정평가를 합치면 누리과정 관련 약 32%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초등 방과후돌봄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대한

긍정평가가 10% 이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부모의 긍정 응답이 저조한 것은 이에 대한 부모의 성과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위특성별로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에 대해서는 부 응답에서, ‘초등방과후돌봄 확대’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그리고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시간제보육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는 모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모의 경우 ‘서비스 지원 확대’에 대해서, 부의 경우 ‘공적 기반의 확대’와 ‘지원금 인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맞벌이가구의 경우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와 ‘보육서비스 질 제고’,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에서 외벌이/비해당 가구에 비해 긍정응답이 좀 더 많았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긍정 평가가, 그리고 250만원 저소득가구에서는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대한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읍면지역에서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인프라 확충과 이용률 제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대)도시지역일수록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긍정 평가가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성과 평가가 우수한 정책 순서대로 살펴보면, ‘누리과정 개정’에 대해서는 유아 부모의 긍정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초등 방과후돌봄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초등부모의 긍정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에 대한 긍정평가는 유아부모와 부모 부재 또는 부모 미취업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는 영아부모, 부모 부재 또는 부모 미취업 가구와 외벌이가구에서,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각 정책별로 주된 대상연령에 따른 긍정평가가 있었으며, 부모 맞벌이 여부 및 부모 부재/미취업과 같은 취약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육아정책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과 부모의 취업 여부 및 가구 취약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표 IV-1-36〉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수)
전체	19.6	8.0	4.6	12.5	5.3	5.4	7.2	5.1	17.9	11.1	3.2	100.0 (1,087)
성별												
남성	19.5	11.4	8.1	14.7	2.6	5.9	6.2	3.3	15.0	9.1	4.2	100.0 (307)
여성	19.6	6.7	3.2	11.7	6.4	5.3	7.6	5.8	19.1	11.9	2.8	100.0 (780)
$\chi^2(df)$	33.881(10)***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14.9	15.9	2.9	10.1	2.9	5.3	11.5	6.7	8.7	18.3	2.9	100.0 (208)
유아부모	23.3	6.4	4.7	16.5	7.5	6.0	8.5	5.1	9.4	10.0	2.6	100.0 (468)
초등부모	17.8	5.8	5.4	9.2	4.1	4.9	3.4	4.1	32.4	8.8	4.1	100.0 (411)
$\chi^2(df)$	153.626(2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9.5	8.0	4.8	12.4	5.6	5.8	7.0	5.2	17.9	10.7	3.1	100.0 (983)
외벌이	18.0	9.8	4.9	13.1	3.3	1.6	11.5	3.3	16.4	13.1	4.9	100.0 (61)
해당없음	23.3	4.7	0.0	14.0	2.3	2.3	4.7	4.7	20.9	18.6	4.7	100.0 (43)
$\chi^2(df)$	13.524(20)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17.9	6.0	1.5	14.9	4.5	4.5	10.4	7.5	16.4	14.9	1.5	100.0 (67)
251~350만원	23.1	5.8	3.5	16.2	3.5	4.6	4.6	5.2	16.2	11.6	5.8	100.0 (173)
351~500만원	18.6	8.2	4.9	12.7	5.6	5.6	5.9	5.6	17.0	12.4	3.6	100.0 (306)
501~600만원	20.7	8.0	3.7	14.4	5.9	5.9	9.6	3.7	15.4	10.1	2.7	100.0 (188)
601만원이상	18.4	9.3	5.9	9.1	5.9	5.7	7.6	4.8	21.2	9.6	2.3	100.0 (353)
$\chi^2(df)$	33.251(40)											
지역구분												
대도시	19.9	8.4	4.6	12.0	7.0	5.0	6.2	5.8	16.3	10.8	4.1	100.0 (417)
중소도시	20.3	6.1	4.6	12.9	5.0	4.8	8.8	4.6	19.2	11.1	2.7	100.0 (479)
읍면	17.5	12.2	4.8	12.7	2.6	7.9	4.8	4.8	18.5	11.6	2.6	100.0 (189)
$\chi^2(df)$	21.628(20)											

주: ① 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②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③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예유파인 도입 등) ④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⑤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⑥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⑦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⑧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⑨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⑩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⑪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01$.

지난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실제 육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은 무엇이었는지 1가지를 고르게 한 결과,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17.1%)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15.2%)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11.7%)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9.7%)에 대한 부정 응답이 뒤를 이었다.

성과가 미흡하다는 응답 순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에 대해서는 부모보다 모 응답에서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영아 부모, 읍면지역일수록 이에 대한 응답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대해서는 부모보다 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초등부모,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지역에서 좀 더 응답이 많았다.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에 대한 부정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유아부모, 맞벌이/비해당가구, 도시지역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부정 응답은 부, 초등부모, 맞벌이가구, 읍면지역일수록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표 IV-1-37〉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수)
전체	7.9	8.9	9.7	6.5	11.7	15.2	4.3	5.1	7.1	6.5	17.1	100.0 (1,087)
성별												
남성	6.8	10.7	13.0	9.1	12.4	13.0	4.9	6.8	4.9	4.2	14.0	100.0 (307)
여성	8.3	8.2	8.3	5.5	11.4	16.0	4.1	4.4	7.9	7.4	18.3	100.0 (780)
$\chi^2(df)$	24.894(10)**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8.7	10.6	8.7	8.2	8.7	13.9	5.8	5.3	2.9	7.2	20.2	100.0 (208)
유아부모	8.8	9.8	9.4	5.3	12.8	14.3	4.7	5.3	6.0	6.8	16.7	100.0 (468)
초등부모	6.6	7.1	10.5	7.1	11.9	16.8	3.2	4.6	10.5	5.8	16.1	100.0 (411)
$\chi^2(df)$	27.343(20)											
맞벌이 여부												
맞벌이	7.6	9.4	9.9	6.6	12.0	15.5	3.9	5.1	6.8	6.3	17.0	100.0 (983)
외벌이	6.6	4.9	8.2	8.2	4.9	16.4	11.5	6.6	4.9	8.2	19.7	100.0 (61)
해당없음	16.3	4.7	7.0	2.3	14.0	7.0	4.7	2.3	16.3	9.3	16.3	100.0 (43)
$\chi^2(df)$	28.193(2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수)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10.4	4.5	9.0	6.0	13.4	11.9	4.5	7.5	7.5	11.9	13.4	100.0 (67)
251~350만원	8.7	13.9	7.5	7.5	9.8	14.5	5.2	4.0	5.8	4.0	19.1	100.0 (173)
351~500만원	6.5	9.2	8.5	5.6	15.0	13.4	3.3	4.6	8.8	6.2	19.0	100.0 (306)
501~600만원	10.1	7.4	10.6	6.4	7.4	18.1	5.3	5.9	5.9	6.9	16.0	100.0 (188)
601만원 이상	7.1	7.9	11.3	7.1	11.6	16.1	4.2	5.1	6.8	6.8	15.9	100.0 (353)
$\chi^2(df)$	34.261(40)											
지역구분												
대도시	8.9	8.4	10.1	5.8	12.7	17.5	4.6	3.8	7.0	4.8	16.5	100.0 (417)
중소도시	7.7	8.6	10.9	6.7	13.4	12.5	4.0	5.8	6.5	6.9	17.1	100.0 (479)
읍면	6.3	11.1	5.8	7.9	5.3	16.9	4.8	5.3	9.0	9.0	18.5	100.0 (189)
$\chi^2(df)$	26.608(20)											

주: ① 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②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③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④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⑤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⑥ 보육 서비스 질 제고 ⑦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⑧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⑨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⑩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⑪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나) 전문가

(1)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의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의 수행 달성도는 앞서 다룬 현금 및 의료비 지원에 비해 세부과제별로 그 평가 수준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의무평가제’의 긍정비율은 (7점 척도, ⑤~⑦ ‘매우 잘 달성되었다’를 합한 비율) 74.0%이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는 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어린이집 의무평가제’의 긍정비율은 2021년(69.0%)에 비해 약 5.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육서비스 질 제고’ 2021년(58.0%)에 비해 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8〉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의 수행 달성도 평가(2020년, 2021년, 2022년)

단위: %(명), 점

정책과제	2020			2021			2022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62.0	4.6	100.0 (100)	63.0	4.87	100.0 (100)	60.6	4.7	100.0 (104)
보육서비스 질 제고	56.0	4.6	100.0 (100)	58.0	4.41	100.0 (100)	50.0	4.3	100.0 (104)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68.0	5.0	100.0 (100)	66.0	4.94	100.0 (100)	60.6	4.9	100.0 (104)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64.0	4.8	100.0 (100)	69.0	5.43	100.0 (100)	74.0	5.3	100.0 (104)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52.0	4.4	100.0 (100)	71.0	5.14	100.0 (100)	59.6	4.9	100.0 (10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45.0	4.4	100.0 (100)	68.0	5.15	100.0 (100)	60.6	4.9	100.0 (104)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43.0	4.2	100.0 (100)	54.0	4.34	100.0 (100)	56.7	4.8	100.0 (104)

주: 1) 긍정비율은 ‘⑥’, ‘⑥’, ‘⑦’ 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2)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81.

3)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192~193.

(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의 성과평가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로는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1.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와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모두 12.5%,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11.5%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의 긍정 응답률이 2.9%,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는 3.8%에 그쳐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2021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항목의 긍정비율은 7.0%에서 11.5%로 4.5%p 상승하였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항목의 응답률은 1.0%에서 5.8%로 4.8%p 상승하였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는 6.2%p로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표 IV-1-39〉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2021년, 2022년)

단위: %(명)

정책과제	2021	2022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0.0	21.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16.0	12.5
보육서비스 질 제고	8.0	3.8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7.0	11.5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1.0	2.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8.0	10.6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5.0	12.5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0.0	3.8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1.0	5.8
계(수)	100.0(100)	100.0(104)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94.

각 과제별로 가장 큰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다음이 제기된다.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은 교육과정의 유보(유아교육과 보육)일원화의 실현의 연장선에 있으며, 유아가 놀이권 보장의 현장적용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파급효과의 측면에서 유아와 교사는 물론, 가정에서도 놀이 중심으로 교육 방식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는 국공립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실질적인 이용률이 높아졌고, 그에 비례하여 공급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쉬운 점으로는 인구 감소로 인한 국공립 어린이집 폐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초등돌봄 확대’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제공되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 진행되고 있음에 긍정적 의견을 보였고, 부모의 상황(맞벌이 혹은 부모의 야근 등)에 맞춰 자녀를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표 IV-1-40〉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로 응답한 이유

정책과제	이유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 누리과정의 경우 국가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므로 이를 놀이중심으로 개정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에 실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 판단됨. -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의 기초마련과 놀이를 유아교육의 키워드로 상정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시킴. -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을 통해 영유아 건강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아동 중심적 교육 및 양육에 대한 교육이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임. -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으로 인하여, 교육 및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자신의 학급 운영 환경과 방법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성찰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이루어지고, 유아의 눈높이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체계의 기반이 구성되었다고 생각함. -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전 시범운영을 토대로 누리과정 개정이 잘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여 보급한 점. - 아동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아동 중심의 정책이기 때문임. - 영유아의 놀 권리 회복, 획일적인 교육과정의 틀에 얽매이지 않게 하는 동인이 됨. - 전 세계적으로 학습자의 역량강화를 강조하는 시점에서, 놀이중심의 2019개정누리과정은 학습자의 행복한 삶과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양성의 초석을 다지는 정책이라고 생각됨. 미래 세계 인재를 키우기 위한 목표를 잘 담아냈다고 봄. - 놀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성장에 대한 인식 제고, 기존의 교사 중심에서 유아 중심 교과과정으로 놀이는 유아교육 보육 현장에서 유아기 발달적 적합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음. - 아동중심, 놀이중심 누리과정이야말로 국가수준의 보육철학 제시라고 봄. 놀이중심의 누리과정 개정으로 유아의 놀 권리와 질적인 자기주도적 유아기 경험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었음. - 그동안 유치원교육과정과 어린이집보육과정으로 이분화되었던 3세 이상 유아교육보육이 '교육과정'으로 일원화하였음.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교육, 보육에서 아동중심의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유아교육에서 놀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실행함. -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전국 3~5세의 90%가 수혜를 받음. - 누리과정 개정으로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관점 또한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바뀌었으므로 이는 아동복지적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짐.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 정책시행 이래 처음으로 국공립 이용률이 40% 이상임. 수요자 요구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고, 지역 간 이용률의 편차가 존재하긴 하나, 이용률 제고가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국정과제 등 여러 정부 정책의 목표로 추진되었던 만큼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높아졌음, 국공립 기관 확충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가 높음,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영유아 돌봄 정책에서 공공기관의 이용률제고는 국공립 어린이집수 확대로 성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 생각함. - 아동양육에서 공공의 책임이 커져야 할 것이고 개인의 선택 상 사립시설을 통한 양육은 민간시장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음. 따라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가능해야 함. 지난 2년간 어려운 상황에서 국공립 이용률이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함. - 국공립 인프라 기반 확대, 부모들의 국공립기관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국공립기관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함.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확대되었음이 가시적으로도 보임. - 공보육과 돌봄의 강화가 아동 양육 전반에 긍정적 영향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됨. - 공공기관 설립 확대로 인해 이용률이 목표를 상회하게 되었다고 사료 됨.

정책과제	이유
	- 코로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면서 필요했던 정책이었음. - 인프라 많이 갖추어졌음.
초등돌봄 확대	- 학교안, 학교밖, 학교-지자체 돌봄체계가 부서에 상관없이 진행됨. - 초등돌봄이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되고 있음.
(학교-지자체 협력	- 초등기 육아공백이 큰 상황을 개선할 수 있었음.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	- 초등돌봄교실, 다함께 돌봄센터의 확대 등을 통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초등돌봄의 확대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에 기여함. - 학교와 지자체 협력 하에 온종일 돌봄 시스템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를 둠. - 사각지대였던 초등 돌봄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제는 많이 정착되고 있는 좋은 정책으로 여겨짐. - 초등학교 아동 역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며 가능한 이동을 최소화하고 확대해야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

주: 개방형으로 응답된 내용을 정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반면에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로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 23.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12.5%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항목은 2021년(25.0%)에 비해 12.5%p 하락으로 큰 감소폭을 보였다.

〈표 IV-1-41〉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가장 성과 미흡 과제(2021년, 2022년)

단위: %(명)

정책과제	2021	202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6.0	10.6
보육서비스 질 제고	17.0	23.1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4.0	-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5.0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0.0	8.7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2.0	1.0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25.0	12.5
계(수)	100.0(69)	100.0(59)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195~196.

낮은 평가를 보인 과제를 위주로 그 이유는 다음이 제기된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미흡, 대체교사와 보조교사의 고용불안, 유보통합 문제 미해결 등이 언급되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였으나,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아동학대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표 IV-1-4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성과가 미흡한 과제로 응답한 이유

정책과제	이유
보육 서비스 질 제고	- 격차가 줄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치원에 비하여 보육교사 등의 처우가 낮음에 따라 그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 보육교사의 전문성 미흡(1년제 보육교사의 양성기관이 아직도 존재하는 상황), 실질적인 교사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여전히 보육교사의 임금을 국가가 제한하고 있어서 전문성이 높은 인력이 보육교사 직업을 유지하기 힘들. 또한 대체교사, 보조교사 지원확대 정책은 시행되고 있으나 대체교사나 보조교사로 일할 인력풀 유치 및 관리적 측면이 매우 미흡하여 실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보육교사 처우 열악함이 심화, 처우개선과 관련된 가장 큰 부분은 급여, 복지와 관련된 부분임. 이에 대한 큰 변화가 여전히 어려움.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는 정책 자료, 관련 연구로만 진행되었고, 실제로 정책적 변화는 거의 없었음.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변화가 미흡함. - 유보 이원화 처우개선 미흡, 전문성 강화 미흡. -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여전히 미흡하고 대체교사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조사, 평가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없음. 따라서 부모들은 보육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하기가 어려움. - 대체교사와 보조교사의 고용불안, 어린이집 유형별 교사 처우 격차, 대체교사 보조교사 확보 어려움, 교사 전문성 강화책 미흡. - 사립시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인데, 질제고가 미흡함.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종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지원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듯함.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안됨. - 보육교사 처우는 대폭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성과가 보이지 않음. -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제고가 시급함. 현재 어린이집 유형별로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편차가 크고 교사 전문성 수준 차이가 많이 남. -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부분에 관심과 지원이 너무 저조함. 배출된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는 재교육 시스템 마련 및 재교육(심화과정 혹은 교육대학원 진학 등) 지원이 대폭 필요함.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시도하였으나 실질적인 아동학대 감소로 이어지지 못함. - 대응체계 중 형식적인 의무교육이 대부분이어서 실제적 인식 강화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여겨짐. -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고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미흡하므로, 문제제기는 많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관간의 연계나 데이터 구축 등 아직 해결할 문제가 많고 언론에서는 계속 아동학대 문제가 노출되어 국민의 체감도가 낮음.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와 같은 정책의 부작용이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 - 일상적 관리시스템 부재 -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가 있으나 역동성 있게 돌아가지 않아서 많은 아동학대

정책과제	이유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문임. - 아동학대예방체계가 매뉴얼화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그럼에도 현장교사와 관리자, 부모 간에 인식 대응차이가 있어 보임.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이 자녀 및 아동중심 체계로 개선 필요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생태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강화와 처벌 강화 등만 변화를 두어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 미흡 - 교육기관의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학대는 가정에서 일어나는데 그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

주: 개방형으로 응답된 내용을 정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다. 자녀돌봄 시간지원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지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육아휴직제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목표와 성과분석 요소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V-1-43〉 자녀돌봄 시간 지원 부문의 성과분석 요소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세부 목표	성과분석 요소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 육아휴직제도 이용률 제고 - 육아휴직제도 성별 이용률 차이 완화 -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 육아휴직 사용률/이용가능성 - 전체 제도 이용 중 남성 비율 - 성별 육아휴직 사용 기간 - 육아휴직 급여의 충분성 - 육아휴직자의 고용복귀율 -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현황

자료: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80~81.

1) 정책의 충분성 및 포괄성

성과지표들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가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목표치에 다소 도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의 충분성 및 포괄성에서 보통 수준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44〉 정책의 충분성 및 포괄성 분석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2021 목표치	지표 종류		실적	결과
				정량화	성격		
① 남녀 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① 남성 육아휴직자 수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32,270명	정량	결과	29,041명	다소 우수

주: 본 보고서 〈표 II-4-4〉를 정리함.

자료: 1) 고용노동부(2021b). 2021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p.310-311.

2) 고용노동부(2022a).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pp.10-11.

2) 정책 만족도 및 성과평가 결과

가) 부모

(1) 부모의 정책 이용률 및 만족도

시간지원 정책(5개)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우선 시간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 인지도가 9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근로시간 단축’(82.0%, 72.8%), ‘시차출퇴근제(유연근로)’(70.7%, 65.6%), ‘재택근로(유연근로)’(68.7%, 6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동일한 시간 정책에 대해 부모보다 모 대상 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지원 전반에 대해 부에 비해 모의 인지도 응답률이 높았다. 또한 시간 지원 및 이용의 주된 대상이 되는 영아부모와 맞벌이가구,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의 정책 인지도도 높게 나타났다.

〈표 IV-1-45〉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인지도(출산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단위: %(명)

구분	모 출산 휴가	부 출산 휴가	모 근로 시간 단축	부 근로 시간 단축	모 육아 휴직	부 육아 휴직	계(수)
전체	94.8	93.0	82.0	72.8	93.9	92.5	100.0 (1,087)
성별							
남성	88.9	89.3	69.7	65.5	85.0	86.6	100.0 (307)
여성	97.1	94.5	86.8	75.6	97.4	94.9	100.0 (780)
$\chi^2(df)$	29.277(1)***	9.289(1)**	43.522(1)***	11.495(1)**	59.581(1)***	21.620(1)***	

구분	모 출산 휴가	부 출산 휴가	모 근로 시간 단축	부 근로 시간 단축	모 육아 휴직	부 육아 휴직	계(수)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96.6	94.2	86.5	71.2	95.7	94.7	100.0 (208)
유아부모	94.4	93.4	82.5	75.6	94.4	92.7	100.0 (468)
초등부모	94.2	92.0	79.1	70.3	92.5	91.2	100.0 (411)
$\chi^2(df)$	1.862(2)	1.256(2)	5.349(2)	3.470(2)	2.888(2)	2.454(2)	
맞벌이 여부							
맞벌이	95.3	93.4	83.0	73.3	94.4	93.0	100.0 (983)
외벌이	85.2	86.9	68.9	63.9	83.6	80.3	100.0 (61)
해당없음	95.3	93.0	76.7	72.1	97.7	100.0	100.0 (43)
$\chi^2(df)$	11.764(2)**	3.734(2)	8.617(2)*	2.578(2)	12.845(2)**	16.938(2)***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94.0	92.5	74.6	76.1	92.5	92.5	100.0 (67)
251~350만원	93.6	91.3	75.1	64.2	90.2	89.0	100.0 (173)
351~500만원	94.1	92.8	80.1	70.9	95.1	92.2	100.0 (306)
501~600만원	96.8	94.7	85.1	74.5	95.2	95.2	100.0 (188)
601만원 이상	94.9	93.2	86.7	77.1	94.3	93.2	100.0 (353)
$\chi^2(df)$	2.363(4)	1.620(4)	15.211(4)**	10.923(4)*	5.884(4)	5.349(4)	

주: 1) 각 서비스의 인지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함.

2) 각 서비스 별 인지/미인지 간 차이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V-1-46〉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인지도(유연근무제)

단위: %(명)

구분	모 유연근무제 (재택근로)	부 유연근무제 (재택근로)	모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부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계(수)
전체	68.7	64.9	70.7	65.6	100.0 (1,087)
성별					
남성	64.8	62.5	64.8	62.2	100.0 (307)
여성	70.3	65.8	73.1	66.9	100.0 (780)
$\chi^2(df)$	3.028(1)	1.007(1)	7.255(1)**	2.164(1)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69.7	64.4	70.2	65.4	100.0 (208)
유아부모	68.8	64.7	72.0	66.2	100.0 (468)
초등부모	68.1	65.2	69.6	65.0	100.0 (411)
$\chi^2(df)$	0.164(2)	0.042(2)	0.658(2)	0.163(2)	

구분	모 유연근무제 (재택근로)	부 유연근무제 (재택근로)	모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부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69.0	65.3	71.7	66.5	100.0 (983)
외벌이	60.7	55.7	57.4	50.8	100.0 (61)
해당없음	74.4	67.4	67.4	65.1	100.0 (43)
$\chi^2(df)$	2.524(2)	2.440(2)	5.945(2)	6.287(2)*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65.7	62.7	61.2	59.7	100.0 (67)
251~350만원	59.0	54.3	59.5	57.2	100.0 (173)
351~500만원	68.3	65.0	69.6	64.1	100.0 (306)
501~600만원	68.6	64.9	69.7	64.9	100.0 (188)
601만원 이상	74.5	70.3	79.6	72.5	100.0 (353)
$\chi^2(df)$	13.477(4)**	13.058(4)*	27.131(4)***	14.268(4)**	

주: 1) 각 서비스의 인지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함.

2) 각 서비스 별 인지/미인지 간 차이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시간지원 정책(5개)에 대한 이용경험은 '출산휴가'에 대한 이용률이 40%대로 (43.0%, 41.3%)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모 육아휴직' 이용률이 37.2%로 늘어나면서 '부 육아휴직' 이용률 10.6%와 격차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부-모 출산휴가' 다음으로, '모 육아휴직'(37.2%), '모 근로시간 단축'(18.2%), '부 육아휴직'(10.6%) '모 시차출퇴근 유연근로제'(10.5%), '부 시차출퇴근 유연근로제'(7.9%), '모 재택근로 유연근무제'(7.8%), '부 근로시간 단축'(5.8%), '부 재택근로 유연근무제'(4.4%)의 순으로 이용률을 보였다.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영아부모, 맞벌이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지원 정책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단 '부 육아휴직'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읍면지역일수록 '부 육아휴직' 이용률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경제적 특성 외에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작동하는 또 다른 기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부의 출산휴가' 이용과 '모의 근로시간 단축', '부-모 유연근로 이용'에서도 읍면지역이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표 IV-1-47〉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출산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단위: %(명)

구분	모 출산 휴가 <i>n</i> =1,030	부 출산 휴가 <i>n</i> =1,011	모 근로 시간 단축 <i>n</i> =891	부 근로 시간 단축 <i>n</i> =791	모 육아 휴직 <i>n</i> =1,021	부 육아 휴직 <i>n</i> =1,006
전체	43.0	41.3	18.2	5.8	37.2	10.6
성별						
남성	33.0	52.6	15.0	8.0	28.0	13.2
여성	46.6	37.2	19.2	5.1	40.4	9.7
$\chi^2(df)$	15.285(2)***	24.732(2)***	6.225(2)*	2.274(2)	13.589(2)**	2.861(2)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45.8	48.5	23.9	6.8	39.7	9.6
유아부모	42.5	41.6	19.9	7.1	37.1	11.8
초등부모	42.1	37.3	12.9	3.8	36.1	9.9
$\chi^2(df)$	9.503(4)	8.573(4)	13.655(4)**	4.542(4)	7.904(4)	3.043(4)
맞벌이 여부						
맞벌이	45.1	43.6	18.5	6.1	39.1	11.3
외벌이	17.3	20.8	7.1	2.6	13.7	6.1
해당없음	26.8	17.5	24.2	3.2	23.8	2.3
$\chi^2(df)$	24.719(4)***	34.822(4)***	5.991(4)	11.671(4)*	21.104(4)***	28.488(4)***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14.3	24.2	10.0	0.0	14.5	11.3
251~350만원	21.0	38.6	4.6	7.2	16.7	11.7
351~500만원	36.8	44.0	16.3	6.5	30.9	10.6
501~600만원	47.3	41.6	15.6	4.3	43.6	6.7
601만원 이상	62.1	43.5	28.1	6.6	53.2	12.2
$\chi^2(df)$	111.723(8)***	21.266(8)**	63.678(8)***	21.541(8)**	96.581(8)***	33.872(8)***
지역구분						
대도시	41.7	40.2	16.3	5.6	35.5	9.7
중소도시	47.1	41.7	19.3	6.0	41.5	10.2
읍면	34.7	43.4	19.0	5.8	29.2	13.4
$\chi^2(df)$	11.881(4)*	4.095(4)	5.724(4)	0.683(4)	13.490(4)**	4.082(4)

주: 1) 이용률은 해당 서비스를 인지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각 서비스의 이용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함.

3) 각 서비스 별 이용/미이용 간 차이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V-1-48〉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유연근무제)

단위: %(명)

구분	모 유연근무제 (재택근로) <i>n</i> =747	부 유연근무제 (재택근로) <i>n</i> =705	모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i>n</i> =769	부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i>n</i> =713
전체	7.8	4.4	10.5	7.9
성별				
남성	4.0	3.1	5.5	8.4
여성	9.1	4.9	12.3	7.7
$\chi^2(df)$	5.866(2)	2.239(2)	9.458(2)**	0.779(2)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9.7	6.7	10.3	7.4
유아부모	8.7	4.3	11.0	10.0
초등부모	5.7	3.4	10.1	5.6
$\chi^2(df)$	3.056(4)	3.360(4)	0.224(4)	3.936(4)
맞벌이 여부				
맞벌이	8.1	4.5	11.2	8.3
외벌이	0.0	2.9	0.0	3.2
해당없음	9.4	3.4	6.9	3.6
$\chi^2(df)$	5.042(4)	14.601(4)**	4.982(4)	17.983(4)**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2.3	0.0	0.0	2.5
251~350만원	2.0	0.0	1.9	5.1
351~500만원	5.3	5.5	9.9	9.7
501~600만원	3.1	1.6	6.9	5.7
601만원 이상	15.2	7.3	17.4	9.4
$\chi^2(df)$	44.685(8)***	31.133(8)***	47.934(8)***	27.180(8)**
지역구분				
대도시	8.0	6.0	8.8	8.8
중소도시	7.4	3.9	11.8	7.0
읍면	8.2	2.4	11.2	8.1
$\chi^2(df)$	7.108(4)	4.597(4)	4.803(4)	2.904(4)

주: 1) 이용률은 해당 서비스를 인지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각 서비스의 이용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함.

3) 각 서비스 별 이용/미이용 간 차이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시간지원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2021년 대비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확대된 이후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출산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등 시간지원 전반에 대한 이용자 수가 줄고 만족도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표 IV-1-49〉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만족도(시간지원)(2021년, 2022년)

단위: %(명), 점

구분	2021				2022			
	만족	비율	5점	평균	계(수)	만족	비율	5점
자녀 돌봄 시간 지원	모 출산휴가	72.1	3.9	100.0	(957)	62.3	3.7	100.0
	부 출산휴가	53.8	3.4	100.0	(781)	46.4	3.3	100.0
	모 근로시간 단축	70.4	3.8	100.0	(399)	62.3	3.6	100.0
	부 근로시간 단축	64.6	3.8	100.0	(127)	63.0	3.8	100.0
	모 육아휴직	71.7	3.9	100.0	(803)	64.7	3.7	100.0
	부 육아휴직	63.7	3.7	100.0	(193)	58.9	3.6	100.0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68.1	3.9	100.0	(207)	63.8	3.8	100.0
	부 유연근무제(재택근로)	60.2	3.7	100.0	(166)	58.1	3.7	100.0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74.3	3.9	100.0	(226)	67.9	3.8	100.0
	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73.2	3.9	100.0	(183)	64.3	3.7	100.0

주: 1)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만족비율은 '만족', '매우 만족' 비율을 합친 결과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219.

시간지원 수혜자의 불만족 이유는 공통적으로 '실제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분위기 등 직장 눈치가 보이는 부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연동된 급여수준이 낮은 것'에 대한 불만족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휴직 이용자'의 경우 '연동된 급여수준이 낮은 것'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50% 내외로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실제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분위기' 외에 '제도 사용에 따른 직장내 불이익'과 '대체인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 직장 문화와 지원 연계에 대한 불만족 이유가 있었으며, 또한 '이용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낮은 부분'에 대한 불만족 응답도 있었다. '유연근로제'의 경우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운 점'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표 IV-1-50〉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자녀돌봄 시간지원)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이 낮아서	이용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낮아서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직장에 눈치가 보여서)	제도 사용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이 염려되어서(승진 시 불이익 등)	대체 인력 지원 등 시간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기타	계(수)
모 출산휴가	36.8	5.3	26.3	14.0	7.0	3.5	7.0	100.0 (57)
부 출산휴가	15.7	2.5	48.8	9.1	9.9	8.3	5.8	100.0 (121)
모 근로시간 단축	16.7	3.3	46.7	6.7	13.3	10.0	3.3	100.0 (30)
부 근로시간 단축	-	-	42.9	28.6	-	14.3	14.3	100.0 (7)
모 육아휴직	50.0	6.3	16.7	8.3	6.3	4.2	8.3	100.0 (48)
부 육아휴직	44.4	5.6	27.8	5.6	5.6	11.1	-	100.0 (18)
모 유연근무제 (재택근로)	11.1	11.1	44.4	22.2	-	11.1	-	100.0 (9)
부 유연근무제 (재택근로)	33.3	-	33.3	-	33.3	-	-	100.0 (3)
모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	-	72.7	9.1	9.1	-	9.1	100.0 (11)
부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20.0	-	20.0	-	-	60.0	-	100.0 (5)

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부모의 정책 효과성 인식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 것과 미흡한 것 1가지를 질문한 결과, ‘육아휴직’에 대한 긍정응답이 과반으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시간지원 정책의 확대에 대한 긍정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15.4%)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15.1%)에 대한 긍정평가가 15%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재택근로’와 같은 유연근무제 실시에 대한 긍정 응답이 13.5%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에 대한 긍정평가는 부, 자녀연령이 어릴수록(영아부모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읍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모, 영아부모와 초등부모, 맞벌이여부 비해당 가구서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긍정평가가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부, 맞벌이가구에서 긍정응답이 좀 더 많았으며,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모, 자녀연령이 많을수록(초등부모일수록),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에서 많았다. ‘시차출퇴근제’에 대해서는 자녀연령이 많을수록(초등부모일수록),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와 월 평균소득 250만원이하 저소득가구, 그리고 대도시지역에서 좀 더 많은 긍정 응답을 보였다.

시간지원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하위집단 특성별로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대체로 지원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과 소득수준, 맞벌이가구에서 시간지원에 대한 긍정평가가 좀 더 많은 가운데,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와 읍면지역 및 대도시지역에서의 긍정응답이 많은 점이 특징적이다.

〈표 IV-1-51〉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단위: %(명)

구분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 (재택근로)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	계(수)
전체	51.0	15.1	15.4	13.5	5.1	100.0 (1,087)
성별						
남성	57.7	9.1	16.6	11.4	5.2	100.0 (307)
여성	48.3	17.4	14.9	14.4	5.0	100.0 (780)
$\chi^2(df)$			15.731(4)**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56.7	15.9	18.3	6.7	2.4	100.0 (208)
유아부모	51.3	13.9	18.2	11.3	5.3	100.0 (468)
초등부모	47.7	16.1	10.7	19.5	6.1	100.0 (411)
$\chi^2(df)$			35.672(8)***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1	14.9	15.9	13.4	4.8	100.0 (983)
외벌이	52.5	14.8	14.8	11.5	6.6	100.0 (61)
해당없음	46.5	20.9	4.7	18.6	9.3	100.0 (43)
$\chi^2(df)$			7.568(8)			

구분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 (재택근로)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	계(수)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55.2	9.0	13.4	11.9	10.4	100.0 (67)
251~350만원	49.7	11.6	19.1	15.0	4.6	100.0 (173)
351~500만원	54.9	14.7	15.0	11.8	3.6	100.0 (306)
501~600만원	53.2	14.4	13.3	12.2	6.9	100.0 (188)
601만원 이상	46.2	18.7	15.3	15.3	4.5	100.0 (353)
$\chi^2(df)$	20.338(16)					
지역구분						
대도시	49.4	15.3	15.6	12.9	6.7	100.0 (417)
중소도시	48.4	16.1	16.5	15.2	3.8	100.0 (479)
읍면	60.3	12.2	12.2	10.6	4.8	100.0 (189)
$\chi^2(df)$	13.343(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 것 1가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긍정 응답에서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31.2%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10%대로 비교적 고르게 응답되었다.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평가는 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외벌이가구,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많았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부, 유아부모, 맞벌이가구, 가구소득 250만원이하 및 601만원이하 가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모,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에서 부정적 응답이 좀 더 많았다.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모, 유아부모, 맞벌이가구와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 읍면 지역에서, ‘시차출퇴근제’에 대해서는 초등부모,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 중소도시 지역에서 좀 더 많은 부정응답을 보였다.

〈표 IV-1-52〉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단위: %(명)

구분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 (재택근로)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	계(수)
전체	31.2	17.4	19.9	17.9	13.6	100.0 (1,087)
성별						
남성	35.2	20.2	16.0	14.3	14.3	100.0 (307)
여성	29.6	16.3	21.4	19.4	13.3	100.0 (780)
$\chi^2(df)$			10.683(4)*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32.2	15.9	21.6	15.4	14.9	100.0 (208)
유아부모	30.1	19.0	20.7	19.9	10.3	100.0 (468)
초등부모	31.9	16.3	18.0	17.0	16.8	100.0 (411)
$\chi^2(df)$			11.880(8)			
맞벌이 여부						
맞벌이	30.4	17.7	19.3	18.7	13.8	100.0 (983)
외벌이	50.8	14.8	21.3	6.6	6.6	100.0 (61)
해당없음	20.9	14.0	30.2	16.3	18.6	100.0 (43)
$\chi^2(df)$			20.156(8)*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38.8	20.9	14.9	16.4	9.0	100.0 (67)
251~350만원	33.5	15.0	21.4	15.6	14.5	100.0 (173)
351~500만원	31.7	16.7	21.2	16.0	14.4	100.0 (306)
501~600만원	31.4	14.9	18.1	20.7	14.9	100.0 (188)
601만원 이상	28.0	19.8	19.8	19.5	12.7	100.0 (353)
$\chi^2(df)$			11.601(16)			
지역구분						
대도시	33.3	16.8	21.1	18.0	10.8	100.0 (417)
중소도시	29.0	18.0	19.0	16.5	17.5	100.0 (479)
읍면	32.3	16.9	19.0	21.7	10.1	100.0 (189)
$\chi^2(df)$			13.803(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나) 전문가

(1)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의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

자녀돌봄 시간지원 부문의 수행 달성도를 보면(7점 척도, ⑤~⑦ ‘매우 잘 달성되었다’를 합한 비율), ‘육아휴직제도’의 긍정비율(64.4%)은 2021년 조사결과(48.0%)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2020년, 2021년, 2022년)

단위: %(명), 점

정책과제	2020			2021			2022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육아휴직제도(육아휴 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48.0	4.3	100.0(100)	63.0	4.76	100.0(100)	64.4	4.8	100.0(104)

주: 1) 긍정비율은 ‘⑥’, ‘⑥’, ‘⑦’ 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2)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12.

3)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224.

(2)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의 성과평가

자녀돌봄 시간지원 부문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정책으로는 ‘육아휴직제도’로 응답자의 49.0%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근제)’의 성과를 가장 높이 평가한 응답률은 9~16%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V-1-54〉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정책(2021년, 2022년)

단위: %(명)

정책과제	2021	2022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63.0	49.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9.0	9.6
배우자 출산휴가	12.0	16.3

정책과제	2021	2022
유연근무제(재택근로)	12.0	14.4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4.0	10.6
계(수)	100.0(100)	100.0(104)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225.

‘육아휴직제도’의 성과를 가장 높게 평가한 이유로는 남성의 이용률 제고로 남녀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신청 및 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녀양육은 부모와 사회,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수행해야 하는 과업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를 통해 제도를 육아 휴직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직장 문화로 변화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남녀가 양육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남녀 공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점을 그 성과로 들었다.

‘재택근로’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및 가정 상황에 대응하여 부모와 아동의 심리적 유대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였다.

〈표 IV-1-55〉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로 평가한 이유

정책과제	이유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 휴직급여 수준이 높아짐. 실제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어 성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 볼 수 있음. - 영아기에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육아휴직제도는 1세 이전 영아를 부모가 직접 양육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임. 또한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점도 긍정적임. - 노동시장의 장시간 노동관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서비스만으로 양육지원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 부모에게 시간을 보장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아버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임. 다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함. - 돌봄시간정책 중 가장 정책효과가 높은 것은 육아휴직제도이며, 여전히 상당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긴 하나, 사용자수도 증가하고 사용자의 만족도 역시 높은 정책이기 때문에 선택함. - 남성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이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므로 실제 혜택에 대한 체감도 높음. - 법적으로 명시된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 등 일부 직종에 한해 보장받았는데,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도 육아휴직이 비교적 수용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 - 제대로 실현된다면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정책임이 분명함. 그러나 실제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임. - 과거와 달리 육아휴직제도 사용이 용이해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음.

정책과제	이유
	- 육아휴직제도의 보편화, 이에 대한 직장 내 긍정적인 문화 정착이 진전되고 있음. -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옴. - 육아휴직급여 현실화로 가정 내 경제어려움 해소 및 양육도움, 남성의 육아휴직인센티브로 일부 직장에만 이루어진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참여기회 확대 -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수 증가와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현실화가 가장 크다고 봄. 명목상이 아닌 실제로 기능하는 정책마련과 실행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함. - 가족구조 변화로 영유아 돌봄은 젊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있어 해결하기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임. 육아휴직제도는 여전히 모든 근로자들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제도에까지 이르지 못했으나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봄. - 남성의 자녀양육과 가정생활 참여를 격려할수록 성평등 사회에 기여하고 공동양육에 대한 인식변화가 발생함. -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통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로 남성의 육아휴직 증대 및 여성의 육아부담 경감 유도 - 육아휴직제도가 현실화될 때, 출산과 영아양육으로 인해 가정 양립이 어려운 문제가 해소 되고, 이를 통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임. 개선점이 많이 있으나 성과적인 측면에서 육아휴직제도가 말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여겨짐. - 제도적 측면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인지도나 활용도가 제고되었음. - 육아휴직을 통해 경력 단절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 아동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아버지 육아 휴직의 비율이 증가하고, 과거와 다르게 아버지 육아 휴직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직장 문화로 변화되고 있음. -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용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고무적임. - 육아휴직제도가 있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 하는 것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는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육아휴직 제도가 안정되게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과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함. - 양육의 공동책임 실현 -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한 인식 확대 - 양육의 책임은 엄마가 아닌, 부모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육아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버지 출산육아휴가의 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임. - 배우자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10일로 법제화하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고 봄. - 남녀 공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음. - 제도가 정착되어 잘 시행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성과가 있다는 판단이고, 이 영역이 좀 더 체감 효과를 높여야 할 부분이라 생각됨. - 핵가족 시대에서 가장 적합한 지원 - 양육을 위한 배우자 출산제도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유연 근무제 (재택근로)	- 육아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의 실질적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덜어주면서 육아를 경험하며 얻게 되는 극도의 부정적 인식을 덜어주고 있음. - 가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가정의 경우에는 재택근로로 인해 부모와 아동이 함께 놀이활동 등 다양한 심리적 유대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 코로나 등으로 인해 유연근무제를 실제로 시행하는 산업체가 많아졌고 이를 활용한 긍정적 경험으로 인해 앞으로도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 가정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임. - 코로나19로 하여 그 동안 도입 의도를 보이지 않았던 기업, 공공기관 등이 어쩔 수 없이

정책과제	이유
	실행가능함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른 성과평가를 통해서 향후 정착화, 개선방안 도출이 요구됨.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맞물려 어느 정도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난 경향이 있지만 재택근무로 업무의 효율성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보다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

주: 개방형으로 응답된 내용을 정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반면에 자녀돌봄 지원 부문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선택한 비율이 28.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육아휴직제도’ 25.0%, ‘재택근무’ 23.1%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56〉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2021년, 2022년)

정책과제	단위: %(명)	
	2021	2022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3.0	2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2.0	28.8
배우자 출산휴가	12.0	10.6
유연근무제(재택근로)	23.0	23.1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10.0	12.5
계(수)	100.0(100)	100.0(104)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226.

성과가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다음이 제기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기업(다양한 유형의 직장)의 상황 및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는 남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직장유형에 따라 실현되는 정도가 다르며, 권리 개념의 사회문화적 인식 부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재택근무’의 경우는 유연근무제 중 재택근무를 실시하려면 성과평가체제가 회사에 잘 설계되어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으로 많은 기관에서 활성화한 것으로 육아지원정책으로서의 재택근로는 여전히 그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표 IV-1-57〉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로 평가한 이유

정책과제	이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육아기에는 가급적 아동과 부모가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함에도 현재 근로 시간 단축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 - 잠재적 이용자의 인식부족, 사업체의 이해부족 등으로 활용도 낮음. - 육아휴직제도와 비교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사용 유인 및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의 미흡함으로 인해 정책효과가 높을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기 때문임. - 다른 관련 정책에 비해 체감도 낮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직장인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봄. -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대체 인력지원 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강구 되어야함. - 아직도 영유아기,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들은 장시간의 근로시간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는 직장이 많지 않으므로 국가적인 개선 노력 요구됨. - 직장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함. 이로 인해 일반 직장에서 해당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움.
육아휴직 제도(육아 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 현장 인식 및 실행 미흡, 현실적으로는 시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 육아휴직기간을 활용하는 것도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까지 단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직장문화를 가지고 있음.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혼용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기관에 상관없이 모두가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기능한다고 체감할 만큼 실행되고 있지 않음. 여전히 민간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명목상 제도에 그치고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직종 제한, 제도 이용률이 매우 낮은 상태임.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이 결정적이라고 봄. - 여전히 인지도가 낮은 제도로, 성공적인 운영 사례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 보임. - 근로시간단축은 필요한 제도이지만 대체인력제도까지 함께 이뤄져야하는 제도임. - 직장에서의 업무 성격에 따라 수행 가능한 환경이 되지 못함. - 장기적이며 단계별 지원 정책의 부재 - 시간 단축과 업무량 감소는 무관하므로,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함. - 취업처가 다양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일괄하여 적용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감독체계가 미비함. -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성화, 실효성 부족 - 많이 보급되었으나 기관이나 회사의 대체 방안 강구 미흡함.
육아휴직 제도(육아 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 사회보장이 잘 이루어진 선진국과 같이 육아휴직급여 현실화를 위해서는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 육아휴직기간 3년으로 확대,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보장,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강화 필요함. - 육아휴직제도는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성과가 큰 정책이기는 하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휴직 급여는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아직 육아휴직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생애초기에서부터 형평성이 떨어짐. -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육아휴직 제도를 현실화하는데 있어 가족 모두가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여건에 따라 이용 대상 자체의 격차가 심함. - 육아를 선택하면서 희생해야 할 기회비용이 너무 커서 현재의 육아휴직급여로는 이 부분을 전혀 상쇄할 수 없음. 남성의 육아휴직의 활성화가 요원하여 여전히 육아는 여성의 몫으로

정책과제	이유
	전가되고 그 결과 여성의 출산회피가 더 심각해지고 있음. - 기업규모별, 맞춤형 전략 부재, 적극적 조치 부재 등 패널티(대기업), 인센티브, 육아휴직 등 준수하지 않은 기업 공시제 도입 등 적극적인 방안 마련. - 육아휴직이 정착화 되고 육아휴직급여가 현실화되었다고 하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불리한 처우를 종종받는 경우도 매우 많고, 육아를 하기에는 아직 급여가 현실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됨. -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보다 많고 다양한 직장에서의 육아휴직이 보장되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남성 육아휴직은 아직도 선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도 문제임. -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며 실제로 육아휴직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부족 - 육아휴직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현실화되어야 하고 남성 육아휴직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함. - 육아휴직제도 중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제도는 이제 시작 단계이므로 좀 더 사회 전반적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일반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미흡하다고 평가하게 되었음. - 육아휴직제도 적용정책의 활용도는 높아졌으나, 직장유형에 따라 휴직급여 현실화, 휴직 급여 인센티브 강화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점에서 문제점이 발행하거나 적용되지 못한 면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 기업과 관리자 측의 정책 운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정책 운영을 위한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음. 육아 휴직이 직장인의 생애주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 및 운영해야 함.
유연 근무제 (재택근로)	- 전국민적 관점에서 볼 때 대상군이 너무 제한적이라 호불호가 강한 제도이고 실제 수혜 대상이 아닌 경우 조직관리 차원에서 형평성 제기가 발생함. - 보호자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양육을 전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일정부분 유연근무제가 가능했으나, 여전히 미흡함. - 재택근로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재택근로에 대한 불신이 높음. -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에서는 본 제도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지만,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종이 대다수인 산업모형에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보여짐. 그렇다고 해서, 재택근로 근무제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님. -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가 이루어졌으나 비상상황에서 불가피한 방법이었을 뿐 재택근무가 제도화되지 못했음. - 재택근로 가능한 근무환경 지원 부족(IT 기술지원, pc등 재택 인프라 부족) - 유연근무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족친화적 시각이 필요함.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나와야 할 것임.

주: 개방형으로 응답된 내용을 정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라. 정책 총괄 평가

1) 부모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실제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현금-서비스-시간 지원 정책 중 1개를 선택하게 한 결과, ‘육아휴직’과 ‘아

동수당'에 대한 긍정응답이 각 28.0%, 22.1%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재택근로(유연근무제)'에 대한 긍정응답이 8.6%로 많았으며, 이를 '시차출퇴근(유연근로제)' 응답 3.6%와 합칠 경우 '유연근로제(재택근로, 시차출퇴근)'에 대한 긍정응답은 12.2%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7.6%)과 '배우자 출산휴가'(7.0%) '의료비지원'(5.7%)과 '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의 누리과정 개정'(3.7%)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시간지원 및 현금지원의 확대에 대한 부모의 긍정평가가 큼을 알 수 있다.

'육아휴직'에 대한 긍정응답은 부, 초등부모에서 유의하게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맞벌이가구, 읍면지역일수록 육아휴직에 대한 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아동수당'에 대한 응답은 부, 유아/초등 부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가구소득 수준이 적을수록 많았다.

'재택근로(유연근무제)'에 대한 긍정응답은 모, 초등부모,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많았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 유아부모, 맞벌이여부 비해당부모에서,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모, 영아부모, 맞벌이가구와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에서, '누리과정 개정'에 대한 긍정응답은 모, 유아/초등 부모, (대)도시지역에서 좀 더 많았다.

〈표 IV-1-58〉 전체 유아정책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구분	단위: %(명)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전체	22.1	5.7	1.1	3.7	1.7	1.0	1.7	1.4	0.4	1.6	0.4	2.4	1.8	0.4	28.0	7.6	7.0	8.6	3.6	100.0 (1,087)
성별																				
남성	30.6	4.9	0.3	3.3	0.7	1.3	1.0	1.3	0.7	0.3	0.3	1.3	2.6	0.3	30.3	4.9	5.9	6.8	3.3	100.0 (307)
여성	18.7	6.0	1.4	3.8	2.1	0.9	2.1	1.4	0.3	2.1	0.4	2.8	1.5	0.4	27.1	8.7	7.4	9.2	3.7	100.0 (780)
$\chi^2(df)$	37.725(18)**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19.2	13.5	2.4	1.0	1.9	0.5	1.0	1.4	0.5	3.4	0.5	1.4	2.4	0.5	27.9	6.3	10.1	4.3	1.9	100.0 (208)
유아부모	24.8	4.3	0.9	4.3	1.5	1.1	2.1	1.7	0.6	1.3	0.4	1.5	1.9	0.2	27.1	8.5	7.7	6.6	3.4	100.0 (468)
초등부모	20.4	3.4	0.7	4.4	1.7	1.2	1.7	1.0	0.0	1.0	0.2	3.9	1.5	0.5	29.0	7.3	4.6	12.9	4.6	100.0 (411)
$\chi^2(df)$	84.238(36)***																			
맞벌이 여부																				
맞벌이	21.9	6.1	1.1	3.9	1.5	0.8	1.6	1.4	0.3	1.6	0.3	2.3	1.7	0.2	28.5	7.6	6.6	8.6	3.8	100.0 (983)
외벌이	21.3	0.0	1.6	0.0	4.9	3.3	3.3	1.6	1.6	1.6	0.0	3.3	3.3	1.6	24.6	4.9	11.5	9.8	1.6	100.0 (61)
해당없음	27.9	4.7	0.0	4.7	0.0	2.3	2.3	0.0	0.0	0.0	2.3	2.3	2.3	2.3	20.9	11.6	9.3	4.7	2.3	100.0 (43)
$\chi^2(df)$	42.221(36)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34.3	3.0	4.5	1.5	0.0	0.0	3.0	0.0	0.0	1.5	1.5	1.5	3.0	1.5	25.4	6.0	9.0	3.0	1.5	100.0 (67)
251~350만원	23.1	6.4	0.6	7.5	0.6	1.7	4.0	1.7	0.6	0.0	0.6	2.3	0.6	0.6	26.6	5.8	8.1	6.4	2.9	100.0 (173)
351~500만원	22.9	4.2	0.7	2.9	2.3	1.0	1.6	0.7	0.3	2.0	0.0	1.0	2.0	0.3	31.0	8.5	6.2	8.2	4.2	100.0 (306)
501~600만원	19.7	8.0	0.5	3.7	1.1	1.1	0.5	2.1	1.1	2.1	0.5	3.2	2.7	0.5	27.1	7.4	5.9	9.0	3.7	100.0 (188)
601만원 이상	19.8	5.9	1.4	2.8	2.3	0.8	1.1	1.7	0.0	1.7	0.3	3.4	1.7	0.0	26.9	8.2	7.4	10.8	3.7	100.0 (353)
$\chi^2(df)$	79.293(72)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계수
지역구분																			
대도시	23.5	6.2	0.7	4.1	1.9	0.2	1.7	1.9	0.5	1.2	0.2	2.2	2.2	0.0	26.1	7.9	7.9	3.6	100.0 (417)
중소도시	20.9	4.8	1.9	3.8	1.5	1.7	1.9	1.3	0.2	1.9	0.6	2.5	1.3	0.2	28.4	7.9	4.8	10.9	100.0 (479)
읍면	22.2	6.9	0.0	2.6	1.6	1.1	1.6	0.5	0.5	1.6	0.0	2.6	2.6	1.6	30.2	6.3	10.6	4.2	100.0 (189)
$\chi^2(df)$															45.293(36)				

주: ① 아동수당 ②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출산 진료비 지원) ③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④ 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⑥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애듀파인 도입 등) ⑦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⑧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⑨ 보육
서비스 질 제고 ⑩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⑪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⑫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⑭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⑮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⑯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⑰ 배우자
출산휴가 ⑱ 유연근무제(재택근로) ⑳ 유연근무제(사차출퇴근)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문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적은 (실제 육아에 도움이 되지않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현금-서비스-시간 지원 정책 중 1개를 선택하게 한 결과,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아동수당’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각 18.9%, 10.9%, 9.4%로 많았다. 그다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유연근무제)’에 대한 부정응답이 8.9%, 7.4%로 많았다.

앞서 살펴본 긍정 성과평가로서의 시간지원 및 현금지원에 대한 부모의 긍정응답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부, 초등/유아 부모, 외벌이가구에서 그리고 (대)도시지역일수록 성과가 미흡하다는 부정적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모, 영아부모,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에서, ‘아동수당’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부, 영아부모, 외벌이가구, 25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에서 좀 더 큰 경향을 보였다.

〈표 IV-1-59〉 전체 육아정책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계(수)	단위: %(명)
	9.4	2.4	3.3	2.7	3.0	3.8	1.4	3.6	4.2	0.8	0.6	1.5	2.0	4.7	18.9	8.9	10.9	10.6	7.4	100.0	(1,087)
전체																					
성별																					
남성	13.7	2.0	5.2	2.3	3.3	4.2	1.6	3.6	2.0	0.7	0.7	0.7	1.3	3.6	22.1	9.1	8.5	9.1	6.5	100.0	(307)
여성	7.7	2.6	2.6	2.8	2.9	3.6	1.3	3.6	5.1	0.9	0.6	1.8	2.3	5.1	17.6	8.8	11.8	11.2	7.7	100.0	(780)
$\chi^2(df)$																					29.746(18)*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11.1	5.8	4.8	3.4	2.4	2.9	0.5	2.4	4.3	1.0	1.0	0.0	2.9	6.7	15.9	8.7	12.5	6.7	7.2	100.0	(208)
유아부모	9.4	1.3	3.6	2.6	2.4	3.8	1.5	4.7	4.3	0.6	0.9	0.9	1.9	4.5	19.2	10.0	11.3	11.1	6.0	100.0	(468)
초등부모	8.5	1.9	2.2	2.4	4.1	4.1	1.7	2.9	4.1	1.0	0.2	2.9	1.7	3.9	20.0	7.8	9.5	11.9	9.0	100.0	(411)
$\chi^2(df)$																					50.883(36)
맞벌이 여부																					
맞벌이	9.0	2.5	3.4	2.7	3.3	4.1	1.3	3.6	4.3	0.8	0.7	1.5	1.8	4.5	18.7	9.2	10.5	10.9	7.3	100.0	(983)
외벌이	16.4	1.6	3.3	1.6	1.6	0.0	3.3	3.3	1.6	0.0	0.0	0.0	1.6	6.6	26.2	9.8	13.1	3.3	6.6	100.0	(61)
해당없음	9.3	0.0	2.3	2.3	0.0	2.3	0.0	4.7	7.0	2.3	0.0	2.3	7.0	7.0	11.6	2.3	16.3	14.0	9.3	100.0	(43)
$\chi^2(df)$																					34.460(36)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16.4	1.5	6.0	3.0	0.0	3.0	3.0	4.5	7.5	1.5	0.0	1.5	3.0	1.5	14.9	7.5	9.0	10.4	6.0	100.0	(67)
251~350만원	6.9	3.5	1.7	0.6	2.9	3.5	2.9	5.8	3.5	1.2	0.6	0.0	0.6	5.8	24.9	8.1	11.0	8.1	8.7	100.0	(173)
351~500만원	9.2	2.0	4.6	2.3	6.2	2.9	1.3	2.0	2.6	0.0	1.0	2.3	2.0	4.2	18.3	10.8	11.1	9.8	7.5	100.0	(306)
501~600만원	10.1	1.6	2.1	4.8	1.1	3.2	0.5	3.2	6.4	1.1	0.5	0.5	1.1	4.3	20.7	8.5	10.6	12.8	6.9	100.0	(188)
601만원 이상	9.1	2.8	3.1	2.8	2.0	5.1	0.8	4.0	4.2	1.1	0.6	2.0	3.1	5.4	16.1	8.2	11.0	11.3	7.1	100.0	(353)
$\chi^2(df)$																					81.562(72)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계(수)	
지역구분																				
대도시	9.1	2.9	3.1	2.2	2.9	4.1	1.7	3.6	5.5	0.2	0.2	1.0	2.4	3.6	20.1	7.4	13.7	8.9	7.4	100.0 (417)
중소도시	10.2	2.3	3.8	3.8	2.7	3.3	0.8	3.8	3.3	1.0	0.8	1.9	1.7	5.6	18.6	9.2	7.7	11.1	8.4	100.0 (479)
읍면	7.9	1.6	2.6	1.1	4.2	4.2	2.1	3.2	3.7	1.6	1.1	1.6	2.1	4.8	16.9	11.6	11.6	13.2	4.8	100.0 (189)
$\chi^2(df)$	37.891(36)																			

주: ① 아동수당 ②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③ 건강 지원(남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④ 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⑥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예유파인 도입 등) ⑦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⑧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⑨ 보육
 서비스 질 제고 ⑩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초-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⑪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⑫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⑭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⑮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⑯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⑰ 배우자
 출산휴가 ⑱ 유연근무제(재택근로) ⑳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문 조사」의 결과임.

* $p < .05$.

2) 전문가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크게 보인 과제를 지정하도록 한 조사 결과는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가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이 12.5%, ‘아동수당’이 11.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육아휴직’ 응답 비율이 여전히 성과가 가장 크다고 평가되나 10%p 정도 크게 하락했다.

〈표 IV-1-60〉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2021년, 2022년)

단위: %(명)

구분	관련 국정과제	2021	2022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13.0	11.5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0	2.9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0.0	1.0
유아교육· 보육·초등 돌봄 지원 정책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7.0	12.5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5.0	4.8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3.0	4.8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2.0	3.8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0.0	1.0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1.0	-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2.0	3.8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0.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2.0	1.9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6.0	1.9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0.0	1.0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1.0	1.0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36.0	26.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5.0	2.9
	(3) 배우자 출산휴가	8.0	3.8
	(4) 유연근무제(재택근로)	4.0	9.6
	(5)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3.0	5.8
계(수)		100.0(100)	100.0(104)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김진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236.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를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강화, 육아휴직제도 채택 직종 확대, 육아휴직으로 인한 작업손실 및 대체 등에 대한 대책마련 등의 실질적 대응 모색, 이용자 확대에 의한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 의식 강화, 자녀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점 등을 제시하였다.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에 대해서는 유아들의 놀이중심교육과정 적용으로 인한 유아기의 행복감 증진 및 교사의 놀이에 대한 인식 개선,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제공, 현금성 지원으로 수요자 부담도 및 만족도가 높다는 점, 연령 및 금액 확대가 이루어지는 점, 출산율 제고에 일시적 성과가 있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표 IV-1-61〉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큰 과제로 평가한 이유

단위: %(명)

국정과제	이유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 육아휴직제도 매우 효율적이고 값지게 사용하는 상황을 많이 보았으며 육아휴직 급여 만족도 높을 것으로 생각됨. 이러한 육아휴직으로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가 낮아졌을 뿐 아니라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육아휴직제도 채택 직종의 확대 -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확대 - 아버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의 사례를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뤄 볼때 정책이 일상으로 들어왔다는 증거임. - 아직은 미흡하지만 휴직급여가 조금이라도 상향되는 것이 휴직기간 양육비 가중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남성 육아휴직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은 제도 개선의 효과로 여겨짐. - 휴직을 통해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양육을 함으로써 자녀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 -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 한 것을 통해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것을 가능하게 함. -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강화는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됨. - 육아휴직이 부모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 확산, 남녀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제도 도입 안착 - 제도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적 접근 - 성과가 크지 않고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현실임. 그래도 과거에 비해 소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선택하였음. -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는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음.

국정과제	이유
	- 육아휴직제도는 기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정책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활성화 되었다고 판단 - 허울뿐인 제도를 실제로 기능하게끔 만든 정책 실천력과 인식 변화 시도 노력을 높이 함. -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었고 직장에서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작업손실 및 대체 등에 대하여 대책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 육아의 문제는 개인 문제이지만 사회적으로 공공으로 대비해 나간다는 사회전반의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음. - 사실 육아휴직제도가 법제화되었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한계가 있고 실제 제도 활용률도 높지 않다고 생각되나, 육아휴직급여를 개편하고,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려고 한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봄. - 비록 공무원 등 공공영역에 정책효과가 한정되기는 하였으나 가장 필요한 시기를 가정별로 설정,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제도가 있어도 급여 문제로 사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어느 정도 보완한 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로 젠더효과를 감소시키고 육아문화에 변화를 시도함. - 육아휴직 제도의 외연확대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휴직급여와 3+3 제도 도입 등 급여 현실화에서 성과가 있었음. - 육아휴직을 통해 부모가 안정적으로 일정 기간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됨. - 출산과 이어서 육아휴직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 영아자녀와의 관계맺음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 성장에 있어 안정적 애착의 기회를 준 것 - 육아휴직제도가 근로기준법 상에 존재해 온 것은 이미 오래전이나, 현실적으로 이용률이 높아진 것은 지난 정부부터라고 할 수 있음. 남성육아휴직률도 상당한 비율로 상승한 것은 이미 통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음. - 육아휴직제도의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활성화된 것으로 판단됨.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 현대 사회는 기존의 교육 방식이 효율적인 인재양성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됨. 그런 관점에서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자체는 의미가 있음. - 누리과정의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됨. -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으로 인해서 초기에는 영유아교육현장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고 개정 누리과정의 시행 시기에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이 더해져서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나 아이누리 사이트 운영, 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 관련 연구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인식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됨. - 취학전 보(교)육의 기초를 개선함. - 영유아의 권리(놀 권리, 참여권, 발달권 등)를 존중하는 교육, 보육을 현장에서 실행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즉, 아동 중심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임.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통 교육과정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음. -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및 관련 자료 개발 등이 빠른 시간 내에 달성되었다고 봄. - 미래 사회를 살아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미래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의 목표를 잘 담았다고 생각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고, 유아·놀이중심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 영유아의 놀권리 회복 - 놀이 중심 교과과정은 유아기 발달의 특성이 잘 반영된 교과과정으로 평가됨. - 2013년에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반 공통누리과정이 도입된 이후 2019년 개정누리과정은 유아들의 진정한 놀이중심교육과정 현장적용으로 인한 유아기의 행복감 증진 및 교사의 놀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큼.

국정과제	이유
아동수당	- 아동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금액이 지자체 별로 상향조정 되고 있음. - 특별한 문제 없이 아동수당이 잘 지급되어 아동이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 -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나아가는 기본적인 단계라고 생각함. - 계속 연령을 높여가고 있고 100%를 대상으로 보편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음. -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으로 수요자 체감 및 만족도가 높고, 점차적으로 연령 및 금액 확대가 이루어짐. - 아동양육 관련 부모들이 생각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그러나 현재의 지원 수준은 저출산 극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고 사료됨. - 전 국민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 (수혜 대상자가 아니어도, 아이 낳으면 국가가 돈 준다 라는 식으로 인지) 출산율 제고에 일시적 성과가 있었음. (그럼에도 전체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은 다른 이유들임. 여전히 경직된 근로문화, 코로나 상황 등등) -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및 아동의 권리 인식 개선 - 현금 지원을 통해 부모 및 아동의 특성 및 욕구에 따라 사용하는 장점이 있음. - 보편적인 지원이고 지원 체감도도 직접적이라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기관 중심 서비스 보다 큼. - 지원 대상 단가 등의 기준이 명료하고 22년 확대 정책 제시 - 보편적 성격의 육아지원 정책이라는 당초 의도대로 전면 도입되었음. - 보편복지 실현을 위한 초석이므로

주: 개방형으로 응답된 내용을 정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를 지정하도록 한 조사 결과는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가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가 14.4%,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가 10.6%로 그 뒤를 이었다.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에 대한 응답 비율이 12.2%p만큼 크게 상승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 항목도 7.4%p 정도 상승했다. 반면, 2021년에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로 평가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0%에서 2022년 9.6%로 10.4%p만큼 크게 하락했다.

〈표 IV-1-62〉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2021년, 2022년)

단위: %(명)

구분	관련 국정과제	2021	2022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2.0	3.8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0.0	1.0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0.0	3.8

구분	관련 국정과제	2021	2022
유아교육· 보육·초등 돌봄 지원 정책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0	-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1.0	5.8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2.0	1.9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1.0	1.9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9.0	21.2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7.0	14.4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0.0	1.9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1.0	1.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1.0	-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6.0	3.8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0.0	-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9.0	4.8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12.0	10.6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0.0	9.6
	(3) 배우자 출산휴가	7.0	1.9
	(4) 유연근무제(재택근로)	14.0	6.7
	(5)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6.0	5.8
계(수)		100.0(100)	100.0(104)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238-239.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교사의 양성과정과 질에 대한 격차, 국가적 재정 지원 차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차이 등이 존재하고 실질적인 격차 완화에 대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부족, 대체교사 지원의 어려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과중 업무 등이 제시되었다.

‘육아휴직제도’를 선택한 이유로는 사회와 기업의 인식 부족이 제시되었다.

〈표 IV-1-63〉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로 평가한 이유

단위: %(명)

국정과제	내용
유치원- 어린이집 격차 완화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로 현 상태에서는 격차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 두 기관 교사의 학력과 급료, 근무환경의 차이로 큰 관계로 이에 대한 격차 완화 방안이 절실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한계 있음. 그러나 지난 정권 동안 유치원-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정립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 유보 일원화가 아니면 해결 어렵다 여겨짐.
	- 교사의 양성과정과 질에 대한 격차가 완화되지 않았으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
	-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거의 없었음.
	- 교사자격기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큼. 누리과정으로 통합되었다 할지라도 교사 자격기준에서 격차가 존재한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격차는 해소되지 않을 것임.
	- 자격의 문제. 유치원교사는 어린이집 근무 가능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유치원근무 불가능. 교사자격의 통합으로 질 높은 유아교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봄.
	- 실제로 격차 완화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유보통합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전혀 진전이 없었음.
	- 교부금 및 예산지원, 업무량, 누리과정 운영지원, 교사 처우 및 근무조건 등 운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분화로 국가적인 재정 지원의 차이, 인력 양성의 차이 등의 근본적인 질적 차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함.
	- 초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다양한 정책방향을 맞추어 가는 것으로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격차 해소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발견하지 못함.
	- 양기관에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시행하는 것은 교육의 격차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부분은 있으나, 실제 유보통합이 진행되지 않는 한 기관 간 격차해소는 한계가 있음. 교육의 질적 보를 위하여 교육부로의 부처 간 통합, 교사양성과정의 정비, 교사전문성 확보 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문재인정부 5년간 실질적인 유보 격차해소 안되고 오히려 차이가 더 벌어진 현상 상황
	- 유치원은 누리과정 및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으로 공사립 간 격차가 완화되었으나, 어린이집은 공립, 사립, 개인 등 다양한 운영주체로 여전히 어린이집 간 격차가 존재함. 특히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음.
	- 유아반(3~5세)공통 누리과정 시행으로 지방교부세에서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보육료 외에 유치원 유아대상의 부가적인 지원 및 유치원에 지원되는 다양한 제도에 대한 부분이 어린이집은 전무한 상황임.
보육 서비스 질 제고(보육 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 교사대 아동 비율이 OECD 국가보다 높음. 보육교사의 급여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개선 여지도 보이지 않음(유치원교사의 급여와도 차이가 큼) 보조교사 지원 미비함. - 보육교사의 근무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안되면 향후 교사수급에 어려움이 야기될 것임. -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여전히 미흡하고, 대체교사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보육교사 양성 체제에 변화가 미미함. 자격증 남발에 대한 시정의 노력이 보이지 않음. 이미 배출된 보육교사 재교육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임. - 보육교사 처우 개선 미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양성 체제 개선 미흡 - 아동수당 등 부모에게 돌아가는 예산에 비해, 보육교사에 대한 예산 투입은 여전히 미흡. 특히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교사 처우 개선은 여전히 최저 수준 - 비정규직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확대 - 아직도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는 기관에서 쉽게 자격증을 발급해줌에 따라 비전공자들의 진입 문턱이 낮고 다소 낮은 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국정과제	내용
	- 보육시설에서 아동의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침해당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서 -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임금 및 근무환경이 여전히 차이 큼. -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큰 변화 없음. 예비교사 양성과정과 관련해 근본적 변화 필요 -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대체교사에 대한 지원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필요할 때 대체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느낌. -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과중업무, 노동인권이 후퇴한 측면이 있음. - 유보통합의 진전이 없었으며, 그에 따른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음.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 아직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 일부 직종에서만 사용가능 -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가 시급함. 육아휴직을 위한 육아휴직 상한액이 월150만원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육아 휴직 중 남성육아휴직은 가장 달성도가 낮은 영역이라고 여겨지며 성평등은 남성 육아휴직처럼 남성도 당연히 아이를 기르는데 동일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와 기업의 인식 부족으로 인함이라고 여겨짐. 국가의 강력한 정책 수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임. - 아직도 육아휴직은 가능하지 않은 직장 많고 특히 아버지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임. - 현실화를 할 수 있지만 현실화가 잘 되지 않은 제도임. 국공립 기관은 잘 되고 있지만 그 외 기관은 아님. - 남성육아 휴직제도의 경우 원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 유인책 필요함. - 육아휴직급여 현실화가 아직도 많이 미흡하기 때문. 몇몇 소수의 직업군을 제외하면 여전히 육아휴직급여가 매우 미비함. - 기관에 따라 육아휴직제도가 아직도 눈치 보면서 잘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기존 활용성 높은 곳과 낮은 곳간 차별화 전략 등 적극적 조치가 달라야하는데 급여 확대, 휴가기간 남녀모두 동시사용 가능 등 기업규모별 격차 심화와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추세이지만 절대적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도 여전히 낮음. 패네티(대기업), 인센티브, 육아휴직 등 준수하지 않은 기업 공시제 도입 등 적극적인 방안 마련 - 정책적으로 제도를 제안했지만 현실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쉽게 하고 돌아왔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주: 개방형으로 응답된 내용을 정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정책성과 분석

정책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본 절에서는 정책에 대한 이용만족도, 이용경험 유무, 이용경험 정책 수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이용만족도 분석

정부의 육아정책을 교육보육돌봄/초등돌봄/육아지원만족도로 나누어 각각의 성

과 수준에 대하여 설문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정책의 성과 수준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정책의 성과 수준은 순위 만족도(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 만족)로 조사되었으므로 순서화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분석모델

종속변수로 사용된 정책의 이용만족도 수준은 리커트형(Likert-type scale) 응답에 해당하며 5점 척도(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 만족)로 순위 만족도를 조사했다. 각 응답별로 순서가 있는 형태인 순서화(ordered)된 형태의 자료이므로 순서화 로짓모델(Ordered logit model)을 사용하여 응답 확률 개념으로 분석한다. 해당 모델은 단순한 이항(binary) 선택에 적합한 로짓 모델(Logit model)과 다르게 순서화된 다항(polytomous) 선택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우선 아래 식(1)과 같은 이항 로짓모델(Binary logit model)로부터 순서화 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의 관계를 가정한다(이성우 외, 2005: 145; 김나영 외, 2018: 73-74, 재인용).

$$y^* = \sum_{i=1}^I \beta_i x_i + \epsilon, \text{ 단, } \epsilon(0, \sigma^2) \quad (1)$$

y^* 는 관찰 불가능한 응답변수이며, 관찰 가능한 응답 y 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식(2)와 같은 순서화 로짓 모델이 도출된다(이성우 외, 2005: 145; 김나영, 황선영, 엄지원, 2019: 6-7, 재인용).

$$\log \left(\frac{P(y \leq j|x)}{1 - P(y \leq j|x)} \right) = \mu - \sum_{i=1}^I \beta_i x_i, \text{ 단, } j = 1, 2, \dots, J-1 \quad (2)$$

이에 따라 현재 이용 양육형태 만족도에 대해 영향을 준 요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모형을 구성하여 순서화 로짓모델로 분석하였다.

$$Y_n = \alpha_0 + \alpha_1 NA + \alpha_2 LS + \alpha_3 RA + \alpha_4 RS + \alpha_5 DW + \alpha_6 MW + \epsilon$$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의 모델에서 종속변수인 교육보육돌봄/초등돌봄/육아지원만족 등은 정책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5점 척도(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 만족)로 응답한 자료이다. 독립변수로는 (막내자녀)연령, 응답자 연령, 응답자 성별, 거주지 규모(대도시/중소도시/읍면), 맞벌이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십만원) 등을 사용하였다.

〈표 IV-2-1〉 분석변수

변수명		측정단위	내용
교육보육돌봄(Y1)	5점 만족도		1: 매우 불만족
초등돌봄(Y2)			2: 불만족
육아지원만족(Y3)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자녀연령(막내자녀)(NA)	만 나이		
거주지 규모(LS)	대도시/중소도시/읍면		
	대도시(LS_1)		0: 아니요/1:예
	중소도시(LS_2)		0: 아니요/1:예
	읍면(LS_3) ¹⁾		0: 아니요/1:예
응답자 연령(RA)	만 나이		
응답자 성별(RS)			0: 남성/1:여성
맞벌이 여부(DW)			0: 아니요/1:예
가구 월평균 소득(MW)	십만원		

주: 1) reference.

〈표 IV-2-2〉 분석변수 기초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치
교육보육돌봄 만족도(Y1)	4.009	0.767	1	5	945
초등돌봄 만족도(Y2)	3.935	0.784	1.5	5	338
육아지원만족도(Y3)	3.508	0.935	1	5	1,066
자녀연령(막내자녀)(NA)	6.276	2.654	1	10	1,087
거주지 규모(LS)	0.555	0.776	0	2	1,087
대도시(LS_1)	0.623	0.485	0	1	1,087
중소도시(LS_2)	0.200	0.400	0	1	1,087
읍면(LS_3)1)	0.178	0.382	0	1	1,087
응답자 연령(RA)	38.062	4.614	23	54	1,087
응답자 성별(RS)	0.282	0.450	0	1	1,087
맞벌이 여부(DW)	0.904	0.294	0	1	1,087
가구 월평균 소득(MW)	596.101	615.474	0	10100	1,087

종속변수 중 ‘교육보육돌봄’에는 총 4개의 설문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 보육 이용 만족도가 이에 해당한다. ‘초등돌봄’에는 4개 변수가 사용되었으며 초등돌봄교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만족도가 이에 해당한다. ‘육아지원만족’ 변수에는 총 13개 설문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 출산휴가, 부 출산휴가, 모 근로시간단축, 부 근로시간 단축, 모 육아휴직, 부 육아휴직,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가 해당된다.

〈표 IV-2-3〉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설문변수

변수명	해당 설문변수 항목수	해당 설문변수 내용
교육보육 돌봄 (Y1)	4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시간제보육
초등돌봄 (Y2)	4	초등돌봄교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지원 만족 (Y3)	13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 출산휴가 부 출산휴가 모 근로시간단축 부 근로시간 단축 모 육아휴직 부 육아휴직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2) 분석결과

가) 종속변수: 교육보육돌봄 정책에 대한 만족도 수준

상관관계 분석결과 교육보육돌봄정책에 대한 만족도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독립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서화 로짓모델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상관관계: 교육보육돌봄에 대한 만족도 수준

	교육보육돌봄	자녀연령(막내자녀)	거주지 규모	응답자 연령	응답자 성별	맞벌이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
교육보육돌봄	1						
자녀연령(막내자녀)	0.017 (0.598)	1					
거주지 규모	0.050 (0.121)	0.011 (0.729)	1				
응답자 연령	-0.039 (0.228)	0.434*** (0.000)	-0.054* (0.074)	1			
응답자 성별	-0.032 (0.326)	0.036 (0.240)	0.015 (0.621)	0.346*** (0.000)	1		
맞벌이 여부	-0.004 (0.894)	0.003 (0.916)	-0.009 (0.759)	0.059* (0.051)	0.023 (0.440)	1	
가구 월평균 소득	0.022 (0.499)	0.034 (0.262)	-0.033 (0.278)	0.028 (0.351)	-0.063** (0.037)	0.062** (0.043)	1

* $p < .05$, ** $p < .01$, *** $p < .001$.

〈표 IV-2-5〉 분석결과: 교육보육돌봄에 대한 만족도 수준

	계수(S.D.)	Odds Ratio(S.D.)
자녀연령(막내자녀)	-0.005(0.028)	0.995(0.028)
대도시	-0.221(0.159)	0.802(0.127)
중소도시	-0.012(0.191)	0.988(0.189)
응답자 연령	-0.017(0.016)	0.983(0.015)
응답자 성별	-0.121(0.143)	0.886(0.126)
맞벌이 여부	-0.100(0.206)	0.905(0.187)
가구 월평균 소득	0.0001(0.000)	1.0001(0.000)
N	945	
Pseudo R ²	0.002	

나) 종속변수: 초등돌봄정책 만족도

맞벌이 여부는 초등돌봄 정책의 만족도 수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서화 로짓모델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맞벌이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초등돌봄 정책의 만족도 수준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즈비를 통하여 결과를 해석해 보면,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 교육보육돌봄 정책의 만족도를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50.9%(OR=0.491, $p<0.05$) 낮아진다.

〈표 IV-2-6〉 상관관계: 초등돌봄에 대한 만족도 수준

	초등돌봄	자녀연령 (막내자녀)	거주지 규모	응답자 연령	응답자 성별	맞벌이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
초등돌봄	1						
자녀연령 (막내자녀)	0.061 (0.264)	1					
거주지 규모	0.025 (0.651)	0.011 (0.729)	1				
응답자 연령	0.034 (0.531)	0.434*** (0.000)	-0.054* (0.074)	1			
응답자 성별	0.042 (0.444)	0.036 (0.240)	0.015 (0.621)	0.346*** (0.000)	1		
맞벌이 여부	-0.106* (0.052)	0.003 (0.916)	-0.009 (0.759)	0.059* (0.051)	0.023 (0.440)	1	
가구 월평균 소득	0.080 (0.143)	0.034 (0.262)	-0.033 (0.278)	0.028 (0.351)	-0.063** (0.037)	0.062** (0.043)	1

* $p < .05$, ** $p < .01$, *** $p < .001$.

〈표 IV-2-7〉 분석결과: 초등돌봄에 대한 만족도 수준

	계수(S.D.)	Odds Ratio(S.D.)
자녀연령(막내자녀)	0.123(0.123)	1.131(0.139)
거주지규모	-0.243(0.271)	0.785(0.213)
중소도시	-0.394(0.335)	0.675(0.226)
응답자 연령	-0.004(0.027)	0.996(0.026)
응답자 성별	0.169(0.246)	1.184(0.291)
맞벌이 여부	-0.712**(0.359)	0.491**(0.176)
가구 월평균 소득	0.0003(0.000)	1.0003(0.000)
N	338	
Pseudo R ²	0.010	

** $p < .01$.

다) 종속변수: 육아지원정책 만족도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자녀연령(막내자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응답자 성별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서화 로짓모델 분석 결과를 보면 자녀연령(막내자녀)이 육아지원정책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즈비를 보면, 자녀연령(막내자녀)의 경우 1세 증가할 때, 보육정책에 대한 성과 수준이 긍정적인 확률이 7.2%(OR=1.072, $p<0.01$) 상승한다.

〈표 IV-2-8〉 상관관계: 육아지원에 대한 만족도 수준

	육아지원	자녀연령 (막내 자녀)	거주지 규모	응답자 연령	응답자 성별	맞벌이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
육아지원	1						
자녀연령 (막내자녀)	0.096*** (0.002)	1					
거주지 규모	-0.013 (0.678)	0.011 (0.729)	1				
응답자 연령	0.023 (0.454)	0.434*** (0.000)	-0.054* (0.074)	1			
응답자 성별	-0.057* (0.065)	0.036 (0.240)	0.015 (0.621)	0.346*** (0.000)	1		
맞벌이 여부	0.028 (0.364)	0.003 (0.916)	-0.009 (0.759)	0.059* (0.051)	0.023 (0.440)	1	
가구 월평균 소득	-0.022 (0.465)	0.034 (0.262)	-0.033 (0.278)	0.028 (0.351)	-0.063** (0.037)	0.062** (0.043)	1

* $p < .05$, ** $p < .01$, *** $p < .001$.

〈표 IV-2-9〉 분석결과: 육아지원에 대한 만족도 수준

	계수(S.D.)	Odds Ratio(S.D.)
자녀연령(막내자녀)	0.070*** (0.023)	1.072*** (0.025)
거주지규모	0.073 (0.143)	1.075 (0.154)
중소도시	0.131 (0.173)	1.140 (0.198)
응답자 연령	-0.002 (0.014)	0.998 (0.014)
응답자 성별	-0.208 (0.132)	0.812 (0.107)
맞벌이 여부	0.214 (0.191)	1.239 (0.237)
가구 월평균 소득	-0.0001 (0.000)	0.9998 (0.000)
N	1,066	
Pseudo R ²	0.003	

*** $p < .001$.

나. 이용경험 유무 분석

정부의 육아정책을 교육보육돌봄/초등돌봄/육아지원만족으로 나누어 각각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설문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정책의 성과 수준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정책의 이용경험(있음/없음/비해당)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로짓모형(logi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분석모델

종속변수는 정책의 이용경험(있음/없음)으로 조사된 이항(binary)응답이다. 로짓모델은 종속변수가 확률을 나타내며 이를 표준 로지스틱 분포의 누적확률분포함수의 역함수로 변환하여 독립변수가 준 영향을 추정한다. 아래 식(1)은 로지스틱 변환을 나타낸다(한치록, 2022: 431).

$$\log\left(\frac{P_i}{1-P_i}\right)=\beta_0+\sum_{i=1}^I\beta_ix_i \quad (1)$$

이에 따라 현재 정책의 이용경험에 영향을 준 요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모델을 구성하여 로짓모델로 분석하였다.

$$Y_n=\alpha_0+\alpha_1NA+\alpha_2LS+\alpha_3RA+\alpha_4RS+\alpha_5DW+\alpha_6MW+\epsilon$$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의 모델에서 종속변수인 교육보육돌봄/초등돌봄/육아지원만족 등은 정책 이용경험을 이항선택(없음/있음)으로 응답한 자료이다. 독립변수로는 (막내자녀)연령, 응답자 연령, 응답자 성별, 거주지 규모(대도시/중소도시/읍면), 맞벌이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십만원) 등을 사용하였다.

〈표 IV-2-10〉 분석변수

변수명	측정단위	내용
교육보육돌봄(Y5)	이용경험 유무	0: 없음 1: 경험
초등돌봄(Y6)		
육아지원만족(Y7)		

변수명	측정단위	내용
자녀연령(막내자녀)(NA)	만 나이	
거주지 규모(LS)	대도시/중소도시/읍면	
	대도시(LS_1)	0: 아니요/1:예
	중소도시(LS_2)	0: 아니요/1:예
	읍면(LS_3) ¹⁾	0: 아니요/1:예
응답자 연령(RA)	만 나이	
응답자 성별(RS)		0: 남성/1:여성
맞벌이 여부(DW)		0: 아니요/1:예
가구 월평균 소득(MW)	십만원	

주: 1) reference.

〈표 IV-2-11〉 분석변수 기초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치
교육보육돌봄 이용 경험(Y5)	0.910	0.287	0	1	1,039
초등돌봄 이용 경험(Y6)	0.914	0.281	0	1	3,70
육아지원만족 이용 경험(Y7)	0.996	0.061	0	1	1,070
자녀연령(막내자녀)(NA)	6.276	2.654	1	10	1,087
거주지 규모(LS)	0.555	0.776	0	2	1,087
대도시(LS_1)	0.623	0.485	0	1	1,087
중소도시(LS_2)	0.200	0.400	0	1	1,087
읍면(LS_3)1)	0.178	0.382	0	1	1,087
응답자 연령(RA)	38.062	4.614	23	54	1,087
응답자 성별(RS)	0.282	0.450	0	1	1,087
맞벌이 여부(DW)	0.904	0.294	0	1	1,087
가구 월평균 소득(MW)	596.101	615.474	0	10100	1,087

종속변수 중 교육보육돌봄에는 총 4개의 설문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경험이 해당된다. 초등돌봄에는 4개 변수가 사용되었으며 초등돌봄교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서비스 이용 유무가 이에 해당한다. 육아지원만족 변수에는 총 13개 설문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 출산휴가, 부 출산휴가, 모 근로시간단축, 부 근로시간 단축, 모 육아휴직, 부 육아휴직,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가 해당된다.

〈표 IV-2-12〉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설문변수

변수명	해당 설문변수 항목수	해당 설문변수 내용
교육보육 돌봄 (Y1)	4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시간제보육
초등돌봄 (Y2)	4	초등돌봄교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지원 만족 (Y3)	13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 출산휴가 부 출산휴가 모 근로시간단축 부 근로시간 단축 모 육아휴직 부 육아휴직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나. 분석결과

1) 종속변수: 교육보육돌봄 정책 이용경험

자녀연령(막내자녀), 응답자 연령, 맞벌이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은 교육보육돌봄 정책에 대한 이용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모델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녀연령(막내자녀), 가구 월평균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교육보육돌봄 정책에 대한 이용경험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연령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즈비를 통하여 결과를 해석해 보면, 자녀연령(막내자녀)이 1세 많아질 때 교육보육돌봄 정책에 대한 이용경험이 있을 확률이 51.2%(OR=1.512, $p<0.01$) 상승하며, 가구 월평균 소득은 이용경험이 있을 확률을 0.1%(OR=1.001, $p<0.1$)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 연령이 1세 증가할 경우 교육보육돌봄 정책에 대한 이용경험이 있을 확률은 5.3%(OR=0.947, $p<0.1$)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3〉 상관관계: 교육보육돌봄에 대한 이용경험

	교육보육 돌봄	자녀연령 (막내자녀)	거주지 규모	응답자 연령	응답자 성별	맞벌이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
교육보육돌봄	1	.	.	.	.	.	.
자녀연령 (막내자녀)	0.262*** (0.000)	1	.	.	.	.	.
거주지 규모	0.013 (0.683)	0.011 (0.729)	1	.	.	.	.
응답자 연령	0.054* (0.081)	0.434*** (0.000)	-0.054* (0.074)	1	.	.	.
응답자 성별	-0.026 (0.402)	0.036 (0.240)	0.015 (0.621)	0.346*** (0.000)	1	.	.
맞벌이 여부	0.053* (0.090)	0.003 (0.916)	-0.009 (0.759)	0.059* (0.051)	0.023 (0.440)	1	.
가구 월평균 소득	0.051* (0.099)	0.034 (0.262)	-0.033 (0.278)	0.028 (0.351)	-0.063** (0.037)	0.062** (0.043)	1

* $p < .05$, ** $p < .01$, *** $p < .001$.

〈표 IV-2-14〉 분석결과: 교육보육돌봄에 대한 이용경험

	계수(S.D.)	Odds Ratio(S.D.)
자녀연령(막내자녀)	0.414*** (0.053)	1.512*** (0.081)
대도시	-0.033 (0.297)	0.967 (0.288)
중소도시	0.435 (0.396)	1.545 (0.612)
응답자 연령	-0.0549* (0.029)	0.947* (0.028)
응답자 성별	-0.048 (0.261)	0.953 (0.248)
맞벌이 여부	0.367 (0.341)	1.443 (0.493)
가구 월평균 소득	0.001** (0.000)	1.001* (0.000)
constant	1.287 (1.051)	3.621(3.807)
N	1,039	
Pseudo R ²	0.135	

* $p < .05$, ** $p < .01$, *** $p < .001$.

2) 종속변수: 초등돌봄정책에 대한 이용경험

상관관계 분석결과 초등돌봄정책에 대한 이용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모델로 분석한 결과도 위와 같이 유의미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5〉 상관관계: 초등돌봄에 대한 이용경험

	초등돌봄	자녀연령 (막내자녀)	거주지 규모	응답자 연령	응답자 성별	맞벌이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
초등돌봄	1						
자녀연령 (막내자녀)	0.010 (0.846)	1					
거주지 규모	-0.052 (0.323)	0.011 (0.729)	1				
응답자 연령	-0.017 (0.742)	0.434*** (0.000)	-0.054* (0.074)	1			
응답자 성별	0.000 (0.998)	0.036 (0.240)	0.015 (0.621)	0.346*** (0.000)	1		
맞벌이 여부	-0.034 (0.518)	0.003 (0.916)	-0.009 (0.759)	0.059* (0.051)	0.023 (0.440)	1	
가구 월평균 소득	0.029 (0.573)	0.034 (0.262)	-0.033 (0.278)	0.028 (0.351)	-0.063** (0.037)	0.062** (0.043)	1

* $p < .05$, ** $p < .01$, *** $p < .001$.

〈표 IV-2-16〉 분석결과: 초등돌봄에 대한 이용경험

	계수(S.D.)	Odds Ratio(S.D.)
자녀연령(막내자녀)	0.061 (0.230)	1.063 (0.245)
대도시	0.423 (0.456)	1.527 (0.696)
중소도시	0.327(0.574)	1.387 (0.796)
응답자 연령	-0.021 (0.049)	0.980 (0.048)
응답자 성별	0.116 (0.457)	1.123 (0.513)
맞벌이 여부	-0.494 (0.772)	0.610 (0.471)
가구 월평균 소득	0.0004 (0.001)	1.0004 (0.001)
constant	2.524 (2.734)	12.478 (34.113)
N	370	
Pseudo R ²	0.010	

3) 종속변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이용경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이용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모델로 분석한 결과도 위와 같이 유의미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7〉 상관관계: 육아지원에 대한 이용경험

	육아지원	자녀연령 (막내자녀)	거주지 규모	응답자 연령	응답자 성별	맞벌이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
육아지원	1						
자녀연령 (막내자녀)	-0.011 (0.727)	1					
거주지 규모	-0.015 (0.619)	0.011 (0.729)	1				
응답자 연령	0.008 (0.805)	0.434*** (0.000)	-0.054* (0.074)	1			
응답자 성별	-0.031 (0.315)	0.036 (0.240)	0.015 (0.621)	0.346*** (0.000)	1		
맞벌이 여부	0.033 (0.277)	0.003 (0.916)	-0.009 (0.759)	0.059* (0.051)	0.023 (0.440)	1	
가구 월평균 소득	-0.015 (0.617)	0.034 (0.262)	-0.033 (0.278)	0.028 (0.351)	-0.063** (0.037)	0.062** (0.043)	1

* $p < .05$, ** $p < .01$, *** $p < .001$.

〈표 IV-2-18〉 분석결과: 육아지원에 대한 이용경험

	계수(S.D.)	Odds Ratio(S.D.)
자녀연령(막내자녀)	-0.131 (0.221)	0.877 (0.194)
대도시	0.420 (1.249)	1.522 (1.901)
중소도시	0.075 (1.462)	1.078 (1.575)
응답자 연령	0.095 (0.120)	1.099 (0.132)
응답자 성별	-1.353 (1.104)	0.259 (0.286)
맞벌이 여부	1.118 (1.191)	3.058 (3.643)
가구 월평균 소득	-0.0002 (0.000)	0.9998 (0.000)
constant	2.314 (3.897)	10.113 (39.414)
N	1,070	
Pseudo R ²	0.055	

다. 이용경험 정책 분석

정부의 육아정책을 교육보육돌봄/초등돌봄/육아지원만족으로 나누어 각각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설문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정책의 이용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육아정책은 해당 항목별 이용경험

수로 조사되었고 이를 해당 항목별 이용경험 수로 변환했다. 종속변수가 항목별 이용경험 수이고 독립변수가 둘 이상이므로 아래의 식(1)과 같은 다중회귀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Y_i = \beta_0 + \sum_{i=1}^I \beta_i x_i + \epsilon \quad (1)$$

육아정책의 항목별 이용경험 수에 영향을 준 요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모형을 구성해 회귀분석하였다.

$$Y_n = \alpha_0 + \alpha_1 NA + \alpha_2 LS + \alpha_3 RA + \alpha_4 RS + \alpha_5 DW + \alpha_6 MW + \epsilon$$

1) 분석모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의 모델에서 종속변수인 교육보육돌봄/초등돌봄/육아지원만족 등은 정책에 대한 항목별 이용경험을 이항(있음/없음)으로 응답한 자료이다. 독립변수로는 (막내자녀)연령, 응답자 연령, 응답자 성별, 거주지 규모(대도시/중소도시/읍면), 맞벌이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십만원) 등을 사용하였다.

〈표 IV-2-19〉 분석변수

변수명	측정단위	내용
교육보육돌봄(Y5)	변수 항목별 이용경험	n : n항목 이용경험 (Y5: n = 1, 2, 3, 4 Y6: n = 1, 2, 3, 4, ..., 12, 13 Y5: n = 1, 2, 3, 4 Y5: n = 1, 2, 3, 4, 5, 6, 7)
초등돌봄(Y6)		
육아지원만족(Y7)		
자녀연령(막내자녀)(NA)	만 나이	
거주지 규모(LS)	대도시/중소도시/읍면	
	대도시(LS_1)	0: 아니요/1:예
	중소도시(LS_2)	0: 아니요/1:예
	읍면(LS_3) ¹⁾	0: 아니요/1:예
응답자 연령(RA)	만 나이	
응답자 성별(RS)		0: 남성/1:여성
맞벌이 여부(DW)		0: 아니요/1:예
가구 월평균 소득(MW)	십만원	

주: 1) reference.

〈표 IV-2-20〉 분석변수 기초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치
교육보육돌봄 정책별 이용경험 수(Y5)	1.587	0.851	0	4	1,039
초등돌봄 정책별 이용경험 수(Y6)	1.392	0.722	0	4	370
육아지원만족 정책별 이용경험 수(Y7)	3.645	1.958	0	13	1,070
자녀연령(막내자녀)(NA)	6.276	2.654	1	10	1,087
거주지 규모(LS)	0.555	0.776	0	2	1,087
대도시(LS_1)	0.623	0.485	0	1	1,087
중소도시(LS_2)	0.200	0.400	0	1	1,087
읍면(LS_3)1)	0.178	0.382	0	1	1,087
응답자 연령(RA)	38.062	4.614	23	54	1,087
응답자 성별(RS)	0.282	0.450	0	1	1,087~
맞벌이 여부(DW)	0.904	0.294	0	1	1,087
가구 월평균 소득(MW)	596.101	615.474	0	10100	1,087

종속변수는 각 정책에 해당하는 변수의 이용경험을 더해 변수화했다. 교육보육돌봄에는 총 4개의 설문변수가 해당되며 아이돌보미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 보육 이용 경험이 이에 해당한다. 초등돌봄에는 4개 변수를 이용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만족도가 이에 해당한다. 육아지원만족 변수에는 총 13개 설문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 출산휴가, 부 출산휴가, 모 근로시간단축, 부 근로시간 단축, 모 육아휴직, 부 육아휴직,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가 해당된다.

〈표 IV-2-21〉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설문변수

변수명	해당 설문변수 항목수	해당 설문변수 내용
교육보육돌봄(Y5)	4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시간제보육
초등돌봄(Y6)	4	초등돌봄교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변수명	해당 설문변수 항목수	해당 설문변수 내용
육아지원 만족 (Y7)	13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 출산휴가 부 출산휴가 모 근로시간단축 부 근로시간 단축 모 육아휴직 부 육아휴직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나. 분석결과

1) 종속변수: 교육보육돌봄 정책 이용경험 수

자녀연령(막내자녀), 가구 월평균 소득은 교육보육돌봄 정책의 정책별 이용경험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자녀연령(막내자녀), 응답자 연령, 가구 월평균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연령이 1세 증가할 때는 이용경험수가 0.129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십만원 증가할 때 0.0001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 연령은 1세 증가할 때 교육보육돌봄 정책의 정책별 이용경험수가 0.024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2〉 상관관계: 교육보육돌봄에 대한 정책별 이용경험

	교육보육 돌봄	자녀연령 (막내자녀)	거주지 규모	응답자 연령	응답자 성별	맞벌이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
교육보육돌봄	1						
자녀연령 (막내자녀)	0.336*** (0.000)	1					
거주지 규모	0.015 (0.639)	0.011 (0.729)	1				
응답자 연령	0.047 (0.131)	0.434*** (0.000)	-0.054* (0.074)	1			

	교육보육 돌봄	자녀연령 (막내자녀)	거주지 규모	응답자 연령	응답자 성별	맞벌이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
응답자 성별	-0.010 (0.745)	0.036 (0.240)	0.015 (0.621)	0.346*** (0.000)	1		
맞벌이 여부	0.017 (0.586)	0.003 (0.916)	-0.009 (0.759)	0.059* (0.051)	0.023 (0.440)	1	
가구 월평균 소득	0.097*** (0.002)	0.034 (0.262)	-0.033 (0.278)	0.028 (0.351)	-0.063** (0.037)	0.062** (0.043)	1

* $p < .05$, ** $p < .01$, *** $p < .001$.

〈표 IV-2-23〉 분석결과: 교육보육돌봄에 대한 정책별 이용경험

	계수 (S.E)
자녀연령(막내자녀)	0.129*** (0.011)
대도시	-0.013 (0.067)
중소도시	0.009 (0.081)
응답자 연령	-0.024*** (0.006)
응답자 성별	0.056 (0.059)
맞벌이 여부	0.032 (0.083)
가구 월평균 소득	0.0001*** (0.000)
constant	1.578*** (0.232)
N	1,039
R ²	0.133

*** $p < .001$.

2) 종속변수: 초등돌봄정책 이용경험 수

초등돌봄 정책의 정책별 이용경험 수와 가구 월평균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응답자 성별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가구 월평균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십만원 증가할 때 초등돌봄정책의 정책별 이용경험 수는 0.0001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4〉 상관관계: 초등돌봄에 대한 정책별 이용경험

	초등돌봄	자녀연령 (막내자녀)	거주지 규모	응답자 연령	응답자 성별	맞벌이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
초등돌봄	1						
자녀연령 (막내자녀)	0.069 (0.185)	1					
거주지 규모	-0.028 (0.598)	0.011 (0.729)	1				
응답자 연령	-0.044 (0.397)	0.434*** (0.000)	-0.054* (0.074)	1			
응답자 성별	-0.098* (0.060)	0.036 (0.240)	0.015 (0.621)	0.346*** (0.000)	1		
맞벌이 여부	-0.004 (0.944)	0.003 (0.916)	-0.009 (0.759)	0.059* (0.051)	0.023 (0.440)	1	
가구 월평균 소득	0.104** (0.046)	0.034 (0.262)	-0.033 (0.278)	0.028 (0.351)	-0.063** (0.037)	0.062** (0.043)	1

* $p < .05$, ** $p < .01$, *** $p < .001$.

〈표 IV-2-25〉 분석결과: 초등돌봄에 대한 정책별 이용경험

	계수 (S.E)
자녀연령(막내자녀)	0.064 (0.046)
대도시	0.049 (0.100)
중소도시	0.021 (0.124)
응답자 연령	-0.004, (0.010)
응답자 성별	-0.139 (0.093)
맞벌이 여부	0.005 (0.128)
가구 월평균 소득	0.0001* (0.000)
constant	0.902 (0.551)
N	370
R ²	0.025

* $p < .05$.

3) 종속변수: 육아지원정책 이용경험 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정책별 이용경험은 맞벌이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연령(막내자녀), 응답자 연령, 응답자 성별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분석 결과 자녀연령(막내자녀), 응답자 성별, 연령, 맞벌이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용경험 수가 0.902개 증가했다. 또한 가구 월평균 소득이 십만원 높아지면 이용경험 수가 0.0005개 증가했다. 반면 자녀연령이 1세 증가할 때는 육아지원정책의 정책별 이용경험 수가 0.088개 감소하고 응답자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0.032개 감소하고 응답자 성별이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에 비해 0.27개 감소했다.

〈표 IV-2-26〉 상관관계: 육아지원에 대한 정책별 이용경험

	육아지원	자녀연령 (막내자녀)	거주지 규모	응답자 연령	응답자 성별	맞벌이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
육아지원	1	.	.	.	.	.	.
자녀연령 (막내자녀)	-0.148*** (0.000)	1	.	.	.	.	.
거주지 규모	-0.021 (0.490)	0.011 (0.729)	1	.	.	.	.
응답자 연령	-0.135*** (0.000)	0.434*** (0.000)	-0.054* (0.074)	1	.	.	.
응답자 성별	-0.098*** (0.001)	0.036 (0.240)	0.015 (0.621)	0.346*** (0.000)	1	.	.
맞벌이 여부	0.138*** (0.000)	0.003 (0.916)	-0.009 (0.759)	0.059* (0.051)	0.023 (0.440)	1	.
가구 월평균 소득	0.149*** (0.000)	0.034 (0.262)	-0.033 (0.278)	0.028 (0.351)	-0.063** (0.037)	0.062** (0.043)	1

* $p < .05$, ** $p < .01$, *** $p < .001$.

〈표 IV-2-27〉 분석결과: 육아지원에 대한 정책별 이용경험

	계수(S.E)
자녀연령(막내자녀)	-0.088*** (0.025)
대도시	0.085 (0.156)
중소도시	0.027 (0.189)
응답자 연령	-0.032** (0.015)
응답자 성별	-0.270* (0.140)
맞벌이 여부	0.902*** (0.200)
가구 월평균 소득	0.0005*** (0.000)

	계수(S.E)
constant	4.328*** (0.546)
N	1,070
R ²	0.074

* $p < .05$, ** $p < .01$, *** $p < .001$.

라. 소결

정책에 대한 이용만족도, 이용경험 유무, 이용경험 정책 수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해 본 결과 종속변수별로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우선 이용만족도 분석에서는 초등돌봄정책 만족도를 분석하였을 때, 맞벌이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육아지원정책 만족도는 자녀연령(막내자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경험 유무 분석에 대한 분석에서는 교육보육돌봄 정책 이용경험은 자녀연령(막내자녀), 가구 월평균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연령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용경험 정책 수 분석에 대해서는 교육보육돌봄 정책 이용경험 수는 자녀연령(막내자녀), 응답자 연령, 가구 월평균 소득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정책 이용경험 수에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지원정책 이용경험 수와는 자녀연령(막내자녀), 응답자 성별, 맞벌이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보면, 많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부문은 육아정책 이용경험 정책 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육아관련 정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의 보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V

육아정책 성과분석(2)

- 01 수요자 부모의 육아정책 성과 평가 및 의견
- 02 어린이집 교사, 원장 성과 평가 및 의견
- 03 유치원 교사, 원장 성과 평가 및 의견

V. 육아정책 성과분석(2)⁴⁾

본 장에서는 육아정책 성과에 대한 영유아부모,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유치원 원장 및 교사의 심층면담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1. 수요자 부모의 육아정책 성과 평가 및 의견

가. 영유아 부모

1)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및 가정양육 시 어려운 점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및 가정양육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근처에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긴급돌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 같은 경우는 24개월 자녀를 어려움이 없는데 이걸 부모님이 바로 옆에 살고 계셔서인 거고 혼자서 아이를 본다 생각하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부모 A).

저는 전업주부로 연년생인 아이들(만 1, 2세)을 키우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덕 근처로 이사를 와서 부모님 도움도 받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부모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위를 보면 아이가 두 자녀 이상 되는데 부모님 도움 없이 키우는 분들은 아무래도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아플 때 어디 맡길 데가 없으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부모 C).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반으로 입학하여 대기는 없었으나, 이른 하원시간과 긴 방학이 주는 불편함을 언급하였다. 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하원시간이 이른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나 자녀가 좋아하고 있어 만족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엄마가 병원에 가야하는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불편함이 있다는, 마찬가지로 긴급돌봄 발생에 대한 대응을 지적하였다.

4)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은 제1장의 <표 I-4-2>~<표 I-4-6>에 수록함.

지금 현재는 솔직히 일찍 끝나서 너무 힘든데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만족은 하고 있어요. 공립 단설을 이용하다 보니 1시 40분에 끝나거든요. 예전에 어린이집 이용했을 때는 빨라도 3시 반 정도에 하원했다면 2시간 일찍 당겨지니까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급한 일이 있을 때 어린이집은 연장보육이 가능해요. 제가 병원을 간다든가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대해 대응책은 없는 거여서 약간 불편하긴 해요. 아프면 안 된다고 엄마들이 그래요(부모 D).

2) 유치원-어린이집 차이/격차에 대한 의견

영유아부모들은 어린이집-유치원 격차에 대해 크게 체감하지 못하거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유치원 교사 수준이 높고, 교육중심,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현재는 어린이집에서도 부모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예전보다 유-보 간 격차는 많이 줄었지만 유치원에서 교육적으로 보다 다양한 것을 제공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첫째가 다섯살이고 둘째가 두 살인데요, 주위의 평도 많이 들어보고 (민간) 어린이집을 보내게 됐는데 그 이유가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격차가 많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치원이 비용을 더 내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 교육도 많이 시켜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치원도 그렇지 않은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도 과정이 되게 좋고 특별활동이 많이 있고 엄마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도 많이 하는 어린이집도 있더라고요. 대신 비용 부담은 유치원에 비해서는 덜한 거죠(부모 B).

유치원은 어린이집만큼 개개인에 대한 케어, 즉 알림장 같은 것도 없다고 하고 유치원은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린이집보다 정보를 덜 접하게 될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유치원에서 하는 활동이 다양하기는 한데 아이의 발달 상태를 봤을 때 그걸 이제 거기 가서 그렇게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게 나은지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가 되고요(부모 C).

만 4세, 6세 두 자녀가 공립단설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부모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다 유치원으로 옮긴 경우로,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가 주임교사로 행정적인 업무로 바빠 아이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만족스러웠다고 하였다. 현재 이용 중인 유치원(공립단설)은 시설 환경이 좋고 특성화 프로그램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원시간이 짧고 방과후반 이용이 제한되어 있어 불편함이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둘째 같은 경우 어린이집을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주임 선생님이다 보니까 원장님의 부재를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서 모르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바쁘고 그런게 아이 행동에 대해서 지도하는 방법에서라던가 약간 불편함이 있었어요(부모 D).

공립단설유치원이 교실이 넓었어요. 단설이다 보니까 시설들이 좋았어요. 도서관 따로 있고 식당 따로 있고 해서 아이들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립은 제가 안 보내봐서 잘 모르겠는데 국공립 단설 유치원은 어찌됐든 저희는 프로그램도 약간 하거든요. 특히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재미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부모 D).

방과후 반이 두 반이 있는데, 단설 유치원은 중간에 취업해도 엄마들이 방과후 반에 자리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과과정을 다니는 엄마들은 그만둘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방학이 여름에 5주 겨울방학에는 거의 두 달이 되니까 힘들다고 해요(부모 D).

엄마들이 사립유치원으로 옮겨야 되나 합니다. (공립유치원에) 만족은 하는데 너무 일찍 끝나는 것과 방학이 너무 길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누리과정을 방과후과정까지 이용 하는 친구들에 비해 보장을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방학이 거의 3개월 이상 되잖아요(부모 D).

만3세, 17개월 자녀가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부모의 경우, 거주지역의 부모들은 국공립보다 민간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으며, 국공립을 이용한 지인에 의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가 상대적으로 아동을 엄격하게 대하고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녀를 맡기는데 어려움을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다른 부모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높으며, 유치원은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되고 생활이 늦은 아이는 유치원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우려되는 점을 언급하였다.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평이 오히려 안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국공립을 정말 선호하였는데 보내본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의 교육 수준이 높다 하여도 안정이 되어서 그런건지 선생님들이 형식적으로 아이를 대하고 긴급 돌봄도 보내기 어렵다고 하여 국공립에 대한 선호가 좀 줄고 있지 않나.. 아이들이 혼자서 잘하지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들이 돌봐주지 않고 적응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민간으로 알아봤어요. 알아서 잘하고 이런 아이들은 교육과정이 좋기 때문에 국공립에서 더 잘 배우고 경험할 수 있지만 예민하거나 아니면 좀 적응이 어려운 친구들은 약간 배제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있어요(부모 A).

저는 3, 4세 형제 키우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는 반대로 단지 안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제 굉장히 만족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원장님이 매우 열정적이셔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활동을 시켜주고 선생님들도 열정이 있어서, 내년엔 5세가 되면 유치원을 갈지 아니면 어린

이집에 계속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적인 부분에서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치원을 포기하고 어린이집에 남기로 결정을 하기에는 교육적인 부분에서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부모 C).

3)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별도의 교사가 연장보육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보며, 기본-연장 보육으로 구분되면서 전업모의 경우 일정 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 불필요한 보육 이용시간이 줄어들을 장점으로 이야기하였다. 간헐적으로 연장보육을 이용해 보았는데, 연장보육시간에 새로운 교사, 새로운 반, 친구들을 만나는 것에 자녀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다만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는 두자녀 이상 전업모의 경우, 기본보육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15개월(가정어린이집 0세반 이용, 육아휴직 중)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가정어린이집 이용에 만족하는 편이나, 복직을 하면 연장보육을 이용해야 하는데 현재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없어 어린이집에 눈치를 보는 상황으로 이야기하였다.

일단 연장보육이 되면서 새로운 선생님이 보육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만족을 하는데 정말 실제로 연장보육에 남아 있는 아이들이 시간대별로 몇 명이나 남아 있는지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부모 E).

지금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현재 매우 만족하고 있지만, 보육지원체계가 바뀌면서 연장보육을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하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중이어서 연장보육은 이용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근무를 다시 시작하면 연장보육을 신청해서 보내야겠지만 이 어린이집에서 저희 아이 하나만을 위해 연장보육을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부모 E).

아무래도 내 아이 하나만 보고자 선생님이 그만큼 더 남아 계셔야 되고 제가 만약에 일을 온종일 하면 7시 반에나 오는 거니까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정말 길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연장보육을 그렇게까지 이용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부모 E).

기본보육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보육 시간이 좀 주는 것 같고요. 엄마들이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집안일 하거나 뭐 하다가 좀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다들 엄마들이 4시면 우르르 와서 하원을 시키니까 불필요한 보육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연장 보육 전담 선생님이 계신 거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더 연장해서 돌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가 다시 복직을 하게 됐을 때도 뭔가 덜 눈치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아이도 또 새로운 선생님이 그 시간에는

새로운 친구들 통합반으로 해서 보니까 좋다고 하더라구요(부모 B).

근데 사실 저희 동네는 다들 조부모가 보시거나 그래서 연장보육을 늦게까지 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부모 B).

그러나 연장보육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들이 적지 않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4) 가정양육수당 및 현금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아동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 등)

대체로 현재의 보편적 현금지원 정책 기조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아동수당으로 저축을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모두 소진하려고 노력한다는(예: 매달 도서 구입 등) 의견과 아동수당을 생활비와 뒤섞어 사용하고 있고, 10만원(소액)이라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금 지원보다는 목적성이 분명한 다른 방식의 지원(예: 예방접종 지원, 농수산물 구입 바우처, 도서/문구 포인트 등)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각 가정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처에 제한이 생길 시 육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정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정양육에 만족하며 만2세(네 살)에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라고 하였다. 양육수당이 자녀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며, 신생아 시기에 양육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비용이 더 늘어나기도 하므로 자녀 연령이 증가하면서 양육수당이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는 비용 설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정양육수당이랑 아동수당이랑 10만원씩 나오고 있어요. 그게 연령이 몇 살이나 몇 개월이 되면 얼마로 줄어드는지 이런 안내를 유선으로나 서면으로도 받은 적이 없어서 따로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고는 있는데요. 그런 안내가 되는 채널이 따로 없는 건지, 연령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 금액이 바뀌는 기준이 뭔지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요. 아이가 커갈수록 비용이 보통은 더 많이 들게 될텐데 왜 줄어드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부모 A).

저는 이제 현금지원 정책은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생활비에 묻혀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뭔가 아이를 위한 뭔가를 살 수 있거나 저는 그런 예방접종 같은 것들

그런 지원 정부에서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써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것을 정책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주어야 하지 않나(부모 F).

현금 지원 자체도 정말 아이들 도서 구입 아니면 문구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구입 할 수 있게 바우처나 포인트 형태로 지급해주면 더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부모 C).

현금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양육을 하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물론 아이를 위해서 온전히 쓸 수 있는 부모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그 부모의 일상생활이 지속되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아이의 책이나 교구나, 식재료 그런 거에 제한하지 않아도 부모의 삶의 질이나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현금 지원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 아닐까 해요(부모 B).

부모급여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면 자녀출산 시 금전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통해 출산장려를 위한 큰 효과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의견이었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정책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히 나타내야 하며, 부모에게 지원되는 현금을 자녀에게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하는지 안내와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모급여라는 거는 처음 들어봐서 찾아봤는데요. 안 주는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걸로 부모는 당연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테니까 필요할 것 같지만, 만 1세까지라고 하면 부모급여의 목적이 뭐를 도우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이라면 특별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부모 A).

사실 아기 용품도 많이 비싸고 그래서 저는 부모급여를 추가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에서 정책을 제시했을 때 조금 더 포장하거나 더 잘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나 부모급여의 가치가 아이한테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조금 더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부모 E).

5) 시간지원에 대한 의견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를 중심으로 시간지원 확대에 대한 부모 의견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공기업 위주가 아닌,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사회적 인식의 부족을 여전한 숙제로 지적하였다.

저는 육아휴직이랑 유연근무제를 둘 다 활용해 봤거든요. 유연근무제는 근무한 지 한 10년 됐는데 최근에 활용할 수 있었고 육아휴직도 첫째 때부터 활용해서 정책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시간 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이 다양해짐으로써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져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효성 부분에서 정책이 아무리 있어도 못 쓰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가 회사에 지원을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부모 E).

저는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는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들어보면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는 크게 눈치보지 않고 약간 권장하는 분위기인데 소규모의 회사나 직원이 적은 경우에는 되게 눈치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적 분위기나 인식이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에 대해 일부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에 대한 특혜로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로 생각할 수 있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효성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부모 C).

유연근무제는 저희 신랑도 약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해요. 근데 쓸 수 있지만 다른 동료들한테 피해를 줄까 봐 쓰지 못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쓰라라고 권장을 하지만 내가 빠지면 다른 직원이 일을 해야 돼서 이런 분위기에 약간 압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부모 D).

6) 아이돌보미/민간육아도우미 등 개별돌봄지원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높은 인지도에 비해 대기가 길고 돌봄인력을 구하지 못해 이용해보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산후도우미에 대해서는 이용경험과 긍정 의견이 많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해 본 적 없고, 민간 육아도우미도 안 해봤고요. 산후지원 도우미만 해봤어요.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나니까 소득 기준이 남편 소득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산후 직후에 저를 케어해주시니까 전 아이를 돌봐준 것보다 저의 식량 가정일이라 이걸 책임져 주시니까 제가 아이만 돌볼 수 있게 여건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했어요. 산후조리원에 2주 있고 도우미 3주 이렇게 썼어요(부모 B).

아이돌보미는 첫째 때 이용해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서 이용할 수 없었고, 지금 이사 온 동네도 신도시 쪽인데 사람이 부족해서 결국 아이돌보미도 구할 수 없었고 산후 지원도우미도 작년에 활용해 봤는데 너무 제한적이긴 했어요. 인력 부분이 부족하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좀 더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부모 E).

돌봄 임신했을 때 몸이 안 좋아서 알아봤을 때 신도시는 불가해요. 이용이 자리가 없어요. 만약에 이용하려고 하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은 지역의 편차가 조금 조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부모 D).

저는 산후지원 도우미만 이용 했었는데요. 굉장히 산모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출산일 경우 당장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볼 게 가장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데 이런 산후지원 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해서 누군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꼭 부모님이 아니어도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부모 C).

7) 가장 도움이 되는, 혹은 가장 미흡한 정책 및 정책 제언

가)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

만족도 높은 정책으로 시간지원(육아휴직, 유연근무제)의 확대와 정부지원산후 도우미를 언급하였으며, 아이돌보미(여가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경우 공급이 부족하여 대기기간이 길어 이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가사도우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육아휴직 제도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기 낳으면 당연히 육아휴직을 써서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키울 수 있다는 게 제일 잘 만든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 E).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육아휴직이 약간은 미흡하다고 해도 육아휴직이 진짜 지금은 맞벌이가 아닌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되게 많고, 현재 맞벌이가 아니어도 앞으로 일을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엄마들도 계속 사회생활을 하고 그렇게 경력 단절 없이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부모 C).

부모 6명 모두 육아휴직이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하였으며, 유연근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가 우세하였다. 또한 현금지원의 확대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을 보였다.

나) 가장 미흡한 정책 및 정책 제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제언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아이들 월령/연령에 따라 발달단계별 앱 서비스에 대한 제언이 있었다.

미흡하다기보다는 좀 이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는 게 아이를 두 명을 키워도 똑같이 발달 단계마다 일어나는 발달 시기에 대한 고민을 인터넷으로 계속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발달 케이스마다 정말 부모들이 결국 동일한 건데 그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앱 같은 게 없다는 게 좀 아쉽다, 그런게 있었으면 내가 그냥 그 앱만 들어가도 10개월짜리 클릭했을 때 사례 케이스마다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시되면 좋겠다 생각해봤습니다(부모 E).

저희도 아이가 어떻게 커가는 지가 궁금하고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플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거 보면서 같이 어느 정도 발달했고 어느 정도 뭐가 미숙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 좋겠고(부모 F).

놀이위주의 교육이 취학 후 교과과정을 따라갈 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최소 2년까지 확대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요즘 공교육 쪽에서는 아예 언어 쪽은 놀이 위주 식으로 많아서 한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학년에 들어가게 됐는데 다른 유치원이나 영어학원을 나와도 국어에 대한 교육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더라고요. 글씨를 몰라도 된다고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글을 알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공교육에서는 오히려 글자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놀이 위주의 수업을 2년 동안 하고 가서 각자 이제 글을 읽으라고 하는 과정에서 갭이 느껴졌어요(부모 F).

육아휴직 보통 1년이잖아요, 공기관 공기업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근데 육아휴직 1년이 너무 짧아요. 아이를 보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둘 아이를 두고서 출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 너무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앞으로 내가 아이 복직을 하면서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나머지 시간에는 부모님한테 맡긴다든가 이런 고민을 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받고요. 애를 키워 보니까 만 2세 정도가 돼야 겨우 이제 좀 말이 조금 통하는 거 같아요(부모 A).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인력 풀의 확대 외에 가사도우미 지원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가사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아이가 몇 개월 미만인 경우 출산을 하고 나서 최대 4시간인가 4번인가를 가사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부모 A).

아이 돌봄이 확대 인력 풀도 좀 확대를 하고 지원도 확대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하원 후 그 뒤를 조부모에 의지하거나 하원 도우미나 사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정부가 도와준다면 엄마들이 일을 할 때 훨씬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부모 B).

나. 초등자녀 부모

1) 자녀 초등 입학 후 달라진 점 - 만족도 및 개선 필요 사항

초등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교육과정의 이른 하교 시간 이후 돌봄의 공백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많았으며, 돌봄교실의 내용과 질, 교과과정과의 연계에 대한 불만족 의견이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고 나니까 너무 시간이 이르게 하원한다는 거, 수업이 빨리 끝난다는 게 좀 아쉬웠고요(부모 F).

동생은 유치원을 다니는데 언니는 학교가 12시에 끝난다 그러면 이 공백을 어떻게 해야 되지 12시부터 학원을 계속 돌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엄마가 둘을 따로따로 나눠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방과후돌봄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의 개입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전문직일까라는 의구심은 들어요(부모 D).

돌봄이 1, 2학년 때 거의 대부분 정말 단순 돌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리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재미없다고 하고 영상 보고 그렇다고 선생님의 개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 고민 중에 있습니다(부모 D).

돌봄 방과후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중간점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개입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전적으로 방과후교사한테 일임하고 있고 방과후교사도 체계가 없기 때문에 교사마다 문자를 보내주시는 교사도 있고 문자를 안 넣어주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이런 간단한 체계 자체도 아직은 초등학교가 잡혀 있지 않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부모 E).

취학 후 교사와의 소통에 있어 취학 전과 차이를 느끼며,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교사와의 소통 및 돌봄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음이 언급되었다.

선생님들과 소통에 있어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 대해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해주고 선생님 한 명당 아이를 케어하는 인원 자체가 적다 보니까 뭔가 아이의 문제점과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었다면, 학교 선생님한테는 학생들도 많고 아이들이 초등에 들어가면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해나가는 것들을 교사들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시선 자체도 다르고 뭔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초1 때는 그렇지 않은 부모들과 또 그런 부모들 간에 약간 반반 정도가 있어서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어려움과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부모 F).

2) 초등돌봄과 마을돌봄 및 방과후학교 이용

초등돌봄의 경우 돌봄교실 이용자격 제한과 (이용자격이 되더라도) 돌봄교실이 몇 개만 편성되어 있지 않음에서 오는 접근성에 대한 불만족 의견과 함께, 돌봄교실 운영시간/시기에 대해 방학기간 등 돌봄공백이 발생함이 지적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지금 현재는 그냥 교과과정만 다니고 방과후과정은 두 요일에 이용하고 있어요. 돌봄교실 같은 경우 육아휴직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고요(부모 E).

지금이야 휴직이지만 일을 하고 있다면 방학 때 보육에 대한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돌봄 교실이 두 클래스밖에 없어서 거의 되는 확률이 낮다고 하시더라고요(부모 E).

초등 돌봄 시 어려운 점은 너무 긴 방학이에요(부모 F).

저희 조카가 당장 내년에 초등학교로 입학할 하게 되는데 부모가 맞벌이이고 주변에 돌봐줄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 등하원 도우미를 쓰던지 아니면 아이가 혼자서 하원 후에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현재 다니는 영어유치원(영어학원)에서 초등학교 하교 시간 이후로 1~6시까지 수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용하고 도시락을 싸갖고 가서 학원에서 먹고 원래 유치원 하원하던 것처럼 그렇게 유치원에서 쫓 하루를 보내야 되나 하더라고요(부모 C).

방과 후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하고 또 시간 자체가 6시 7시 이렇게까지 쫓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방과 후 수업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부모 C).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를 포함하여 초등돌봄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부모 만족도와 기대가 높았다.

방과후학교는 예전보다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우선 가장 좋은 건 학교 안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저는 이제 아이의 안전적인 부분에서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제가 데리고 이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좋고 가격적인 부분도 저렴하거든요(부모 F).

3) 초등학교 급식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식사시간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급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초등 급식은 맛있어요. 메뉴도 다양하고 신선한 음식도 많이 먹을 수 있긴 한데 저희가 과밀학급이다 보니까 식사시간이 20분 정도로 짧아 아이들이 급하게

먹고 가야 돼서 많이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칸막이를 설치해 놓고 혼자서 먹어야 해 좀 외로운 식사가 된다고 해야 되나(부모 F).

4) 초등자녀 돌봄 시 어려운 점 및 만족스러운 점

초등자녀 돌봄의 어려움으로, 창의체험활동이 편차없이 알차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점과, 초등돌봄교실의 부족으로 조부모 도움과 학원 이용이 필요한 현실, 그리고 마을돌봄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이용의 꺼려함과 어려움이 있음이 나타났다. 초등 고학년의 경우에도 방학기간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며 이태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코로나 기간 긴급돌봄의 이용 기준이 맞벌이 위주로 제시되면서 실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다른 경우에는 이용하기 어려웠던 점 또한 지적되었다.

국영수 교과목 아니고 창체(창의적인 체험활동) 시간의 활용도가 선생님마다 재량이 달라서 클래스마다 차이가 있는 게 좀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부모 F).

초등돌봄교실이 전 학년에 한 두 반 정도 있다고 들었고 교육보다는 아무래도 아이들을 케어하는 입장에서 그냥 보내다 보니까 어떤 부모들은 직장을 다니지만 굳이 초등 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조부모의 도움으로 뒤에 학원을 붙여서 연결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부모 F).

마을 돌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용해 보지는 않았고,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약간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저학년) 아이들 위주로 케어하는 것 같아 조금 보내기가 어렵겠다 생각도 들었어요(부모 F).

코로나로 초등 휴교 때 긴급돌봄은 거의 직장맘만 사용하기를 권했지만 일반 부모들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거든요. 돌봄시스템 자체가 어느 시간 동안에 학교에서 있어야 되는 시간 기준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아파서 잠깐 병원에 갈 경우 다시 돌봄으로 넣는 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또다시 조부모를 불러서 집에서 케어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긴급돌봄 부분도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부모 F).

고학년 같은 경우 대부분 다 학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도 이번에 학교에서 각 학년마다 10명씩 체육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10명이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해 지원을 했다가 또 떨어졌어요. 방향을 참 어떻게 이용할지 항상 그게 고민이 많습니다(부모 F).

5) 초등돌봄 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되는, 혹은 미흡한 정책과 제언

초등돌봄에서 가장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제언으로 학교 내 위클래스의 운영에 대한 것이 있었다.

위 클래스 같은 경우 심리 상담 케어 이런 쪽으로 학교 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부모 F).

그런데 위 클래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위클래스 자체가 뭔가 좀 문제가 있을 때 가는 곳으로 엄마들이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넓게 확장된 위클래스가 되면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위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부모 F).

학교 안에서 저는 좀 교육이나 도덕성 이런 기본 예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이제 가정 내 교육도 중요하지만 창체 시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백을 너무 많이 두지 않고 아이들에게 도덕성과 서로 배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존댓말 하는 학교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학폭 같은 것들도 좀 줄고 세세한 일이긴 하지만 결국 가정으로 와서 또 부모한테도 존댓말을 하게 되는 연장이 되더라고요(부모 F).

추가로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어린 자녀와 부모를 위한 교통지원서비스가 마련되기를 제안하는 의견이 있었다.

아이들을 한 명 이상 케어를 하다 보면 교통 약자가 되잖아요.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지원도 좋지만) 교통비 지원 같은 부분은 좀 더 편하게 많은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부모 A).

2. 어린이집 교사, 원장 성과 평가 및 의견

가. 어린이집 교사

1)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

가) 연장반(영아반) 교사대아동 비율 및 간헐적 연장보육 수요의 어려움

특히 연장반이 영아들로 구성된 경우 3:1 교사대아동 비율로 연장반 교사 한 명이 아이들을 돌보는 게 사실상 어려워, 추가로 담임교사가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여기에 추가로 발생하는 간헐적 연장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전처럼 담임교사가 당직으로 돌아가면서 연장보육 시간에 돌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연장반-기본반이 분리된 거는 현장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쉬운 거는 (연장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아직까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영아 반을 3대 1로 있는 거는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개월 수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한 분(담임 교사)이 필요에 의해서 도와주시고 있는데 그 점은 한계가 있습니다(교사 1).

저희는 연장반에 전담교사가 있어요. 만 0세 두 명, 만 1세 한 명인데, 그 외에도 부모님들의 신청에 따라서 연장보육을 운영하게 되면 1 대 3이 넘어가니까요. 0세가 있기 때문에 담임 교사가 보육 수요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맞춰질 때까지 함께 있다가 가게 되면, 가장 늦게 퇴근하는 당직 교사가 저희는 6시예요. 돌 안 지난 아기 둘과 다른 만 1세 아이 하나가 있다면 사실은 연장반 교사가 버텨내기는 벅차죠. 웬만하면 6시 퇴근 선생님이 애들이 하나 혹은 둘 남을 때까지는 같이 도와주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교사 2).

연장반에 있지만 영아들의 경우 담임을 찾죠. 그러면 그때마다 가서 도와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외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있을까요(교사 2).

연장보육 필요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만 육아휴직 중인데도 연장보육 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라던가, 또 다수 발생하진 않지만 간혹 개인적인 이유로 연장보육을 간헐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워서 연장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 시간으로 구분한 기본-연장 보육의 운영이 대체로는 잘 돌아가고 있고 긍정적으로 안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저희는 가정어린이집으로 규모가 작고 연장반 신청 아동이 없는데, 간헐적 보육으로 가끔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 때는 연장반 교사 지원이 되지 않잖아요. 이때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는 그 순서대로 과거 원래대로 운영하고 있어,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죠(교사 1).

지금은 사실 연장반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도 저희가 어머니가 하고 싶다고 하면 받아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교사가 투입이 되어야 해요. 교사는 늘 거기 있어라, 누가 원하면 당연히 돌봐줘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교사 2).

연장보육 필요 사유라는게 있지만, 이래도 가능하고 저래도 가능하게 붙이면 돼요. 어린이집은 원래 그러라고 존재하는 곳이기는 한데 사업 자체가 교사한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위했다면 연장반 보다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조금 더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좋다고 보거든요(교사 2).

나)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의 어려움 지속, 당직에 의한 연장보육 운영

연장반 교사 채용이 어려워, 이러한 경우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전처럼 담임교사들이 돌아가며 당직을 보며 연장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타개를 위해 원마다 연장보육 교사를 배치하던가, 혹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연장보육 교사를 채용하는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사가 안 구해진다는 게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만 잘 되면 이제 교사의 업무도 덜고 그걸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전처럼 똑같은 거죠. 담임교사는 (연장반 운영을 위해) 당직을 쓰고 그러면서 수업준비도 하고 행사도 하고 변함없는 것 같아요(교사 3).

교사가 안 구해지는데 억지로 구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원장님께 강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저희 원도 연장반 선생님이 전혀 운영이 되지 않고 담임교사들이 당직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교사 4).

작년 같은 경우 전담교사 구하기 하도 어려우니까 그 선생님의 편의를 들어주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이 안 되어서 매주 수요일만 교사들이 당직을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됐었어요(교사 3).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떻게 연장반 전담교사를 채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직은 좀 어려운가 봅니다(교사 3).

6시 이후에 남는 아이들은 솔직히 없어요. 6시쯤에는 거의 하원을 하거든요. 4시부터 5시 반 사이에까지 열 몇 명이 남아 있는 아이들을 그냥 당직선생님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교사 4).

다) 연장보육 시간

연장보육이 시작되는 시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연장반 같은 경우도 시간이 5시 1분이 돼야 천원이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4시부터 5시까지지는 담임교사가 또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연장반 시간도 4시부터 이어진다고 하면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시간이 애매하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은 항상 떠날 수 없이 그 자리에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교사 1).

2) 교사 근로여건(휴게시간) 및 처우에 대한 의견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적용과 대체교사 파견을 통한 휴가의 사용, 경력이 반영되기 어려운 급여, 가정어린이집 원장 겸직 반의 교사역할 수행의 어려움이 언급되었다.

가) 휴게시간 적용의 어려움

연장보육이 당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휴게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 저희는 초과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 초과근무 시간으로 쳐주세요. 그래서 일찍 퇴근을 하잖아요. 점심시간, 낮잠시간이 저희한테 어떻게 휴게시간이에요.(교사 2).

저희가 필요한 건 휴게시간이고, 필요한 건 추가 인력이 근무시간 내에 우리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정책인데, 청소담당 지원과 하모니 시니어 선생님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 시간대에 저희가 그 선생님이 필요가 없어요. 연장반교사가 옴으로 해서 담임 교사가 휴게를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교사 2).

나) 처우 개선-휴가 관련

처우 개선은 정말 많이 생각하고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편이고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이 강해지면서 휴가 등은 정책이 되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하는 날에 휴가를 갈 수는 없어요(교사 1).

대체인력이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청이 안 되고 한 달 전 월 초에 신청을 해야지만, 내가 휴가를 가기 위해 갑자기 한두 달 전에 미리 계획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병원도 마음 놓고 갈 수가 없고요(교사 1).

아파도 대체교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오지 말라 하는데 저희도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안 가면 당장 대체교사가 갑자기 투입이 안 되는데 그냥 이 약 물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또 그것이 감사에 걸리고. 저희는 아프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교사 2).

교사 식사 시간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아이들하고 밥 먹으면서 식사 지도를 하라고 하는데 제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을 먹일 수는 없어요. 휴게시간 표만 이루어져 있지, 현실은 그걸 진행할 수 없는 걸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교사 1).

다) 처우 개선-급여 관련

아시겠지만 가정, 민간 어린이집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시거든요. 똑같은 일을 규모가 작다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수준의 일을 하는데 월급의 차이는 너무 크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주잖아요. 월급 체계가 너무 틀린 거예요(교사 1).

라) 처우 개선-원장겸직, 대체교사 관련

저희는 영아전담 국공립 어린이집이에요. 처우가 많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0세반 아무도 안 맞고 싶어 해요. 원장님이 담임겸직으로 있으니까 그 반 애를 내가 무조건 봐야 되고, 그 반 친구들 서류도 그 반 엄마들도 제가 다 대응해야 돼요. 원장님이 관리 직책이니까 다른 반도 봐야 되고 전화도 다 받으셔야 되고. 저는 제가 1대 5라고 생각하거든요(교사 2).

저희 대체 교사를 지금 8월인데 3, 4, 5, 6, 7, 8월까지 6번 신청 했는데 전부 안됐어요. 저희 반 보조 선생님이 대체교사를 못 구해서 그만두었고 그러면 저는 초과보육이예요(교사 2).

제가 아파서 하루만 결근을 해도 갑작스럽게 대체교사가 바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담임교사가 통합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그거에 불만이 생기시죠(교사 1).

상기한 대체교사 관련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교사들은 2~3개월 묶어서 대체교사를 보장하고 확보하는 대체교사 풀에 대한 체계적 운영을 제안하였다. 방학 혹은 하계휴가, 병가와 같이 꼭 필요한 경우에 작동하게끔 하는 게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에 대한 의견

가) 놀이중심 운영의 어려움 - 부모요구의 반영, 부모교육의 필요성

놀이중심 아동중심 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중요성과 의의를 이해하고 있으나, 특색 프로그램과 취학전 학습에 대한 요구를 갖고 있는 부모의 수요를 무시할 수 없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부모 대상의 교육과 안내, 홍보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4차 보육과정이 과연 저희한테 맞는건가 라는 생각은 좀 해요. 교육과정 자체는 좋은데 그걸 부모님들이 원치 않고 부모님의 니즈에 맞지 않는데 그걸 아예 무시하기에는 우리나라 실정에 과연 그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서류는 간소화됐어요(교사 2).

놀이 중심으로 아이들 놀이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데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유치원은 배우는 곳 어린이집은 노는 곳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원장님도 아이들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 아이들이 원에 없으니까 사실상 이게 원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교사 3).

교사들은 놀이중심 아동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이 아동에게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를 체감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규모가 있는 어린이집과 유아 위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놀이 중심으로 해서 좋아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동 중심으로 놀이를 지원하니까 예전에는 몇 개를 해야 되고 어떤 활동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고 나눠져 있었잖아요 ..(중략)... 아이들 반응도 적극적으로 변하고 긍정적인 변화인데 학부모님들이 이걸 이해하는 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교사 3).

부모님들은 놀이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계획한 그런 것들이 누리과정 전하고 똑같은 식으로 나가요.. (중략)... 원장과 교사, 부모가 함께 맞춰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교육과 교사-부모-원장의 협조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교사 4).

예전에는 다 갖춰져 있으니까 언어도 하고 음악도 하고 그랬는데, 놀이 중심으로 하면서 약간 치우쳐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교사 3).

놀이 중심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 나라에서도 많은 홍보와 안내를 해야 부모님들이 인식이 바뀔 것 같고요(교사 1).

진행하면서 아쉬운 거는 대부분 자료들이 규모가 큰 어린이집과 6~7세 위주의 놀이가 많아요 (교사 1).

나) 영아 대상 놀이중심 운영의 어려움

특히 영아 대상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아동 중심의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개별 아동의 반응과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사대 아동 비율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아이들은 자기 의견이 정확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놀이 방법도 다양해지잖아요. 근데 영아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스스로 배워가는 걸음마 아이들인데 영아반 교사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놀이를 구성해야 하는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영아반 교육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교사 1).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놀고만 있는게 아니구나 라는 인식의 전환은 되더라고요. 저희 원이 인력이 많은 원이기 때문에 오전 중 놀이중심 활동을 해도 보조교사를 포함하여 아동 20명에 총 6명의 교사가 운영되기 때문에 아이들 니즈가 있을 때 곧바로 반영하기 좋아요. 만 0세 3명을 데리고 물총 놀이를 하려면 인력이 그만큼 있어야 가능하겠죠(교사 2).

4)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견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인프라에 대한 양적 확충에 머물지 말고, 민간, 가정을 포함하여 함께 상생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난 운영 상의 격차(갭)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국공립 확충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공립 수준으로 모든 어린이집을 만든다면 보육의 질 교사의 질이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거고 부모님들도 원하는 게 그거일 것 같아요(교사 1).

좋은 선생님이 국공립에 몰리는 이유는 처우가 좋기 때문이죠. 민간 가정 선생님이 수준이 낮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국공립시설 확충보다 다른 쪽으로 지원을 더해준다면 엄마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늘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확충보다는 일단 갭을 줄이는 게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교사 2).

5) 유보격차 완화 및 유치원-어린이집 차이에 대한 의견

유보 격차는 줄어들었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많아졌음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운영 구조상 교사의 근로시간 및 수업 준비 시간에서 격차가 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지금 어린이집은 시스템이나 보육교사의 질, 보육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는 유치원 못지않게 교육도 많이 반영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보다 더 높게 평가하시는 어머님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되고요(교사 1).

유치원과 격차, 급여 차이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수준 차이가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줄 수 없어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2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랑 수준이 같을 수 있을까요. ..(중략) 어린이집 교사들이 좋은 선생님들이 정말 많다고 느낍니다. 근데 수업의 질을 따진다면 일단은 교육 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자체가 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이 같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요(교사 2).

6) 변화와 조정이 필요한 보육 정책 제언

교사들은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기본반-연장반을 구분하는 4~5시의 애매한 시간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반 전담교사의 채용과 대체교사의 배치가 많은 원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개별

원에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경계선 적 문제행동과 장애 아동의 진단 비율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원활한 개별 아동 지원을 위해 최종 진단서가 아닌 의사/교사의 소견으로도 특수교사 배치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기본반-연장반의 경우 애매한 시간이 남지 않도록, 기본반에서 연장반으로 가는 정확한 시간을 만들어 담임교사가 덜 힘든 구조로 갔으면 합니다(교사 1).

연장반 전담교사를 구하는 게 어려운 거 모두 알고 있으므로, 차라리 한 원에 오후반 보조교사 한 명씩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교사 1).

비담임교사 배치를 원장 재량으로 선택하게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선생님들이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교사 4).

아무래도 대체교사 배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교사 3).

예전에는 좀 덜했던 것 같은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보육교사에게 요구하는 건 많아지고 질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사대아동 비율을 낮춰주는 거라고 봅니다. 놀이 중심과 경계선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사 2).

영유아 건강검진을 해왔는데 3명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큰 게 아니면 인정을 안 하세요. 장애 아동이 있으면 보조교사 지원이 되는데, 문제는 부모가 인정하지 않으면 저희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입니다. ...(중략)... 부모가 갖고 온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의사와 교사의 소견으로도 보조교사/특수교사와 관련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1).

나. 어린이집 원장

1)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연장전담교사 채용 가능 여부에 따라 체계 개편의 운영 효과나 만족도가 크게 다를 것을 언급하였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만족도는 부모님도 교사들도 만족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교사들은 기본-연장 보육이 나눠져서 있어서 연장보육 선생님이 임용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교사가 기본적으로 자기 수업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시간들이 많이 할애되고 중간에 휴게시간도 철저히 지키게끔 많이 바뀌고 자리를 잡았잖아요(원장 1).

보육지원체계는 연장교사가 채용이 되어 있는 것과 안 되어 있는 것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용이 되고 제대로 사이클이 돌아가면 보육교사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어린이집도 늦게까지 보육을 맡겨야 하는 부모님들도 부담없이 7시 반까지 편안하게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원장 1).

여전히 연장반 교사 구인에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원장 2).

연장보육 시간 중 4~5시 자율 하원시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요구되며, 간헐적 보육 수요에 대한 대응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또한 연장반 전담교사 미채용 시 담당 교사들에 대한 수당지급 등 처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목표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모 대상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도 논의되었다. 전체적으로 현행 운영시간 구분(기본-연장-야간연장 보육)에 대한 재검토와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연장 보육을 하더라도 6시, 6시 반 정도면 아이들이 귀가를 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부모님들도 뒤 시간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로워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연장교사가 임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사들이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뭔 의미가 있는지, 아무리 적정수당을 지원하라고 해도 그 수당을 갖고 안 받고 안 하겠다는 거죠(원장 1).

운영비에서 지원되는 보육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비율(%)로 준다든지, 아니면 연장교사가 미임용 됐을 때 교사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인건비 수당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체계가 겹쳐서 같이 가면 어떨까 합니다(원장 1).

4~5시까지 기본 보육반 아이들이 자유롭게 하원을 할 수 있잖아요. 자율 하원 시간으로 5시부터 카운팅 해서 보육료가 지원되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 선생님이 4시에 들어가고 간헐적 보육으로 자율 하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본 선생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어서 이 한 시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4시부터 카운팅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원장 1).

현재 영아-유아 연장반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아 연장반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면서 유아 연장반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원장 2).

4~5시 시간이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애매하고 어머님들이 4시부터 5시까지 하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5시에 하원을 시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원장 2).

굉장히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보육 체계를 개편하려고 했던 큰 목표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했다고 봅니다(원장 3).

차라리 4시 반에 통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이 연장반 시간을 당기는 거예요. 7시 반까지 너무 길거든요(원장 3).

연장보육 시간에 채용이 가능한 분들이 대체로 연령이 많아 관련 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반 교사의 전문성이 쟁점이 되며, 연장반 교사의 기본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연장반 교사 1인이 남아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업무매뉴얼과 비상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좀 더 역량 있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연장반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원장 2).

연장반 교사의 전문성 향상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연장 선생님들 대부분 나이가 대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지원을 하는게 지금 현실이에요. 일지도 써야 되고 선생님들 이랑 밴드나 카톡, sns를 통해서 정보를 계속 주고받아야 되고 하는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업무도 되게 어려워하세요.(원장 1).

좀 나이가 있는 연장 선생님들에 관해서 기초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거 같아요. 일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은 많지만 특정 분야의 교사가 기초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들이 마련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원장 1).

오후에 연장 선생님이 혼자 있으시잖아요. 최소한 한 시간 반 정도는 혼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아동학대나 정말 그런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2인 1조로 그 시간에 같이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연장보육 관련 업무 매뉴얼 아니면 비상시 대처 매뉴얼 정도는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원장 1).

2) 어린이집 인력 운영-비담임교사, 연장반교사, 보조교사 등

어린이집에 배치되는 다양한 인력 운영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를 체감하고 있으며, 단시간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은 최소 6시간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요즘 논의가 되고있는 비담임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국공립 위주가 아닌,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특히 영아 보육과 경계선 행동을 하는 아동 대상의 보육 제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이는 교사대아동 비율의 조정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제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력들이 들어온 이후 어린이집에서 안전 사고들이 많이 줄어든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최소 6시간은 보조교사랑 보육도우미를 운영 하는게 어린이집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원장 1).

특히 영아들은 손이 많이 가요. 정말 보조인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원장 3).

교사가 수업을 잘할 수 있는 있도록, 교육과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 반에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놀이 치료나 언어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부모님께 권유를 해야 하는 이런 친구들이 교실 내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반별 보조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원장 2).

지금 보조교사-비담임교사의 큰 차이는 없거든요. 어차피 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별적 특성이 있는 친구들은 별도로 보조교사라든가 이런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 가장 좋은 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지는건데, 그 정책 단계로 가기 전까지 보조인력들이 충분히 투입이 되어야 된다(원장 3).

교직원의 연차 보장을 위해 대체교사 배치가 필요한데 이 역시 어려우므로 추가 교사의 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장 담임 반의 경우 보조교사에 대한 역할 부여 등 추가 인력의 운영에 재량권 부여를 바라는 의견이 있었다.

선생님들이 순차적으로 휴가를 갈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도 비담임교사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원장 2).

일단 인력 지원을 해주되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원장한테 재량권을 줬으면 합니다(원장 3).

3) 비용지원, 공공성, 회계투명성, 보육의 질 제고 관련

회계의 투명성은 상당부분 어린이집에 정착이 되었다고 보니, 교사의 지원이 기관 설립유형에 따라 다른 점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보육의 질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형 어린이집에 진입하기 위해 일단 회계가 먼저였고, 서울시 회계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각종 인센티브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거든요. 원장님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가 되어 정착이 됐다고 봐요(원장 3).

어린이집 회계와 사회복지법인시설 회계는 다르거든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감사와 사회

복지법인 시설의 재무규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흔해되다 보니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원장 3).

국공립이랑 민간 가정 이런 유형에 따라서 아이들은 똑같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교사들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일반 민간 가정어린이집도 최하 1호봉 수준에 맞는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원장 1).

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전체적으로 개소수나 이용률 제고의 목표를 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별로 상생 방안을 고려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국공립 확충은 나라에서 조울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실제로 국공립 중에서도 오래된 시설은 아이들 정원의 50%가 차지 않아요. 국공립 확충을 무조건 50%할 거다 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보육 수요에 따라서 조울했으면 합니다. 가정 민간 국공립 어린이집이 서로 어깨를 견주면서 같이 기회를 제공받고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모델링이 필요해보여요(원장 1).

어린이집이 계속 공보육으로 가려면 민간 가정을 데리고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민간 가정 어린이집도 인건비를 지원을 해줘야하는 시설로 가는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원장 2).

구체적으로 지역내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간 상생의 전략으로서, 유아전담, 영아전담으로 구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제안하였다.

현장에서는 국공립이 많다고 느끼는데 아직도 부모님들은 보낼 데가 없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가정어린이집에서 유아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영아전문-유아전문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나누자 그랬어요. 개소 수 확충은 의미가 없다. 유아 전문 영아 전문 국공립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원장 3).

5) 유보격차 완화

유보격차가 완화되었다고 하나 지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으며, 특히 부모의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로 인해 유치원을 선택하는 부모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유보 격차 완화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그렇게 크게 완화가 됐거나 아니면 연계가 되었다거나 하는건 그렇게 체감하지 못합니다(원장 1).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똑같이 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의 교육과정을 갖고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어머니들은 유치원을 선택하세요. 그 이유는 특별활동 단가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프로그램 때문에 가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아직도 많으세요(원장 1).

이전 정권에서 유보격차를 해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처 간 통합이라도 어떻게 진행이 되었더라면 아니면 기본 재원이라도 큰 틀에서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서요 ..(중략)... 사실 어린이집 현장에서도 유아교육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유아교육을 한 사람이거든요. 유치원을 많이 경험하신 선생님들이 현장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이 많이 다르냐고 느꼈을 때 저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아요.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 자체가 일원화가 된 게 몹시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원장 2).

유보격차 해소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은 운영시간/교사 근로시간 개편과 인적 기준의 일원화로 논의하였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시간부터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오후 2시 정도면 이후 시간은 다른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원장 3).

일단 교육과정이 일원화 됐으니까 그 다음은 인적 구성의 일원화로 봅니다(원장 3).

6) 표준보육비용

코로나 이후 급간식비의 물가 상승, 정원 충족이 안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반당 운영비용과 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급간식비를 서울시에서도 영아, 유아 단가를 재조정하였어요. 급간식 재료비는 상승하고 있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물가 상승률이 오르고 있잖아요. 공과금 같은 경우는 더 올랐죠(원장 1).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일수록 그리고 원 반에 정원 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일수록 운영 여건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1인당 보육료로 어린이집이 지원을 받는 것보다 한 반을 만들었을 경우 이 반에 교사 인건비와 반 운영비가 어린이집으로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원장 2). 교사들이 연차 휴가 일수 확보 못했을 경우에 연차휴가 수당 이런 건 지금 빠져 있는 상태 아닌가요(원장 3).

7) 개정 누리과정

개정 누리과정의 운영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유-초 교육과정 연계가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저희는 영아들이잖아요. 영아이다 보니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기도 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바로 수용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놀이중심을 적용할 때는 어려움이 많아요. 영아 중심으로 아동 중심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교사들한테 표현되어 있지 않다고 봐요(원장 1).

아동중심 놀이중심은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들한테 긍정적이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아이들을 보육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육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 자료 등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원장 1).

22년에 육종에서 진행하는 놀이 중심 맞춤 컨설팅을 했어요. 세 달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 자체가 온라인으로 봤던 교육과정과 너무 다릅니다. 많은 어린이집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회차를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원장 2).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운영했을 때 정말 좋았어요. 가장 행복해지는 건 아이들이었어요. 놀이 중심으로 바뀌면서 부모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선택권은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이 좋은 교육과정을 왜 부모교육하고 연계를 안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원장 3).

필요성을 느꼈던 게 유아반은 초등학교 연계가 되잖아요.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 거의 연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 개정 누리과정을 이해하려면 초등 과정까지도 교육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봐요(원장 3).

8) 보육정책으로 체감하는 변화, 잘 추진된/미흡한 정책 및 제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관찰위주 점수화 과정에 대한 교사 및 아동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 컨설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어린이집 평가제에 관한 것으로, 3차 통합 평가가 관찰로 이루어지는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상호작용 관찰을 하는데 행동 하나하나가 점수화되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동의 인권과 보육교직원의 인권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원장 1).

계속 3년에 한 번씩 점수화/등급화를 할 해서 갈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른 어린이집 운영했던 시설은 컨설팅이 아니라 평가제 장학으로 가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책을 제언 드리고 싶어요.

일일이 점수화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처럼 장학으로 컨설팅을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원장 1).

3. 유치원 교사, 원장 성과 평가 및 의견

가. 유치원 교사

유치원 교사 대상 면담조사는 사립법인유치원과 사립사인유치원의 교사 2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사립유치원 공공성 제고에 대한 의견

가) 국공립유치원 확충

저출산으로 유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에서 지금처럼 국공립유치원의 인프라만 확충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성을 제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즉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양적 확충보다 모든 기관유형의 유치원이 함께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목적과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부모가 목적에 맞게 학부모가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며, 공립유치원 간에도 격차가 존재하므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주변의 공립병설유치원이 정원 미달을 보이고 있고, 특성화활동과 등하원차량 운행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이용에 불편을 느껴 사립유치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음 또한 언급하였다.

주변 공립유치원의 경우, 2시 하원 이후 대부분의 유아가 학원으로 옮겨 가기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의 측면에서 공공성 제고 목적과 실체가 일치하지 않는 현황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충 정책이 어떠한 방식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주변 유치원들을 봤을 때 공립유치원의 장점이 일단 비용이고, 공립유치원 이용이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오후 2시면 정규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대부분 4시면 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앞에 수많은 학원 차들이 대기 중이어서 사교육비 감소가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고, 특강이 없고 등하원 차량이 없는 등 부모님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거든요(교사 1).

주변에 국공립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는 정원 미달이에요.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요구하는 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교사 1).

국공립 유치원 확충 정책이라는 게 사립을 매립형으로 하여 공영형으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국공립을 설립한다는 건지 저는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교사 2).

사실 지역에 따라 사립유치원 간 격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보낼 때 고민을 하는 거고, 따라서 그런 격차 부분에 대해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립 유치원이지만 조금 더 커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교사 2).

나) 사립유치원 공공성 제고 정책

에듀파인이 도입되면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은 확보되었다고 생각하나, 여전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유치원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사립유치원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정 우수유치원에 공립유치원이 많이 선정되는데 사립유치원에도 유인책을 마련하여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공공형으로 운영하던 사립유치원이 시범적용 이후 사후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에듀파인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립유치원 회계가 많이 투명해졌다고 생각해요. 아직 사회적인 시선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사건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만(교사 1).

사립 유치원 세 곳을 지정해 운영한 공공성 제고 시범사업 결과가 어떤지 궁금해요(교사 1).

2)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의견

누리과정 도입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현장에 정착이 잘 되어 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으며,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교사의 질임을 언급하였다. 누리과정은 유아의 흥미에 따라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교사의 행정 업무가 줄지 않고, 높은 교사대 유아 비율로 누리과정을 제대로 실행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지적하였다. 아이들의 개별 활동이 이어짐에 따라 안전문제가 항상 우려되며, 안전을 위해 교사대 유아 비율을 하향 조정 또는 보조교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 놀이중심으로 하니까 정말 좋아하는는 해요(교사 1).

아이들의 표현이 더 확장된다고 느꼈고 이제 자율성과 책임감도 높아지는 거 같아요. 그러나 학부모님들은 아직도 결과물을 조금 중시하시는 부분이 있어요(교사 2).

사실 이제 월간 교육 계획안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놀이를 하다 보면 변화가 되잖아요. 사실 월간 교육 계획안에 큰 주제가 나가고 그 안에 정말 세부적으로 다 나가거든요(교사 1).

학부모님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놀이 속에서 배움이 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과정이 있었어요(교사 1).

결국 놀이중심은 교사의 질이 중요한데,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공문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누리과정은 좋지만 행정적인 업무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느낌이에요(교사 1).

근데 솔직히 33명을 봤을 때 안전문제에 대해 항상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좀 힘들고,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교사 2).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 중심으로 하다가 8살이 되면 이제 40분 동안 앉아 있고 아이들이 학교 적응하는 데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놀이 중심이 좋지만 초등학교와 연계 부분에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될까 같아요(교사 1).

교재교구 구입 시 행정절차가 많아 시간 소요가 되는 등 즉각적인 놀이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습과 초등 준비 교육을 기대하는 학부모가 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의 취지(유아·놀이중심, 놀이를 통한 배움)에 대해 학부모를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누리과정 도입 전·후 유아의 성장발달에 차이가 있는 것을 체감하였으며, 유아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되려면 초등교육과정의 변화도 함께 필요하고, 유초연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3) 유치원 보조인력 운영 및 행정지원체계

가) 유치원 보조인력 운영

유아대 교사 비율 하향 조정을 매우 반기는 입장이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수가 줄면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하였다. 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 만 3세반이라도 보조교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교사가 교육과정에 집중하기 위해 청소 및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전반적으로 공·사립 유치원간 인력배치와 운영에 차이가 있으며, 교사들 유아교육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으려면 법적 기준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겠으나 인력 배치에 대한 인건비 지원 부분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이 이야기되었다.

저희는 오전 10시에 보조 선생님이 오세요. 2시까지 저희 반 보조 선생님을 하고 2시 이후에는 방과후과정 담임 선생님을 하시거든요(교사 1).

사실 공립 유치원에는 수업 준비를 도와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조금 다른 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립은 그런 비용들을 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뽑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나라에서 오는 청소 업무라든지 그런 다른 기본적인 업무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교사 2).

교사 대 유아 수를 감축한다는 소식이 입법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비용 상 운영이 안돼서 보조교사를 뽑을 수 없는 거예요(교사 1).

유치원교사의 처우로 급여에 관한 것으로 연차 경력이 쌓여도 반영되기 어려운 임금구조에 대한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사립은 호봉표가 있지만 솔직히 원장님 재량이거든요. 저희는 그냥 주는 대로 받게 되고 협상이 안 되면 취직을 못하는 거고(교사 2).

이제 최저임금을 줘야 처우개선이 나오는데, 이런 법령이 생겨서 교사들이 연차 상관없이 월급이 거의 비슷해진 거예요. 저는 거의 10년 차가 다 돼 가는데 새로 부임한 교사랑 월급이 3만원 차이가 나는데 되게 속상하더라고요(교사 2).

나) 행정지원체계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는 행정직원이 없기 때문에 교사의 행정업무가 과다하며, 에듀파인과 무상급식이 도입되면서 과거 대비 행정 및 회계 업무가 늘어났다. 유치원에 행정직원이 근무하지만, 행정업무와 교육업무가 완벽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교사들 업무로 되어있어 교사가 일정부분 행정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치원에서 행정하시는 분들 지원이 있었으면, 선생님들의 업무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대형 유치원에서는 원장이 다 하는데 좀 작거나 소규모 유치원에서는 교사들이 하는 게 거의 태반이거든요.(교사 2).

4) 유보격차 완화에 대한 의견

공통의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운영한다는 것 외에는 격차가 완화된 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치원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체계 및 양성과정이 다르기 때

문에 유보통합에서 어려운 과제로 예측하였다. 학부모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처럼 긴 시간을 운영하고 돌봄(보육)을 강화하고 방과 후과정 프로그램과 인력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과제임을 언급하였다.

제가 봤을 때는 유아교육-보육 간의 격차가 완화되기보다는 그냥 각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지내는 시간도 다르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만의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누리과정을 해서 과정은 같지만 조금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기는 해요(교사 1).

비용적인 부분이라면 공립유치원에 보내면 해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어린이집을 보내셨던 부모님들 상당수가 맞벌이이기 때문인 거예요. 공립유치원을 갈 경우에는 2시에 하원을 하거나 아니면 방과후 교육과정이 운영되지만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 4시면 아이들이 거의 다 가요. 그렇다보니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교사 1).

방과후과정 프로그램과 방과후과정 인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교사 1).

특강(특성화활동)을 해야지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아직도 계세요. 놀이 중심이지만 그래도 특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적인 개선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교사 1).

놀이중심의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어린이집 교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5) 유아교육 정책으로 체감하는 변화 및 개선 요구사항

가) 정책으로 체감하는 변화

교육과정 운영이 교사중심(교사 주도적)에서 아동중심(놀이중심)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크게 체감되는 변화로 얘기되었으며, 올해 무상급식의 도입으로 급식의 질이 높아진 점과 원비가 줄어들면서 학부모 만족도 높아진 점이 긍정적인 변화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간식이 무상급식에 포함되지 않아 간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유치원이 있는데 학부모에게 별도로 간식비만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무상급식에 교사 중식비가 포함되지 않는데, 유치원 점심시간이 교사업무(식사 지도)의 연장선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무상급식의 도입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모니터링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서류업무가 많아진 점을 지적하였다.

(교육과정 운영이) 교사 중심에서 놀이 중심으로 바뀐 부분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요(교사 1).

최근에 추진한 것 중에는 학교급식법으로 인한 급식관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영양선생님이 배치가 되었고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급식의 질이 많이 좋아졌어요(교사 1).

근데 오전 간식은 왜 무상급식에 포함이 안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중략).. 저희는 오후 간식비는 따로 받아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이 다 방과후과정을 하지는 않거든요(교사 1).

조리사님들의 인건비는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이에요(교사 2).

교육과정 지원금이 해마다 올해도 또 2만원이 올랐고요(교사 2).

나) 개선 과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으로, 경계성 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교육청의 “두런두런 프로그램(유아 사회정서언어 발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나, 이용 유아 수에 제한이 있고 선정기준 때문에 많은 유아가 사용하지 못해 아쉬웠음을 언급하였다. 교사의 근무여건과 교권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교권보호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사립유치원 교사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대체교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대체교사 수급 방안이 필요하다.

사립유치원은 인건비 문제로 저경력 교사를 선호하고, 고호봉 고경력 교사의 입지가 불안정하고 처우개선과 근속기간 보장, 정년 보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내실있는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해 사립유치원에도 지원을 같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교사 1).

아이들 적응 문제도 있고 요즘 아이들이 코로나도 겪고 나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되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개선 정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요즘에 지원이 굉장히 많던데(예: 두런두런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교사 2).

교사의 근무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권 보호가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교권을 위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프로그램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들을 위한

것도 필요하지만 교사들을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종락).. 육아 휴직 그런 것도 조금 보장이 됐으면 하고, 고경력자들은 갈 데가 이제 없거든요(교사 1).

어린이집 같은 경우 대체인력 풀이 있잖아요. 유치원 교사 같은 경우 갑자기 아플 때 대체 교사를 구하기 어려워요. 대체교사를 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교사 1).

무상교육을 통해서 사립-공립 유치원이 함께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상교육이 안 된다면 학부모님들 동의하에, 법인의 재량으로 비용을 좀 더 올린다면 어떨지. 공공성 제고를 위해 공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교사 1).

나. 유치원 원장

유치원 원장 면담조사도 사립법인유치원과 사립사인유치원의 원장 2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사립유치원 공공성 제고에 대한 의견

가) 국공립유치원 확충

저출산으로 유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 확충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하향 평준화, 서비스 다양성 부족의 문제가 우려되며, 학부모의 국공립유치원 이용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 공립에서 사립으로 이동하는 유아가 (상당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저출산으로 아이들 수가 줄어드는데 교원 정년 보장도 그렇고, 국공립 유치원 확충의 문제가 하향 평준화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에서 저희 유치원으로 넘어오는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상담해보면 교육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원장 2).

결국은 제로섬 게임인데, 국가적인 손실이고 재정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공립이 정원 미달인 데가 너무 많아요. 이미 사립도 기본적인 공공성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립 유치원을 활용하지 않고 공립 유치원을 더 지어서 사립에 있는 아이들을 빼서 거기서 데리고 가는 것밖에 안 된다 생각해요(원장 1).

나) 사립유치원 공공성 제고 정책

에듀파인의 도입과 누리과정 운영, 무상급식, 교육비 인상률 제한, 유치원평가, 교원평가 실시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은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고 보는 견해이

다, 다만 에듀파인 절차가 공립유치원 행정 시스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행정 효율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고 에듀파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행정전담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며, 매입형-공영형 유치원에 대해서는 매입형의 기준이 시세에 맞지 않으며,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사후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은 이미 에듀파인이 들어와 있어서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고요. 초·중고등학교 또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에듀파인을 행정 지원해 줄 수 있는 팀이 있어요.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사가 하고 제가 해야 되고 십시일반 나눠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사립이 60~70% 이상인데도 모든 제도는 공공성 하에 초점과 잣대가 국공립에 맞춰져 있어요(원장 2).

저는 출근해서 한 2시까지에는 에듀파인만 하고 있어요(원장 1).

에듀파인에서 회계 투명하게 하고 있고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무상급식 하고 그 식단 올리고 공개하고 관리받고, 교육비 인상률이 사립유치원 원장 재량 없고 교육과정도 새롭거나 시도 하지 못해 본 걸 도전하거나 우리 유치원만의 특색을 갖추기 위해서 연구하고 새로운 걸 도입하거나 이거 이제 없어요. 교육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치원 평가하고, 교원 평가를 하고 있죠. 이미 공공성에 해당되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원장 1).

하향 평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유치원과 다른 공립에 없는 우리 유치원만의 특색과 설립 이념을 실현하는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어요(원장 1).

다) 사립유치원 법인화

사립유치원 법인화와 관련하여 과거 국가가 사립유치원을 양적으로 확충하였다 이제는 개인의 재산을 법인화로 유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법인화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를 언급하였다. 아울러 사립사인 유치원의 공공성이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법인화로 전환해야 할 이유가 크게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미 공공성을 갖추고 있는 유치원을 법인화시키고 국공립 확충하고 그래서 교육과정이 단 일화되고 획일화되는게 좋은건지 모르겠어요. 많은 부분 사립유치원에도 공공성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어서 사립유치원 원장의 재량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데 또 법인화를 하려는 목적이 뭘까 생각하게 됩니다(원장 1).

라) 유치원 원비 인상을 상한제

원비 인상을 상한제는 물가/원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

제로, 원재료 값 상승을 차치하더라도 원비 인상을 상한제 때문에 교사 인건비를 맞춰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인상을 상한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제재 규정만 있음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수익성 경비에 대해서는 학교 제도에서 1%가 풀어졌는데 유치원은 교육비 다 묶어서 1% 안에 묶어놔오니 교육비는 올리지 못해도 교사 인건비는 올라가요. 3% 정도 저허가 해마다 올려주거든요. 본봉에도 호봉에 따라 올려주잖아요. 교사 인건비만큼이라도 조금 교육비 인상을 조금 올릴 수 있도록 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원장 2).

원재료값 상승 이런 거는 차지하고라도 교사 호봉을 못 맞춰요. 호봉 오른 만큼은 교육비 인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립에서는 이제 경력 많은 교사들이 부담스럽고 또 어떤 유치원은 10년 된 경력 교사들을 그냥 호봉 스톱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원장 1).

2)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의견

유아 놀이 중심 누리과정을 원활히 실행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교사 경력이 필요하며, 대학에서는 수학, 과학, 음악 등 분절된 활동으로 교과를 편성하기 때문에 현장과 양성과정의 교과내용이 맞지 않음을 논의하였다. 초임교사가 누리과정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장으로서 초임교사에 대한 우려가 있음도 제시하였다.

선생님 주도의 수업을 50을 한다면 나머지 50 정도는 유아 주도의 수업을 해서 적절하게 기초학력이나 기본적인 상식도 기르면서 같이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전체가 놀이 중심으로 가다 보니 정말 꼭 알아야 될 것을 주고 싶은 것을 못 주는 때가 좀 있거든요(원장 1).

교사가 발현적으로 아이들 놀이를 탐색하고 놀이를 지원하고 확대할 때까지 경력이 한 5년 이상은 되어야 해요. 보통 유치원에서 5년이상 경력이면 벌써 급급나 봉급 이런 거 맞춰주기가 쉽지 않아요. ..(중략).. 대학에서 유아 과학, 음악, 수학 다 분절된 교과로 가르키는데 현장에서는 놀이중심으로 지원해주라는 것 자체가 시스템이 안 맞아요. 현장의 괴리감은 크다고 생각합니다(원장 2).

3) 사립유치원 교원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사립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교원 본봉을 국가에서 지원하기를 희망하며, 본봉은 국가에서, 수당은 유치원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이야기하였다. 현재 지원되는 처우 개선비는 현실성이 떨어지며, 유아교사의 점심시간은 휴게시간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교사 중식비에 대한 지원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처우개선비의 경우 경력이 다르고 구마다도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교사를 뽑으면 교육청에 임용을 하잖아요. 임용이라면 나라에서 받아준다는 건데, 그러면 본봉까지 지원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원장 2).

행정 관련된 것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새로 신설된 행동 지침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행정지원과 교육청 또 저희가 무상급식하다 보니까 급식에 관련된 거, 에듀파인은 늘 있고요, 교원 평가에 대한 것들, 나이스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원장 2).

4) 유보격차 완화에 대한 의견

과거에는 만3세가 되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는 추세였는데 최근에는 어린이집에 남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바라보는 학부모의 인식이 달라졌음을 언급하였다.

시설이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아교육 전공자가 있는 데는 유치원으로 옮겨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걸 봤어요. 어린이집에서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 격차가 조금 줄어든 것 같고요. 최근에 교사들의 경력을 시스템적으로 인정하는 걸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원장 1).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작되면서 아이들 무상급식비가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영양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교사 급식비가 지원이 안 돼요. 사실 교사들이 점심 시간이 제일 바빠요. 선생님 한두명이 스물 몇 명 아이들 밥을 먹이는데 완전 노동이거든요. 근데 무상급식비 지원이 안 돼서 선생님들은 급식비를 선생님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원장 1).

5) 유아교육 정책으로 체감하는 변화 및 가장 잘한, 미흡한, 개선 요구사항

무상급식과 에듀파인, 나이스, 교원평가 관련 행정업무가 늘어났으며, 에듀파인의 도입으로 행정업무를 위한 시간과 노력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잘 추진된 유아교육 정책으로는 무상급식을 미흡한 정책 및 개선과제로는 누리과정 도입과 공공성 제고 정책으로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이 저해된 점을 들었다. 원장의 철학과 교육신념으로 교육과정과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무상교육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학부모 만족도와 교육과정의 질, 유아 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하며, 현장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무상급식의 지원으로 급식의 질이 올라가고 학부모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나, 급

식이 지원됨으로써 행정업무가 많이 늘어난 점, 교사의 중식비 지원이 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에듀파인을 통한 변화가 가장 크며, 잘 추진된 것이 있다면 무상급식인데, 이것 때문에 또 얼마나 감사가 심할지 떨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당장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 좀 좋아졌다 (원장 1).

무상교육을 시작하면 학부모들의 부담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원장 1).

유치원의 자율성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원장의 철학과 신념으로 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아이들을 잘 보살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원장 2)

VI

새 정부 육아정책 국정과제 평가(5차)

01 새 정부 육아정책 국정과제

02 새 정부 육아정책 국정과제 평가

VI. 새 정부 육아정책 국정과제 평가(5차)

1. 새 정부 육아정책 국정과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육아정책 부문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선별해 보면 다음 <표 VI-1-1>과 같다.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급여를 신설’, 아동의 건강권을 고려한,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식생활 및 건강권 강화를 위한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 마지막으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내용 등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VI-1-1>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과제목표	주요내용
1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	• (처우개선)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2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산 위기	• (부모급여 신설)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보육서비스질제고)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면적 상향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 (츠츠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 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과제목표	주요내용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업' 고도화 및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추진,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검토 -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 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3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학대 예방으로 아동의 공정한 출발 보장	•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업 활성화 등 통해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4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	• (발달장애인)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5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 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 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6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노동권 보호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 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
7	소외 계층을 포함한 전국민 대상 미디어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이용사업자·이용자 간 상생 생태계 구축	• (미디어 교육) (유아)찾아가는 놀이형 교육, (청소년)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교육, (중·장년층·노인·장애인) 특화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 제공
8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9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 서비스 확대	• (아동 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 강화

	과제목표	주요내용
10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확충과 건강 위해요인 통합 관리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국가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향유	• (식생활 건강권)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 까지 국가관리 확대 - K-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확립 및 소비기한, 디지털·점자 표시 등 선택권 보장
11	교통 및 건설·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확립과 치안 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 (교통안전)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 (속도·신호 등) 개선,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 강화 • (사회적 약자 보호)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12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	• (유보통합)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자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5).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2. 새 정부 육아정책 국정과제 평가

가. 부모

윤석열 정부(2022~2026년)에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육아정책의 3개 정책 범주(현금/의료비 지원,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돌봄/시간지원 정책)에 대해, 범주별로 향후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1) 범주별 정책 중요도

윤석열 정부(2022~2026년)에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의 4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질문하였다. 제시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중요도가 높은 국정과제로, '의료비지원'과 '건강지원'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70% 내외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산모와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체계화' 65.9%, '부모급여의 도입' 60.1%로, 전반적으로 60% 이상의 긍정 응답률 가운데에서도 의료비지원과 건강지원의 증진에 대한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1〉 윤석열 정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요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잘 모르 겠다	중요 비율 (4+5)	계(수)	5점 평균
	1	2	3	4	5				
1. (부모급여) 만0~1세 아동 현금 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7.6	5.6	22.5	21.1	39.0	4.1	60.1	100.0 (1,087)	3.8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0	1.9	20.3	27.4	46.0	2.3	73.4	100.0 (1,087)	4.2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1.7	2.9	23.7	27.0	42.3	2.4	69.3	100.0 (1,087)	4.1
4.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 확대	2.9	4.4	23.5	28.7	37.2	3.4	65.9	100.0 (1,087)	4.0

주: 5점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산출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에 관한 12개 국정과제 중 중요도가 가장 큰 것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81.4%(4.4점/5점척도)로 나타났다. 여기에 교사대아동비율의 개선과 시설면적 상향, 부모교육과 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다음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의 구축'과 '식생활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내용 제안이 각 79.5%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돌봄인력 보수체계의 개선(복지시설종사자 보수 적정화 포함)' 77.6%,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아이돌보미/민간육아도우미 자격관리제도 도입과 민간돌봄서비스 기관 등록제' 74.2%, '아동진료체계(맞춤형 교육상담 및 아동주치의제도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강화 등)' 74.1%,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 등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71.8%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제시된 모든 과제에 대해 중요하다는 긍정응답이 60% 이상으로 그 중요도가 큰 가운데, '미디어교육 및 생애주기별 격차 없는 맞춤형교육'(65.4%)과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및 유초 교육과정 연계 강화'(65.9%)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2〉 윤석열 정부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요도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매우 중요 하다	잘 모르 겠다	중요 비율 (4+5)	계(수)	5점 평균
		보통									
		1	2	3	4	5					
단위: %(명), 점	1. (미디어 교육) (유아)찾아기는 놀이형교육 (청소년) 초중고교육과정 연계 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	2.9	5.1	25.3	29.4	36.0	1.4	65.4	100.0 (1,087)	3.9	
	2.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2.0	4.8	25.8	33.2	32.6	1.7	65.8	100.0 (1,087)	3.9	
	3. (사회적 약자 보호/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0.9	2.0	15.5	24.8	54.6	2.0	79.5	100.0 (1,087)	4.3	
	4. (아동진로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강화	1.5	2.7	19.7	30.3	43.9	2.0	74.1	100.0 (1,087)	4.1	
	5. (식생활 건강권)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소비기한/디지털·점자표시 등 선택권 보장	0.7	2.2	15.2	26.7	52.8	2.4	79.5	100.0 (1,087)	4.3	
	6. (사교육경감/학습격차완화/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학습결손 해소 지원/생애 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저소득층SW·AI영재교육, 다중문화교육	1.7	3.7	21.4	30.1	40.5	2.7	70.6	100.0 (1,087)	4.1	
	7. (돌봄인력 보수체계) 돌봄인력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 적정화	0.8	1.7	17.0	29.6	47.9	2.9	77.6	100.0 (1,087)	4.3	
	8. (보육서비스 질 제고) 교사대아동비율,시설면적 상향검토, 부모교육과 시간 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0.6	1.3	13.6	27.2	54.2	3.0	81.4	100.0 (1,087)	4.4	
	9. (유보통합)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0-5세 영유아대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1.1	3.4	23.6	28.9	39.9	3.1	68.8	100.0 (1,087)	4.1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중요 비율 (4+5)	잘 모르 겠다	계(수)	5점 평균
		1	2	3	4	5				
10. (출생한 아동돌봄체계) 마을돌봄을 통한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학 교돌봄 사각지대 보충/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1.1	3.6	19.4	31.4	41.2	3.3	72.6	100.0 (1,087)	4.1	
1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민간육아도우미 교육 및 자격관리제도 도입, 민간돌봄서비스 기관등록제 도입	1.2	1.8	19.4	29.7	44.5	3.3	74.2	100.0 (1,087)	4.2	
12.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발달장애인)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기까지 검진기록 연계로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1.6	3.6	20.0	32.1	39.7	3.0	71.8	100.0 (1,087)	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문 조사」의 결과임.

윤석열 정부의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2개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적용대상 확대 및 난임 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양립 지원과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에 대한 중요도 응답이 80.7%로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유치원 방과 후과정 돌봄 대상과 운영시간 확대’에 대한 긍정응답이 77.4%로 높게 나타났다. 제시된 시간지원 과제에 대한 중요도 평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VI-2-3〉 윤석열 정부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요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잘 모르 겠다	중요 비율 (4+5)	계(수)	5점 평균
	1	2	3	4	5				
1.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1.0	2.7	18.2	31.2	46.2	0.7	77.4	100.0 (1,087)	4.2
2.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 휴직 기간/급여 적용대상 (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 가정 양립 지원	0.7	1.8	15.6	26.3	54.4	1.1	80.7	100.0 (1,087)	4.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전반적으로 3개 범주에 대한 정책별 중요도 평가에서 부모는 현금/의료비 지원 보다는, 교사대아동비율의 개선과 시설면적 상향, 부모교육과 시간제보육 개선의 양육지원 강화를 담고 있는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81.4%, 4.4점)와 ‘사회적약자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의 구축’, ‘식생활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내용’이 각 79.5%로 그 중요도가 부모에 의해 높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윤석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

각 3개 범주를 포괄하여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를 1, 2 순위로 응답하게 한 결과에서는, (1+2순위 중복응답 결과) ‘부모급여’의 중요도가 중복응답률 42.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의료비지원’에 대한 응답률 27.0%,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확대’(유치원 방과후과정 대상/운영시간 확대, 육아휴직 급여/기관 확대 등)에 대한 긍정응답이 중복 16.9%, 16.8%로 나타났다.

제시된 18개 과제 중, 부모들이 생각하는 중요도 평가는 유보통합의 추진(긍정 응답 2.0%)과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의 확대(2.9%)에서 가장 낮게 응답되었다.

〈표 VI-2-4〉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1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부모급여) 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37.5	5.2	42.7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5.5	11.5	27.0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4.0	2.9	6.9
	4.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 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 확대	2.5	3.0	5.5
유아교육·보육·초등 돌봄 정책	1. (미디어 교육) (유아)찾아가는 놀이형교육, (청소년) 초중고교육 과정 연계 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	2.3	4.7	7.0
	2.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1.7	2.5	4.2
	3. (사회적 약자 보호/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4.4	4.3	8.7
	4. (아동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아동 건강 길라잡이 (아동주치의)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강화	1.0	3.4	4.4
	5. (식생활 건강권)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 관리 확대/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소비기한/디지털·점차표시 등 선택권 보장	4.8	6.4	11.2
	6. (사교육경감/학습격차완화/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학습결손 해소 지원/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저소득층SW·AI 영재교육, 다중문화교육	4.0	6.1	10.1
	7. (돌봄인력 보수체계) 돌봄인력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 적정화	2.0	5.5	7.5
	8. (보육서비스 질 제고) 교사대아동비율,시설면적 상향검토, 부모 교육과 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4.7	7.1	11.8
	9. (유보통합)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0~5세 영유아대상 유아 교육과 보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0.6	1.5	2.0
	10. (충족한 아동돌봄체계) 마을돌봄을 통한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1.6	3.6	5.2
	1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민간육아도우미 교육 및 자격관리제도 도입, 민간돌봄서비스 기관등록제 도입	1.6	7.5	9.0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2.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발달장애인)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기 까지 검진기록 연계로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0.7	2.1	2.9
	1.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5.6	11.3	16.9
	2.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 기간/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5.4	11.4	16.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1순위 응답을 중심으로 중요도가 높은 과제별 하위특성변인을 살펴보면, ①‘부모급여’(1순위 중요도 응답 37.5%)의 경우 부, 자녀연령이 어릴수록(영아부모일수록), 외벌이가구,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 읍면지역에서 부모급여가 중요한 우선과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의료비지원’(15.5%) 응답은 부, 유아부모, 맞벌이가구와 맞벌이여부 비해당 가구에서, ⑩‘유치원 방과후과정(돌봄) 대상/운영시간 확대’(5.6%)는 모, 유아부모, 맞벌이가구와 비해당가구,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읍면지역일수록, ⑪‘양성평등 일자리 구현’(5.4%)을 위한 육아휴직 급여/기간 확대 등의 의견은 모, 맞벌이가구, 가구소득 601만원이상 고소득가구, 읍면지역일수록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표 VI-2-5〉 분석결과 정부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진중해야 할 육아정책(1순위)(계특성별)

구분	⑥ ④ ③ ② ①																	계(수)		
	부모 급여	의료비 지원	건강 지원	산모· 아동 건강 관리 체계화	미디어 교육	유치원- 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⑦ 사회적 약자 보호/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⑧ 아동 진료 체계	⑨ 식생활 건강권	⑩ 사교육 경감/학습 격차인화/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⑪ 돌봄 인력 보수 체계	⑫ 보육 서비스 질 제고	⑬ 유보 통합	⑭ 출출한 아동 돌봄 체계	⑮ 아이 돌봄 서비스	⑯ 가정방문 건강 관리사업 /별달 장애인 저녁 등 확대	⑰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 (주말· 저녁 등) 확대	⑱ 양성 평등 일자리 구현		
전체	37.5	15.5	4.0	2.5	2.3	1.7	4.4	1.0	4.8	4.0	2.0	4.7	0.6	1.6	1.6	1.6	5.6	5.4	100.0(1087)	
성별																				
남성	48.2	18.2	5.2	1.6	2.3	2.0	3.3	0.3	4.2	2.3	1.3	1.6	0.3	0.3	1.0	0.0	3.9	3.9	100.0(307)	
여성	33.3	14.5	3.5	2.8	2.3	1.7	4.9	1.3	5.0	4.7	2.3	5.9	0.6	2.1	1.8	1.0	6.3	6.0	100.0(780)	
$\chi^2(df)$									47.28(17)	***										
첫째이 기준																				
양아부모	58.2	14.4	4.3	3.4	1.0	2.4	3.4	0.0	1.4	0.0	1.0	1.9	0.5	0.5	1.4	0.5	1.9	3.8	100.0(208)	
유아부모	34.6	16.2	3.4	1.9	3.0	1.5	4.9	0.4	4.3	3.6	1.9	6.0	0.9	1.7	1.3	1.1	7.5	5.8	100.0(468)	
초등부모	30.4	15.3	4.4	2.7	2.2	1.7	4.4	2.2	7.1	6.6	2.7	4.6	0.2	1.9	1.9	0.5	5.4	5.8	100.0(411)	
$\chi^2(df)$									92.165(34)	***										
맞벌이 여부																				
맞벌이	36.6	15.9	4.0	2.7	2.2	1.6	4.2	1.0	4.8	4.0	2.2	4.9	0.5	1.5	1.7	0.7	5.5	5.9	100.0(983)	
외벌이	54.1	9.8	6.6	0.0	3.3	3.3	4.9	1.6	4.9	4.9	0.0	1.6	0.0	0.0	0.0	0.0	3.3	1.6	100.0(61)	
해당없음	34.9	16.3	0.0	0.0	2.3	2.3	9.3	0.0	4.7	4.7	0.0	4.7	2.3	4.7	0.0	2.3	11.6	0.0	100.0(43)	
$\chi^2(df)$									37.802(34)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구분	부모급여	의료비지원	건강지원	산모·아동건강관리체계화	미디어교육	유치원교사처우개선 유치원-초등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사회적약자 아동학대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이동의료체제	식생활건강권	경감/학습격차완화/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돌봄인력보수체계	보육서비스질 제고	유보통합	충혼한아이돌봄체계	아이돌봄서비스	가정 방문 건강 관리사업 /별달 장애인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 (주말, 저녁 등)	계(수)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53.7	10.4	4.5	0.0	3.0	0.0	6.0	1.5	6.0	3.0	1.5	0.0	3.0	1.5	0.0	1.5	3.0	1.5
251~350만원	38.7	16.8	1.7	0.6	3.5	1.7	3.5	0.6	6.9	2.9	2.3	5.8	0.6	1.7	1.2	0.6	5.2	5.8
351~500만원	40.8	15.7	4.2	2.9	2.0	1.3	4.9	1.3	4.9	4.6	1.6	3.3	0.3	0.7	0.7	1.0	4.6	5.2
501~600만원	33.5	14.9	5.9	2.1	2.7	1.6	4.8	0.5	3.7	5.3	1.1	6.4	0.0	1.6	2.1	0.5	8.5	4.8
601만원 이상	33.1	16.1	3.7	3.7	1.7	2.5	4.0	1.1	4.0	3.7	2.8	5.4	0.6	2.3	2.5	0.6	5.7	6.5
$\chi^2(df)$																		100.0(67) 100.0(173) 100.0(306) 100.0(188) 100.0(353)
지역구분																		
대도시	37.9	14.4	4.3	1.9	2.9	2.2	4.8	1.2	5.3	3.1	1.4	6.0	0.7	1.7	2.4	0.5	4.6	4.8
중소도시	35.1	16.1	3.5	3.5	1.9	1.5	4.8	1.3	4.6	4.6	2.7	4.6	0.4	1.9	1.0	1.3	5.8	5.4
읍면	43.4	16.9	4.2	1.1	2.1	1.6	2.6	0.0	4.2	4.8	1.6	2.1	0.5	0.5	1.1	0.0	6.9	6.3
$\chi^2(df)$																		100.0(417) 100.0(479) 100.0(189)

지표: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01$.

나. 전문가

1) 향후 중요도가 높은 정책 범주

향후 중요도가 가장 높은 정책 범주로는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이 67.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7.3%,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5.4% 순이었다.

〈표 VI-3-1〉 향후 가장 중요도가 높은 정책 범주

단위: %(명)

구분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유아교육·보육· 초등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계(수)
전체	15.4	67.3	17.3	100.0 (104)
분야				
유아교육	14.3	74.3	11.4	100.0 (35)
보육	20.9	60.5	18.6	100.0 (43)
기타	7.7	69.2	23.1	100.0 (26)
$\chi^2(df)$		3.694(4)		
전공				
유아교육/교육	17.9	62.5	19.6	100.0 (56)
보육/가족/아동	13.8	75.9	10.3	100.0 (29)
사회복지/행정/경제/기타	10.5	68.4	21.1	100.0 (19)
$\chi^2(df)$		2.216(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이 향후 중요도가 높은 이유는 영유아기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의 필요성, 일·가정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보육의 질 상승이나 노동계의 협력 및 유보통합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점,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보편적으로 제공받는 육아 정책이라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그다음으로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인데, 저출산이나 장기적인 가족기능약화 문제 예방, 부모가 직접 돌봄시 아동에게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 감염발생시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생활비 지원이 필요해졌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으며,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국민의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돌봄 정책과 가족 지원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표 VI-3-2〉 향후 가장 중요도가 높은 정책 범주로 판단한 이유

정책범주	이유
유아교육· 보육· 초등돌봄 정책	- 현재 가정을 대신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교육은 물론 양육 돌봄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임. 영유아기는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지내야 하므로 기본과정 후의 돌봄 과정의 질 수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하지만 현 실정에서 돌봄의 수준이 열악하므로 돌봄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보육/유아교육 이원체제 일원화 필요 - 초등돌봄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 - 교육/보육교사 자격요건 및 처우 격차 해소 필요 - 팬데믹상황에도 일관적인 돌봄이 이루어져야 함. - 코로나19 이후 유아교육 보육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또한 초등돌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데 한계가 있었음. - 모두의 자녀가 거치는 발달 단계별 돌봄과 교육 필요시기이고 연령적으로 취약한 시기 이므로 건강한 미래 국민을 키우는 초석이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겨짐. -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수요 맞춤 돌봄정책이 필요함. - 향후 유아교육 보육 초등돌봄은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되어 왔던 일가정 양립정책을 더욱 고도화 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 - 공적인 체계에서의 유아와 초등기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질적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질이 담보되지 않은 사교육에 대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음. - 돌봄의 공백과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 - 아동 돌봄지원정책의 기본이기 때문임. 시간자원, 현금 자원은 개별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한계적임. - 교육보육서비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모든 영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임 - 시스템 하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기 때문 - 서비스 정책으로서 가장 효과성이 높음 - 유아교육보육의 전문성 신장,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사교육 경감,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등이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기 때문 - 유아와 초등 교육은 생의 기초를 마련하는 시기로 교육이 중요하고 맞벌이 가족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인 교육과 돌봄체계를 일관성 있게 확립할 필요가 있음, 가정교육, 학교 교육, 지역사회돌봄 등이 포괄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촘촘한 아동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등의 협업과 시너지를 획기적으로 높여야함. - 정책범주별 세부 정책을 고려하였을 때 유아교육, 보육, 초등돌봄정책 범주에 포함된 정책 과제가 가장 많고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로 여겨짐. - 여성의 경력단절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육아와 관련되기 때문에, 유아기와초등시기에 대한 교육 및 돌봄정책이 탄탄하게 조직화될 필요가 있음. - 근본적으로 이 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 - 부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아동 본인이 누리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과 환경을 좌우하기 때문임. - 돌봄의 사각지대는 아동의 방임으로 이어지고, 이는 아동보호체계의 붕괴로 이어짐. - 대부분의 부모가 근로자인 현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갖춰져야 할 제도와 체제를 고도화하는 정책에 해당하기 때문임. -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유아교육의 확보가 시급함. - 방과후 초등돌봄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사교육 기관 이용 - 일관된 보육정책 필요

정책범주	이유
	- 공적인 차원에서 어린 사회구성원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부모들이 사회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즉 일-가정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녀 돌봄 정책의 지원이 다른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중요 - 부모의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중요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봄서비스 중요 -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유형의 요구를 반영하고, 돌봄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요구를 반영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실제 저출산극복, 일과 가정양립 등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아가~아동기까지의 안정된 돌봄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임. - 국가 인재 개발의 출발점 평등교육의 국가책임제 실현 -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 쓰임을 확인하기 쉽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것은 노동계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 - 영유아, 초등시기의 돌봄 정책이 안정화되어야 저출산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 - 돌봄 정책의 확대는 저출산문제, 성평등문제 등과 연관되며 젊은 세대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유아 및 초등까지 아우르는 정책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아젠다가 다수 존재함 (예: 유보통합 등). -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높은 곳으로 교육기관에서 보다 돌봄정책을 활성화 필요가 있음. - 유아교육, 보육, 초등돌봄에서 해결할 과제가 많음. - 국가정책에서 효과성과 파급성이 높음. - 급변하고 있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 과거와 달리 문재인 정부 공적인프라 확충과 공공성 강화 노력이었다면 현 윤정부에서는 분절적 서비스의 통합체계 및 효율적 운영 체계 마련 등이 중요한 대표적으로 유보통합, 초등방과후돌봄 촘촘한 돌봄 일원화 및 체계화 필요하다고 봄. - 가장 적극적 형태의 돌봄/교육 지원 정책이라서 - 저출산 극복,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이기 때문 - 현재 가장 다양한 정책과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중요도를 말해주는 것 같으며, 유아교육과 보육 및 초등돌봄정책이 촘촘하게 잘 진행되어야 궁극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됨. - 이미 우리 사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주요 업무를 기관과 교사들이 하고 있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정책이 오랫동안 이원화되어 발전한 역사 때문에 다양한 정책들이 중복, 지원의 격차 등의 이슈가 이를 증폭시키고 있음. 이에 대한 좋은 정책이 나와야 감소하는 영유아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보육이 가능하다고 봄. -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학대를 받는 경우도 높음. - 정책 영역의 범위도 가장 넓고, 돌봄서비스 제공의 양적, 질적 문제에 직결되는 정책 영역이라는 점 - 유보통합 과제의 지속적, 단계별 수행 필요

정책범주	이유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필요함. - 가장 요긴한 지원 - 감염병은 개별 돌봄이 필요함. - 국가의 지원이 고루 배분될 수 있어야 함(형평성). - 사회적 돌봄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양성평등을 통한 육아휴직 확대, 일가정 양립지원 등을 통해 부모의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와 아동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여겨짐. - 공적 돌봄인프라가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에서 이제는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 지원에 집중해야할 단계임. - 자녀의 돌봄은 수당이나 대신 돌봄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음. 직접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젊은 부모들 세대는 과거 그 어느 세대보다 자신의 자아성취와 육아를 양립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세대임. 아동수당을 지원하여 스스로 육아를 하도록 함으로서 사회적으로 육아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도 좋은 일임. 그러나 그것은 부모들의 2차적 욕구임. 1차적 욕구인 일과 가정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돌봄 시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봄. - 여성의 아동양육에 있어 힘들어 하는 것은 자녀 돌봄에 대한 독박육아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기 때문 - 다른 정책에 비해 가장 덜 실현되어 있음. - 자녀돌봄의 형태는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므로 선택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공공의 보육서비스 인프라 마련이 시급함 - 긴 노동시간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양육을 제3자에게 위탁하게 되는 경향이 커, 장기적인 가족기능약화 문제가 있고, 상시적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자녀양육 및 가족생활의 질 향상에 육아기 부모의 시간지원이 필수적임. - 양육자의 자녀 돌봄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 맞벌이 가정 부부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자녀 양육임. 조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저출산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코로나로 휴직 상태이거나 무급여, 무직 상태인 경우가 늘어 생활비 지원이 절실함. - 나머지 정책은 영유아 초등 등 자녀 지원정책이나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부모 급여 내용은 저출산 극복에 대한 대안 중 하나라고 여겨지기 때문 - 소득 낮은 계층지원 확대 필요 - 가족형태에 따른 자율적 사용을 위함.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 됨. 개별 가족의 특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경제적, 실질적인 지원 -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국민의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의료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등이 중요 - 이 부분의 지원이 하위의 돌봄 정책과 가족 지원의 간간이 된다고 봄. -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12개월 미만의 영아들에 대한 현금지원과 의료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 -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금은 가장 필수적인 것이며, 의료비 지원은 인간 존엄의 토대이므로 - 부모급여의 지원액이 매우 많음. - 국민의 양육방식 선택권 존중 -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주: 개방형으로 응답된 내용을 정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범주별 정책 중요도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의 세부 정책 중요도에 질문한 결과, 중요비율은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출산 진료비 지원)’ 8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80.8%,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 확대’ 76.0%, ‘(부모급여) 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58.7%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3-3〉 윤석열 정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요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 하다	중요 비율 (5+6+ 7)	계(수)	7점 평균
	1	2	3	4	5	6	7				
1. (부모급여) 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3.8	9.6	10.6	17.3	24.0	19.2	15.4	58.7	100.0	(104)	4.7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0	-	1.9	15.4	26.9	35.6	19.2	81.7	100.0	(104)	5.5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1.0	-	1.9	16.3	27.9	26.0	26.9	80.8	100.0	(104)	5.6
4.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 확대	1.0	4.8	1.0	17.3	28.8	25.0	22.1	76.0	100.0	(104)	5.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의 세부 정책 중요도에 질문한 결과, 중요비율은 ‘(사회적 약자 보호/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8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아동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아동 건강 길라잡이(아

동주치의)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강화' 78.8%,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76.0%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3-4〉 윤석열 정부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요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 하다	중요 비율 (5+6 +7)	계(수)	7점 평균
		1	2	3	4	5	6				
1. (미디어 교육) (유아) 찾아가는 놀이형교육, (청소년) 초중고교육 과정 연계 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	2.9	6.7	4.8	26.0	29.8	14.4	15.4	59.6	100.0 (104)	4.8	
2.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1.0	3.8	1.9	17.3	25.0	27.9	23.1	76.0	100.0 (104)	5.4	
3. (사회적 약자 보호/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1.9	-	1.0	7.7	16.3	31.7	41.3	89.4	100.0 (104)	6.0	
4. (아동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아동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강화	-	1.9	5.8	13.5	31.7	32.7	14.4	78.8	100.0 (104)	5.3	
5. (식생활 건강권) 매일 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 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소비기한/디지털·전자표시 등 선택권 보장	1.0	2.9	5.8	15.4	23.1	36.5	14.4	74.0	100.0 (104)	5.3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 하다	중요 비율 (5+6 +7)	계(수)	7점 평균
		1	2	3	4	5	6				
6. (사교육경감/학습격차 완화/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학습시스템, 메타 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 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학습결손 해소 지원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저소득층 SW·AI영재교육, 다중 문해력교육	1.0	3.8	4.8	13.5	22.1	35.6	18.3	76.0	100.0 (104)	5.3	
7. (돌봄인력 보수체계) 돌봄인력 보수체계, 근 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사 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 적정화	-	-	5.8	8.7	21.2	31.7	32.7	85.6	100.0 (104)	5.8	
8. (보육서비스 질 제고) 교사대아동비율,시설 면적 상향검토, 부모교 육과 시간제보육 개선 으로 양육지원 강화	-	1.0	2.9	4.8	10.6	23.1	56.7	90.4	100.0 (104)	6.2	
9. (유보통합) 유보통합추 진단을 구성, 0~5세 영유아대상 유아교육 과 보육의 단계적 통 합 방안 마련	2.9	1.9	2.9	12.5	6.7	15.4	55.8	77.9	100.0 (104)	5.9	
10.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을돌봄을 통한 주거 지 인근 돌봄수요 대 응,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한부모가족, 다문 화가족, 청소년부모, 1 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 비스 지원 강화	-	1.0	3.8	7.7	18.3	34.6	34.6	87.5	100.0 (104)	5.9	
11. (아이돌봄서비스) 정 부지원 확대, 아이돌 보미/민간육아도우미 교육 및 자격관리제 도 도입, 민간돌봄서 비스 기관등록제 도입	1.9	1.9	6.7	12.5	25.0	28.8	22.1	76.0	100.0 (104)	5.3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 하다	중요 비율 (5+6 +7)	계(수)	7점 평균
		1	2	3	4	5	6				
12.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발달장애인) 전문 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기 까지 검진기록 연계로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	1.9	4.8	14.4	18.3	33.7	26.0	77.9	100.0 (104)	5.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의 세부 정책 중요도에 질문한 결과, 중요비율은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 기간/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 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89.4%,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68.3%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3-5〉 윤석열 정부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요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 하다	중요 비율 (5+6 +7)	계(수)	7점 평균
	1	2	3	4	5	6	7				
1.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3.8	3.8	5.8	18.3	26.9	28.8	12.5	68.3	100.0 (104)	5.0	
2.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 기간/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1.9	1.0	7.7	20.2	36.5	32.7	89.4	100.0 (104)	5.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3) 향후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을 지정하도록 한 조사 결과는 1순위를 기준으로 할 때, ‘(유보통합)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0~5세 영유아대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부모급여) 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 70→100만원, (만1세) 월 35→50만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 교사대아동비율, 시설면적 상향검토, 부모교육과 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항목이 각각 18.3%로 그 뒤를 이었다.

〈표 VI-3-6〉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1순위, 2순위, 1+2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부모급여) 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18.3	4.8	23.1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9	4.8	7.7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1.0	1.9	2.9
	4.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 확대	1.0	-	1.0
〈유아 교육·보육·초등 돌봄 정책〉	1. (미디어 교육) (유아)찾아가는 놀이형교육, (청소년)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	-	1.0	1.0
	2.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7.7	6.7	14.4
	3. (사회적약자 보호/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3.8	4.8	8.7
	4. (아동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아동 건강 길라잡이 (아동주치의)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강화	1.0	1.9	2.9
	5. (식생활 건강권)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대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소비기한/디지털·전자 표시 등 선택권 보장	1.0	1.9	2.9
	6. (사교육경감/학습격차완화/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학습결손 해소 지원/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저소득층 SW·AI영재교육, 다중문화교육	2.9	6.7	9.6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7. (돌봄인력 보수체계) 돌봄인력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 적정화	2.9	7.7	10.6
	8. (보육서비스 질 제고) 교사대아동비율,시설면적 상향검토, 부모교육과 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18.3	20.2	38.5
	9. (유보통합)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0~5세 영유아대상 유아 교육과 보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27.9	16.3	44.2
	10. (쫄쫄한 아동돌봄체계) 마을돌봄을 통한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청소년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5.8	6.7	12.5
	1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민간육아도우미 교육 및 자격관리제도 도입, 민간돌봄서비스 기관 등록제 도입	1.0	4.8	5.8
	12.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발달장애인)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기까지 검진기록 연계로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1.9	2.9	4.8
〈자녀 돌봄 시간 지원 정책〉	1.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2.9	2.9
	2.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 기간/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2.9	3.8	6.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으로 지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보통합)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0~5세 영유아대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30여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보육과 유치원 이원체제 극복 요구, 교사의 수준 향상 필요성, 영유아의 공정한면서도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이원화된 체계에서 정책의 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부모급여) 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에 대해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일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점이 제시되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 교사대아동비율, 시설면적 상향검토, 부모교육과 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의 이유로는 높은 교사대아동비율과 물리적 환경 등의

문제로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보육교사의 질 제고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가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표 VI-3-7〉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으로 선택한 이유

	이유
(유보통합)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0~5세 영유아대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 보육과 유치원 이원체제 극복 요구가 30여년 이상 지속 - 우리나라 영유아의 공정한 출발을 통한 최상의 영유아기 경험 기회 제공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연령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양성과정 차이로 인하여 현장에서 유아들이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 또한 미래사회변화를 대비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통하여 교사의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아 통합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 - 동일한 연령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부처에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불평등을 야기함. - 유사한 일을 하면서 보수, 자격이 서로 차이가 있음. - 부처간의 통합이 되면 유보통합은 가능할 것임. - 생애 초기의 경험이 영유아의 미래 역량을 좌우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후속 출산에 대한 동기화를 가져오는데, 현재 국민으로서의 영유아는 태어나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이가 왜 발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음. 국민들에게 행정체계의 통합과 하나의 강력한 컨트롤타워에서 영유아에 대한 국가적 책임 교육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됨. - 이원화된 체계에서 정책의 효율성 떨어지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 - 유보통합은 이원화된 지원시스템을 일원화할 수 있음. 교사 자격제도를 상향조정하여 교사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교원양성기관의 질적 수준을 재고 할 수 있음. - 저출생 극복, 질 높은 유아교육서비스 증진을 위해 필수적 요소임. - 이원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 보육의 공공성, 보편성, 이용자의 편의성. 보육의 질적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유보통합은 기본적으로 영유아의 생애출발선을 공정하게 보장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도 가능하게 함. - 유보통합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개선을 통한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특히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로 이원화된 교사 자격 체계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 보육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필요 - 다른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실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 - 유보통합은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 관련한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된 지원과 운영을 위해서 - 아동의 성장발달의 연속성, 아동의 성장기간 대부분에서 돌봄과 교육으로 기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점. 보육과 교육의 서비스 질 격차 해소 등을 위해 통합 필요함. - 현행 이원화 되어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것이 다른 정책들보다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함.

	이유
(부모급여) 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 '24년) : (만0세) 월70→100 만원 (만1세) 월35→50 만원	- 저출산에 기여할수있는 정책임. - 아이키우기 좋은 정책보다 아이 낳기 좋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부모급여는 자녀출산을 원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되는 부부에게는 저출산 극복 역할 기여 - 저소득층 접근성 높일 필요 있음.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현금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양육비를 포함한 신호부부의 경제적 지원에도 도움이 됨. - 현실적 효과성이 제일 클 것으로 보임. 다양한 가족 상황에 따른 개별성 존중이 실행력을 높일 것으로 보임. - 경제적 지원이 가장 실질적인 지원임. -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가 경제적인 요인에 따른다고 보여지므로 부모 대상의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다만 현금지원 시 영아를 위한 생필품(예: 분유, 기저귀 등)에 한하여 쓸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비혼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물론 비혼과 저출산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함. 다만, 이러한 지원이 문제가 심화되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저출산 타개의 핵심 대책이라고 생각됨. - 저출산을 해소하는 우선적인 기초적 정책이라고 여겨짐. - 부모급여는 직접적 효과가 크고 부모의 재량권을 확보함. 물론 부모가 수당을 양육이외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함. -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지원이 되어야 가정양육이 많아짐. - 현실적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듦. 현금 지원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위해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음.
(보육 서비스 질 제고) 교사대아동 비율, 시설면적 상향검토, 부모교육과 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 교사대아동비율 높음으로 인한 사고 및 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이 안 됨. 국공립 시간제 보육기관 확충 필요 -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현재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 선진국과 비교 해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너무 많음. - 기관보육의 수가 많으나 교사 대 아동 비율, 물리적 환경 등의 문제로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 0~5세 아동의 초기발달과 성장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교사의 업무량과 강도를 줄이지 않고는 품질높은 서비스 공급은 불가함. -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이므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임. - 보육교사의 질 제고와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 한 부모가 믿고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출산율도 높아지기 어려움. - 저출생 시대에 아동 수도 줄었는데 교사대 아동비율, 시설면적 상향은 반드시 필요함. - 교사대아동 비율을 낮춰서 교사의 아동학대 예방과 안심 보육 가능 - 보육의 양적확대에서 벗어나 질제고가 필요함. - 보육서비스의 질이 영유아 성장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줌. -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권리 보장 - 부모의 양육부담 감소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 - 부모의 사회 경제 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정 및 발전 기여 -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의 효과성을 높이고 보육서비스의 지속적인 질 제고를 위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라고 여겨짐.

	이유
	-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돌봄을 받는 수가 압도적임. 이에 어린이집의 보육 질 향상이 주요 과제로 주목 받아야함. - 교사대 아동비율, 시설 기준 등과 더불어 국가지원이 이루어질 때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효율적임.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2,3담임제 개편, 인간기준 확대 등이 수반되어야 함 이를 토대로 일가정 양립, 경력중지 예방, 저출생, 아동학대 문제 개선 가능성 높아질 것임. -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기관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정책임.

주: 개방형으로 응답된 내용을 정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4)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로는 먼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으로 현금 및 의료비 지원이 요구되는 대상을 선별, 일회성이 아닌 아동의 상황이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보육·초등 돌봄 정책으로는 국공립 보육 기관 지속적 확충 및 이용률 제고, 돌봄 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의 처우개선, 개별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 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환경 개선, 유보통합, 초등돌봄 활성화 등을 강조하였다.

자녀 돌봄 시간 지원정책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 지원 강화, 보편적 사용 보장, 근무 유연화,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표 VI-3-8〉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

	향후 추가로 요구되는 정책 과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현금 지원보다는 바우처 제도 도입 필요 - 현금 및 의료비 지원이 요구되는 대상 선별 및 지원 - 필요한 사람에게 좀 더 많이 지원되는 것이 필요함. - 초등까지로 육아 지원 확대 필요 - 체감도 제고를 위해 유사 중복된 현금 지원 통합 필요 - 일회성 지원이 아닌 아동의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현금성 및 의료비 지원 정책 필요 - 인간 존엄을 위한 기초적인 항목이므로. - 의료비 현실화 - 의료비 걱정 없음 육아 실현 - 육아 담당자 건강관리 비용 지원 예를 들어 한의원 물리치료 등 - 어려움 있는 가정 중심 - 양육에 필요한 현물지원(유모차, 카시트 등 연령에 따른 육아용품 바우처 쿠폰) - 아동수당 인상

	향후 추가로 요구되는 정책 과제
	- 아동 수당을 확대하기보다는 실제로 아동 양육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운영이 더 효과적 -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어느 부분에 사용될지가 불분명한 현금 지원을 늘리기 보다는 현재 혜택이 부족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비 부분을 찾아서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바람직하겠음. - 수당, 사회보험, 서비스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함. 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는 그 경계를 흐리고 정책목표성을 낮추고 있음. - 산후도우미 지원확대 기간 연장 - 부모들의 공동체 돌봄, 조부모의 자녀돌봄(초등학생 자녀 돌봄까지 포함) 등에 대한 현금 지원 - 경제적 이유, 아동학대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보호아동 중에서 나이든 아동, 형제 자매가 있는 아동, 질병 및 장애가 있는 아동, 다문화 아동 등 가정위탁이나 입양이 어려운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위탁이나 입양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보호 및 입양시에 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함(미국의 위탁입양아동 지원정책 참고). - 경제구조의 변화 및 물가 상승 등을 국가 지원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결혼 및 예비 부모교육비 지원도 필요 - 가정 사정에 따라 활용가능 - 12개월 미만인 아니라 24개월(아니면 최소 18개월)미만으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함/ 현금 지원 영아는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
유아교육·보육·초등 돌봄 정책	-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인력육성 및 재배치를 위한 재교육 연수정책 실시 - 유치원교사 및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간의 상호교류 지원방안과 교육과정 공유체제 점진적 실현 필요 - 공립학교 병설 유치원 필수 의무화 계획의 점진적인 추진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공립화 완성 등 - K학년 도입 등 학제 개편 - 가족센터 등 가족서비스 기관과 부모지원 서비스 연계 - 경계선 유아들을 위한 전문가 진단 및 학급에 1:1 지원교사 지원 등의 정책 마련 - 공적인 체계 안에서 육아지원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 - 국공립 유아교육(보육)기관 지속적 확충 및 이용률 제고 - 국공립 유치원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또한 국공립 유치원이라 할지라도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파악 하고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 단계적 통합이 아닌 선부처 유보통합 후 유초중등 무상교육 확대 - 돌봄 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의 처우개선 - 돌봄정책 수립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기구 구성 - 마을공동체 뿐만 아니라,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함. - 만 1세이하에서는 기관보다는 가정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함. - 발달지연이나 부적응 등 개별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방과 후 돌봄 제도 강화 - 보육교사 교육기간 및 자격증에 관한 정비가 필요함. 유아교사와 보육교사의 수준 격차가 벌어져서는 안됨. 배출된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함. - 보육은 복지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출산 장려와 일가정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돌봄 지원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봄. - 보육의 질 향상

	향후 추가로 요구되는 정책 과제
	- 사립유치원 교사 뿐만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정책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사립유치원의 다양성 인정(모든 교육정책을 획일화하려고 하지 말 것) - 시간제 돌봄이 단순히 아이를 원할 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 필요 - 실외 놀이터 인가 조건 강화 - 아동상담 정책과의 연계 필요 - 어린이집의 질적 강화를 통한 돌봄의 수준 향상 필요 -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위하여 가정에 돌봄 도우미를 파견하는 제도와 육아를 돕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환경 개선 필요 - 유보 일원화는 여타의 문제를 자동 해결하는 방안으로 여겨짐. - 유보통합 이후 추가 돌봄에 대한 연구 필요 - 유보통합과 더불어 초등돌봄까지 연계하여 영유아돌기 발달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유보통합시 전담부처가 정해지면 영아국과 유아국을 구분하여 대상별 특성에 따른 양질의 교육지원을 위한 체계가 필요함. - 유보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보육교사양성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평가의 도입이 이루어져야함. - 유보통합의 주무부처 지정 - 유아교사, 초등교사 등 우리 사회에서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의 일과 직업 양립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유아교육 보육 초등 돌봄 확대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유아교육 보육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보급 - 유아교육 행정체계와 보육 행정체계의 통합 - 유아교육, 보육, 초등에서 장시간 돌봄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모가 일찍 퇴근하거나 재택 등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고용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 유아교육/보육교사 양성과정 통합 및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기준 강화 - 유아기 교육도 초등과 같이 오전에는 학교체제로 의무화하고, 오후에는 돌봄정책을 좀 더 확대해갈 필요가 있음. - 유초연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 유치원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어린이집 비율과 같거나 낮게 법적 규정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 정책이어야 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신체활동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질적으로 우수하고 넓은 실외놀이터를 갖추어야 하는 필수조건을 만들어 실외놀이의 확대를 꾀하여야 함. 특히 20인 이하나 49인 이하 어린이집 시설이 모두 실외놀이터를 갖추도록 해야 함. - 주 0~12세 돌봄부처 신설, 보육교육 초등돌봄 아이돌봄 등 공적 돌봄서비스 효율적 개편 및 촘촘한 돌봄 체계 마련, 보육 및 교육 시간과 돌봄 시간을 연령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아동관점 및 아동권에 맞는 교직원, 돌봄교사 등 역량 강화 - 초등돌봄 확대,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균형, 돌봄기관 명칭 하나로 통일 등 - 초등돌봄에서 학교의 정규 수업시간을 연장하고 학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 초등돌봄을 담당하는 교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의 지역사회기반 아동센터 지원 확대 - 초등전일제 시행 - 통합 (영유아) 교원 양성 정책 - 통합적 컨트롤 타워 필요

	향후 추가로 요구되는 정책 과제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공동돌봄, 조부모 돌봄 등 다양한 방향의 돌봄 형태 지원 등 - 0-2세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한 시기에 있는 영아들이 가정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린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자녀돌봄 시간 보장 정책이 필요함 - 가정내 양육을 하는 부모의 시간제보육에 대한 부분을 평일에서 주말까지 확대방안이 필요함. - 근무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권리를 부여하고, 낮아진 급여를 일반조세에서 보충해 주는 등의 적극적 정책추진이 필요함. 예) 독일 - 근무의 유연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촉진 - 기관 돌봄의 확대뿐만 아니라 가정 돌봄이 가능한 정책 지향 - 다양한 형태의 지원 - 돌봄휴가 강화 필요 - 등하교 등의 필요한 시간대 단축 근로 - 마을 돌봄 공동체 운영 - 맞벌이 가정의 경우, 육아기 동안 근무일 수 조정 및 근무시간 선택의 유연성 확대 필요 - 민간기업의 육아지원을 위한 유연근무 확대 지원 - 부모에게 자녀돌봄 시간을 제공하여 부모의 권리확대 - 수당이나 대신돌봄은 직접돌봄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함. - 수요자 뿐 아니라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과 관련 종사자들의 형편을 기초한 현실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시간지원 정책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임 - 시간지원제도 사각지대(미적용 부문)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 - 아버지의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기간 확대 - 아동을 차별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를 법적으로 금해야 함(예: 노키즈존). - 유연근무제의 일상화 및 일반화 -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주말과 저녁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인력이나 운영비용 낭비일수도 있음. 수요가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내 거점 기관을 한 곳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초등 저학년 대상 자녀돌봄 시간지원이 시급함. - 자녀 돌봄의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자녀돌봄 시간지원도 좋지만 가정이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야 함 - 자녀돌봄 시간지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자녀 양육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함. - 장애가 있는 자녀이거나 한부모 가정 등에게 좀 더 현실적인 지원 필요 - 재택근무 확대 - 직장 내 아동 돌봄 가족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 초등 1학년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긴급육아휴직 제도를 총 시간으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예: 주 10시간 등) 이를 자유롭게 자녀돌봄에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 - 코로나 때 사용되었던 다양한 시간정책 중 만족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주: 개방형으로 응답된 내용을 정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5) 정책의 방향성

향후 5년간 육아 및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의 방향성에 관련해 조사한 결과는 정책 대상을 기준으로 할 때, ‘(교직원/종사자) 아동 교육·보육·돌봄 교원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이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아동)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양질의 놀이/학습권 보장’ 24.0%, ‘(부모) 부모 수요 파악 및 부모 가정양육/돌봄역량 지원 강화’ 16.3%로 그 뒤를 이었다.

〈표 VI-3-9〉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육아 및 유아교육·보육·돌봄의 정책 방향성(정책대상)

구분	(부모) 부모 수요 파악 및 부모 가정양육/돌봄역량 지원 강화	(교직원/종사자) 아동 교육·보육· 돌봄 교원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아동)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양질의 놀이/학습권 보장	계(수)
전체	16.3	59.6	24.0	100.0 (104)
분야				
유아교육	14.3	68.6	17.1	100.0 (35)
보육	9.3	65.1	25.6	100.0 (43)
기타	30.8	38.5	30.8	100.0 (26)
$\chi^2(df)$		8.571(4)		
전공				
유아교육/교육	12.5	66.1	21.4	100.0 (56)
보육/가족/아동	13.8	62.1	24.1	100.0 (29)
사회복지/행정/경제/기타	31.6	36.8	31.6	100.0 (19)
$\chi^2(df)$		6.00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향후 5년간 육아 및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의 방향성에 관련해 조사한 결과는 정책 조합을 기준으로 할 때,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질 제고’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동대상 교육·보육·돌봄의 공공성 확대(공적인프라, 비용지원체계 등)’ 31.7%, ‘부모 시간지원 확대 지속’ 12.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VI-3-10〉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육아 및 유아교육·보육·돌봄의 정책 방향성(정책조합)

구분	부모 현금 지원 강화	부모 시간 지원 확대 지속	교육· 보육· 돌봄 서비스 질 제고	아동대상 교육·보육·돌봄의 공공성 확대(공적인프라, 비용지원체계 등)	보건의료 및 건강안전 지원 확대	계(수)
전체	5.8	12.5	47.1	31.7	2.9	100.0 (104)
분야						
유아교육	8.6	2.9	48.6	37.1	2.9	100.0 (35)
보육	7.0	9.3	53.5	27.9	2.3	100.0 (43)
기타	0.0	30.8	34.6	30.8	3.8	100.0 (26)
$\chi^2(df)$	13.890(8)					
전공						
유아교육/교육	8.9	10.7	44.6	33.9	1.8	100.0 (56)
보육/가족/아동	0.0	10.3	65.5	20.7	3.4	100.0 (29)
사회복지/행정/경제/기타	5.3	21.1	26.3	42.1	5.3	100.0 (19)
$\chi^2(df)$	10.397(8)					

향후 5년간 육아 및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의 방향성에 관련해 조사한 결과는 지원 체계를 기준으로 할 때, ‘(보편적) 모든 아동과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이용기반 및 비용지원의 확대’ 66.3%, ‘(선별적) 우선 취약계층 아동부모 대상 지원 보강에서부터 양육지원체계 점검’ 33.7%로 나타났다.

〈표 VI-3-11〉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육아 및 유아교육·보육·돌봄의 정책 방향성(보편적vs선별적 지원체계)

구분	(보편적) 모든 아동과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이용기반 및 비용지원의 확대	(선별적) 우선 취약계층 아동부모 대상 지원 보강에서부터 양육지원체계 점검	계(수)
전체	66.3	33.7	100.0 (104)
분야			
유아교육	51.4	48.6	100.0 (35)
보육	67.4	32.6	100.0 (43)
기타	84.6	15.4	100.0 (26)
$\chi^2(df)$	7.398(2)*		

구분	(보편적) 모든 아동과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이용기반 및 비용지원의 확대	(선별적) 우선 취약계층 아동부모 대상 지원 보강에서부터 양육지원체계 점검	계(수)
전공			
유아교육/교육	57.1	42.9	100.0 (56)
보육/가족/아동	69.0	31.0	100.0 (29)
사회복지/행정/경제/기타	89.5	10.5	100.0 (19)
$\chi^2(df)$	6.76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p < .05$.

향후 5년간 육아 및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의 방향성에 관련해 조사한 결과는 추가비용 부담과 비용지원 강화를 기준으로 할 때, ‘(비용지원강화) 저출생시대, 미래세대 아동 및 부모 양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가 비용 지원을 강화해야함’ 56.7%, ‘(추가비용부담)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교직원의 우수한 근로여건 확보를 위해 이용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함’ 43.3%로 나타났다.

〈표 VI-3-12〉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육아 및 유아교육·보육·돌봄의 정책 방향성(추가비용 부담 vs비용지원 강화)

구분	(추가비용부담)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교직원의 우수한 근로여건 확보를 위해 이용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함	(비용지원강화) 저출생시대, 미래세대 아동 및 부모 양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가 비용 지원을 강화해야함	계(수)
전체	43.3	56.7	100.0 (104)
분야			
유아교육	37.1	62.9	100.0 (35)
보육	46.5	53.5	100.0 (43)
기타	46.2	53.8	100.0 (26)
$\chi^2(df)$	0.807(2)		
전공			
유아교육/교육	39.3	60.7	100.0 (56)
보육/가족/아동	51.7	48.3	100.0 (29)
사회복지/행정/경제/기타	42.1	57.9	100.0 (19)
$\chi^2(df)$	1.217(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다소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는 비율은 전체 76.9%로 과반수 이상이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3-13〉 유보통합의 필요성

구분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보통	다소 필요 하다	매우 필요하다	필요 비율 (4+5)	계(수)	5점 평균
	1	2	3	4	5			
전체	3.8	7.7	11.5	19.2	57.7	76.9	100.0 (104)	4.2
분야								
유아교육	2.9	11.4	11.4	20.0	54.3	74.3	100.0 (35)	4.1
보육	7.0	9.3	11.6	16.3	55.8	72.1	100.0 (43)	4.0
기타	0.0	0.0	11.5	23.1	65.4	88.5	100.0 (26)	4.5
$\chi^2(df) / F$			5.734(8)					1.6(a)
전공								
유아교육/교육	5.4	8.9	8.9	23.2	53.6	76.8	100.0 (56)	4.1
보육/가족/아동	3.4	10.3	13.8	10.3	62.1	72.4	100.0 (29)	4.2
사회복지/행정/경제/기타	0.0	0.0	15.8	21.1	63.2	84.2	100.0 (19)	4.5
$\chi^2(df) / F$			5.714(8)					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VII

결론 및 정책제언

01 결론

02 정책제언

Ⅶ.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육아정책 각 부문별 성과(5차년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는 ‘아동수당제도’로 54.8%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의료비 지원’ 30.8%, ‘건강지원’ 14.4% 순으로 평가되었다.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아동수당제도’ 항목이 11.2%p만큼 크게 하락했다. 그 외 ‘의료비 지원’과 ‘건강지원’에 대한 비율은 상승하였다.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로는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1.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12.5%,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2.5%,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11.5%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의 긍정 응답률이 2.9%,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는 3.8%에 그쳐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2021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항목의 긍정비율은 7.0%에서 11.5%로 4.5%p 상승하였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항목의 응답률은 1.0%에서 5.8%로 4.8%p 상승하였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는 6.2%p로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자녀돌봄 시간지원 부문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정책으로는 ‘육아휴직제도’로 응답자의 49.0%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근제)’의 성과를 가장 높이 평가한 응답률은 9~16%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육아정책 성과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임신·출산 건강 지원 과제에서 성과지표 중 ‘난임·우울증상담센터 대상자 만족도’는 증가추세에 있다. 아동수당 지급 과제의 성과지표인 ‘아동수당 지원 만족도’는 2018년 71.4점, 2019년 71.5점, 2020년

74.6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21년도에 목표 수치인 73점으로 하락했다.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목표의 관리과제인 ‘보호대상아동 지원체계 강화 및 아동인권증진’의 경우, 성과지표 중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을 위한 관리과제의 경우, 아동안전사고예방 교육 만족도가 2018년 94.0%에서 2019년 96.3%로 상승하였다가, 2020년 95.8%로 하락 후, 2021년에 다시 96.2%로 상승하였다.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에서는 수요자중심의 무상교육기반 강화 과제 중 성과지표 ‘보육료 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2018년 80.9%에서 2019년 81.8%로 증가하다가, 2020년 74.1%로 큰 하락을 보였고, 2021년에 다시 81.6%로 회복했다. 동 성과목표 중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과제의 경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비중’ 성과지표는 2018년 9.2%, 2019년 11.6%, 2020년 14.0%, 2021년 16.3%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다.

교육부(2018~2021년)에서 시행한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로 ‘유아교육 국가 책임 강화 및 유치원 투명성 지속 제고’ 관리과제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충 수’는 2018년 25.5%, 2019년 28.5%, 2020년 29.8%, 2021년 31.0%로 매년 증가했다. 방과후 돌봄 정책 활성화에 관한 과제로서 성과지표인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수는 2018년 26.1만명에서 2019년 29.0만명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에는 25.6만명으로 감소하는 등락을 반복했다.

여성가족부(2018~2021년)에서 시행한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가족정책 기반구축 단위사업의 경우 성과지표 중 ‘가족친화인증 기업(관)수’는 2018년 3,328개, 2019년 3,833개, 2020년 4,340개, 2021년 4,918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경우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성과지표에서도 2018년 89.9점, 2019년 90.2점, 2020년 90.6점, 2021년 91.4점으로 매해 증가하였다. 한부모가족 지원(기금) 사업의 성과지표인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만족도 역시 2018년 74.6점, 2019년 79.4점, 2020년 80.5점, 2021년 80.6점으로 매년 개선되었다. 가족서비스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 상담실적’도 매년 증가하였다(2018년 132,115건, 2019년 155,641건, 2020년 161,466건, 2021년 194,802건).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육아정책 성과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 성과 목표 중 남녀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과제에서도 모든 성과지표에서 매년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자수 2018년 17,665명, 2019년 22,297명, 2020년 27,423명, 2021년 29,041명,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 수 2018년 1,111개, 2019년 1,153개, 2020년 1,216개, 2021년 1,248개로 매해 증가하였다.

2. 정책제언

가. 현금 지원의 방향성 확립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의 방향성은 선별적 확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금지원의 경우 적절한 규모가 지원될 때 만족도가 다른 정책들에 비해서 매우 크게 증가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한 정책을 분류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는 ‘아동수당제도’(54.8%), ‘의료비 지원’(30.8%), ‘건강지원’(14.4%) 순으로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이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가 다른 정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맥락으로 성과가 ‘미흡’한 정책에 대한 응답을 보면 ‘건강 지원’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1년 56.0%에서 다소 감소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50.0%를 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각종수당 등 현금지원’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부정적 응답을 한 경우, 그 이유를 보면, 현금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인 만큼 ‘지원금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80.0% 이상인 것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규모의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현금지원의 경우에는 신규 정책을 계속해서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 시기별 영유

아 인구규모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준한 선별 혹은 보편지원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나영 외(2019: 294)에 따르면, 비용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금 지원의 경우, 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지원 비용수준을 높이는 것이 수요자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때 모든 비용 지원정책의 지원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정책의 인지도 및 만족도가 낮은 비용지원 정책을 선별해 내고, 인지도 및 만족도가 높은 정책에 대하여 보다 집중하여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즉, 제한적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수요가 높지만 보편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은 정책 확대에 대하여 절감한 비용을 활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양육정책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의 포괄적 확대

아동수당의 경우,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제도의 목적을 보다 포괄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즉,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정책의 1차적 목적과 더불어 저출생을 개선하기 위한,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목적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가 출산, 즉, 둘째아 부터는 아동수당 지원의 증액을 고려하여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의료비 지원 수준의 확대

의료비 지원의 경우 난임부부와 산모 및 신생아 지원사업이 포함된 ‘건강지원’(52.9%)이 전문가 조사에서 정책성과 ‘미흡’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및 지원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건강 지원사업의 포괄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난임부부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충분한 지원이 부족하여, 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선되기는 하였

으나 여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비중이 크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수준의 비용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나. 정책 인지도 및 이용률 수준에 따른 정책성과의 집중 관리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정책인지도 및 이용률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인지도가 높지만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원 정책을 우선 파악하고, 이렇게 파악된 정책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연계를 통한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집중 성과관리 필요 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

지난 문재인정부 5년간 이루어진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전반에 대한 수요자 부모의 성과평가를 살펴보면 성과가 큰 정책을 설문하였을 때 취학전 유아기 아동중심 놀이중심의 ‘누리과정 개정’, ‘초등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낮은 응답률을 보인 정책의 경우, 해당 이슈들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만큼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개선이 단행되었지만, 여전히 부모의 성과평가에서는 정책의 성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성과 평가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정책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성과 관리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간제보육의 활용도 제고

다양한 보육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시간제보육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하지만 시간제보육의 경우 인지도는 82.6%로 높은 수준인 반면에 이용률은 13.0%에 그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만족 비율은 63.4%(2019), 54.4%(2020), 55.1%(2021), 71.8%(2022)로 2019년 이후 하락하였던 그 수준이 2022년에는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만족도가 높은 지원 정책 인만큼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간제보육 이용대상자를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의 일

환으로 2020년 12월 예술인, 2021년 7월 특수형태근로 12개 직종,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 대리운전 기사 2개 직종, 2022년 7월 1일부터는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골프장캐디,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다. 이러한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근로형태의 자녀 양육 부모를 지원하는데 시간 제보육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상기 특수형태근로 여성종사자의 경우 양육을 위해 상대적으로 본인의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특수형태근로 혹은 자영업과 같은 직종을 선택한 경우가 많아 특히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유연한 양육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제보육 확대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용시간 충분성 확보 위한 추가적 보육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

보육지원개편에 대한 만족도에는 부모들의 의견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부모 설문조사를 보면, 29.0%의 부모들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는데, 37.0%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므로’를 그 이유로 선택하였다. 영유아 부모 면담조사에서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이 줄어들어 보육의 질 제고에 대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면담조사에서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어린이집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김근진 외, 2020). 하지만 2022년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43.1%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어서’(77.3%)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개편에 불만족하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설문했을 때, 여전히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없어서’(49.1%)의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들의 이용시간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중요한 비중으로 정책운영에 반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 자녀돌봄 시간지원 사각지대 감소 및 정책 활용도 지속적 제고

중소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육아지원정책 활용도 제고

‘육아휴직제도’의 수행달성도에 대한 긍정평가의 비율(64.4%)은 2021년 조사결과(48.0%)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측면

에서도 ‘육아휴직제도’가 가장 큰 성과를 보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2021년 조사의 63.0% 보다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의 의견에서 제시되었듯이 중소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의 활용을 높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육아참여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입

아울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에 대한 실적은 2018년 17,662명에서 2021년 29,041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자체평가에서는 ‘다소 우수’ 혹은 ‘매우 우수’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와 모의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에서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의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은 37.2%인 반면에 부의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은 10.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보육실태조사(김은설 외, 2021)에서도 나타난다. 취업 부모의 육아휴직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 32.6%, 부 2.1%로 나타났고, 육아휴직 기간 역시 모 평균 17.8개월, 부 평균 9.5개월로, 어머니의 사용시간이 약 8개월 긴 것으로 나타나 성별의 차이가 여전히 크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보다 남성들의 육아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바, 이들의 참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성들의 육아관련 휴가·휴직사용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직장 및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김나영 외, 2019: 265-266), 이를 위해서 향후 일정시점까지는 남성의 이들 제도 활용을 보다 더 강제하는 등의 아버지의 육아휴직 활용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정책시행계획의 목표수치를 보다 상향하여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정부 차원에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한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

육아휴직 사용과 업무의 전문성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육아휴직제의 자유로운 사용여부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직종에 따라서는 육아휴직제의 사용이 업무의 전문성 저하를 초래하거나, 나아가서는 원 업무로의 복귀 혹은 직장으로의 복귀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장에서의 활용도가 낮은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 즉, 결국 해당 제도의 사용이 개인의 전반적인 직장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경력유지와 돌봄시간 확보를 위하여 또 다른 유형의 시간정책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의 활용제고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조사에 따르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이용경험은 모 18.2%, 부 5.8%로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어 해당 제도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라. 지속적으로 요구도 높은 정책에 대한 재평가 및 재구조화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 관련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2개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교사대아동비율의 개선, 시설면적 상향, 부모교육과 시간제보육 개선)’(8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의 질 제고에 대한 높은 요구는 4차년도 연구(김근진 외, 2021: 317-318)에서도 보고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이었고, 특히 만 0세에 대한 비율 개선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의 요구도가 높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적극적으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요구도 높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지난 연구에서 보고한 만 0세에 대한 높은 요구 부분을 반영하여 특정 연령만이라도 비율의 현실화를 추진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마. 육아지원정책 관련 데이터 기반화 및 정보수집 체계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79.5%). 포괄적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정보 수집의 차원이 보다 세밀하게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보수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20년 정부는 부처 간(복지부, 경찰청, 법무부) 아동학대 관련 정보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의 발굴-적극대응-재발방지 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정보가 아동이 처한 위

험도 판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정보가, 아동의 위험도에 따라 수집 및 관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정 내 아동학대 재발은 오히려 경미한 학대로 판정받아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김나영 외, 2021: 116).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이후 별도의 조치 없이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신고 이후 학대 미판정 된 아동을 ‘잠재적’ 아동학대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의 장기결석,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고위험 아동가구 도출 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도 포함하여 아동학대 정보관리를 보다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김나영 외, 2021: 116). 궁극적으로 아동학대 정부 수집 체계를 아동학대 신고 접수된 사례, 아동학대 판정 이후 판결을 받은 사례, 원가정 조치 사례 등으로 보다 세분화 하여 관리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포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나영 외, 2021: 111-112).

바. 다양한 노동유형의 양육 부모 지원 위한 맞춤형 정책 강화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원하는 형태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이때 부모의 직접 돌봄의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모의 직접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육을 위한 절대적 시간확보가 가능해야 하며, 이러한 시간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해진 노동유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근로유형별로 양육시간확보를 위한 육아지원 시간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부모가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외에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의 추가적인 시간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강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지원정책의 활용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할 것이며, 맞벌이 시간제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육아휴직 등의 시간지원정책의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사. 중앙-지방 연계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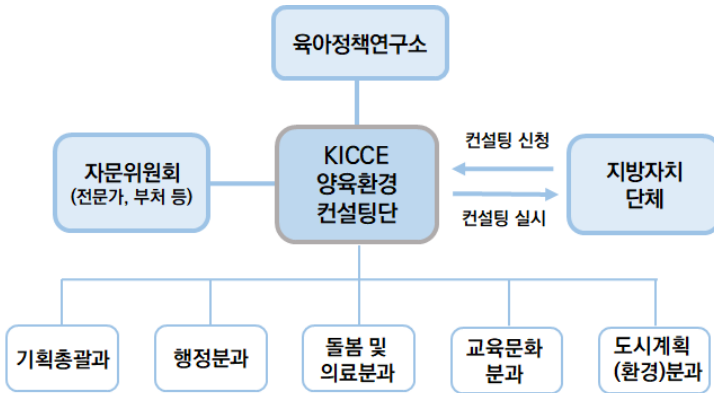
중앙-지방 보육정책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출산장려금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의 사업은 수요가 높으나 대부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운영여부, 운영 프로그램 수 등의 지역적 차이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국고 사업으로 확충할 사업예산에는 투자하되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감소, 어린이집 초과공급, 도농간 아동수 격차에 따른 지역별 보육예산투입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통해 보육예산의 효율적 투입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 필요가 필요하다. 또한 보편적으로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한 적절한 수요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중앙-지방 연계 중장기 보육지원 계획 수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 계획은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 현황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보육기관 분포, 영유아 인구규모, 지자체 담당인력, 보육서비스 인프라 등)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보육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포괄적 지역분류의 개념을 정립한다. 이러한 개념을 법제화하여 향후 보육정책 및 사업수립에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수립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분류를 시행하고(예, 보육취약지역(현재), 잠재적 보육취약지역 등), 분류 지역그룹별 특성을 분석한다. 중앙정부는 지역그룹별 맞춤형 사업의 큰 틀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세부적인 시행사업(정책)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 비중과 편성을 배분하여 보육재정의 효율화를 달성한다.

[그림 VI-2-1] 맞춤형 보육사업(정책) 개발 절차(안)



구체적인 세부 시행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육아정책에 대하여 포괄적인 목표수립과 추진계획이 설정되어야 하지만 지방정부의 경우 실무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연속성 있는 사업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육아정책연구소와 같은 관련 연구기관을 통한 컨설팅 지원 단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컨설팅 내용을 수립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해당 컨설팅은 지역의 양육환경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정리-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보다 지역 밀착형 육아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컨설팅을 운영하기 위한 개괄적인 체계로는 김나영 외(2021) 연구에서 제안한 컨설팅단(가칭)을 보완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컨설팅 총괄을 육아정책연구소가 맡아 연구소 내 「(가칭)KICCE 양육환경 컨설팅단」을 구축하여 지역특성을 분석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그 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그림 VI-2-2] KICCE 양육환경 컨설팅단(가칭)



자료: 김나영 외(2021).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Ⅲ):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시범 적용. 육아정책연구소. p.272.

아. 맞춤형 보육컨설팅 제공을 통하여 보육의 질 제고 강화

소규모, 농어촌 등 여러 특수한 여건에 놓여 있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을 고려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지역별 여러 특수한 여건(소규모 어린이집, 문화체험시설 부족 등)을 고려한 보육컨설팅 프로그램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하며, 컨설팅 제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의 경우 전환의 조건으로 정기적인 보육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자. 인구유입 정책과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연계

인구소멸 위기로 인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혹은 농촌으로의 청년유입 사업 및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 및 정책의 경우 단순하게 일자리 사업이나 정착금 지원에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유입된 청년이 정착하여 이후의 삶을 그 지역에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결혼/출산/양육에서 어려움이 없는 환경 조성 방안도 반드시 연계하여 수립해야 할 것이다. 즉, 양육인프라가 구축되거나 적절한 양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구유입 정책은 그야말로 단기성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구정책과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은 반드시 밀접하게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8). 2018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 고용노동부(2019a).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 고용노동부(2019b). 2019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 고용노동부(2020a).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 고용노동부(2020b). 2020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 고용노동부(2021a).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 고용노동부(2021b). 2021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 고용노동부(2022a).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 고용노동부(2022b). 2022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 교육부(2018). 2018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 교육부(2019a).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 교육부(2019b). 2019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안).
- 교육부(2020a).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 교육부(2020b). 2020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 교육부(2021a).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 교육부(2021b). 2021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 교육부(2022a).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 교육부(2022b). 20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 김근진, 박창현, 김희수(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I):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김근진, 유해미, 조혜주(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김나영, 권미경, 오동석, 정유나(2021).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II):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시범 적용. 육아정책
연구소

- 김나영, 김은설, 이재희, 이혜민(2018).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의 설치효과 및 만족도 분석과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육아정책연구소.
- 김나영, 유해미, 박은정, 김자연, 송신영(2021).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나영, 황선영, 엄지원(2019). 영아 양육지원 수요 분석 및 종합적 대응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 김지현, 최정원, 윤유나(2020).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델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 박원순, 김희수(2019).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운영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연구. 충청남도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 최윤경, 권미경, 최효미, 김나영, 김자연, 박은영(2021).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대한민국정부(2018). 2018년도 성과계획서(여성가족부).
- 대한민국정부(2019a). 2018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
- 대한민국정부(2019b). 2018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여성가족부).
- 대한민국정부(2019c). 201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고용노동부).
- 대한민국정부(2019d). 2019년도 성과계획서(여성가족부).
- 대한민국정부(2020a). 201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
- 대한민국정부(2020b). 201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여성가족부).
- 대한민국정부(2020c). 2020년도 성과계획서(여성가족부).
- 대한민국정부(2021a). 202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
- 대한민국정부(2021b). 202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여성가족부).
- 대한민국정부(2021c). 2021년도 성과계획서(변경)(여성가족부).
- 대한민국정부(2022a). 202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
- 대한민국정부(2022b). 202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2018). 2018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 보건복지부(2019a).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 보건복지부(2019b). 2019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 보건복지부(2020a).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 보건복지부(2020b). 2020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 보건복지부(2021a).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 보건복지부(2021b). 2021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 보건복지부(2022a).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 보건복지부(2022b). 20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 이성우, 민성희, 박지영, 윤성도(2005). 로짓·프라빗모형 응용. 박영사.
- 이운진, 양미선, 김문정(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육아정책 연구소.
- 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최효미, 이재희, 이운진, 윤지연, 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5).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 최윤경, 김나영, 이혜민(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통계청(2021). 2021년 출생 통계.
- 한치록(2022). 계량경제학 강의. 박영사.



Abstract

2018~2022 Childrearing Policy Analysis and Outcome Evaluation(V) : Focusing on 2021~2022 Policies

Nayoung Kim, Yoon Kyung Choi, Hee Sue Kim

This study is the last annual study of 「Analysis and Tasks of Childcare Policy (2018~2022)」, which was conducted as a five-year study, and its main purpose is to review the achievements of childcare policies that have been promoted so far, and to find ways for future improvements.

The lifestyle of Korea's childrearing households is rapidly changing, such as the increase in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changes in household types, and accordingly, the needs of policy consumers are constantly changing in raising children. Therefore, it is very meaningful to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so that the government's various efforts can show positive results, and to seek ways to improve them.

In this study, the categories of childcare policies are comprehensively defined as cash and medical expense support, early childhood education, child care, primary care policies, and childcare time support policies. In addition to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consultation based on the policy plans proposed by each ministry and the degree of achievement against the annual targets, we examined how the goals and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implemented are felt from the perspectives of parents, field staff, and experts, and reflected in the child-rearing process and environment as a whole.

In addi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actual results of childcare policies, survey results were conducted among parents, childcare policy experts, and field faculty and staff, and they were use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childcare policies in a larger framework.

Keyword: Childrearing policy, Policy analysis, Outcome evaluation



부록1.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설문조사 결과)

1) 정책의 충분성 및 포괄성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은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도입된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가족돌봄휴가제도가 포함된다.

2020년에 일시적으로 지급된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장기화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서비스 이용비용의 부담과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한 가구소득의 감소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아동의 성장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양육비용과 가구소득의 감소에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부록 표 1-1〉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의 성과분석 요소

목표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세부 목표	성과분석 요소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아동돌봄쿠폰 40만원/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양육 비용 부담 완화 - 가구소득 보전	-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의 충분성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정도) -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의 포괄성 -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의 만족도 (도움 정도 인식)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의 양적 확충 -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의 질적 수준 제고	- 긴급돌봄 이용률 - 긴급돌봄 만족도
	가족돌봄휴가 도입	- 가족돌봄휴가 이용률 제고 - 가족돌봄휴가 성별 이용률 차이 완화 - 가족돌봄휴가 사각지대 해소	- 가족돌봄휴가 이용률/이용가능성 - 성별 가족돌봄휴가 이용률 - 성별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 - 가족돌봄휴가 사각지대 현황

자료: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84.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의 성과지표별 산식(측정방법) 및 이용자료는 다음과 같다.

〈부록 표 1-2〉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의 성과지표별 산식(측정방법) 및 이용자료(추후보완)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성과지표 (세부 지표)	산식(측정방법)	이용자료	부처 성과지표 관련
아동양육 한시지원 (아동돌봄 쿠폰 40만원/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의 충분성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정도)	- 아동 1인당 연간 지출 비용 중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	- 아동 1인당 연간 지출 비용관련 선행연구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의 포괄성	해당 연령에서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을 지원받는 비율	- 관련 정책자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의 만족도(도움 정도 인식)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만족도 (도움 인식 정도):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문항(5점 척도)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긴급돌봄 이용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긴급돌봄 이용 현황	관련 정책자료	
	긴급돌봄 만족도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에 대한 부모, 어린이집·유치원 원장·교사, 초등돌봄전담사 만족도 및 개선사항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 부모 및 어린이집·유치원 원장·교사, 초등돌봄전담사 설문조사 / 면담조사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자 수/이용가능성	-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사용자 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가능성: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가족돌봄휴가 이용 문항(5점 척도)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현황 -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성별 가족돌봄휴가 이용률	가족돌봄휴가 사용자 수 성별 비율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현황	
	가족돌봄휴가 사각지대 현황	가족돌봄휴가 사각지대: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가족돌봄휴가 이용 문항(5점 척도)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자료: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84~85.

2) 정책 만족도 및 성과평가 결과

가) 부모

단계적 거리두기 완화 등 위드코로나 대응이 이루어진 2021년 이후 현재까지,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정책에 대한 이용 여부와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아동돌봄쿠폰’을 지급받았다는 응답이 36.0%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휴원·휴업 기간 ‘긴급돌봄’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어린이집(33.3%), 유치원(22.9%), 초등학교(16.8%)로 나타났다. 2021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⁵⁾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14.6%로 나타났으며, 부-모 가족돌봄휴가 이용률은 각 7.7%, 9.0%로 나타났다.

하위특성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원 대부분에서 ‘모’의 응답이 유의하게 많았으며, 휴원·휴업 기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긴급돌봄’ 이용은 유아 부모에서 공통적으로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어린이집 긴급돌봄’의 경우 맞벌이가구와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어린이집에서의 긴급돌봄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초등학교 긴급돌봄’의 이용은 가구소득 601만원이상 고소득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외벌이가구에서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부-모 가족돌봄휴가’의 이용은 초등부모에서 유의하게 많았으며,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구에서,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돌봄휴가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모 가족돌봄휴가는 중소도시 지역에서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에 대한 긴급지원은 유아/초등 부모와 가구소득 501만원 이상 가구에서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코로나19 관련 대응에서 긴급돌봄 서비스와 돌봄휴가의 이용 및 비용지원의 수혜가 대체로 맞벌이가구 및 초등/유아 부모 위주로 좀 더 많고, 가구소득 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5) 코로나19로 기존 돌봄 인프라를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하여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씩 지원함.

〈부록 표 1-3〉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아동양육한 시지원(아동 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 돌봄쿠폰 20만원)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 (유치원)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 (초등학교)	모 가족돌봄 휴가	부 가족돌봄 휴가	2021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사업
	n=1,087	n=877	n=545	n=411	n=1,087	n=1,087	n=1,087
전체	36.0	33.3	22.9	16.8	9.0	7.7	14.6
성별							
남성	28.3	22.5	16.9	7.3	3.9	7.8	8.5
여성	39.0	37.4	25.7	20.8	11.0	7.7	17.1
$\chi^2(df)$	14.733(2)**	19.740(2)***	7.746(2)*	11.657(2)**	13.834(2)**	1.586(2)	15.468(2)***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12.0	16.7	12.5	-	3.4	4.8	10.1
유아부모	41.7	42.4	24.8	-	9.8	7.9	16.2
초등부모	41.6	26.7	21.8	16.8	10.9	9.0	15.1
$\chi^2(df)$	70.412(4)***	48.358(4)***	5.838(4)	-	26.348(4)***	24.054(4)***	32.508(4)***
맞벌이 여부							
맞벌이	36.5	33.6	23.3	16.6	9.7	8.3	14.5
외벌이	31.1	22.7	25.7	20.0	1.6	3.3	13.1
해당없음	30.2	40.6	12.5	17.6	4.7	0.0	18.6
$\chi^2(df)$	1.696(4)	4.237(4)	4.987(4)	1.797(4)	6.574(4)	19.702(4)**	1.508(4)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25.4	27.5	12.9	13.6	1.5	1.5	14.9
251~350만원	41.6	25.2	19.2	10.3	2.9	4.6	11.0
351~500만원	38.2	31.0	23.3	11.9	7.8	8.5	12.7
501~600만원	34.6	35.8	19.4	13.3	8.0	6.4	16.5
601만원 이상	34.0	38.6	27.9	25.2	15.0	10.5	17.0
$\chi^2(df)$	10.101(8)	10.108(8)	9.287(8)	17.358(8)*	48.327(8)***	27.413(8)**	12.086(8)
지역구분							
대도시	34.5	32.8	22.5	17.8	8.6	7.9	13.7
중소도시	36.1	34.4	22.1	16.3	9.6	7.1	16.1
읍면	38.6	31.1	26.1	15.7	8.5	9.0	13.2
$\chi^2(df)$	6.884(4)	6.490(4)	5.912(4)	1.849(4)	11.309(4)*	6.846(4)	8.841(4)

주: 해당 지원을 이용한 응답자 비율을 산출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휴원·휴업 기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을 이용한 이유는, ‘맞벌이로 인해 가정내양육이 불가능하여’라는 응답이 6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관의 감염예방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어’(16.5%),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할 수 있어서’(10.6%)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부의 경우 기관의 감염예방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어서라는 응답과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모의 경우 맞벌이로 가정내양육이 불가능하여 이용한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많았다.

그밖에 ‘맞벌이로 인해 가정내양육이 불가능하여’ 이용한다는 응답은 유아/초등 부모와 맞벌이가구 및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 그리고 가구소득 501만원이상 고소득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기관의 감염예방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어서’라는 응답은 영아부모와 가구소득 251~500만원미만 중소득 가구에서,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읍면지역에서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은 유아부모와 외벌이 및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에서, 그리고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1-4〉 긴급돌봄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맞벌이로 인해 가정 내 양육이 불가능하므로	기관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주위에 가까이 있으므로	비용 지원이 되어서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기타	계(수)
전체	66.5	16.5	2.2	2.0	10.6	2.2	100.0 (358)
성별							
남성	44.1	23.5	2.9	2.9	20.6	5.9	100.0 (68)
여성	71.7	14.8	2.1	1.7	8.3	1.4	100.0 (290)
$\chi^2(df)$	22.316(5)***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41.2	35.3	5.9	11.8	5.9	0.0	100.0 (17)
유아부모	65.2	15.2	2.0	1.0	13.6	3.0	100.0 (198)
초등부모	71.3	16.1	2.1	2.1	7.0	1.4	100.0 (143)
$\chi^2(df)$	21.640(10)*						

구분	맞벌이로 인해 가정 내 양육이 불가능하므로	기관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주위에 가까이 있으 므로	비용 지원이 되어서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기타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67.5	16.9	2.5	2.1	8.9	2.1	100.0 (326)
외벌이	43.8	18.8	0.0	0.0	31.3	6.3	100.0 (16)
해당없음	68.8	6.3	0.0	0.0	25.0	0.0	100.0 (16)
$\chi^2(df)$	15.843(10)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50.0	6.3	0.0	0.0	37.5	6.3	100.0 (16)
251~350만원	33.3	26.2	7.1	2.4	26.2	4.8	100.0 (42)
351~500만원	56.7	23.3	4.4	1.1	14.4	0.0	100.0 (90)
501~600만원	76.9	13.8	1.5	4.6	0.0	3.1	100.0 (65)
601만원 이상	79.3	11.7	0.0	1.4	5.5	2.1	100.0 (145)
$\chi^2(df)$	72.092(20)***						
지역구분							
대도시	65.9	13.8	2.2	2.2	12.3	3.6	100.0 (138)
중소도시	70.0	17.5	1.9	1.3	8.1	1.3	100.0 (160)
읍면	57.6	20.3	3.4	3.4	13.6	1.7	100.0 (59)
$\chi^2(df)$	7.496(10)						

주: 긴급돌봄을 이용한 3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휴원·휴업 기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코로나 감염우려 때문’이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이용자격이 되지않아’(21.7%),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할 수 없어서’(16.4%)로 응답되었다.

‘코로나 감염우려 때문’이라는 응답은 모, 유아/초등부모에서 유의하게 많았으며, ‘이용자격이 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초등부모에서 많아 초등돌봄서비스 이용에 자격제한이 있음으로 인한 미이용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이용자격이 되지 않아서’ 미이용했다는 응답은 외벌이가구, 가구소득 250만원이하 저소득가구에서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할 수 없어서'라는 미이용 이유는 부,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였다.

〈부록 표 1-5〉 긴급돌봄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이용자격이 되지 않아서	이용신청을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공급부족)	주위에 가까이 없어서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기타	계(수)
전체	43.7	21.7	5.9	2.6	16.4	9.8	100.0 (623)
성별							
남성	41.1	20.8	5.9	1.0	23.3	7.9	100.0 (202)
여성	44.9	22.1	5.9	3.3	13.1	10.7	100.0 (421)
$\chi^2(df)$			13.205(5)*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37.5	15.6	10.9	3.1	17.2	15.6	100.0 (64)
유아부모	47.3	17.3	3.5	3.1	17.3	11.5	100.0 (260)
초등부모	41.8	26.8	7.0	2.0	15.4	7.0	100.0 (299)
$\chi^2(df)$			20.911(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44.6	21.2	6.4	2.3	15.9	9.6	100.0 (565)
외벌이	42.4	33.3	3.0	3.0	12.1	6.1	100.0 (33)
해당없음	24.0	16.0	0.0	8.0	32.0	20.0	100.0 (25)
$\chi^2(df)$			17.343(10)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43.2	27.0	0.0	8.1	18.9	2.7	100.0 (37)
251~350만원	46.5	22.8	5.9	2.0	11.9	10.9	100.0 (101)
351~500만원	45.1	20.1	4.9	1.6	17.9	10.3	100.0 (184)
501~600만원	41.5	24.5	3.8	4.7	17.0	8.5	100.0 (106)
601만원 이상	42.1	20.0	9.2	1.5	16.4	10.8	100.0 (195)
$\chi^2(df)$			20.884(20)				

주: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은 6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코로나19 관련 긴급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긍정응답은 2021년 대비 2022년 조사에서 ‘아동돌봄쿠폰’과 ‘어린이집 긴급돌봄’ 이용, ‘부-모 가족돌봄

휴가’ 이용에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초등학교 긴급돌봄’ 이용에 대한 만족 응답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22년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집의 긴급돌봄’ 이용에 대한 만족 응답이 72.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 이용’이 공통 69.6%를 보이며 높은 수준의 만족 응답을 보였다. 이어서 ‘아동돌봄쿠폰 지급’(64.7%)과 ‘모 가족돌봄휴가’(64.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60.4%), ‘부 가족돌봄휴가’(59.5%)의 순으로 만족 응답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60%이상의 높은 만족 응답률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부록 표 1-6〉 코로나19 긴급 육아 지원 만족도(2021년, 2022년)

단위: %(명), 점

구분	2021			2022		
	만족 비율	5점 평균	계(수)	만족 비율	5점 평균	계(수)
1.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쿠폰 20만원)	68.0	3.8	100.0 (1,008)	64.7	3.7	100.0 (391)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74.9	4.0	100.0 (778)	72.9	3.9	100.0 (292)
3.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69.3	3.8	100.0 (323)	69.6	3.9	100.0 (125)
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67.7	3.8	100.0 (220)	69.6	4.0	100.0 (69)
5. 모 가족돌봄휴가	65.1	3.8	100.0 (195)	64.3	3.7	100.0 (98)
6. 부 가족돌봄휴가	66.3	3.8	100.0 (160)	59.5	3.7	100.0 (84)
7. 2021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	-	- -	60.4	3.7	100.0 (159)

주: 1)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만족비율은 ‘만족’, ‘매우 만족’ 비율을 합친 결과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252.

‘아동돌봄쿠폰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지원금액 수준이 낮아서’(66.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원횟수가 적어서’라는 응답은 12.1%로 나타났다.

〈부록 표 1-7〉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지원 금액 수준 낮음	지원 대상 연령 낮음	지원 횟수 적음	지원 받기까지 시간 오래 걸림	기타	계(수)
전체	66.7	3.0	12.1	6.1	12.1	100.0 (33)

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긴급돌봄 제공에 불만족 이유는 (응답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가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의 긴급돌봄 이용에 공통적으로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대해 불만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밖에 ‘어린이집 긴급돌봄’의 경우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워서’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서’라는 불만족 응답이 각 19.0%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이용자격’과 ‘이용방법/절차’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 9.5%, 4.8%로 나타났다.

‘유치원 긴급돌봄’의 경우 ‘서비스 질/내용’에 대한 불만족 응답 외에, ‘이용자격’과 ‘이용방법/절차’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있었다.

〈부록 표 1-8〉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서비스 질/ 내용 수준 낮음	이용 방법/ 절차 복잡	이용 자격 까다 로움	접근성 떨어짐	신청 후 서비스 이용 까지 시간 오래 걸림 (오래 대기)	원하는 시간/ 시기 이용 하기 어려움	급식을 제공 하지 않거나 급식의 질이 낮음	차량 운행 하지 않거나 차량 운행 불만족	기타	계(수)
----	--------------------	-----------------	----------------	------------	---	-------------------------------	-------------------------------------	------------------------------------	----	------

1.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 (어린이집)	33.3	4.8	9.5	4.8	-	19.0	-	19.0	9.5	100.0 (21)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 (유치원)	57.1	14.3	28.6	-	-	-	-	-	-	100.0 (7)
3.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 (초등학교)	100.0	-	-	-	-	-	-	-	-	100.0 (1)

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불만족이유는 (응답 사례수가 적은 가운데에서도) ‘모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대체인력 등 시간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라는 응답(4사례)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직장에 눈치가 보여서)’와 ‘제도 사용에 따른 직장내 불이익이 염려되어서(승진시 불이익 등)’라는 응답이 각 2사례 있었다.

‘부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직장에 눈치가 보여서)’라는 사회문화적 압력에 대한 응답(4사례)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대체인력 등 시간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3사례), ‘제도 사용에 따른 직장내 불이익이 염려되어서(승진시 불이익 등)’(2사례)라는 응답이 있었다.

〈부록 표 1-9〉 가족돌봄휴가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직장에 눈치가 보여서)	제도 사용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 염려(승진 시 불이익 등)	대체인력 지원 등 시간지원 이용할 수 있는 직장지원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하는 시간/ 시기 이용 어려움	기타	계(수)
1. 모 가족돌봄휴가	20.0	20.0	40.0	-	20.0	100.0 (10)
2. 부 가족돌봄휴가	36.4	18.2	27.3	9.1	9.1	100.0 (11)

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불만족이유는 1일 5만원 최대 10일의 지원금액 수준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지원대상 연령과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점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있었다.

〈부록 표 1-10〉 2021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지원 금액 수준 낮음	지원 대상 연령 낮음	지원 횟수 적음	지원 받기까지 시간 오래 걸림	계(수)
전체	68.8	12.5	6.3	12.5	100.0 (16)

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 육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를 질문한 결과, 아동돌봄쿠폰과 같은 ‘현금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응답자의 36.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긴급돌봄’ 이용(18.6%), ‘가족돌봄휴가’(14.6%)와 ‘유연근로제’(재택근로 12.6%, 시차출퇴근 2.0%)로 나타났다.

그밖에 육아휴직 9.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8%,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1%로 응답되었다.

아동돌봄쿠폰과 같은 ‘현금지원’이 팬데믹시기 가장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부, 초등부모, 외벌이 및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 가구소득 250만원이하 저소득가구, 그리고 읍면지역에서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돌봄’ 이용이 가장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모, 유아부모,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 그리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는 유아부모와 맞벌이가구에서, ‘재택근로(유연근로제)’는 맞벌이가구와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에서, 501만원이상 고소득가구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지원과 서비스 및 시간지원에 따른 수요와 선호가 하위특성 변인에 따라 다른 것으로, 즉 외벌이 및 저소득가구에서는 현금지원을, 맞벌이 및 고소득가구에서는 서비스 및 시간지원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록 표 1-11〉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 육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

단위: %(명)

구분	가족 돌봄 휴가	육아 휴직	유연 근로제 (재택 근로)	유연 근로제 (시차 출퇴근)	긴급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여가부)	현금 지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 등)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타	계(수)
전체	14.6	9.3	12.6	2.0	18.6	2.1	36.9	2.8	1.1	100.0 (1,087)
성별										
남성	15.3	11.4	12.7	2.9	10.7	2.0	42.0	1.6	1.3	100.0 (307)
여성	14.4	8.5	12.6	1.7	21.7	2.2	34.9	3.2	1.0	100.0 (780)
$\chi^2(df)$					23.299(8)**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12.0	11.5	13.0	3.8	13.0	5.8	34.1	5.8	1.0	100.0 (208)
유아부모	16.5	9.8	11.5	1.7	20.9	1.5	34.8	2.1	1.1	100.0 (468)
초등부모	13.9	7.5	13.6	1.5	18.7	1.0	40.6	1.9	1.2	100.0 (411)
$\chi^2(df)$					42.408(16)***					

구분	가족 돌봄 휴가	육아 휴직	유연 근로제 (재택 근로)	유연 근로제 (시차 출퇴근)	긴급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여가부)	현금 지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 등)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타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15.0	9.5	12.9	2.1	18.5	2.1	35.7	3.1	1.1	100.0 (983)
외벌이	13.1	8.2	8.2	1.6	16.4	1.6	49.2	0.0	1.6	100.0 (61)
해당없음	9.3	7.0	11.6	0.0	23.3	2.3	46.5	0.0	0.0	100.0 (43)
$\chi^2(df)$	11.884(16)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10.4	9.0	3.0	0.0	9.0	4.5	61.2	1.5	1.5	100.0 (67)
251~350만원	13.3	9.2	7.5	1.7	14.5	2.3	49.1	1.7	0.6	100.0 (173)
351~500만원	16.0	6.5	11.4	1.6	14.7	2.9	42.5	2.6	1.6	100.0 (306)
501~600만원	12.2	11.2	14.9	3.2	23.9	1.6	29.3	2.7	1.1	100.0 (188)
601만원 이상	16.1	10.8	16.7	2.3	22.9	1.1	25.5	3.7	0.8	100.0 (353)
$\chi^2(df)$	82.082(32)***									
지역구분										
대도시	15.1	10.8	10.3	2.4	18.7	2.2	36.2	2.4	1.4	100.0 (417)
중소도시	14.0	9.4	16.1	1.3	19.2	2.7	33.6	1.3	0.8	100.0 (479)
읍면	14.8	5.3	9.0	3.2	16.9	0.5	47.1	3.2	1.1	100.0 (189)
$\chi^2(df)$	26.973(1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021~2022년 코로나19 팬데믹기간 이루어진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5점척도로 평정하게 한 결과, 초등학교 원격수업의 경우 2021년 대비 만족한다는 긍정 응답이 4.9%p 상승하여 전체 응답자의 20.7%로 나타났다. 그 외 원격수업 및 온라인 지원에 대한 만족 응답은 20% 이하로, 다함께돌봄센터 비대면 지원에 대한 만족 응답이 20.0%, 지역아동센터 온라인 지원 18.2%로 나타났다.

유치원 원격수업과 어린이집의 온라인과정에 대한 만족 응답은 각 11.9%, 8.0%로 초등 원격수업 및 방과후 온라인과정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다.

〈부록 표 1-12〉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2021			2022		
	만족비율	5점 평균	계(수)	만족비율	5점 평균	계(수)
초등학교 원격수업	15.8	2.6	100.0 (733)	20.7	2.8	100.0 (411)
유치원 원격수업	-	-	- -	11.9	2.6	100.0 (545)
어린이집 온라인과정	-	-	- -	8.0	2.6	100.0 (877)
지역아동센터 비대면/ 온라인 지원	-	-	- -	18.2	3.1	100.0 (22)
다함께돌봄센터 비대 면/온라인 지원	-	-	- -	20.0	3.6	100.0 (10)

주: 1)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만족비율은 '만족', '매우 만족' 비율을 합친 결과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255.

초등학교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교육격차와 학습공백의 발생'(34.0%), '원격수업 준비와 진행에 대한 학부모 부담 증가'(31.2%)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등교수업 감축에 따른 가정양육부담 증가'(18.4%), '자녀의 사회성 발달 저해'(12.1%), 그리고 '자녀의 미디어 의존 증가'(4.3%)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유치원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원격수업 준비와 진행에 대한 학부모 부담 증가'(35.3%)와 '등교수업 감축에 따른 가정양육부담 증가'(25.3%)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 온라인과정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가정양육부담 증가'(32.3%)와 '자녀의 사회성 발달 지연'(22.2%), '원격수업 준비와 진행에 대한 학부모 부담 증가'(21.2%), '자녀의 미디어 의존 증가'(19.2%)의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학령 전후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원격수업(온라인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와 부정적 의견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가정 내양육 및 부담의 증가 외에, 교육격차와 학습공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지연, 미디어 의존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록 표 1-13〉 원격수업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구분	교육격차 확대 및 학습공백 발생	등교수업 감축에 따라 발생하는 가정양육 부담 증가	원격수업 준비 및 진행 위한 학부모 부담 증가	등교수업 감축에 따른 자녀 사회성 발달 지연	자녀 미디어 의존 증가	계(수)
초등학교 원격수업	34.0	18.4	31.2	12.1	4.3	100.0 (141)
유치원 원격수업	15.3	25.3	35.3	14.0	10.0	100.0 (150)
어린이집 온라인과정	5.1	32.3	21.2	22.2	19.2	100.0 (99)

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영유아부모를 대상으로 2021~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기관보육과 등원수업 등 대면활동의 감소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 지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영향이 있다’(약간있음+있음+상당히 있음)는 응답이 전체 97.0%로 대다수로 나타났다.

부에 비해 모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응답이 유의하게 많았으며, 그 외 하위변인에 따른 응답 차이는 크게 경향성을 드러내지 않으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1-14〉 (영유아 부모) 코로나19로 인한 기관보육, 등원수업 등 대면활동의 감소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영향 없음	거의 영향 없음	약간 영향 있음	영향 있음	상당한 영향 있음	계(수)	평균
전체	0.7	2.4	19.6	46.8	30.6	100.0 (887)	4.0
성별							
남성	0.4	4.1	22.9	47.3	25.3	100.0 (245)	3.9
여성	0.8	1.7	18.4	46.6	32.6	100.0 (642)	4.1
$\chi^2(df) / t$			9.445(4)				-2.5*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0.0	2.4	20.2	46.6	30.8	100.0 (208)	4.1
유아부모	1.3	2.4	20.1	47.0	29.3	100.0 (468)	4.0
초등부모	0.0	2.4	18.0	46.4	33.2	100.0 (211)	4.1
$\chi^2(df) / F$			6.479(8)				1.1

구분	영향 없음	거의 영향 없음	약간 영향 있음	영향 있음	상당한 영향 있음	계(수)	평균
맞벌이 여부							
맞벌이	0.4	2.2	19.1	48.0	30.2	100.0 (810)	4.1
외벌이	0.0	4.1	28.6	34.7	32.7	100.0 (49)	4.0
해당없음	10.7	3.6	17.9	32.1	35.7	100.0 (28)	3.8
$\chi^2(df) / F$			49.575(8)				1.8(a)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1.9	3.8	17.3	42.3	34.6	100.0 (52)	4.0
251~350만원	2.1	2.1	21.3	44.7	29.8	100.0 (141)	4.0
351~500만원	0.0	2.3	20.4	46.5	30.8	100.0 (260)	4.1
501~600만원	0.0	4.6	17.6	44.4	33.3	100.0 (153)	4.1
601만원 이상	0.7	1.1	19.6	50.2	28.5	100.0 (281)	4.0
$\chi^2(df) / F$			17.106(16)				0.3
지역구분							
대도시	0.3	3.1	17.2	49.2	30.2	100.0 (325)	4.1
중소도시	0.5	1.0	21.2	45.1	32.2	100.0 (401)	4.1
읍면	1.9	4.4	20.8	45.9	27.0	100.0 (159)	3.9
$\chi^2(df) / F$			14.140(8)				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초등부모를 대상으로 2021~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감축과 원격수업의 확대가 교육격차 확대와 학습공백의 발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5점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영향이 있다’(약간있음+있음+상당히있음)는 응답이 전체 97.1%로 (영유아부모와 마찬가지로) 대다수로 나타났다.

초등부모에서도 부에 비해 모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맞벌이가구, 가구소득 601만원이상 고소득가구, 대도시 지역에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응답이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부록 표 1-15〉 (초등 부모)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감축, 원격수업 확대가 교육격차 확대 및 학습 공백 발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

단위: %(명)

구분	영향 없음	거의 영향 없음	약간 영향 있음	영향 있음	상당한 영향 있음	계(수)	평균
전체	-	2.9	15.8	44.8	36.5	100.0 (411)	4.1
성별							
남성	-	2.4	20.3	50.4	26.8	100.0 (123)	4.0
여성	-	3.1	13.9	42.4	40.6	100.0 (288)	4.2
$\chi^2(df) / t$			8.137(3)				-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	2.1	15.2	46.3	36.4	100.0 (374)	4.2
외벌이	-	10.0	20.0	35.0	35.0	100.0 (20)	4.0
해당없음	-	11.8	23.5	23.5	41.2	100.0 (17)	3.9
$\chi^2(df) / F$			12.149(6)				1.3(a)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	13.6	13.6	40.9	31.8	100.0 (22)	3.9
251~350만원	-	0.0	17.2	56.9	25.9	100.0 (58)	4.1
351~500만원	-	3.7	20.2	44.0	32.1	100.0 (109)	4.0
501~600만원	-	0.0	18.7	38.7	42.7	100.0 (75)	4.2
601만원 이상	-	3.4	10.9	44.2	41.5	100.0 (147)	4.2
$\chi^2(df) / F$			23.884(12)				1.8
지역구분	-						
대도시	-	3.2	15.3	40.1	41.4	100.0 (157)	4.2
중소도시	-	2.2	17.4	45.1	35.3	100.0 (184)	4.1
읍면	-	4.3	12.9	54.3	28.6	100.0 (70)	4.1
$\chi^2(df) / F$			6.025(6)				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전체 부모를 대상으로 2021~2022년 코로나19로 인해 기관보육 및 등교수업 감축에 따라 가정양육 시간이 증가하였는데, 가정양육 시간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가정양육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모교육 등 가정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지 5점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필요하다(약간필요+필요+매우 필요)’는 응답이 97.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위특성 변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나 경향성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1-16〉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양육 부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부모교육 등 가정양육 역량 강화 정책의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필요 없음	거의 필요 없음	약간 필요함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평균
전체	0.6	1.9	14.0	49.7	33.9	100.0 (1,087)	4.1
성별							
남성	0.7	1.6	16.3	49.8	31.6	100.0 (307)	4.1
여성	0.5	2.1	13.1	49.6	34.7	100.0 (780)	4.2
$\chi^2(df) / t$			2.550(4)				-1.1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0.0	0.5	15.4	48.6	35.6	100.0 (208)	4.2
유아부모	0.9	3.0	13.2	48.9	34.0	100.0 (468)	4.1
초등부모	0.5	1.5	14.1	51.1	32.8	100.0 (411)	4.1
$\chi^2(df) / F$			8.474(8)				0.6
맞벌이 여부							
맞벌이	0.5	1.9	13.8	49.9	33.8	100.0 (983)	4.1
외벌이	0.0	1.6	19.7	41.0	37.7	100.0 (61)	4.1
해당없음	2.3	2.3	9.3	55.8	30.2	100.0 (43)	4.1
$\chi^2(df) / F$			6.687(8)				0.1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0.0	0.0	14.9	53.7	31.3	100.0 (67)	4.2
251~350만원	0.6	2.3	12.7	48.0	36.4	100.0 (173)	4.2
351~500만원	0.7	2.6	15.0	49.7	32.0	100.0 (306)	4.1
501~600만원	0.0	1.6	11.2	46.3	41.0	100.0 (188)	4.3
601만원 이상	0.8	1.7	15.0	51.6	30.9	100.0 (353)	4.1
$\chi^2(df) / F$			11.718(16)				1.9
지역구분							
대도시	0.5	1.4	15.1	47.2	35.7	100.0 (417)	4.2
중소도시	0.4	2.1	12.7	52.6	32.2	100.0 (479)	4.1
읍면	1.1	2.6	14.8	47.6	33.9	100.0 (189)	4.1
$\chi^2(df) / F$			5.488(8)				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코로나19와 같이 향후 예기치 못한 위험/재난 상황에서 육아정책 분야 정부의 대응과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가정양육시 지원금 제공(37.4%)에 대한 현금지원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긴급돌봄의 제공(28.2%), 가족돌봄휴가 확대(24.5%)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가정양육 지원금과 같은 ‘현금지원’의 경우 부, 초등부모와 영아부모, 맞벌이가구,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읍면지역에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돌봄’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응답은 모, 유아부모와 초등부모, 맞벌이가구 및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의 확대는 모, 유아부모, 맞벌이가구 및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대)도시지역에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였다.

〈부록 표 1-17〉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책
단위: %(명)

구분	기관 긴급돌봄 제공(어린이 집/유치원/ 초등학교)	가정 양육시 지원금 제공	시간제 돌봄시설 이용 바우처 제공	가족돌봄 휴가 확대	긴급 가정방문 아이돌보미 지원	계(수)
전체	28.2	37.4	5.6	24.5	4.3	100.0 (1,087)
성별						
남성	23.8	45.6	7.2	19.9	3.6	100.0 (307)
여성	29.9	34.2	5.0	26.3	4.6	100.0 (780)
$\chi^2(df)$			16.600(4)**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23.1	38.0	10.6	22.6	5.8	100.0 (208)
유아부모	29.3	35.0	4.9	25.9	4.9	100.0 (468)
초등부모	29.4	39.9	3.9	23.8	2.9	100.0 (411)
$\chi^2(df)$			19.449(8)*			
맞벌이 여부						
맞벌이	28.9	36.9	5.1	24.8	4.3	100.0 (983)
외벌이	14.8	49.2	14.8	18.0	3.3	100.0 (61)
해당없음	30.2	32.6	4.7	25.6	7.0	100.0 (43)
$\chi^2(df)$			18.339(8)*			

구분	기관 긴급돌봄 제공(어린이 집/유치원/ 초등학교)	가정 양육시 지원금 제공	시간제 돌봄시설 이용 바우처 제공	가족돌봄 휴가 확대	긴급 가정방문 아이돌보미 지원	계(수)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23.9	47.8	9.0	11.9	7.5	100.0 (67)
251~350만원	23.7	47.4	5.8	20.8	2.3	100.0 (173)
351~500만원	26.5	41.8	5.2	22.9	3.6	100.0 (306)
501~600만원	33.5	33.0	3.7	25.0	4.8	100.0 (188)
601만원 이상	29.7	29.2	6.2	29.7	5.1	100.0 (353)
$\chi^2(df)$	36.259(16)**					
지역구분						
대도시	26.6	36.2	6.5	26.6	4.1	100.0 (417)
중소도시	30.5	36.3	4.2	24.4	4.6	100.0 (479)
읍면	25.9	43.4	7.4	19.0	4.2	100.0 (189)
$\chi^2(df)$	10.309(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나) 전문가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정책의 효과는 긴급돌봄을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경우와 ‘2021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각각 65.4%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7점 척도, ⑤~⑦ ‘매우 잘 달성되었다’를 합한 비율),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이 60.6%로 높게 나타났다.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는데, 특히 긴급돌봄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제공하는 경우 모두 12%p 정도 감소했다.

〈부록 표 1-18〉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2021년, 2022년)

단위: %(명), 점

구분	2021				2022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57.0	4.70	100.0	(100)	50.0	4.6	100.0	(10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77.0	5.39	100.0	(100)	65.4	4.9	100.0	(10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69.0	5.26	100.0	(100)	60.6	4.7	100.0	(10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70.0	5.19	100.0	(100)	57.7	4.7	100.0	(104)
가족돌봄휴가	61.0	4.93	100.0	(100)	57.7	4.8	100.0	(104)
2021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	-	-	-	65.4	4.9	100.0	(104)

주: 1) 긍정비율은 '⑥', '⑥', '⑦' 정책 효과성 매우 높음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2)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
 정책연구소. p.264.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정책에서 가장 큰 정책 효과를 보인 과제로는 '코
 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이 39.4%의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가족돌봄휴가' 28.8%, '2021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아
 동양육한시지원'이 각각 13.5%로 나타났다.

〈부록 표 1-19〉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정책에서 정책 효과성이 가장 높은 과제(2021년,
 2022년)

단위: %(명)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2021	2022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22.0	13.5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44.0	39.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6.0	1.9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5.0	2.9
가족돌봄휴가	23.0	28.8
2021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	13.5
계(수)	100.0(100)	100.0(104)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
 정책연구소. p.265.

긴급돌봄을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경우의 정책 효과를 가장 높게 평가한 이유로 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고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는 점, 부모의 직업 유형상 수혜 대상이 많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는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고, 감염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2021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체감 가능한 정책 지원이라는 점,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지원이 된다는 점을 그 성과로 들었다.

‘아동양육한시지원’과 관련해서는 쿠폰으로 인한 가정지원 실효성 마련과 직접 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체감도가 높았다는 점을 언급한다.

〈부록 표 1-20〉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정책에서 정책 효과성이 가장 높은 과제로 판단한 이유

정책	이유
아동양육 한시지원 (아동돌봄 쿠폰 40만원, 아동특별 돌봄지원금 20만원)	- 쿠폰이긴 하지만 현금성으로 직접 지출이 가능하므로 대상자는 그 효과를 체감하기 쉬움. -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확대됨에 따라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비용 제공(식비, 간식비 등) 대상자수가 가장 많았고, 정책수요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임. 실제 정책효과가 가장 높을 수 있는 것은 긴급돌봄이었으나, 실제 어린이집, 유치원의 긴급 돌봄은 충분히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택하지 않았음. - 실질적 가계 경제 지원 - 현금성 지원이므로 수요자에게 더 쉽고 명확하게 수용됨. - 비용지급으로 가정상황에 맞게 이용 가능 -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어린이집과 학교들이 휴원 또는 휴교상태라 하더라도 부모가 육아를 못하고 일을 나가야 하는 경우, 아동양육한시지원으로 돌봄 시간을 확대해 준 것은 일하는 부모들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제공했다고 봄. - 아동을 둔 가정에서 이 정책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만족도가 높았음. - 추가적 돌봄 비용 발생에 대한 대응 가능 - 돌봄쿠폰으로 인해 가정지원이 실효성이 있었음.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 (어린이집)	- 초기부터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였고, 일하는 부모에게 든든한 지원이 되었음. - 어린이집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등이 코로나임에도 일할 수 있었다고 사료됨. - 부모의 직업 유형 상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수혜대상이 많음. - 어린이집에서의 긴급 돌봄 제공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맞벌이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장시간 돌봄인데 이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이 어린이집이라고 판단하여 어린 영유아기 자녀의 돌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였음. - 어린이집 긴급돌봄을 통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근무를 해야 하는 부모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영아까지 포함하여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 돌봄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기의 아동이 이용하는 곳이 어린이집으로 가장 체감도가 높음. - 직면한 육아 어려움 해소 방안 중 접근성과 편의성이 가장 높았음. -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코로나19 기간동안 긴급돌봄을 실시함.

정책	이유
	- 영유아가구에 대한 현금지원보다 어린이집 지원이 일가정 양립 정책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 - 어머니의 일자리 보호에 효과 - 코로나 초기엔 유아교육기관이 전면휴원 조치를 시행하면서 진행된 긴급돌봄 제공이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 하달되면서 비교적 효과성있게 운영되었다고 봄. -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컸다고 봄. -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감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긴급돌봄을 제공함으로써,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하거나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음. - 아동의 발달 단계별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수요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취업모에게 자녀의 어린이집 긴급 돌봄 제공이 도움이 되었음. - 부모 본인 상황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이 실제 가능했음(휴원이 무색할 정도). - 어린이집은 기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보다 정책효과성이 높았음. - 코로나19시기에는 모든 어린이집이 긴급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였음. - 어린이집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었음. - 어린이집에서의 긴급돌봄은 어린이집에서 축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임. - 거의 휴일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
가족돌봄 휴가	- 실질적으로 돌봄인력을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부모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적 방안이므로 - 의료현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 간 돌봄을 위한 휴가가 꼭 필요했음. - 감염병에 시달리는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체계 구축 감염병 상황에서 직장 내 어려움을 최소화하며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었음. - 가족돌봄 실현으로 정서적, 심리적 안정까지 줄 수 있기 때문 - 양육자인 부모들이 코로나 돌봄을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은 매우 적절하였음. - 코로나시기에 아동을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에 맡기고 싶어 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임. 가족돌봄휴가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음. - 코로나로 인한 영유아교육기관 및 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가족휴가로 지원해줄 수 있어서 좋았음. - 다른 지원에 비해 가족이 돌보는 것에 대해 안심되고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안전하고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족이 돌보는 것이 안전하고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됨. - 특정대상을 정하기보다는 가족돌봄이 필요한 모든 경우를 포괄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 - 어린이집, 유치원과 비교할 때, 가족들의 대응은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긴급한 가족돌봄을 하기까지 다른 조치가 필요 없으므로 가장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돌봄인력의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접촉을 가능한 피하도록 하는 지원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돌봄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봄. - 코로나19시기 어린 자녀일수록 주 양육자의 돌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고, 돌봄 휴가를 보장하여 이를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케어가 가능하였음. - 자녀 돌봄에 가장 적합하고는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수당이나 보조 대신 돌봄에는 한계가 있음. -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통해 가족의 건강을 돌보고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기여함. - 실제 돌봄이 필요한 시점에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확진자가 발생 했다면 돌봄휴가를 통해 가정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봄.

정책	이유
	- 기존 휴가 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코로나19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음. 자녀가 있는 가족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정책임. - 가족이 일차적인 돌봄의 주체가 되고 전염성으로 고려하였을 때 가족돌봄휴가는 필수적임. - 어린 영유아 가정의 경우, 가족돌봄 휴가를 통해 자녀를 편안하게 양육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서 비용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코로나시기에 가족 돌봄 휴가를 주는 것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되므로 정책 효과성이 높다고 생각함.
2021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사업	- 긴급 상황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가계 경제적 부담 경감 - 실질적 체감도 높음. -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비용 등 재정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에 대해 대응책이 된 점이 있음. - 코로나로 인해 아동 등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었으며 활용의 자율성이 있었음. - 기관에 보내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부모가 많았으며 이들에게는 비용지원이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임.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가족을 포함하여 모든 영유아들에게 수혜 혜택을 준 것이라 사료됨. 해당 수혜자 가족이 현실적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 지원이었음. - 코로나로 가정에서 자녀 교육 및 양육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가정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긴급 지원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음. - 현실적으로 수혜를 받기 가장 용이함. 휴가 등을 이용 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비용 청구는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주: 개방형으로 응답된 내용을 정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반면에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로는 ‘가족돌봄휴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3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아동양육한시지원’ 28.8%,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17.3% 순이었다.

〈부록 표 1-21〉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2021년, 2022년)

단위: %(명)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2021	2022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34.0	28.8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4.0	5.8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4.0	2.9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19.0	17.3
가족돌봄휴가	39.0	38.5
2021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	6.7
계(수)	100.0(100)	100.0(104)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266.

성도가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다음이 제기된다. ‘가족돌봄휴가’는 여전히 그 인식도와 활용도가 낮다는 점, 사업체 유형에 따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비용 지원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돌봄 부담의 해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절차 및 사용처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긴급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긴급 돌봄을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경우,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초등학교의 기능상 긴급돌봄에 대한 실질적 준비 미비와 지원에 대한 한계로 활용도가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부록 표 1-22〉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정책에서 정책효과성이 낮은 육아 지원 정책으로 선택한 이유

정책	이유
아동양육한시지원 (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 지속적인 지원이 아닌 한시적인 지원이기에 정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비용보다 서비스 지원이 더 필요 - 코로나 상황에 현금지급이 아동돌봄에 기여하는 바가 적으므로 현실성이 떨어진 금액, 돌봄공백에 현금급여가 가진 효과성이 낮음. - 아동돌봄지원을 위해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봄. - 현금지원은 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함. 가족돌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봄. 가족돌봄은 제도적 차원에서 직장에서 제공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가족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돌봄 인력을 지원하거나 돌봄센터(어린이집 등)를 이용할 수 있음. - 중앙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여러 종류의 단발성 현금지원이 이루어져서 중복성 배제할 수 없는 듯함. - 코로나19 시기 돌봄의 어려움을 지원금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웠음.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돌봄 부담의 해소에 도움이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음. - 영유아, 아픈 아이, 가족이 아픈 경우에 경제적 지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코로나 기간이 2년 정도 되었는데, 지원 금액이 낮았음. - 아동양육 한시지원 제도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아동들에 대한 대책이 다소 미비하다고 사료되므로 한시지원하기 보다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했으면 함. -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아동양육비 지원보다 실제로 기관에 맡길 수 있는 정책이 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임.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 (초등학교)	- 다른 아동들과 달리 긴급돌봄을 받기 위해 학교에 출석하는 것이 더 위험하고 불안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음. 가정에서 원격으로 돌봄을 받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음. - 교육관련 staff들의 이해부족으로 현장에서 큰 애로가 많았음. 교육현장의 교육 vs. 돌봄 이분법적 사고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함. - 초등학교에는 긴급돌봄 수요를 모두 감당할 만한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지 못함. 초등학교 긴급돌봄이 교육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초등학교의 기능과 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인 준비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함.

정책	이유
	- 이용자 많지 않음. - 학교가 운영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효과가 없음. -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지극히 정해진 소수의 인원만 이용할 수 있어 맞벌이 가정의 돌봄의 어려움이 큼. - 매우 중요한 정책인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함. 목적과 기대효과에 비해 이행력이 수준 이하였음에도 개선되지 못했음. - 초등이라는 기관의 한계로 활용성에서 떨어졌음. - 코로나19의 불안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긴급돌봄 제공을 이용하는 것 역시 불안감이 다른 제도에 비해 크며, 가족돌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방법으로 초등학교 긴급돌봄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일종의 낙인이 있을 수 있음. - 타 사업에 비해 초등학교의 학생 등교가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돌봄 제공은 또 다른 행정수요와 돌봄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 학교가 섰다둔하면서 초등학교에서의 긴급돌봄도 같이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음. - 체계적 운영이 되지 않고 방학 기간 등의 이용 어려움이 있음. - 코로나19시기였기 때문에 긴급돌봄을 택하기 보다는 학원을 보내거나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 등으로 돌보는 수요가 더 높았음. - 유아교육기관과 비교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돌봄 서비스 활성도가 낮았음.
가족돌봄 휴가	- 아직 인식도와 활용도가 낮음. - 노동계의 협조 방안 미흡 - 부모의 직업 특성 상 제도가 있더라도 직장상황과 연계가 어려운 경우 선택 폭이 좁아짐. -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았고 이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였으므로 실효성이 떨어짐. - 가족돌봄휴가의 활용가능성이 낮았음. - 해당 정책의 수혜자가 매우 제한적이었음. - 실제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를 둔 가정에서만 효과성을 발휘함. - 가족돌봄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직군이 많았고,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여전히 사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실제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움. - 부모직장에 따라 실행가능성 차이가 있음. - 가족돌봄휴가도 필요는 하였지만 재택이 가능한 기업의 경우 불필요 또는 유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집에서 돌볼자는 방임되고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일이 없어 휴직, 폐점 되는 경우는 그마저도 이용할 수 없어 효과성은 낮다고 판단함. - 가족 돌봄은 경제적 계층이 높은 가정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실행되기 어렵고 매일 일을 해야 하는 생계형 가정으로서는 가족돌봄 휴가는 어려움. - 코로나 관련해서 부모들의 돌봄 휴가는 쉽지 않았고, 결국 아이들을 긴급돌봄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았음. 지금은 코로나가 일상이 되었지만 초창기 2020년 3월~12월까지의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고 정부는 긴급 돌봄을 실시했음. - 긴급돌봄이지만 대부분 어린이집 70% 이상 아이들이 등원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적었음. 특히 코로나 초창기에는 이러한 부분이 심각했음. - 무급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기 눈치 보이며 증명하기도 쉽지 않음. - 대상, 목표 등 구체적 내용이 모호함. - 기업에서 인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로계층은 전문직종 및 고소득 맞벌이가구 이외에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영세자영업 가구의 경우는 돌봄 휴가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오히려 위탁돌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방안 등이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었음. 이 정책은 현실적으로 관광진흥정책과 일가정양립정책 등을 비롯한 평시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서

정책	이유
	오히려 효율적인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실제로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음. - 가족돌봄 휴가는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휴가를 받았으나 양육방식에 대한 정보부족과 양육에의 피로감 등의 원인으로 돌봄을 더 어렵게 생각할 수 있음. - 코로나 가족 환자를 돌보기 위한 휴가 실효성 부족 - 가족돌봄휴가의 제도 자체는 매우 좋으나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가 수반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거나 만족도가 낮아질 것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개방형으로 응답된 내용을 정리함.

부록2. 전문가 설문지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대상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2년 일반과제인 「2018~2022 육아정책의 분석과 과제 연구(V): 2021~2022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의 일환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중간점검의 의미를 갖는 조사입니다.

전반적인 성과평가와 향후 제언을 위해 육아 관련 각 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박 상 희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본 설문은 2022년 시점에서 바라본 육아정책의 구성과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Ⅰ. 육아정책의 성과평가: 국정과제 및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

문1. 다음은 육아정책과 관련된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정부에서 **2021년 동안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귀하가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판단하시는 성과에 대해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우 못했으면 1점, 매우 잘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못했다			보통			매우 잘했다
	1	2	3	4	5	6	7
1.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6.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7.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8. 일·가정 양립 일상화							
9.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 시스템 구현							
10.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문2. **지난 문재인 정부**의 육아 관련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중 실행이 가장 잘 된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 1~2순위로 응답해주십시오.

문2-1. 지난 문재인 정부의 육아 관련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 2가**지를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6.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7.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8. 일·가정 양립 일상화

9.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10.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문2-2. **지난 문재인 정부의 육아 관련 국정과제 중 실행이 가장 잘 된 과제 2가지를**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6.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7.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8. 일·가정 양립 일상화
9.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10.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문2-2-1. **정책 추진과 실행이 가장 잘 된 과제로**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1. ()
2. ()

문2-3. **지난 문재인 정부의 육아 관련 국정과제 중 실행이 가장 미흡한 과제 2가지를**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6.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7.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8. 일·가정 양립 일상화
9.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10.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문2-3-1. **가장 미흡한 과제로**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1. ()
2. ()

문2-3-2. 가장 미흡하다고 선택하신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1. ()
- 2. ()

문3. 다음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 과제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먼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 주요 목표 달성 평가는 최근 2년(2021~2022)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 전혀 달성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잘 달성되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 겠다
	1	2	3	4	5	6	7	9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문4. 다음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 과제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 주요 목표 달성 평가는 최근 2년(2021~2022)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 전혀 달성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잘 달성되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 겠다
	1	2	3	4	5	6	7	9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 겠다
	1	2	3	4	5	6	7	9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 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문5. 다음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 과제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시시오. 마지막으로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주요 목표 달성 평가는 최근 2년(2021~2022)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전혀 달성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잘 달성되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 겠다
	1	2	3	4	5	6	7	9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4. 유연근무제 - 재택근로								
5.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								

문6. **지난 문재인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수요자 만족도 높음, 정책 효과 높음)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를 합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성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세부 육아정책 1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정책범주	세부 육아정책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4.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5.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6.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7.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8.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9.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10.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11.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12.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
	13.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1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5.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6.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8. 배우자 출산휴가
	19. 유연근무제 - 재택근로
	20.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

문6-1. 문 6번에서 선택한 정책에 대해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이유를 자세히 작성해주시시오.

1. ()

문7. **지난 문재인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수요자 만족도 높음, 정책 효과 높음)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각각 성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세부 육아정책을 1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7-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문7-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문7-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4. 유연근무제 - 재택근로
5.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

문7-4. 문7-1 ~ 문7-3번에서 각 영역별 선택 정책에 대해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영역별로 해당 이유를 자세히 작성해주시요.

정책 영역 구분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선택 정책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선택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선택 정책	

문8. **지난 문재인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미흡한(수요자 만족도 낮음, 정책 효과 낮음)**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를 합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성과가 가장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세부 육아정책 1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정책범주	세부 육아정책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4.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5.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6.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7.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8.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9.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10.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11.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12.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
	13.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5.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6.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8. 배우자 출산휴가
	19. 유연근무제(재택근로)
	20.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문8-1. 문 8번에서 선택한 정책에 대해 성과가 **가장 미흡한 정책**이라고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이유를 자세히 작성해주시시오.

1.()

문9. **지난 문제인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미흡한(수요자 만족도 낮음, 정책 효과 낮음)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각각 성과가 가장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세부 육아정책을 1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9-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문9-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문9-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4. 유연근무제 - 재택근로
5.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

문9-4. 문9-1 ~ 문9-3번에서 각 영역별 선택 정책에 대해 성과가 가장 **미흡한 정책**이라고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영역별로 해당 이유를 자세히 작성해주시시오.

정책 영역 구분	성과가 가장 미흡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선택 정책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선택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선택 정책	

II.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문10. 다음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을 위해 추진한 정책입니다. 각 지원 내용별로 정책 효과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 정책 효과성이 매우 저조하다고 판단되면 1점,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대응 긴급육아지원 정책〉

	정책 효과성 매우 낮음			보통			정책 효과성 매우 높음	잘 모르 겠다
	1	2	3	4	5	6	7	9
1.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3.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5. 가족돌봄휴가								
6. 2021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문11.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에서 정책 효과성이 가장 높은(수요자 효능감이 가장 큰) 육아 지원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 3.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 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 5. 가족돌봄휴가
- 6. 2021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문11-1. 정책 효과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 정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 ()

문12.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에서 정책 효과성이 가장 낮은(수요자 효능감이 낮은) 육아 지원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 3.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 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 5. 가족돌봄휴가
- 6. 2021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문12-1. 정책 효과성이 가장 낮다고 판단한 정책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

문13.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집중해야 할 육아 지원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 3.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 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 5. 가족돌봄휴가
- 6. 2021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문13-1.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이라고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

문14. 위의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팬데믹 상황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가 있다면, 각 정책 범주별로 자유롭게 제안해 주십시오.

※ 추가로 요구되는 정책과제는 이하 해당란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정책 범주 구분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을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정책 과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기타	

Ⅲ.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향후 육아정책 개선 제안

※ 다음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국정과제 및 정책과제의 개요입니다. 이를 참조하여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정책범주	세부 육아정책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부모급여) 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4.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 확대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1. (미디어 교육) (유아)찾아가는 놀이형교육, (청소년) 초중고교육과정 연계 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 2.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3. (사회적약자 보호/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4. (아동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강화 5. (식생활 건강권)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대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급식 위생영양 관리체계 재정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소비기한/디지털·점자표시 등 선택권 보장 6. (사교육경감/학습격차완화/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학습결손 해소 지원/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저소득층SW·SI영재교육, 다중문화역교육 7. (돌봄인력 보수체계) 돌봄인력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 적정화 8. (보육서비스 질 제고) 교사대아동비율,시설면적 상향검토, 부모교육과 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9. (유보통합)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0~5세 영유아대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10. (충족한 아동돌봄체계) 마을돌봄을 통한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1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민간육아도우미 교육 및 자격관리제도 도입, 민간돌봄서비스 기관등록제 도입 12.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발달장애인)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기까지 검진기록 연계로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2.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 기간/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 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문15. 향후 가장 **중요도가 높은 정책범주**는 무엇이라고 판단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문15-1. 문 15번에서 선택한 정책범주에 대해 **향후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이유를 자세히 작성해 주십시오

1. ()

문16.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별 향후 중요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혀 중요하지 않으면 1점, 매우 중요하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문16-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 하다	잘 모르 겠다
	1	2	3	4	5	6	7	9
1. (부모급여) 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산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4.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 확대								

문16-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 하다	잘 모르 겠다
	1	2	3	4	5	6	7	9
1. (미디어 교육) (유아)찾아가는 놀이형교육, (청소년) 초중고교육과정 연계 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 없는 맞춤형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2.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3. (사회적약자 보호/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 하다	잘 모르 겠다
	1	2	3	4	5	6	7	9
4. (아동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5. (식생활 건강권)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대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소비기한/디지털·점자표시 등 선택권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6. (사교육경감/학습격차완화/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학습결손 해소 지원/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저소득층SW·AI영재교육, 다중문화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7. (돌봄인력 보수체계) 돌봄인력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 적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8. (보육서비스 질 제고) 교사대아동비율,시설면적 상향 검토, 부모교육과 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9. (유보통합)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0~5세 영유아대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10.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을돌봄을 통한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1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민간육아도우미 교육 및 자격관리제도 도입, 민간돌봄서비스 기관등록제 도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12.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발달장애인)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기까지 검진기록 연계로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문16-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 하다	잘 모르 겠다
	1	2	3	4	5	6	7	9
1.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 하다	잘 모르 겠다
	1	2	3	4	5	6	7	9
2.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 기간/급여 적용대 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문17. **향후 가장 중요도가 높은 정책**은 무엇이라고 판단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를 합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세부 육아정책을 2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정책범주	세부 육아정책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부모급여) 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4.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 확대
유아교육·보육· 초등돌봄 정책	1. (미디어 교육) (유아)찾아가는 놀이형교육, (청소년) 초중고교육과정 연계 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 2.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3. (사회적약자 보호/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4. (아동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강화 5. (식생활 건강권)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급식 위생 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소비기한/디지털·점자표시 등 선택권 보장 6. (사교육경감/학습격차완화/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학습결손 해소 지원/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저소득층SW·AI영재교육, 다중문해력교육 7. (돌봄인력 보수체계) 돌봄인력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 적정화 8. (보육서비스 질 제고) 교사대아동비율,시설면적 상향검토, 부모교육과 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9. (유보통합)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0~5세 영유아대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10.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을돌봄을 통한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학교돌봄 사각 지대 보충/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1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민간육아도우미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돌봄서비스 기관등록제 도입 12.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발달장애인)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기까지 검진기록 연계로 생애주기 통합적

정책범주	세부 육아정책
	건강관리체계 구축/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2.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 기간/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문17-1. 문 17번에서 선택한 정책에 대해 향후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이유를 자세히 작성해주시시오.

1. ()
2. ()

문18.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육아지원정책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가 있다면 각 정책 범주별로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시오.

※ 추가로 요구되는 정책과제는 이하 해당란에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정책 범주 구분	향후 추가로 요구되는 정책 과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문19.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5년간 육아 및 유아교육·보육·돌봄의 정책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디에 최우선의 중점을 두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각 범주별로 제시된 항목 중 가장 중요한 1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19-1. 정책대상

1. (부모) 부모 수요 파악 및 부모 가정양육/돌봄역량 지원 강화
2. (교직원/종사자) 아동 교육·보육·돌봄 교원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사회적 인식 향상
3. (아동)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양질의 놀이/학습권 보장

문19-2. 정책조합

1. 부모 현금지원 강화
2. 부모 시간지원 확대 지속
3.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질 제고
4. 아동대상 교육·보육·돌봄의 공공성 확대(공적인프라, 비용지원체계 등)
5. 보건의료 및 건강안전 지원 확대

문19-3. 보편적 vs. 선별적 지원체계

1. (보편적) 모든 아동과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이용기반 및 비용지원의 확대
2. (선별적) 우선 취약계층 아동부모 대상 지원 보강에서부터 양육지원체계 점검

문19-4. 추가비용 부담 vs. 비용지원 강화

1. (추가비용부담)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교직원의 우수한 근로여건 확보를 위해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함
2. (비용지원강화) 저출생시대, 미래세대 아동 및 부모 양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가 비용 지원을 강화해야함

문20. 귀하는 **유보통합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3. 보통
4. 다소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배문1.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 하십니까? 가장 주되게 하시는 일을 응답해 주십시오.

1. 대학 교수
2. 연구기관의 연구원
3. 공무원
4. 현장전문가(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종사자)
5. 기타 전문가()

배문2. 귀하의 전공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사회복지
2. 정책/행정
3. 유아교육/교육
4. 보육
5. 가족
6. 아동
7. 경제
8. 기타()

배문 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1. 만 ()세

배문 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여자
2. 남자

부록3. 부모 설문지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대상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2년 일반과제인 「2018~2022 육아정책의 분석과 과제 연구(V): 2021~2022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의 일환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중간점검의 의미를 갖는 조사입니다.

전반적인 성과평가와 향후 제언을 위해 자녀 양육 및 육아와 관련된 부모님들의 의견과 주관적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박 상 희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I.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대한 질문

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문2. 귀하의 출생년도를 기입해 주세요. _____년

문3. 귀하의 혼인여부를 다음 중 선택해 주세요.

1. 미혼 2.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3. 사별 4. 이혼 5. 기타 ()

문4.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명 수를 기입해 주세요.

1. 자녀 있음 _____명
2. 자녀 없음 → 조사 중단

문5. 귀하의 자녀의 출생년도를 작성해 주십시오.

자녀	출생연도
첫째 자녀	_____년
둘째 자녀	_____년
셋째 자녀	_____년

문6.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문7. 귀하의 최종학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수료, 중퇴, 재학/휴학은 이전 학력으로 분류해 주세요.

1. 중졸이하 2. 고졸 3. 2-3년제 대졸
4. 4년제 대졸 5. 대학원졸 이상

문8. 귀하의 취업 상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1. 취업(취업과 학업 병행 시 취업으로 선택) 2. 휴직 3. 학업
4. 구직 5. 미취업

문9. 항목별로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예	아니오	수급경험 있음	모름
기초생활수급 여부	1	2	3	4
법정차상위계층 여부	1	2	3	4

문10. 항목별로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예	아니오	과거 그러함	모름
다문화가족 여부	1	2	3	4
한부모가족 여부	1	2	3	4

문9. 귀하의 경제활동 상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1. 전일제 근로자 2. 시간제 근로자

문10. 귀하의 배우자의 취업 상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1. 취업(취업과 학업 병행 시 취업으로 선택) 2. 휴직 3. 학업
4. 구직 5. 미취업

문10-1. 귀하의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1. 전일제 근로자 2. 시간제 근로자

문11. 귀댁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근로소득은 세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기타소득에는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정부지원금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또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받은 금액도 기타 가구소득(이전소득)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1) 본인 근로소득 월 평균 _____만원
2) 배우자 근로소득 월 평균 _____만원
3) 기타 가구 소득(기타 임대 소득, 이자 소득, 정부지원금 등 포함) 월 평균 _____만원
4) 월 가구 총 소득 _____만원

문12. 귀댁의 월 평균 자녀 양육 비용은 얼마입니까?

※ 자녀양육비의 경우, 가족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비, 공과금 등은 제외하고, 자녀 고유하게 사용하는 비용을 대략으로 말씀해 주십시오.(해당 나이에 자녀 합산)

- 1) 취학 전(만 0~6세) 자녀 양육비용 월 평균 _____만원
2) 취학 후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 양육비용 월 평균 _____만원
3) 월 가구 총 자녀양육 비용 _____만원

II. 육아 서비스 및 지원 제도 만족도에 대한 질문

문1. **최근 2년 이내에 (2021~2022년)** 영유아 교육·보육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유무, 만족도 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알고 있음	알지 못함	있음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공공 아이돌보미(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1	2	1	2	1	2	3	4	5
2. 민간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등)	1	2	1	2	1	2	3	4	5
3. 어린이집 이용			1	2	1	2	3	4	5
4. 유치원 이용			1	2	1	2	3	4	5
5. 시간제보육	1	2	1	2	1	2	3	4	5

문1-1. 해당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보기	① 서비스 질/내용의 수준이 낮음 ②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 ③ 이용자격이 까다로움 ④ 주위에 가까이 없음(접근성이 떨어짐) ⑤ 비용이 부담됨 ⑥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오래 대기해야 함) ⑦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⑧ 기타()
-----------	---

1. 공공 아이돌보미(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2. 민간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등)
3. 어린이집 이용
4. 유치원 이용
5.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의 기본 보육시간이 2020년 3월부터 12시간(7:30~19:30)에서 7시간(9:00~16: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본보육시간은 12시간에서 7시간으로 변경되었으나, 기본보육시간 이외에 실시되는 연장보육(16:00~19:30)은 자격심사를 통해 이용가능하고, 시간당 1,000~3,000원의 추가 지원금을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1-2. 귀하는 최근 2년 이내에 (2021~2022년)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 1-2-1로 이동
2. 아니오 -> 문 1-2-1로 이동

문1-2-1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기본보육+연장보육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문1-2-1-1.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에 대해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필요한 시간 만큼 이용할 수 있어서
2.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서
3. 비용 부담이 낮아져서
4. 기타 ()

문1-2-1-2.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에 대해 (매우)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필요한 시간 만큼 이용할 수 없어서
2.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서
3. 비용 부담이 높아져서
4. 기타 ()

문1-3. 귀하는 최근 2년 이내에 (2021~2022년)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 1-3-1로 이동
2. 아니오 -> 문 1-3-1로 이동

문1-3-1 유치원 교육과정 시간 구성(교육과정+방과후과정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문1-3-1-1.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에 대해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필요한 시간 만큼 이용할 수 있어서
2. 서비스의 질이 높아서
3. 비용 부담이 낮아서
4. 기타 ()

문1-3-1-2.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에 대해 (매우)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필요한 시간 만큼 이용할 수 없어서
2. 서비스의 질이 낮아서
3. 비용 부담이 높아서
4. 기타 ()

문2. 최근 2년 이내에 (2021~2022년)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여부, 이용 경험 유무, 만족도 등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인지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알고 있음	알지 못함	있음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2	1	2	1	2	3	4	5
1. 초등돌봄교실									
2.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3. 지역아동센터									
4. 다함께돌봄센터(지자체돌봄 포함)									
5. 육아/마을공동체 돌봄									

문2-1. 해당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를 적어주시시오.

보기	① 서비스 질/내용의 수준이 낮음 ②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 ③ 이용자격이 까다로움 ④ 주위에 가까이 없음(접근성이 떨어짐) ⑤ 비용이 부담됨 ⑥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오래 대기해야 함) ⑦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⑧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급식의 질이 낮음 ⑨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차량 운행이 불만족스러움 ⑩ 기타()
----	--

1. 초등돌봄교실
2.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3. 지역아동센터
4. 다함께돌봄센터(지자체돌봄 포함)
5. 육아/마을공동체 돌봄

문3. 귀하는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중 무엇을 이용하였습니까? 각 지원 제도 별로 이용 경험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신청했으나, 아직 못 받은 경우에도 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이용 경험 '있음'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신청했으나,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다면 이용 경험 '없음'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없음: 이용 자격요건은 되지만 이용하지 않음
- * 비해당: 이용 자격요건이 되지 않음

		인지여부		이용/수혜 경험*		
		알고 있음	알지 못함	있음	없음	비 해당
현금 및 의료비 지원	1. 아동수당	1	2	1	2	3
	2. 영아수당	1	2	1	2	3
	3. 가정양육수당	1	2	1	2	3
	4.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	2	1	2	3
	5.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1	2	1	2	3
	6. 첫만남이용권(생후 육아용품 구입비 200만원 1회 지급)	1	2	1	2	3
	7.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금	1	2	1	2	3
자녀돌 봄 시간지 원	8. 모 출산휴가	1	2	1	2	3
	9. 부 출산휴가	1	2	1	2	3
	10. 모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	2	1	2	3
	11. 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	2	1	2	3
	12. 모 육아휴직	1	2	1	2	3
	13. 부 육아휴직	1	2	1	2	3
	14.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1	2	1	2	3
	15. 부 유연근무제(재택근로)	1	2	1	2	3
	16.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1	2	1	2	3
	17. 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1	2	1	2	3

문3-3. 지자체 현금지원금 총 수급액을 기입해 주세요

_____만원

문3-2. 이용한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해주시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아동수당	1	2	3	4	5
2. 영아수당	1	2	3	4	5
3. 가정양육수당	1	2	3	4	5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4.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	2	3	4	5
5.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1	2	3	4	5
6. 첫만남이용권(생후 육아용품 구입비 200만원 1회 지급)	1	2	3	4	5
7.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금	1	2	3	4	5
8. 모 출산휴가	1	2	3	4	5
9. 부 출산휴가	1	2	3	4	5
10. 모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	2	3	4	5
11. 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	2	3	4	5
12. 모 육아휴직	1	2	3	4	5
13. 부 육아휴직	1	2	3	4	5
14.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1	2	3	4	5
15. 부 유연근무제(재택근로)	1	2	3	4	5
16.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1	2	3	4	5
17. 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1	2	3	4	5

문3-3. 해당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를 골라 응답해주시시오.

문3-3-1. 현금지원

구분	①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② 지원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③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 전 계층에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④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⑤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⑥ 현금지원보다 서비스/인프라/교직원 등 다른 지원이 우선될 필요가 있어서 ⑦ 기타()
1. 아동수당	
2. 영아수당	
3. 가정양육수당	
4. 첫만남이용권(생후 육아용품 구입비 200만원 1회 지급)	
5.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금	

문3-3-2. 의료비 및 건강 지원

구분	① 지원 금액/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②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해서 ③ 지원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④ 신청 후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⑤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⑥ 기타()
6.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7.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문3-4. 해당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를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이 낮아서 ② 이용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낮아서 ③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직장에 눈치가 보여서) ④ 제도 사용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 염려되어서(승진 시 불이익 등) ⑤ 대체 인력 지원 등 시간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⑥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⑦ 기타()
8. 모 출산휴가	
9. 부 출산휴가	
10. 모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1. 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2. 모 육아휴직	
13. 부 육아휴직	
14.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15. 부 유연근무제(재택근로)	
16.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17. 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Ⅲ. 코로나19 긴급 육아 지원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

문4. 귀하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중 무엇을 이용하였습니까? 각 지원 제도 별로 이용 경험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이용 안함: 이용 자격요건은 되지만 이용하지 않음

* 비해당: 이용 자격요건이 되지 않음

	이용함	이용 안함	비해당
1.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1	2	3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1	2	3
3.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1	2	3
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1	2	3
5. 모 가족돌봄휴가	1	2	3
6. 부 가족돌봄휴가	1	2	3
7. 2021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1	2	3

문4-1. 긴급돌봄을 이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맞벌이로 인해 가정 내 양육이 불가능하므로
2. 기관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3. 주위에 가까이 있으므로
4. 비용 지원이 되어서
5.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6. 기타 (·)

문4-2.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2. 이용자격이 되지 않아서
3. 이용신청을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공급부족)
4. 주위에 가까이 없어서
5.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6. 기타 (·)

문5-1. 이용한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해주시시오.

	매우 불만족	불 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1	2	3	4	5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1	2	3	4	5
3.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1	2	3	4	5
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1	2	3	4	5
5. 모 가족돌봄휴가	1	2	3	4	5
6. 부 가족돌봄휴가	1	2	3	4	5
7. 2021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1	2	3	4	5

문5-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를 적어주시시오.

구분	① 서비스 질/내용의 수준이 낮음 ②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 ③ 이용자격이 까다로움/이용자격에 제한이 있음 ④ 주위에 가까이 없음(접근성이 떨어짐) ⑤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오래 대기해야 함) ⑥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⑦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급식의 질이 낮음 ⑧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차량 운행이 불만족스러움 ⑨ 기타()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3.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문5-3.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를 선택하여 응답해주시시오

구분	①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직장에 눈치가 보여서) ② 제도 사용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 염려되어서(승진 시 불이익 등) ③ 대체 인력 지원 등 시간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④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⑤ 기타()
5. 모 가족돌봄휴가	
6. 부 가족돌봄휴가	

문5-4-1.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를 선택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지원 금액 수준이 낮아서
2.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이 낮아서
3. 지원 횟수가 적어서
4. 신청 후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5. 기타()

문5-4-2.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를 선택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지원 금액 수준이 낮아서
2.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이 낮아서
3. 지원 횟수가 적어서
4. 신청 후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5. 기타()

문6.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 육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1. 가족돌봄휴가
2. 육아휴직
3. 유연근로제(재택근로)
4. 유연근로제(시차출퇴근)
5. 긴급돌봄(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6.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여성가족부)
7. 현금지원(아동양육 한시지원금 등)
8. 육아기근로시간단축
9. 기타()

문7.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등교수업 감축에 따라 원격수업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의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비해당
1. 초등학교 원격수업	1	2	3	4	5	6
2. 유치원 원격수업	1	2	3	4	5	6
3. 어린이집 온라인과정	1	2	3	4	5	6
4. 지역아동센터 비대면/온라인 지원	1	2	3	4	5	6
5. 다함께돌봄센터 비대면/온라인 지원	1	2	3	4	5	6

문8-1. (초등부모) 초등학교 원격수업 확대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교육격차 확대 및 학습공백 발생
2. 등교수업 감축에 따라 발생하는 가정양육부담 증가
3. 원격수업 준비 및 진행을 위한 학부모 부담 증가
4. 등교수업 감축에 따른 자녀의 사회성 발달 지연
5. 자녀의 미디어 의존 증가

문8-2. (유아부모) 유치원 원격수업 확대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교육격차 확대 및 학습공백 발생
2. 등교수업 감축에 따라 발생하는 가정양육부담 증가
3. 원격수업 준비 및 진행을 위한 학부모 부담 증가
4. 등교수업 감축에 따른 자녀의 사회성 발달 지연
5. 자녀의 미디어 의존 증가

문8-3. (영유아부모) 어린이집 원격수업 확대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교육격차 확대 및 학습공백 발생
2. 등교수업 감축에 따라 발생하는 가정양육부담 증가
3. 원격수업 준비 및 진행을 위한 학부모 부담 증가
4. 등교수업 감축에 따른 자녀의 사회성 발달 지연
5. 자녀의 미디어 의존 증가

문9. (영유아 부모) 2021~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기관보육, 등원수업 및 대면활동의 감소가 아동발달에 어느 정도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영향 없음
2. 거의 영향 없음
3. 약간 영향 있음
4. 영향 있음
5. 상당한 영향 있음

문10. (초등부모) 2021~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감축 및 원격수업 확대는 교육격차 확대 및 학습공백 발생에 어느 정도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영향 없음
2. 거의 영향 없음
3. 약간 영향 있음
4. 영향 있음
5. 상당한 영향 있음

문11. 코로나19로 인해 기관보육 및 등교수업이 감축됨에 따라 가정양육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정양육 시간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가정양육 부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부모교육 등 가정양육 역량 강화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필요 없음
2. 거의 필요 없음
3. 약간 필요함
4. 필요함
5. 매우 필요함

문12.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등 향후 예기치 못한 위험/재난 상황에서 육아정책 분야 정부의 대응과 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기관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2. 가정 양육시 지원금 제공
3. 시간제 돌봄시설 이용 바우처 제공
4. 가족돌봄휴가 확대
5. 긴급 가정방문 아이돌보미 지원

Ⅳ. 문재인 정부(2017~2021년) 육아정책 성과에 대한 질문

문13. **지난 문재인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를 합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을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유아교육·보육· 초등돌봄 정책	4. 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5.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6.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7.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8.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9. 보육서비스 질 제고 10.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11.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12.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1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4.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5.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7. 배우자 출산휴가 18. 유연근무제 - 재택근로 19.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

문14. **지난 문재인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각각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을 1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14-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범주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을 1개 선택해 주십시오.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문14-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범주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을 1개 선택해 주십시오.

1. 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4.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7.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9.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10.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문14-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범주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을 1개 선택해 주십시오.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4. 유연근무제 - 재택근로
5.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

문15. **지난 문재인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정책, 자녀돌봄 시간 지원 정책)를 합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을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산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유아교육·보육· 초등돌봄 정책	4. 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5.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6.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7.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8.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9. 보육서비스 질 제고 10.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11.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12.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1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4.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5.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7. 배우자 출산휴가 18. 유연근무제 - 재택근로 19.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

문15-1. **지난 문재인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각각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을 1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15-1-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범주 중에서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을 1개 선택해 주십시오.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문15-1-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범주 중에서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을 1개 선택해 주십시오.

1. 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4.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7.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9.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10.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문15-1-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범주 중에서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을 1개 선택해 주십시오.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4. 유연근무제 - 재택근로
5.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

V. 윤석열 정부(2022~2026년) 육아정책 중요도에 대한 질문

문16. 다음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입니다. 향후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각 정책 과제별 향후 중요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 전혀 중요하지 않으면 1점, 매우 중요하면 5점으로 1~5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 하다	잘 모르 겠다
1. (부모급여) 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1	2	3	4	5	9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	2	3	4	5	9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1	2	3	4	5	9
4.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 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 확대	1	2	3	4	5	9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 하다	잘 모르 겠다
1. (미디어 교육) (유아)찾아가는 놀이형교육, (청소년) 초중고교 육과정 연계 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	1	2	3	4	5	9
2.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1	2	3	4	5	9
3. (사회적 약자 보호/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1	2	3	4	5	9
4. (아동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강화	1	2	3	4	5	9
5. (식생활 건강권)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소비기한/디지털·점자표시 등 선택권 보장	1	2	3	4	5	9
6. (사교육경감/학습격차완화/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학습결손 해소 지원/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저소득층SW·AI영재교육, 다중문화교육	1	2	3	4	5	9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 하다	잘 모르 겠다
7. (돌봄인력 보수체계) 돌봄인력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 적정화	1	2	3	4	5	9
8. (보육서비스 질 제고) 교사대아동비율,시설면적 상향검토, 부모교육과 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1	2	3	4	5	9
9. (유보통합)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0~5세 영유아대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1	2	3	4	5	9
10. (종합한 아동돌봄체계) 마을돌봄을 통한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1	2	3	4	5	9
1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민간육아도우미 교육 및 자격관리제도 도입, 민간돌봄서비스 기관등록제 도입	1	2	3	4	5	9
12.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발달장애인)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기까지 검진기록 연계로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1	2	3	4	5	9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 하다	잘 모르 겠다
1.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자녀 등) 확대	1	2	3	4	5	9
2.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 기간/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1	2	3	4	5	9

문17.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전체 육아정책 국정과제 목록을 기준으로 향후 가장 우선적으로 및 실행해야 할 정책을 1, 2순위를 응답해주시시오.

1.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해야할 정책: 1순위:(), 2순위:()

문18. 끝으로, 정부의 육아지원 전반에 대해 제언과 의견이 있으면 자유로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

부록4. 면담조사 질문지

대상	면담조사 질문
영유아 부모	1.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또는 가정양육 시, 어려운 점 및 만족스러운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2. 교육에 있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격차가 있다면 줄어 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3. 2020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가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기본보육시간이 기존 12시간(7:30~19:30)에서 7시간(9:00~16:00)으로 변경되었으나, 기본보육시간 이외에 실시되는 연장보육(16:00~19:30)은 자격심사를 통해 이용가능하고, 시간당 1,000~3,000원의 추가 지원금을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 지원정책(양육수당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보육·교육 지원 뿐 아니라 가정양육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등 부모의 육아 시간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6. 아이돌보미/민간육아도우미/산후지원도우미 등 개별돌봄지원 서비스를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셨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아동수당, 영아수당과 같은 보편적 현금지원정책이 육아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8. 부모급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9.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휴원하였을 때 긴급돌봄을 사용하셨습니까? 이러한 긴급돌봄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0.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11. 영유아의 육아와 관련하여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2.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등 저학년 부모	1.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와 비교하여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만족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또는 원장과 소통할 때와 초등학교 교사 또는 학교장과 소통할 때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만족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3. 초등학교 급식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및 문제점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4. 자녀가 방과후학교를 이용하십니까? 이용한다면 자녀가 이용하는 방과후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및 문제점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5. 자녀가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포함)을 이용하십니까? 이용한다면 자녀가 이용하는 초등돌봄교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및 문제점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6. 자녀가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이용하십니까? 이용한다면 자녀가 이용하는 마을돌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및 문제점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하지 않는다면 마을돌봄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7.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교가 휴교하였을 때 긴급돌봄을 사용하셨습니까? 이러한 긴급돌봄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 초등자녀 돌봄 시 어려운 점 및 만족스러운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상	면담조사 질문
	9. 초등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가장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체감하시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0. 초등돌봄과 관련하여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1. 초등 자녀의 돌봄을 위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 원장	1.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 어린이집 내 인력 운영(연장반 교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3. 어린이집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해 공공성, 회계투명성, 보육의 질제고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이전 정부는 유보격차 완화를, 현 정부는 유보통합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보간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완화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6. 표준보육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개정 표준보육과정, 유아·놀이중심 누리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8. 정부의 보육정책으로 인해 체감하시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9.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잘 추진된 보육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0. 정부의 보육정책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1. 정부의 보육정책에서 변화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2. 정부의 보육정책에서 필요한 정책(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3.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	1.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보육교사 처우개선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전 정부는 유보격차 완화를 정책과제로 추진하였고, 현 정부는 유보통합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유-보 간 완화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6. 정부의 보육정책으로 인해 체감하시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7.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잘 추진된 보육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 정부의 보육정책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9. 정부의 보육정책에서 변화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0. 정부의 보육정책에서 필요한 정책(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유치원 원장	1. 국공립유치원 확충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사립유치원 공공성 제고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매입형 유치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공영형 유치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6. 사립유치원 법인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이전 정부는 유보격차 완화를, 현 정부는 유보통합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보간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완화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상	면담조사 질문
	8. 사립유치원 교원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유치원 원비 인상을 상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으로 인해 체감하시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11.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잘 추진된 유아교육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2.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3.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에서 변화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4.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에서 필요한 정책(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5. 유치원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유치원 교사	1. 국공립유치원 확충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3. 유치원 보조 인력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국공립유치원 행정지원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사립유치원 공공성 제고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이전 정부는 유보격차 완화를, 현 정부는 유보통합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보간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완화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7.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으로 인해 체감하시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8.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잘 추진된 유아교육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9.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0.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에서 변화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1.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에서 필요한 정책(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V)
: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